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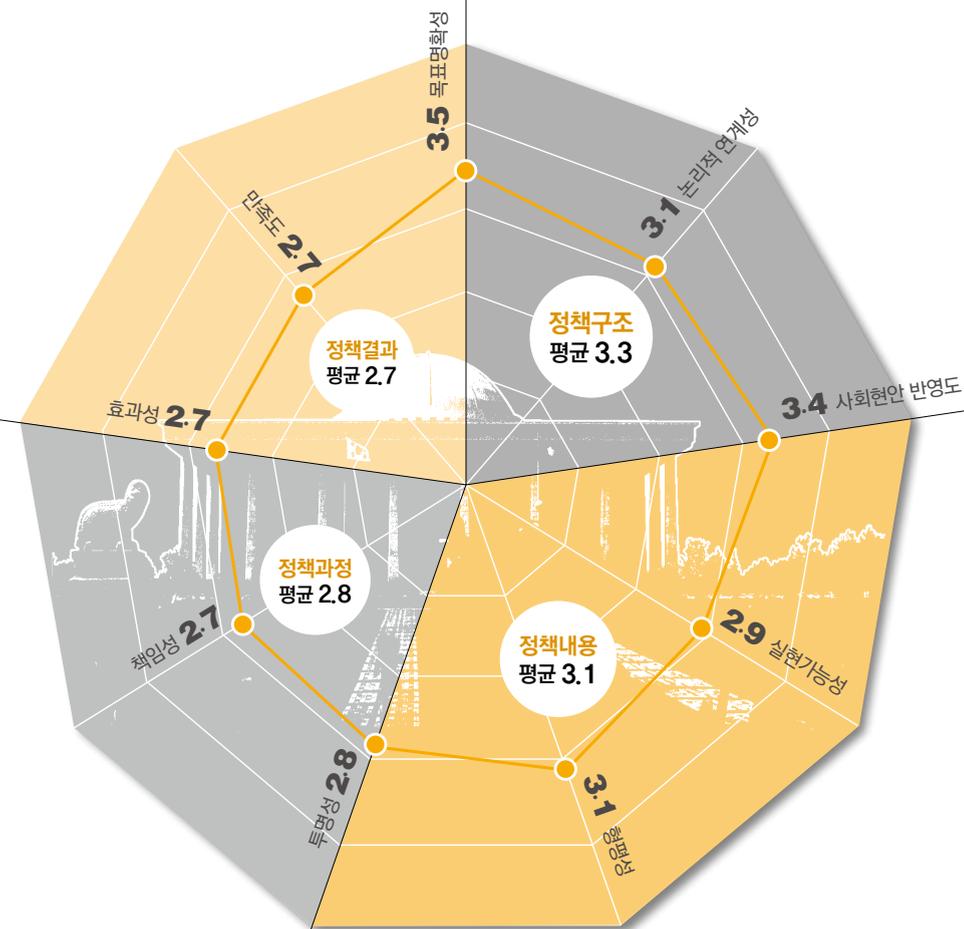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동아E&D

동아E&D



값 20,000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지은이: 최진욱, 심동철, 구교준, 이응균, 윤건수,
정해일, 김두래, 최상욱, 김선혁, 임현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 서울 : 동아E&D
2017
p. : cm
권말부록: 2016년 평가 대상 정책 목록
(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97257-11-9 03340 : ₩20,000
한국 행정[韓廳行政]
정책 평가[政策評價]
351.11-KDC6
352.3-DDC23 CIP2017002256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
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
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snet>)에서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02256)

참여 저자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책임)
심동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총괄)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총괄)
이응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윤건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총괄)
정해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총괄)
최상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총괄)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여론조사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동아E&D

contents

제 1 장	서론	013		
	1. 연구 목적	014		
	2. 연구 방법과 대상	016		
제 2 장	정책평가 방법론	018		
	1. 평가지표와 의미	020		
	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	020		
	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	020		
	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	021		
	4) 평가영역 3: 정책의 결과	021		
	5) 기타 영역	022		
	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022		
	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023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023		
	2) 평가대상 정책	025		
제 3 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034		
	1. 경제정책 분야	036		
	1) 임금피크제(고용노동부)	036		
	2)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036		
	3) 가계부채 관리(금융위원회)	037		
	4)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038		
	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기획재정부)	038		
	6)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획재정부)	039		
	7)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산업통상자원부)	039		
	8)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국토교통부)	040		
	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미래창조과학부)	040		
	10) 틱스(TIPS) 프로그램(중소기업청)	041		
	2. 사회복지정책 분야	042		
	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국민권익위원회)	042		
	2) 일 가정 양립(고용노동부)	043		
	3)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046		
	4)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대검찰청)	047		
	5)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법무부)	048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048		
	7)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국민안전처)	051		
	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052		
	9)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경찰청)	052		
	10)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환경부)	053		
	3. 교육문화정책 분야	055		
	1)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교육부)	055		
	2)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교육부)	056		
	3) 누리과정 지원(교육부)	057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송통신위원회)	058		
	5) 초등돌봄교실(교육부)	059		
	6) 도시숲 조성(산림청)	060		
	7)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방송통신위원회)	061		
	8) 문화가 있는 날 확대(문화체육관광부)	062		
	9)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문화체육관광부)	063		
	10)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교육부)	064		
	4. 외교안보정책 분야	065		
	1)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국방부)	065		
	2)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국방부)	065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외교부)	065		
	4)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066		
	5)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국방부)	066		
	6)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외교부)	067		
	7)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외교부)	067		
	8) 한·일·중 3국 협력 강화(외교부)	068		
	9)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외교부)	068		
	10)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069		

제4장 분야별 정책평가	070
1. 경제정책 분야.....	072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072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093
3) 평가결과 종합.....	121
2. 사회복지정책 분야.....	130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30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157
3) 평가결과 종합.....	185
3. 교육문화정책 분야.....	192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92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211
3) 평가결과 종합.....	239
4. 외교안보정책 분야.....	247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47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274
3) 평가결과 종합.....	305
 제5장 정부 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312
1. 정부 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314
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317
3. 정부 정책지지도, 정책 체감도, 정부신뢰도, 사회신뢰도간의 인과관계.....	321
 제6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322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324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328
1) 경제정책 분야.....	328
2) 사회복지정책 분야.....	331
3) 교육문화정책 분야.....	335
4) 외교안보정책 분야.....	339
 참고문헌	 341
부록-2016년 평가 대상 정책 목록(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346

표 목 차

[표 2-1]	경제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3
[표 2-2]	사회복지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4
[표 2-3]	교육문화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4
[표 2-4]	외교안보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5
[표 2-5]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경제정책 분야.....	031
[표 2-6]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사회복지정책 분야.....	032
[표 2-7]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교육문화정책 분야.....	032
[표 2-8]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외교안보정책 분야.....	033
[표 3-1]	일기양득 캠페인의 5대 핵심 분야 및 내용.....	044
[표 3-2]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045
[표 3-3]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045
[표 3-4]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현황.....	047
[표 3-5]	연도별 미약류 밀반입 적발 현황.....	048
[표 3-6]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049
[표 3-7]	개편 이후 수급자 변화.....	050
[표 3-8]	신청 탈락자 연계 현황.....	051
[표 3-9]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건수 변화.....	054
[표 3-10]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를 위한 주요 개정 사항.....	056
[표 3-11]	사·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058
[표 3-12]	최근 5년간 계층별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적.....	059
[표 3-13]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060
[표 3-14]	연차별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투자계획.....	061
[표 3-15]	장애인방승수신기 보급 현황.....	062
[표 3-16]	해외 세종학당 설치 현황.....	064
[표 3-17]	초·중·고 2015년 SW 교육과정 개편 내용.....	064
[표 5-1]	정부정책지지도 교차분석결과.....	317
[표 5-2]	정부신뢰도 교차분석결과.....	318
[표 5-3]	사회신뢰도 교차분석결과.....	320
[표 5-4]	회귀분석 결과.....	321

그림 목 차

[그림 2-1]	경제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26
[그림 2-2]	사회복지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27
[그림 2-3]	교육문화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28
[그림 2-4]	외교안보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30
[그림 3-1]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2015년 기준).....	050
[그림 3-2]	국가장학금 구조.....	055
[그림 3-3]	학자금 대출 제도의 구조.....	056
[그림 3-4]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062
[그림 3-5]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참여자의 만족도 추이.....	063
[그림 4-1]	경제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072
[그림 4-2]	임금피크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73
[그림 4-3]	임금피크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74

[그림 4-4]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75
[그림 4-5]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76
[그림 4-6]	가계부채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77
[그림 4-7]	가계부채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79
[그림 4-8]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79
[그림 4-9]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81
[그림 4-1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81
[그림 4-1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83
[그림 4-12]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83
[그림 4-13]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85
[그림 4-14]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85
[그림 4-15]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87
[그림 4-16]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87
[그림 4-17]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89
[그림 4-18]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89
[그림 4-1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91
[그림 4-20]	팁스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91
[그림 4-21]	팁스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93
[그림 4-22]	임금피크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093
[그림 4-23]	임금피크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096
[그림 4-24]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096
[그림 4-25]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098
[그림 4-26]	가계부채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099
[그림 4-27]	가계부채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1
[그림 4-28]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01
[그림 4-29]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3
[그림 4-3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04
[그림 4-3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6
[그림 4-32]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07
[그림 4-33]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9
[그림 4-34]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09
[그림 4-35]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12
[그림 4-36]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12
[그림 4-37]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14
[그림 4-38]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15
[그림 4-3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17
[그림 4-40]	팁스 프로그램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18
[그림 4-41]	팁스 프로그램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21
[그림 4-42]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121
[그림 4-43]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124
[그림 4-44]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127
[그림 4-45]	사회복지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130
[그림 4-46]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31
[그림 4-47]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33
[그림 4-48]	일 가정 양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34
[그림 4-49]	일 가정 양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36
[그림 4-5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36
[그림 4-51]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38

[그림 4-52]	미약류 확산 차단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39
[그림 4-53]	미약류 확산 차단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41
[그림 4-54]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42
[그림 4-55]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44
[그림 4-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45
[그림 4-5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47
[그림 4-58]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47
[그림 4-59]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49
[그림 4-6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50
[그림 4-6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52
[그림 4-62]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52
[그림 4-63]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54
[그림 4-64]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55
[그림 4-6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57
[그림 4-66]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58
[그림 4-67]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60
[그림 4-68]	일 가정 양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61
[그림 4-69]	일 가정 양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63
[그림 4-7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63
[그림 4-71]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66
[그림 4-72]	미약류 확산 차단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66
[그림 4-73]	미약류 확산 차단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68
[그림 4-74]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69
[그림 4-75]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71
[그림 4-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72
[그림 4-7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74
[그림 4-78]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74
[그림 4-79]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76
[그림 4-8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76
[그림 4-8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79
[그림 4-82]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79
[그림 4-83]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81
[그림 4-84]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182
[그림 4-8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84
[그림 4-86]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185
[그림 4-87]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187
[그림 4-88]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190
[그림 4-89]	교육문화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192
[그림 4-90]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93
[그림 4-91]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94
[그림 4-92]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94
[그림 4-93]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96
[그림 4-94]	누리과정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96
[그림 4-95]	누리과정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97
[그림 4-96]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98
[그림 4-97]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99
[그림 4-98]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00
[그림 4-99]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01

[그림 4-100]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02	[그림 4-148]	한일 중 3국 협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66
[그림 4-101]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03	[그림 4-149]	한일 중 3국 협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68
[그림 4-102]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04	[그림 4-150]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68
[그림 4-103]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05	[그림 4-151]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71
[그림 4-104]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06	[그림 4-152]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71
[그림 4-105]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07	[그림 4-153]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73
[그림 4-106]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07	[그림 4-154]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76
[그림 4-107]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09	[그림 4-155]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78
[그림 4-108]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09	[그림 4-156]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79
[그림 4-109]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11	[그림 4-157]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81
[그림 4-110]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11	[그림 4-15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82
[그림 4-111]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13	[그림 4-159]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84
[그림 4-112]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 아동 체계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14	[그림 4-160]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85
[그림 4-113]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 아동 체계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16	[그림 4-161]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87
[그림 4-114]	누리과정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16	[그림 4-162]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88
[그림 4-115]	누리과정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19	[그림 4-163]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91
[그림 4-116]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19	[그림 4-164]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91
[그림 4-117]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22	[그림 4-165]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94
[그림 4-118]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22	[그림 4-166]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94
[그림 4-119]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25	[그림 4-167]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96
[그림 4-120]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25	[그림 4-168]	한일 중 3국 협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97
[그림 4-121]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27	[그림 4-169]	한일 중 3국 협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99
[그림 4-122]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28	[그림 4-170]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99
[그림 4-123]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31	[그림 4-171]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01
[그림 4-124]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31	[그림 4-172]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302
[그림 4-125]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33	[그림 4-173]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05
[그림 4-126]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34	[그림 4-174]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306
[그림 4-127]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36	[그림 4-175]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307
[그림 4-128]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237	[그림 4-176]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310
[그림 4-129]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39	[그림 5-1]	정부정책지도, 삶의 질, 정부신뢰, 사회신뢰	314
[그림 4-130]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239	[그림 5-2]	4대 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	315
[그림 4-131]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242	[그림 5-3]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316
[그림 4-132]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245	[그림 5-4]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안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316
[그림 4-133]	외교안보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248	[그림 6-1]	4대 정책분야별 종합평균	325
[그림 4-134]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48	[그림 6-2]	40개 정책 평균 비교	326
[그림 4-135]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50	[그림 6-3]	40개 정책 평가지표별 점수 결과	327
[그림 4-136]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51			
[그림 4-137]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53			
[그림 4-13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53			
[그림 4-139]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55			
[그림 4-140]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56			
[그림 4-141]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58			
[그림 4-142]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58			
[그림 4-143]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60			
[그림 4-144]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61			
[그림 4-145]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63			
[그림 4-146]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63			
[그림 4-147]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66			

01

제1장 서론

정책평가는 일반적인 정부의 신뢰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의 신뢰도는 정부가 공공성을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로서, 정부와 국민 간의 사회적 자본이며, 정치, 경제, 법·질서 등 사회 전반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국민 정서의 반영이다. 반면 정책평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사업이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보다 분석적 평가 결과이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평가할 정확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되며,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도와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1 연구목적	014
2 연구방법과대상	016

정책평가 방법의 다양성

고려대학교 “대한민국 정책평가”에 참가한 연구진들은 매년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면서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사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항목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2016년에는 4개의 정책분야 중 어느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떠한 분야에 정책이 좋아졌다고 혹은 나빠졌다고 느끼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연구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국내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해외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등장 등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고용 침체는 이제 “뉴 노멀 (new normal)”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또한 국정농단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너무도 낮을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과연 정책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는 일반적인 정부의 신뢰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의 신뢰도는 정부가 공공성을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로서, 정부와 국민 간의 사회적 자본이며, 정치, 경제, 법·질서 등 사회 전반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국민 정서의 반영이다. 반면 정책평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사업이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보다 분석적 평가 결과이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평가할 정확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되며,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도와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평가는 환류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역량향상을 도모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증가하고, 양질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나 집행자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해 서비스가 개발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는 평가와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과 발전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는 이러한 정책평가의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 주요정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국민과 전문가들은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부터 “대한민국 정책평가”를 실시해 왔다.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가 기존

의 다른 평가와 다른 점은 조사의 엄정성과 조사의 범위, 그리고 일관성에 있다고 하겠다. 우선 본 평가는 정부정책을 경제정책, 교육문화정책, 사회복지정책, 외교안보정책의 4개 분야로 나누고, 매년 각 분야에서 엄정하게 선정된 10개씩, 총 40개의 정책을 구조, 내용, 과정,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였는데, 이는 평가대상이 임의적이거나 제한된 기존의 평가들과 차별된다. 또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3년간 같은 평가기법을 유지하며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향후 대한민국 정책평가이론을 개발하고 분석을 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평가는 매년 같은 평가에 안주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려대학교 “대한민국 정책평가”에 참가한 연구진들은 매년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면서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사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항목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2016년에는 4개의 정책분야 중 어느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떠한 분야에 정책이 좋아졌다고 혹은 나빠졌다고 느끼는지를 물음으로써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40개의 정책들은 정부부처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정책은 정부부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정책평가가 나쁘다는 것이 반드시 정책의 실패로 단정되고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앞서서 밝혔듯이, 정책평가의 주요 목적은 환류를 통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 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평가의 결과는 다음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회마련의 초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올해 일부 부처가 예년의 평가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평가를 거부하게 된 것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발전적인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처나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발전적인 정책 개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 방법과 대상

앞서서 밝혔듯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는 국민인식조사와 정책전문가의 정책 평가에 교수진들의 정성평가를 더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평가와 구별된다. 또한 특정 정책영역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의 포괄적인 분야에서 평가를 했다는 점도 기존의 정책평가들과 차별된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 정책영역의 구분과 정책목록의 선정: 평가에 참여한 10명의 교수진들은 기존의 4개의 정책분야(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를 2016년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각 부처별로 대표되는 정책을 요청하여 취합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로 배정된 교수들은 중요한 정책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누락된 정책을 추가하였다.

2. 정책평가 대상의 선정: 분야별로 정리된 정책목록을 일반국민 600명(정책분야별 150명)과 정책전문가 80명(정책분야별 20명)을 대상으로 정책의 영향력, 정책시행의 시급성을 물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으며, 여기에 참여교수들의 정성적 평가를 더해 각 분야별 10개, 총 4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3.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 설문조사: 앞서서 설명한 총 40개의 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 2,000명(정책 분야별 500명), 정책전문가 200명(정책분야별 5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앞서서 밝힌 4개의 분야에서 9개의 세부항목의 질문에 답했으며, 응답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40개 정책의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

4. 분야별 정성평가와 최종 점수의 산출: 앞서서 설명한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참여한 교수들은 9개의 세부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문결과(30%), 정책전문가의 평가결과(35%), 그리고 교수진의 정성평가결과(35%)에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40개 분야 정책의 최종점수를 산출하였다.

앞서서 기술하였듯이, 2016년 정책평가에서는 이러한 항목들 외에도 2015년부터 조사된 국민의 삶에 대한 정책의 기여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설문 항목과 함께, 정책분야의 중요도, 그리고 영역별 4개의 정책분야의 정책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02

제2장 정책평가 방법론

본 연구진은 지난해(2015년) 평가에서 4회에 걸친 평가지표 팀 회의와 2회의 전체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책의 과정과 결과 이외에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목표와 정책대안 간에 논리적 연계성이 얼마나 뚜렷한가와 같은 정책의 구조적 측면과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현가능한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 영역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3) 사회현안 반영도, 4) 정책의 실현가능성, 5) 정책의 형평성, 6) 정책의 투명성, 7) 정책의 책무성, 8) 정책의 효과성, 9) 정책의 만족도의 9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올해의 평가에서도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라는 네 가지 큰 영역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9개의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에 더해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정책지지도, 삶의 질과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과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선정된 분야별 각 20개씩의 정책을 가지고 일반인 600명과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지도, 영향력, 우선시행 여부를 물었는데, 인지도는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선생님께서서는 이 정책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시행 여부는 “선생님께서서는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각각 제기하였다. 순위가 결정된 분야별 20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차로 최종 1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1 평가지표와 의미	020
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022
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023



1. 평가지표와 의미

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

가)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정책목표가 누가 보기에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목표의 명확성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1)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3) 복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목표 간 일관성이 있는지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수단으로서의 정책과 정책목표 간에 원인과 결과로서 뚜렷한 논리적 연계성이 존재하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제시된 정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논리적 연결이 뚜렷하게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

가)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는 대상 정책이 현재 거시적인 국가/사회의 목표(social goal)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의 경우 경제성장이나 경제민주화,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문제와 관련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들이 수집 분석되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나)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제도, 자원,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원래 의도한 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1)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타당해야 하고(재정적 실현가능성), 2)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비해서 소요되는 인력과 인프라가 타당해야 하며(행정적 실현가능성), 3) 정책의 법적근거가 충실히 마련되어야 한다(법/제도적 실현가능성).

다) 정책의 형평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하며, 정책의 형평성은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되며,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집단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혜택을 누려서도 안된다.

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

가)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은 정책과정(입안 및 집행)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고 그러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누구나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이란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를 통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책무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1)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하고, 2) 정책이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3)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주기적인 환류를 통해 재도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4)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

가)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정책이 원래 의도한 대로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혹은 정책이 고유의 목표뿐 아니라 연관목표의 달성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는 정책에 대하여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정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반영하는 평가로 이루어진다.

5) 기타 영역

본 연구에서는 이 밖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규모의 적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삶의 질 등에 대한 질문을 설문 조사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 요인의 수준에 따라 분야별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대부분의 기존 교과서는 정책평가를 주로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는 효과성 개념, 즉 정책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Bingham, 2002).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인과관계의 틀(정책개입 → 정책효과)에서 효과성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평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반영하는 정책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효과성 기준으로 낮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이 가지는 다면적 성격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표 선정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책평가 관련 문헌에서 정책의 결과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과와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된 좋은 정책의 기준은 구조와 내용,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학계의 평가 기준이 정책 자체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정책 자체는 이미 제대로 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가정 밑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자체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평가도 좋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의도한 결과를 가져 온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지난해(2015년) 평가에서 4회에 걸친 평가지표 팀 회의와 2회의 전체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책의 과정과 결과 이외에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목표와 정책대안 간에 논리적 연계성이 얼마나 뚜렷한가와 같은 정책의 구조적 측면과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현가능하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 영역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3) 사회현안 반영도, 4) 정책의 실현가능성, 5) 정책의 형평성, 6) 정책의 투명성, 7) 정책의 책무성, 8) 정책의 효과성, 9) 정책의 만족도의 9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올해의 평가에서도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라는 네 가지 큰 영역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9개의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에 더해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정책지도, 삶의 질과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체감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본 연구진은 평가의 대상이 될 정책들을 선정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평가 대상 정책을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샘플링(sampling)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별 '정책'의 조작적 정의(定義)에 따라 평가 대상 정책 목록의 구성이 결정되므로 예컨대 근거 법령의 존재(신규 입법 혹은 개정), 예산 편성의 단위(項 혹은 目), 관할권의 확립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대상은 '정책'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과제는 정부의 평가가 아니라 개별 정책의 평가이다. 따라서 복수(複數)의 정부에 걸쳐 있는 연속적 정책도 존재할 수 있고, 반면에 동일 정부에서도 상이한(혹은 상충적인) 복수의 정책이 존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에 유념하여 평가 대상이 될 정책의 예비 선정을 2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해당 정부 부처와 동아일보가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망라적 목록(exhaustive list)을 만들었다. 해당 정부 부처는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정책의 목록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특히 관련된 법령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는 이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동아일보의 해당 부처 출입기자가 검토의견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마련된 망라적 목록을 가지고 연구진 전문가 집단 검토 FGD(Focused Group Discussion)를 통해 취합된 정책들 중에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각 20개의 정책을 선별하였다. 전문가 집단 검토 시 고려된 요인들은 정책 목표 및 추진일정의 유무, 소요 예산의 규모, 전담 인원의 크기, 근거 법령의 존부(存否) 등이다.

[표 2-1] 경제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경제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2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대형 M&A 적극 대응
3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4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5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6		국토교통부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7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8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0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확대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6차 산업화
13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시대 선제적 대응
14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15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16		산업통상자원부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17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8		중소기업청	팁스(TIPS) 프로그램
19		해양수산부	7개 항만재개발 및 6개 거점마리나 항만 개발
20		해양수산부	해양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브랜드 가치제고

[표 2-2] 사회복지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사회복지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2		경찰청	112 신고 총력 대응체계 구축
3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4		고용노동부	일 가정 양립
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중심 민원상담을 위한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6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7		국민안전처	간급신고처리체계 개선
8		대검찰청	청정국 위협하는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9		법무부	디지털 증거 추가 형사소송법 개정
10		법무부	사회적 약자 등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1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강화
1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3		보건복지부	읍면동을 지역사회 이웃사촌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14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16		여성가족부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17		행정자치부	정부 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18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혁
19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20		환경부	그린카드제도

[표 2-3] 교육문화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NCS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전환
2		교육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3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
4		교육부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5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및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6		교육부	초·중등 SW교육 강화
7		교육부	초등 돌봄교실
8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 활성화
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창조융합벨트
12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영화관 건립
13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14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15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강화
16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17	교육문화	산림청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실현
18		산림청	도시숲 조성
19		산림청	해외산림 자원개발 활성화
20		해양수산부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유치

[표 2-4] 외교안보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외교안보	국방부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2		국방부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3		국방부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4		병무청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제' 운영
5		외교부	EU 및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핵심 유럽 국가와의 협력 강화
6		외교부	개발협력구상 추진 정책
7		외교부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8		외교부	국제무대에서 모범 중견국으로서 국제적 리더십 강화
9		외교부	난민 지원
10		외교부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11		외교부	중남미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
12		외교부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한국 매력 확대
13		외교부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14		외교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15		외교부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16		외교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17		외교부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18		통일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19		통일부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20		통일부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준비 내실화

2) 평가대상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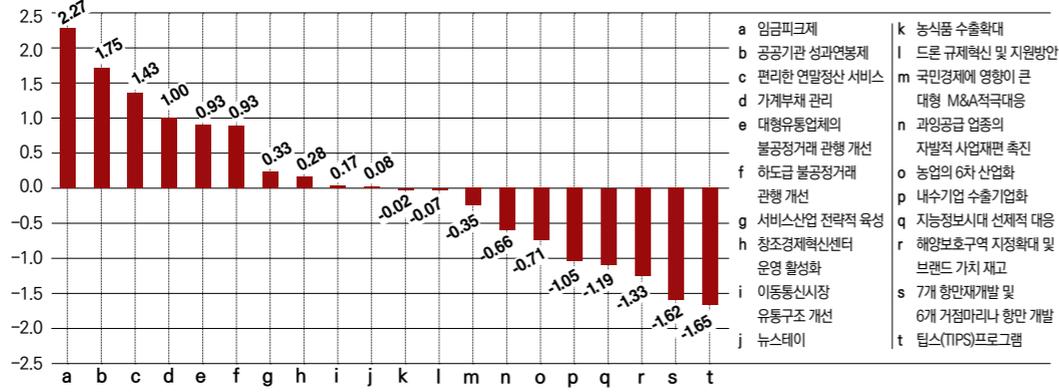
가)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 결과

위에서 언급한 제2단계 FGD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각 20개씩의 정책을 가지고 일반인 600명과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지도, 영향력, 우선시행 여부를 물었는데, 인지도는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선생님께서서는 이 정책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시행 여부는 “선생님께서서는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각각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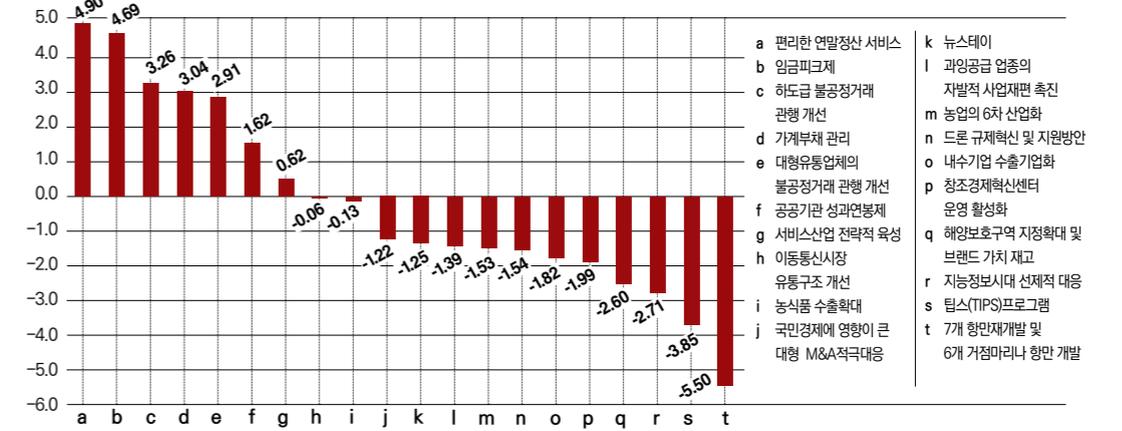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원점수를 표준점수화하고, 이를 다시 가중평균하여(전문가 60%, 일반인 40%) 점수화한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20개 정책의 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2-1] 경제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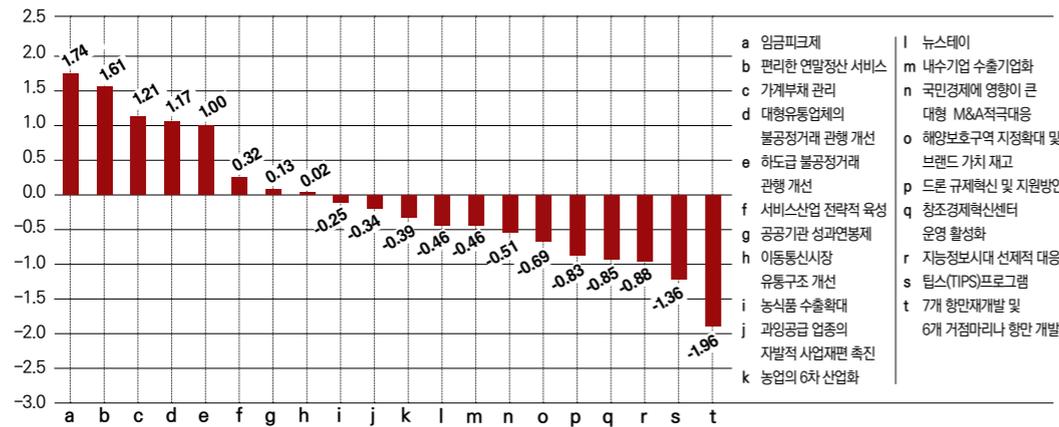
경제정책 분야 : 인지도



경제정책 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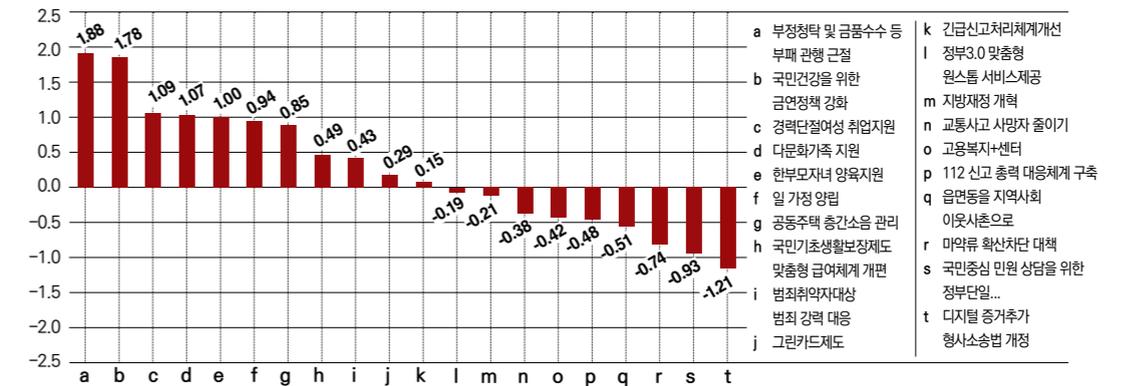


경제정책 분야 :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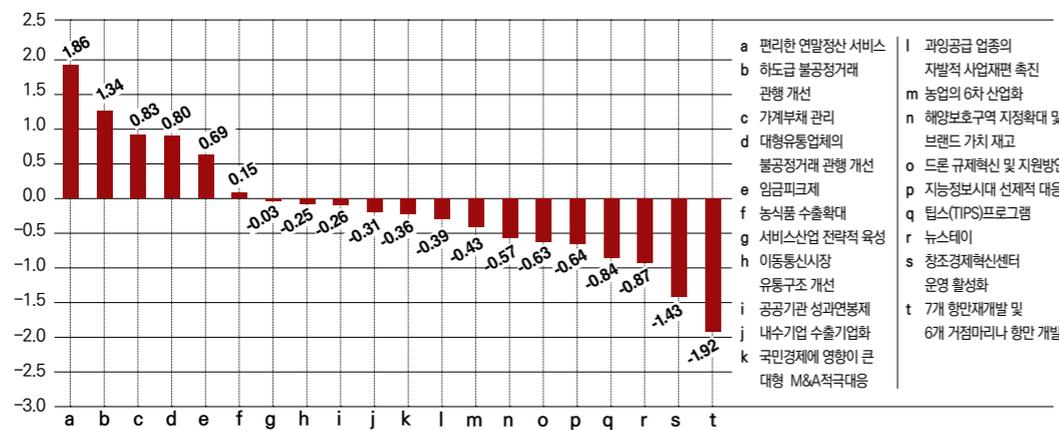


[그림 2-2] 사회복지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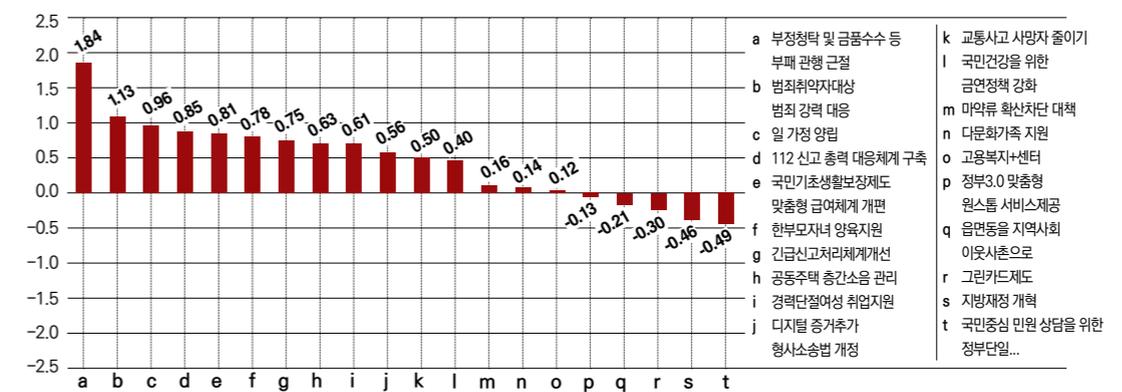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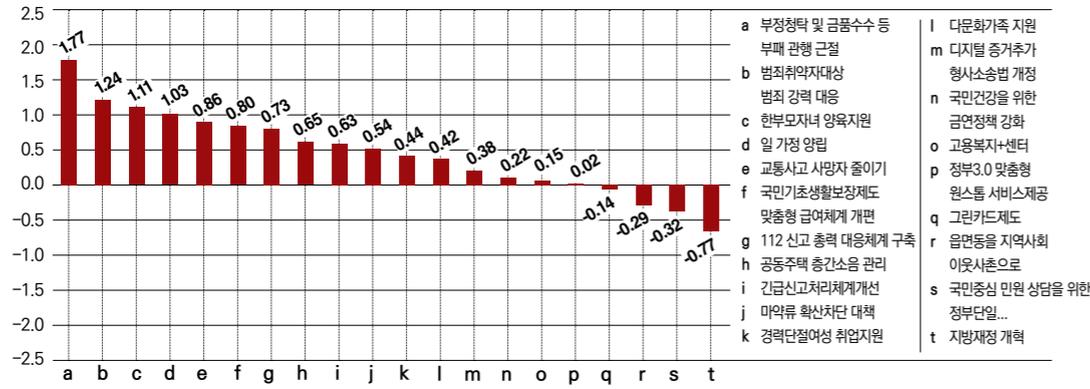
경제정책 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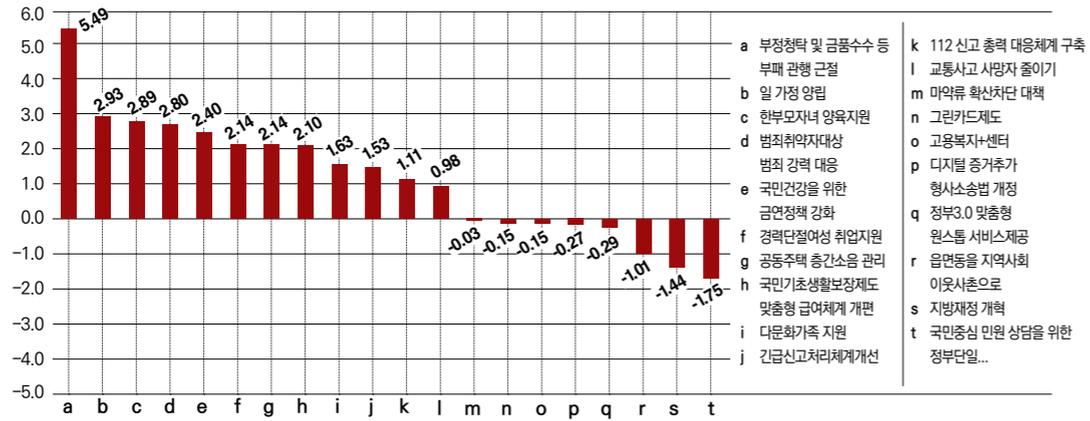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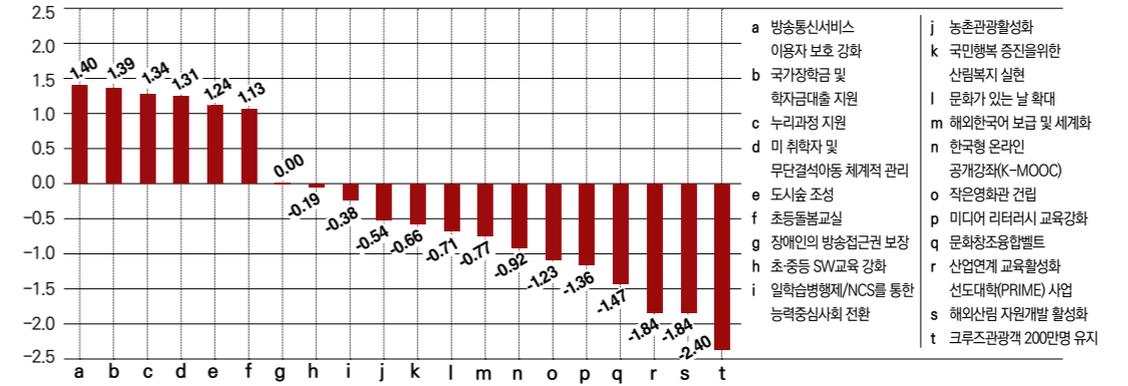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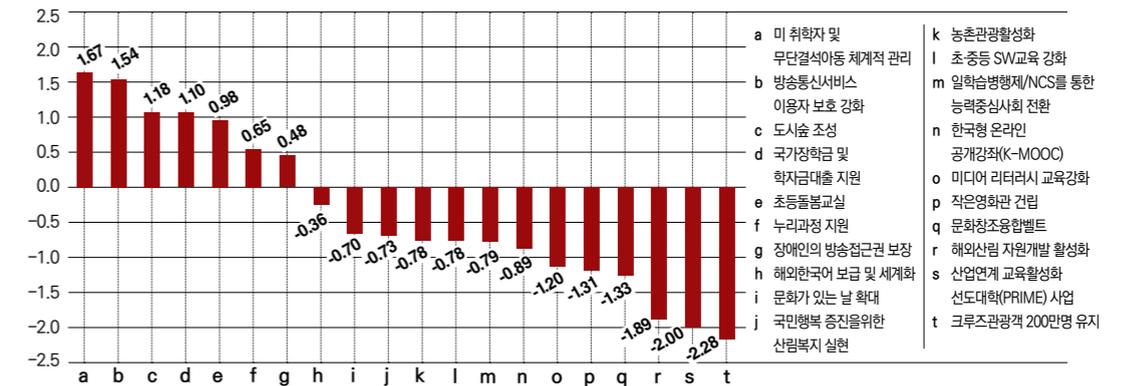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 합산점수



교육문화 분야 :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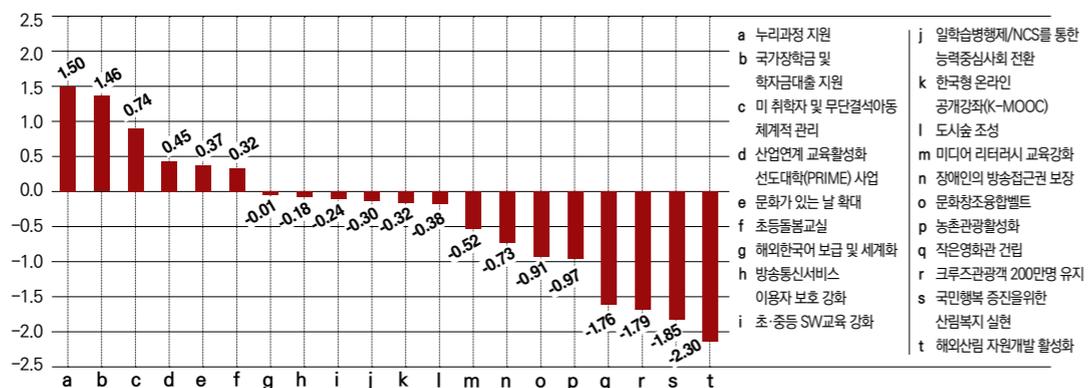


교육문화 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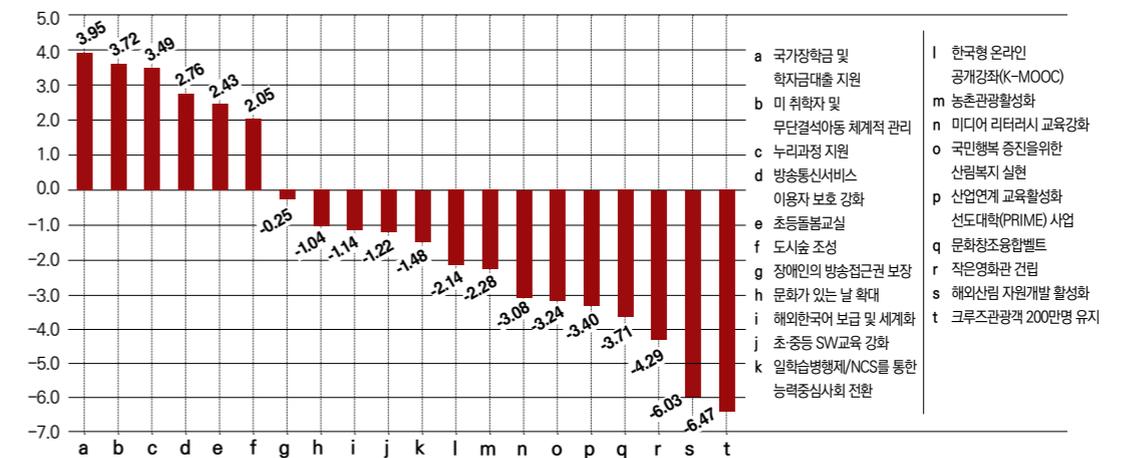


[그림 2-3] 교육문화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교육문화 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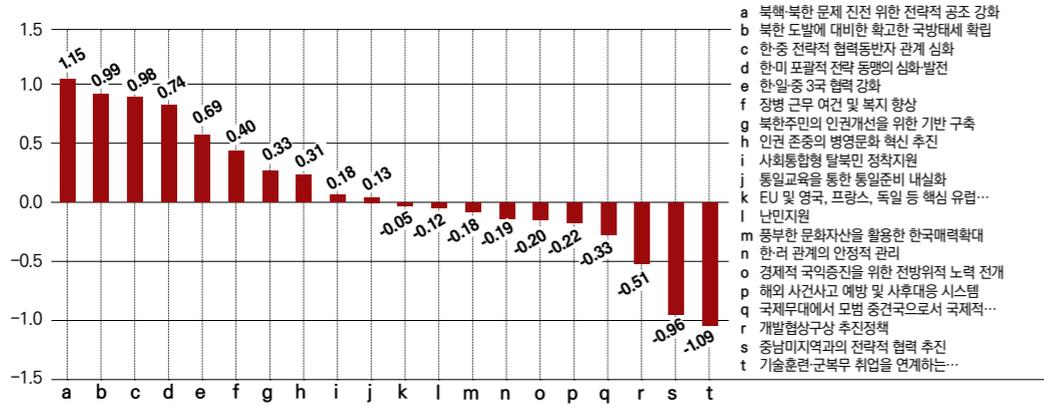


교육문화 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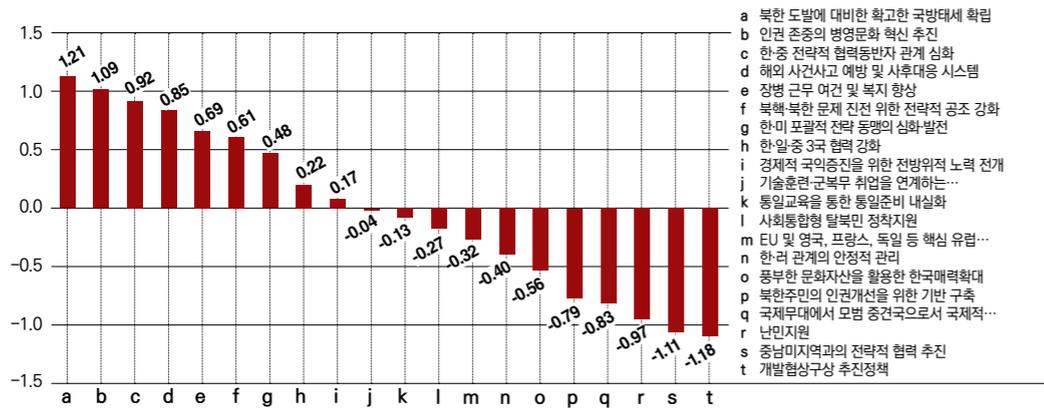


[그림 2-4] 외교안보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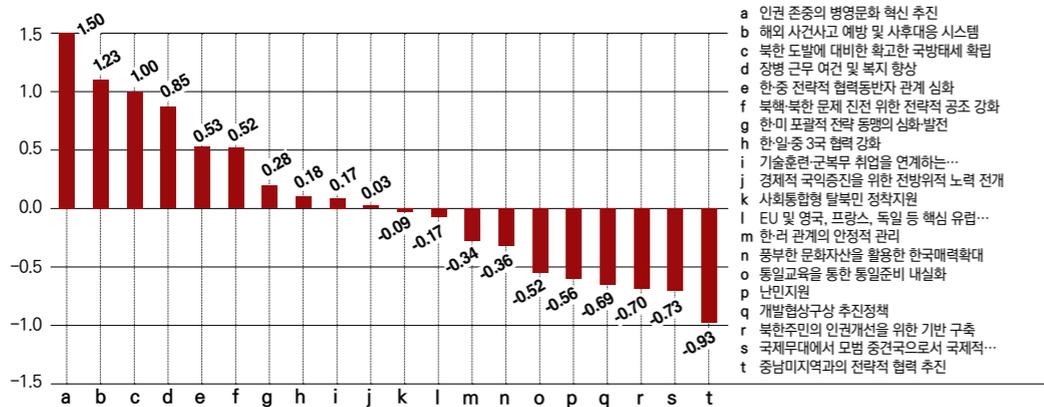
외교안보 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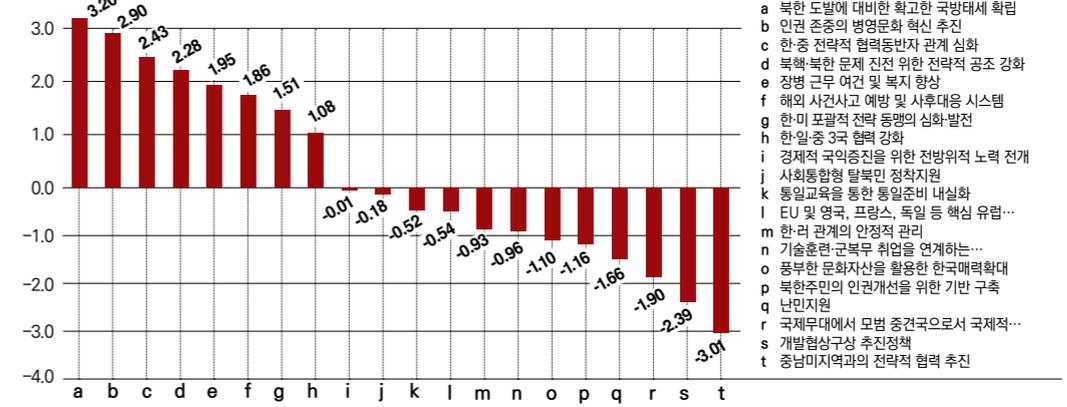
외교안보 분야 : 영향력



외교안보 분야 : 우선시행 여부



외교안보 분야 : 합산점수



나)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결과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순위가 결정된 분야별 20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차로 최종 1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각 분야에서 선정된 정책 10개의 목록과 그 선정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다.

[표 2-5]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경제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경제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3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4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6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7		산업통상자원부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8		국토교통부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9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10		중소기업청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 근거

경제팀의 최종 리스트는 1차 설문조사의 리스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편이다. 우선순위 안에 속하지 못했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구조조정 문제를 다루는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신기술 규제완화와 관련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드론 규제혁신,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향점으로 자주 논의되는 실리콘밸리형 창업경제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팁스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그 대신 반복 평가되고 있는 사업들과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한 4개 사업은 제외되었다.

[표 2-6]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사회복지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사회복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2		고용노동부	일 가정 양립
3		여성가족부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4		대검찰청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5		법무부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6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7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8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9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10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선정 근거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최종 평가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1차 설문조사 결과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점수를 받은 10개 정책들 중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등 2개를 제외하고, 대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을 포함하였다. 금연 정책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이미 전년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요성 측면에서 연이어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하지만, 영향력과 시의성 측면에서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연구진 판단에 근거하여 제외하였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여러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중요 정책이었지만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마약류 확산 차단 정책은 최근 들어 마약류 국내 유입 및 유통,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장차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선정하였다.

[표 2-7]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교육문화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교육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2		교육부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3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
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5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6		산림청	도시숲 조성
7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9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10		교육부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선정 근거

교육문화 평가팀은 1차 평가결과 상위 점수를 받은 10개 정책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최종 평가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언론측은 1차 평가에서 20개 정책 중 17위이었던 문화창조융합벨트(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해당 사안의 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사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1차 평가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최종 평가대상으로 상위 10개 정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표 2-8]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외교안보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외교안보	국방부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2		국방부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3		외교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4		외교부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5		국방부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6		외교부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7		외교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8		외교부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9		외교부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위적 노력 전개
10		통일부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선정 근거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최종평가대상 정책을 선정함에 있어 1차 평가 결과, 즉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위 10개 정책을 선정하였다.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국가의 안전과 존립 및 국익의 신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들이 다수이며, 따라서 지난 2년 간의 정책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은 제외하였다. 11위부터 20위까지의 정책 중 ‘EU 및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핵심 유럽 국가와의 협력 강화’(12위), ‘개발협력구상 추진’(19위) 정책의 경우 지난해 각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외 정책들의 경우 1위부터 10위까지의 정책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없어 설문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평가대상 정책을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와 과정, 기준과 근거에 따라 분야별 각 10개씩 총 40개의 정책이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03

제3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평가대상 정책 분야 : 경제정책 / 사회복지정책 / 교육문화정책 / 외교안보정책

분야별 각 10개씩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

1 경제정책 분야	036
2 사회복지정책 분야	042
3 교육문화정책 분야	055
4 외교안보정책 분야	065

1. 경제정책 분야

- 1) 임금피크제(고용노동부)
- 2)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 3) 가계부채 관리(금융위원회)
- 4)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 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기획재정부)
- 6)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획재정부)
- 7)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산업통상자원부)
- 8)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국토교통부)
- 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미래창조과학부)
- 10) 틱스(TIPS) 프로그램(중소기업청)

2. 사회복지정책 분야

- 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국민권익위원회)
- 2) 일 가정 양립(고용노동부)
- 3)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 4)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대검찰청)
- 5)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법무부)
-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 7)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국민안전처)
- 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 9)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경찰청)
- 10)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환경부)

3. 교육문화정책 분야

- 1)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교육부)
- 2)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교육부)
- 3) 누리과정 지원(교육부)
-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송통신위원회)
- 5) 초등돌봄교실(교육부)
- 6) 도시숲 조성(산림청)
- 7) 장애인인 방송접근권 보장(방송통신위원회)
- 8) 문화가 있는 날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9)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문화체육관광부)
- 10)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교육부)

4. 외교안보정책 분야

- 1)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국방부)
- 2)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국방부)
-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외교부)
- 4)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 5)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국방부)
- 6)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외교부)
- 7)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외교부)
- 8) 한·일·중 3국 협력 강화(외교부)
- 9)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외교부)
- 10)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1. 경제정책 분야

1) 임금피크제(고용노동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비용의 부담 완화 및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촉진을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저해하고 이는 곧 청년실업문제의 악화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도입되었다. 기본 아이디어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고령 근로자 인건비를 재원으로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정부는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실시했으며, 점차 민간기업으로의 임금피크제 실시와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1,080만원을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용 인원당 연간 540만 원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었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22일 현재 500대 기업의 62.9%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으로 도입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문화의 창출을 통해 균형 잡힌 경제 체질로의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발생 시 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 없이 신고 또는 제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본 정책의 핵심적 사안이다. 이 정책의 특징은 제도적 장치의 완비와 더불어 효과적인 방법을 통한 정책 이행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을 통해 도입된 제도는 크게 예방적 제도와 사후적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예방적 제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표 아래 수립된 것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 구축, 17개 지자체 및 20개 공공기관과의 협조 아래 16조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대한 '직불제' 실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후적 제도는 피해 발생 시 대기업의 보복 없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목표 아래 수립된 것으로,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보복사업자에 대한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대금미지급 행위 자진시정 면책제, 중소기업 익명제보센터 홍보 및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도 포함시키는 하도급법 개정의 추진으로 보복행위에 대한 연

려로 인한 효과적인 정책의 이행이 저해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제도적 개선의 훌륭한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노력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들로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에만 1,190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는 등 사후적 조치의 개선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92.3%가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4대 불공정행위의 10.5% 감소, 부당특약 설정행위의 10.1% 감소,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의 8.7% 감소 등 정량적으로도 사전적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사후적 제도의 유기적 결합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증가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 및 제품개발 총액 70.6% 증가, 인력채용 10.1% 증가 및 자금지원 전년 대비 2배 증가), 이는 본 정책의 주요 목적인 균형 잡힌 경제로의 체질개선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가계부채 관리(금융위원회)

본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 전반적 위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평균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 구조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등 구조를 개선하며, 은행권의 혁신성 관련 성과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특히 올해 발표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집 단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의 승인 및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과 전세금 분할상환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협의, 기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11월 24일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비록 예년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8.25 대책의 영향과 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증가세를 더욱 완화하고자 8.25 대책 이후 후속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금리상승에 대응하는 보완방안을 실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하고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체계를 확립하는 등 그동안 이루어진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분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잔금대출에 대해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관행 확산을 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잔금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신상품 출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 대상 특별 점검 등이 있다. 또한 금리상승에 대응하고자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하며 서민금융 역할 및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4)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본 정책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망 독점에서 야기된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은 부당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함으로써 납품업체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책입안 의도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정책은 크게 제도적 개선과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의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 지연 교부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왔던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로의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부당행위의 사전적 방지를 위하여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매장 이동 및 인테리어비용 부담 완화, 판촉행사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공정거래 위반시 무관용원칙 적용 등의 처벌과 6차 산업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새로운 상거래 플랫폼으로 등장한 소셜커머스 및 온라인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분야에서의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12월 중으로 예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을 추진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제도 설치 및 이행에 대한 주무부처의 노력은 마련되고 있는 중이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기획재정부)

2016년 1월 18일 정부는 공공부문 종사 비간부직까지 적용되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연공서열제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이러한 연공서열제에서 비롯되는 공공기관 내부경쟁의 부재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시각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주된 내용으로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4급 이상)비간부직에게까지 성과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고, 저성과자와 고성과자의 연봉 인상률을 성과에 따라 차등 결정하기로 한 것을 들 수 있다(1-3급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차이 3%, 성과연봉 비중 1-3급 20-30%, 4급 15-20%). 즉, 개개인의 업적 및 공헌도에 따라 개인별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인건비 지급의 총액은 고정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저렴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6월 10일 현재 공공기관 120곳이(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90곳)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120개 공공기관 중 44%인 53곳이 노사합의 없이 의사회의 의결만으로 일방적인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본 정책의 도입을 통해서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중은 약 70% 정도로 예측된다. 본 정책의 일방적 도입에 반발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파업이 뒤따랐으며 사회적인 논란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성과연봉제의 강력한 시행 의지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의 도입 마무리 후 기타 공공기관으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6)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정책은 성장잠재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 아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의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물류)의 육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제도상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한편 정부-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분야의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경제의 인프라를 혁신하며,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7대 유망서비스별 맞춤형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7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였고,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OECD 평균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이끌며 양질의 일자리를 25만 개 추가 창출할 것을 구체적 목표로 두었다. 이에 따라 의료법(원격의료 관련), 규제프리존법(공유민박업 관련), 외국환거래법(핀테크 외화송금 허용), 은행법(인터넷은행 지분규제 완화) 관련 입법 및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완료되지 않는 상태이다. 기획재정부 11월 1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국민 여가활동의 다양화, 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서비스 인재양성, 의료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확대, 서비스기업 지원확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되었다.

7)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산업통상자원부)

본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공급 과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을 통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기업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 재편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7월 28일 발표하였고 원활한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세제 지원 확대, 8.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중소·중견기업의 특별지원 등이 방안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8월 5일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또한 8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추어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활법 활용지원 센터'를 신설하고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정책 시행 초기 단계이나 9월 8일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을 필두로 11월 22일 기준 7개 업종의 10개 기업이 승인된 상태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승인업종, 사업재편 유형, 승인기업 규모, 지원요청사항 등이 다채로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8)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국토교통부)

본 정책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이 등장한 드론에 대한 규제혁신을 통해 드론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드론의 사용을 통해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시장수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상을 촉진하여 새로운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통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업의 활성화 및 시장수요의 창출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적으로 무인항공기 시대 선제 대응 및 무인항공기 비행여건의 개선이라는 하드웨어적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드론 사용사업의 범위의 네거티브 전환, 소형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전문교육 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단축 등을 통하여 창업의 걸림돌을 줄이고자 하며, 드론 시범사업의 야간 및 가시권 밖의 비행허가, 공공 수요 발굴 및 제작업체와의 매칭 지원,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드론 사업의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업 및 시장의 창출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시험비행장소 확보 및 안전가이드 앱의 제공,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 및 장기비행 허가, 부처 통합형 온라인 승인 시스템 구축 등의 비행여건 개선과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 및 통합 시범운영, 중대형 무인기 비행성능 시험을 위한 국가비행성능시험장 구축,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 등의 하드웨어적 개선을 병행하는 중이다. 비교적 최근에 입안된 정책 이어서 현재까지 새로운 시장수요의 창출과 창업의 증가 등의 가시적인 결과는 부족하지만, 정책의 의도대로 하드웨어적 개선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그 예로, 7월 4일 항공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이 수도권 지역에 지정되었고, 비행안전 앱('Ready to Fly')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또한 5월 중에는 공공수요 발굴 및 제작업체 매칭지원을 위한 '2016 Go Drone'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정책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센터를 통해 창업, 지역 중소기업 혁신,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목표로는 창업 관련 멘토링, 윈스톱서비스(금융·법률특허 등), 창업공모전, 교육강연,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혁신 관련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며, 혁신센터별 전담기업의 강점을 살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 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것 등을 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5년 7월 전국 17개 센터 구축을 완료한 후 2016년 8월 12일 현재 창업 보육기업 1,175개, 중소기업 혁신 건수 1,664개, 투자 유치 2,850억 원, 매출 증가 1,606억 원, 신규 고용 1,360명의 정량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러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등 정성적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삼성, LG, SK 등 센터 전담 기업의 특허 개방 및 기술이전

이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에 있어 상생협력이 확대되었다고 자체 평가되었다. 한편 센터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관련 과학기술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2016년 6월 23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 스캔들의 영향으로 지자체 예산 축소가 논의되는 등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10) 틱스 프로그램(중소기업청)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틱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엑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초기 전문 VC, 선배 벤처기업, 기술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유망한 창업 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 R&D 등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고급 기술 인력의 벤처창업 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엑셀러레이터, 기술대기업 등이 TIPS 운영사로서 발굴·엔젤투자한 창업 팀에게 1억 원 내외로 우선 투자하고 보육·멘토링하는 한편, 정부의 기술개발자금(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최장 3년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10월 기준 성공벤처인 주도의 엔젤투자회사 및 벤처회사 등 21개 운영사를 선정하여 189개의 창업 팀을 선정하고 엔젤투자자로 팀당 평균 2억 원, 총 371억 원을 매칭하였으며 R&D에 607.8억 원, 창업사업화에 102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기준 60개 창업 팀이 국내·외 후속투자 2,014억 원을 유치하여 2016년 목표 대비 3.1% 초과달성하였으며 국내·외 민간투자를 총 2,385억 원 유치하여 정부지원금 709.8억 원 대비 3.3배 유치, 16개 팀이 해외 엔젤투자사 및 VC 등으로부터 약 3,049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 현재 최종평가 완료된 12개 창업 팀 중 9개 창업 팀이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전체 창업자 591명 중 석·박사 303명(51.3%), 국내·외 대기업 출신이 170명(28.8%)이었다.

2. 사회복지정책 분야

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국민권익위원회)

정부의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전체의 59.2%가 한국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6점으로 대상 168개국 중 37위, OECD 회원국 기준으로는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동년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공무원의 3.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인식차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의 관행을 개선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 등 부패유발적 사회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제정 추진을 결정하였고, 이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안을 마련하여 동년 10월,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4~5월에 권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 이후 정부입법절차가 진행되었다. 2012년 8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국민 입법예고가 실시되었으며, 2013년 8월 5일 정부 최종안이 국회로 제출되었다. 국회에서 정부위원회에 총 6차례에 걸쳐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 1월 12일 정무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안으로 의결되었다. 이어 동년 3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7일 공포되었고, 2016년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 대가성 없이도 일정 범위 이상의 금품 수수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통제장치를 구체화하고, 모든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 단체,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 공무원으로 의제 가능한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에 비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부패방지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으로 2016년 2월 기준 39,965개에 이른다. 또한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법령 내에 대표적인 부정청탁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과 결부되지 않는 청탁 행위 자체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 형법 등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를 반드시 입증해야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최초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시 동일한 청탁을 받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일 가정 양립(고용노동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임신·출산과 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여성 취업의 확대와 여성노동의 주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최초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과 함께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었고, 200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으로 개정하는 등 단순 보육정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주요 정책 목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2007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 지역사회 조성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성할 것을 목표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0년에는 유연근무제를 시범도입하면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근무 형태의 변화와 조정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임신한 여성의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하였으며, 유산산 휴가 범위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였다. 2006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휴가금 지원, 육아휴직 급여를 2007년 월 30만원 수준에서 점차 인상하여 2011년부터는 통상임금의 40%,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다. 육아휴직 대상자도 확대하여 2004년 기준 자녀 나이 3세 미만에서 2010년에는 6세 미만까지 확대하였다. 2007년 최초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최초 최대 3일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1년에는 5일로(유급휴가 3일) 확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을 복무 또는 근로 기간에 산정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요건 역시 자녀 만 6세 미만, 3년 동안으로 확대하였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입된 대표적인 정책이 가족친화 인증제도. 2010년에는 근무형태의 변화와 조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유연근무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확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 가정 양립 정책을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육아·보육 지원,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일·가정 양립 기업에 대한 지원, 기초고용 평등질서 확립 등 다섯 가지이다. 임신·출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유산·사산 위험이 높은 임신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2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인건비 지원,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및 근로 전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유해·위험업종에 대한 근무금지, 배우자 출산휴가(3~5일), 출산 전·후 90일간 보호 휴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부부 대

상 시술비 지원 등이 있다. 육아·보육 정책으로는 육아 또는 수유시간 부여,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최대 연 90일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제도, 영·유아 건강검진지원제도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과 기존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인건비 일부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일·가정 양립 캠페인 등이 있다. 일·가정 양립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체·사업주 대상 지원,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등이 있고, 이를 위한 기초고용 평등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여성고용에 대한 근로감독,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등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일·가(家)양립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가양립 캠페인의 5대 핵심 분야는 크게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유연근무제 활용, 불필요한 회식과 야근 줄이기, 육아 부담 분담, 자기계발 및 휴가 지원 등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1] 일·가양립 캠페인의 5대 핵심 분야 및 내용

핵심 분야	세부 프로그램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교대제 개편, 회의시간 단축, 집중근무제, 보고서 줄이기 등
유연근무제 활용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현장출퇴근제 등
불필요한 회식/야근 줄이기	정시퇴근제, 3무(無)데이 운영, 문화형 회식
육아 부담 분담	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 자동육아휴직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수유실·직장어린이집 운영
자기계발 및 휴가 지원	동호회 지원, 연차 사용 촉진, 안식년제도 등

자료: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5)

이외에도 유연근무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연근무 장려금 최대 월 30만원(주 7만원), 재택·원격근무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주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일·가양립 캠페인 참여 기업 근로자에 대한 제휴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전후 휴가자 수와 지원금액, 육아휴직자 수와 육아휴직 지원금액을 비교하면, 휴가자 수와 휴가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와 육아휴직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낮지만, 제도 시행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산전후 휴가자 수	58,368	68,526	70,560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출산전후 휴가 지원금액	132,412	166,631	178,477	192,564	232,915	241,900	235,105	236,845	258,139
육아 휴직자 수	합계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여성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남성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육아휴직 지원금액	합계	60,989	98,431	139,724	178,121	276,261	357,797	420,248	500,663
	여성	60,249	97,449	138,221	175,582	270,500	348,644	408,557	482,743
	남성	740	982	1,503	2,539	5,761	9,153	11,691	17,920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 DB

이외에도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와 공직사회에서 연가 활용 활성화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정부 부처의 연가 활용 일수는 2012년 2.3일에서 2016년 6월 기준 3.8일로 증가한 바 있고,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수는 2013년 15,373명에서 2016년 24,679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3-3]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알고있다						
		출산(전후) 휴가제	배우자 출산 휴가제	육아 휴가제	직장 보육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 돌봄 휴직제	유연근무제
2011	계	74.2	73.5	80.6	58.1	-	-	-
	20~29세	75.6	74.2	80.3	55.1	-	-	-
	30~39세	79.3	80.6	85.4	62.9	-	-	-
	40~49세	77.5	77.2	83.7	64.9	-	-	-
2013	계	78.8	68.5	72	52.8	36.7	28.7	-
	20~29세	78.3	65.5	70.9	48.1	34	26.4	-
	30~39세	83.8	76.2	77.4	58	41.6	29.8	-
	40~49세	81.3	73.2	76.2	58.6	40.2	33.6	-
2015	계	80.7	68.6	77.3	56.5	44.1	36.2	47.1
	20~29세	77.3	62.9	73	49.2	38.9	30.5	44.6
	30~39세	87.2	77	84.5	61.2	51.4	38.9	52.6
	40~49세	84.7	76.1	82.1	62.5	48.8	40.9	51.6

자료: 통계청(2015). 일·가정 양립 지표

3)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한부모가족 중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과 함께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제정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98년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외 개인이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2년에는 모자가정만이 아니라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명칭 역시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 1990년대 말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2006년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였고, 공동생활과정을 설치하여 독립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개정되었다.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을 보호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보호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선되어 왔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를 근거로,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12세 미만 아동 대상 양육비 월 10만원을 지원(조손가족 또는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 자녀 대상 월 5만원 추가 지원)하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대비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학비(입학금수업료 실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 운영 및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에 대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로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지원 기관을 설치·운영하면서, 한부모가족 등 취약 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혼을 앞둔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통한 가족 회복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 인지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법률적 지원 등).

연도별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현황을 보면, 2014년까지 지원 대상 가구가 2007년 대비 약 두 배인 14만 가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양육비지급 이행을 위한 감치 집행 건수가 22건으로 집계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3-4]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73,305	81,792	94,487	107,775	115,402	130,509	140,015	142,069	131,218
모자가정	57,757	63,469	71,775	81,299	86,830	98,209	104,915	106,598	98,579
부자가정	15,548	18,150	22,532	26,112	28,173	31,781	34,518	34,884	32,150
조손가정	-	173	180	364	399	519	582	587	489

자료: 여성가족부(2016b)

4)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대검찰청)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국내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1만 2천명에 이르고, 적발 및 압수된 마약류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동년 93.6kg까지 증가하는 등 급속한 마약 확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일반인이 과거에 비해 보다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적발 건수도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2012년 밀반입된 마약류 적발 건수 232건에서 2015년 325건으로 증가), 신종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중독자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높은 재범률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신종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2016년 4월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마약 반입 통제,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마약류 중독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대국민 홍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급증하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여 통관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공항이나 항만 등에 배치하는 마약탐지조 운영 내실화, 마약류 관련정보 공유를 위한 마약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증진하며,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불법거래를 자동으로 검색,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마약 판매 광고를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와 제조방법 공유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신종마약류 물질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임시마약류 지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보고를 의무화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마약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집중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는 보호관찰소 수를 2016년 26개소, 2017년 56개소로 확대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검사를 강화하며, 상습 투약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표 3-5] 연도별 마약류 밀반입 적발 현황

(단위: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합계	232	254	308	325
특송화물 국제우편	175	202	268	262
개인휴대물품	52	47	34	54
기타	5	5	6	9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5)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법무부)

정부는 2016년 6월 1일 개최한 제4회 범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정신질환자 및 알콜 중독 등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양성평등문화 조성 등이다.

여성 등 범죄 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CCTV 확대 설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등 남/여 화장실 분리 의무화 대상 건물 확대, 강력범죄 빈발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치안활동, 범죄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범죄 단속 등 예방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 개입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자신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정신질환자가 치료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수검 의무를 부여하며, 향후 강력범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취, 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기간 연장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 등 범죄 취약자에 대한 강력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규정된 범위 중 최고 수준으로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적극 항소하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특히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추가 배치, 피해자 맞춤형 신변 보호와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 센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빈곤율 증가와 함께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과 함께 2000년 기존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로 개편하

면서 수급자의 생계, 주거, 의료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10년 기준 총 인구의 약 2.8%인 140만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절대빈곤을 감소 효과는 약 1.2%p 수준,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성공률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모든 지급이 중단되는 All-or-nothin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급자의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급여 수준의 인상 필요성, 지속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격한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존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5년 급여별 지급 기준과 급여 수준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준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은 크게 급여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를 구분할 수 있다. 종전 통합급여체계에서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적자 가구들에게 중위소득 3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월 소득대비 임대료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자들에게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에 따라 지원하고, 자가га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고려한 개량·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수업료, 교과서대 등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표 3-6]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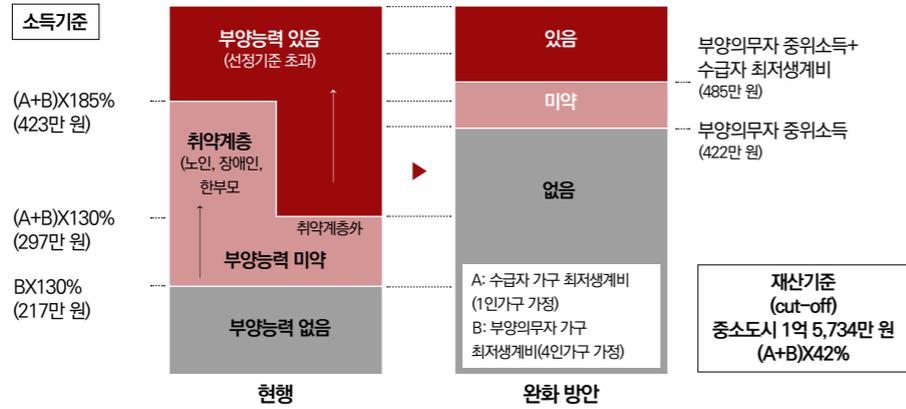
현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		선정기준	급여수준
최저 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생계	중위소득 28% 수준*	중위소득 28% 수준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주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업료, 교과서대 등	의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교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생계급여 수준은 2017년까지 중위소득 대비 30% 수준까지 인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에 수급 제외된 가구들을 보호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지방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탄력적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림 3-1]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2015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5)

이러한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는 133만 명 수준에서 167만 명 수준(2016. 5월 기준)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들에 대한 주거 혹은 교육 급여 지원이 가능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결과이다. 수급자의 평균 급여 수준 역시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2015년 기준 월 평균 5.4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생계급여 28% 기준), 이는 종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 최저생계비를 대신하여 중위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고, 급여 수준 역시 급여 종류별로 설정된 최저 보장 수준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 탈락자에 대해서도 기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었던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하여 급여의 성격별로 수급 기준이 다층화되면서 기존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모든 급여 수급권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수급자의 취업과 자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표 3-7] 개편 이후 수급자 변화

(단위: 만 명)

구분	'15.6	...	'15.12	...	'16.5	'15.6월 대비 순증
전체		...	164.6	...	166.8	35.2 (신규 46.9 탈수급 11.7)
생계급여	131.6		125.9		126.4	9.8 (신규 17.0, 탈수급 7.2)
의료급여	(생계 116.6 교육 17.8)*	...	143.5	...	143.2	11.6 (신규 24.3 탈수급 12.7)
주거급여		...	142.8	...	141.5	9.9 (신규 25.6 탈수급 15.7)
교육급여		...	38.8	...	40.1	22.3 (신규 24.4 탈수급 2.1)

자료: 보건복지부(2016)

[표 3-8] 신청 탈락자 연계 현황

(단위: 건)

총 201,294건 (147,578명, 중복제거)								
차상위					지자체 자체 지원	지자체 자체 지원	지자체 자체 지원	민간 연계
한부모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 경감	우선돌봄				
29,224	17,971	1,495	53,832	18,487	6,215	12,605	11,755	49,710

자료: 보건복지부(2016)

7)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국민안전처)

세월호 사고에서 최초 신고에서 해양사고 신고전화로 재연결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반복설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고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던 것처럼,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21개 신고전화 번호가 각기 달라 긴급신고 시 혼란을 주는 문제, 그리고 현재 긴급신고전화인 119, 112 전화의 상당수가 비긴급전화(119의 27%, 112의 44%)로 실제 긴급신고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각 부처가 운영하는 긴급신고전화를 크게 119(재난), 112(범죄), 110(기타 민원) 등 3개 번호로 통합하고, 타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전화를 원터치로 해당 기관에 이관하거나 3자통화 연결이 가능하도록 긴급전화 체계를 개선하여 필요시 사고에 대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긴급신고번호 통합 및 긴급신고 처리체계 개선 정책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2월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신고전화 통합추진단이 설치되었으며, 18회에 걸쳐 긴급신고전화 통합에 대한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운영하였다. 동년 10월에 관계부처의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시범서비스가 2016년 7월 전남, 광주, 제주 지역에 우선 실시되었으며, 이어 전국 단위로 확대되었다(2016. 7. 15). 이어 2016년 10월부터 전면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사업 설계 단계부터 관계부처 간 합동 워크숍, 공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율 및 토론, 정책 및 홍보협의회 운영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 대상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국민 대상 홍보와 소통을 계속하였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결과, 긴급신고는 119, 112 등 2개 번호로, 기타 비긴급전화는 110번으로 통합되는 등 세 개 번호만 기억하면 되는 등 국민의 신고 편의가 증진되었으며, 통합체계 구축 이후 시범운영 결과, 신고에서 출동지령까지 소요 시간이 약 34%(133초에서 88초로 45초 단축) 감소하고, 공동대응 출동까지는 27% 단축(385초에서 282초로 103초 단축)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이를 통한 인명 구조율 증가, 비긴급 신고 분리를 통한 대응률 향상, 기관별 긴급신고전화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효율성 증진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3천억 원 수준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6년 7월 속초 유람선 사고, 동년 8월 목포 선박화재사고, 9월 충주 살인미수 용의자 검거 등 통합신고체계로의 개선을 통해 화재 조기진압, 인명 전원 구조, 용의자 조기 검거 등 긴급신고 처리체계 개선을 통한 긍정적인 사례를 확인하였다.

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 57.9%로 OECD 평균 63.0%에 비해 낮으며, 주요 선진국(미국 66.9%, 영국 72.5%, 덴마크 75.3%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달리 많은 여성이 가사 및 육아 부담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시 고용의 질이 하락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미스매칭 현상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성인력 개발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설치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직업정보 제공, 교육훈련과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초기에는 대체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의 여성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산단지역 및 농·어촌 지역까지 포함하여 전국 150개소(2016년 기준)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협업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영 또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일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취업상담은 구직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상담과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메이킹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내용은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과정, 전문기술과정 등으로 구성되며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로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알선과 함께 직장 적응교육과 고충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의 적응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기업 분위기를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상 창업훈련 및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컨설팅, 공간제공, 자금지원 등)과 함께 보건복지분야 제도 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한 재취업 수요 발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과는 2013년 10만 8천명, 2014년 13만 명, 2015년 14만 명 취업 등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만족도가 2015년 기준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9)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경찰청)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 기준 연간 자동차 수 1만 대 대비 2.36명(2012년 기준)에서 30% 감소한 1.6명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추

진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내용은 크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는 등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노인과 아동 등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무인단속장비 개선, 신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강화,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자동전송시스템 개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노인 등의 보행교통사고 예방에 특히 중점을 두어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생활도로구역을 법제화하여 구역 내 최대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 추진으로 고령자의 사회활동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고령 운전자 대상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며, 어린이 안전모, 카시트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셋째,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제도를 현행 고속도로에서 더 확대하여 전 도로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며, 안전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높이며, 국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고 대응 고도화를 위한 자동전송장치(e-call)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필요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5년 기준 4,621명으로 나타나 2014년의 4,762명 대비 141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분(71명)은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교통사고 수와 사망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통사고 사상자수 줄이기 종합대책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사망자 감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환경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이후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주거 양식 역시 1980년대 이후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지금 국민 3명 중 2명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소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바닥충격음의 경우 인접세대에 더 쉽게 전달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단순한 분쟁을 넘어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건설기준과 건설공법 등 구조적 한계, 공동체 관리규

약의 실효성 미흡, 분쟁에 대한 법적 관리 기준의 부재 등 제도적 미비, 주거문화와 행태, 소음부족 등 행태적 문제 등 다양하다. 특히 전체 아파트의 대부분(85%)을 차지하는 벽식구조 아파트는 기둥과 보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구조로 인해 실내 소음이 벽을 타고 전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층간소음에 더욱 취약하지만,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 두께와 바닥충격음 기준만 규정하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되도록 규정되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는 불충분한 문제가 있었다. 이후 바닥 두께와 충격음 기준 모두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이러한 기준 변경 역시 층간소음 감소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며, 불필요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자체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이 된 사례가 없고, 갈등이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기준 마련, 건설기준 강화, 갈등 중재기관 운영, 이웃 간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등을 2013년 개정하고, 동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2014년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는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 기준을 강화하여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 충격음 기준 양자를 모두 준수하도록 강화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 중재와 해결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인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발적으로 예방·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자율조직 구성, 분쟁시 자율적 조정 절차 등을 담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12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시범 실시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을 층간소음 갈등 중재지원 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며,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실적은 2014년 40건으로부터 2015년 90건, 2016년 8월 기준 9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행동에 대한 인지도가 교육을 통해 큰 폭으로 상승(교육 이전 69.4점에서 교육 이후 89.4점으로)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표 3-9】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건수 변화

	합계	해결	현장진단 접수	기타
건수(합계)	77,796	54,017	17,382	6,397
비율	100	69.4	22.3	8.3
2012년(3-12월)	8,795	5,412	1,829	1,554
2013년	18,524	12,491	3,271	2,762
2014년	20,641	15,242	4,465	934
2015년	19,278	14,067	4,712	499
2016년(1-8월)	10,558	6,805	3,105	648

자료: 환경부-국가소음정보시스템

3. 교육문화정책 분야

1)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교육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정책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대학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소득분위와 학업 성취도를 감안하여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의 재원은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재단이 정부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다. 2015년은 정부가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 시기이다. 국가장학금은 I유형, II유형, 다자녀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I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최고 480만 원(기초-2분위)에서 최저 67.5만 원(7-8분위)로 차등 지급된다. II유형은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 자체 장학금 확충 등과 같은 대학 자체의 노력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셋째이상의 다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도 지급된다. 2015년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총 3.6조 원(I유형 2.9조원, II유형 5,000억 원, 다자녀 2,000억 원)이다. 대학자체의 부담은 3.1조 원에 이르러 국가장학금과 합해서 7조 원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교육부, 2015a3-4; 2016a3). 학자금 대출제도는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대출(Income Contingency Loan)인 든든학자금대출로 전환되어 소득 8분위까지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일정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반환하도록 개선되었다(교육부, 2015a5; 2016a2).

【그림 3-2】 국가장학금 구조



자료: 교육부(2015a4),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그림 3-3] 학자금 대출 제도의 구조



자료: 교육부(2015a2),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요약 설명자료

2)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교육부)

교육부의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관리 정책은 아동학대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가운데 미취학 아동 및 장기무단결석 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동의 소재파악 및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추진 실적을 보면(교육부, 2016b1-b4),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 배포하였으며 17개 시도 전담기구 및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학교장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소재 파악이 가능토록 하였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협업을 통한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실시하고 매뉴얼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법제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통보·독촉하는 행정적 조치 수준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촘촘한 미취학·무단결석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0]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를 위한 주요 개정 사항

내용	현행	개정
미취학 및 무단결석 시 신속히 조치	- 학교장이 미취학 시 2회에 걸쳐 취학 독려, 7일 이상 무단 결석의 경우 출석 독려 - 교육감의 취학 독려 상황 확인·점검(선언적 규정)	- 학교장 및 교육감, 읍·면·동장 등의 취학 독려 조치 명细化(가정방문, 내교 조치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 의뢰
전학 관련 내용 강화	- 비밀전학 관련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 수준 - 읍·면·동장의 전입 학생 통보 의무 부재 - 전출 후 언제 전입해야 하는지 규정 부재	- 초·중학교의 학생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 읍·면·동장이 전입 학생 발생 시 학교장·교육장에 통보하도록 규정 - 전출일 다음날 전입하도록 규정

내용	현행	개정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경찰 조사의 의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 경찰 조사 의뢰 근거 부재 - 출입국 사실 확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부재	-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 의뢰 근거 마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 의뢰 - 학교장이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
취학 유예·면제 심사 강화	- 읍·면·동장이 별도의 심의 없이 12월 31일까지 입학 연기를 결정 - 1월 1일 이후에는 학교장이 취학 유예·면제 여부 결정	- 읍·면·동장의 입학연기 결정 권한을 학교장으로 일원화(학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 여부 결정)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이 학교에 취학·출석하는 경우 적응 지원	- 관련 내용 없음	- 장기간 취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한 학생이 학교에 취학·출석할 경우 학습결손 최소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규정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 관련 내용 없음(기존에는 매년 교육부 지침*으로 승부) *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	-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및 학부모 참여 의무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 전담기구 설치	- 관련 내용 없음	- 의무교육학생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의무교육 학생 관리(월 1회 출석 독려, 안전·소재 확인 등) 역할 명확화

자료: 교육부(2016b1),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3) 누리과정 지원(교육부)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책은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책임 실현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유아단계부터 양질의 표준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계층에 상관없이 학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누리과정의 지원 대상은 '11년도에는 소득하위 70%로 국한되었으나, '13년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월 지원금액도 '13년도까지는 연령별로 차이를 두었으나 '14년도부터는 차등을 없앴으며 '13년도 22만원에서 '14년도 24만원, '15년도 27만원, 그리고 '16년도에는 29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중앙정부는 2015년에 총 4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 2.1조원, 유치원 1.9조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하였고 추경으로 추가 지원하였다(교육부, 2016c1-c4). 중앙정부는 2013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과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의 의무지출 경비 지정이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까지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2016).

[표 3-11]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지역	교육청		지자체	주요 동향 (교 : 교육청, 지 : 지자체)
	유치원 (계획)	어린이집 (계획)	어린이집 (계획)	
대구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2.25)
울산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2.26)
경북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4)
충남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19)
대전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27)
부산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6.30)
충북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7.20)
세종	12	10 (12)	12	(교) 전액편성 완료(5.31) 어린이집 잔여 2개월분 예정 (지) 정상집행
서울	7.4 (12)	7.4 (12)	12	(교) 유치원(911억 원), 어린이집(1,333억 원) 부족분 전액 편성 예정(9.5. 의회제출) (지) 정상집행
경남	12	8 (12)	12	(교) 어린이집 부족분(481억 원) 전액 편성 예정(9.20. 의회제출) (지) 정상 집행
전남	12	5 (12)	12	(교) 어린이집 부족분(508억 원) 전액 편성 예정(9.13. 의회제출) (지) 정상집행
인천	11 (12)	11 (12)	12	(교) 유치원(107억 원), 어린이집(95억 원) 부족분 전액 편성 예정(9.30. 의회제출) (지) 정상 집행
광주	9 (12)	0 (12)	12	(교) 유치원(185억 원)(9.28. 의회제출), 어린이집(670억 원) 부족분 전액 편성 예정(정리추경) (지) 9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예정
제주	12	9 (12)	12	(교) 어린이집 부족분(108억 원) 전액 편성 예정(10월 추경) (지) 정상 집행
강원	9 (12)	2.3* (0)	12 (-)	(교) 유치원 부족분(138억 원) 전액 편성 예정(9.27. 의회제출) * 방과후과정비 9개월분 (지) 12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전북	12	0 (0)	12	(교) 어린이집 편성 불가 입장 (지) 1~3월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경기	8 (12)	0 (0)	12	(교) 어린이집 편성 불가 입장 (지) 12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예정

자료: 교육부(2016c2). 보도자료. 14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9월 8일).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다양화와 새로운 유형의 위험들이 등장함으로써 방송통신 이용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역량을 제고하여 위험에 대한 규제를 통합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강화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보호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할 정책내용들을 보

면,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이용자의 이해행위 규제 통합 및 피해규제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중요사항(할부금, 약정할인, 위약금 등)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민간자율로 시행중인 인터넷 광고의 규제 효율성을 강화하고 플로팅광고 등 이용자 불편 사례를 개선함과 동시에 포털 및 알뜰폰 사업자 등 평가대상을 20개사에서 25개사로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등 신종 피해발생시 선제적으로 SMS 문자발송, 방송광고 송출, 웹툰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11년도 예산 6.6억 원에서 '15년도에는 10.9억 원으로 증액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5a: 34).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정보취약계층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층별 전문강사단을 육성하여 맞춤형 눈높이 교육시행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계층별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2] 최근 5년간 계층별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적

구분	연도	노령층	농어민	청소년	일반인	소비자단체 상담원	외국인	장애인	계
	2010년 (횟수)	165 (4)		370(2)	405 (5)				940 (11)
	2011년 (횟수)	1,070 (13)			854 (11)	430 (8)			2,354 (32)
	2012년 (횟수)	7,785 (197)		22 (1)		20 (1)	296 (97)		8,123 (296)
	2013년 (횟수)	9,806 (264)					902 (299)	209 (35)	10,917 (598)
	2014년 (횟수)	10,239 (347)	1,280 (47)	345 (22)	755 (28)		1,108 (320)	539 (60)	14,266 (824)

자료: 방통위(2015a). 2016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 자료.

5)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증가, 방과후 나홀로 학생의 증가, 양육사 교육비의 증가, 여성이 사회진출 확대에 의해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2010년부터 기존의 ‘보육교실’을 확대하여 시행되었다. 현재 이 정책은 수요자중심 돌봄교실 운영,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강화,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6a1; 2016d1-d4). 초등돌봄교실은 크게 1-2학년 중심의 돌봄교실과 3-6학년 중심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구분된다. 1-2학년 중심의 돌봄교실은 주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6학년 중심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학교 프

로그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2016).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학생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22시까지 저녁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총 5,972개 학교가 돌봄교실을 개설하여 239,798명의 학생이 이용하였고 1,693개 학교는 저녁돌봄을 제공하여 16,248명의 학생이 이용하였다(교육부, 2016d1). 2016년에는 교실당운영비를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매일 1개 이상의 특기·적성프로그램에 놀이 및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저녁돌봄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의 대상을 3-4학년에서 5-6학년으로 확대하였고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기초와 방학 중의 돌봄교실을 내실화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지원금을 2015년 3,514억 원에서 2016년 3,922억 원으로 증액하였다(교육부, 2016d3).

[표 3-13]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구분	'15년	'16년	
돌봄교실	실당운영비	• 오후 : 약 25백만 원	• 오후 : 약 30백만 원(5백만 원 증액)
	프로그램	• 매일 1개 이상 무상프로그램	• 매일 1개 이상 무상프로그램 지속 강화 • 놀이 및 안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병행
	간식	• 간식 다양성 확보 및 위생관리 철저	• 학부모 보조인력 활용 간식의 다양화 • 위생관리 철저
	돌봄전담사	• 원격교육 실시 • 교육청 및 학교 단위 인력풀 구축	• 원격교육 지속 강화(지역단위 워크숍) • 학교장 중심 사기진작 강화 • 대체인력풀 활용 강화
	지역 연계	• 학교 및 지역 돌봄기관 협의체 활성화	• 학교 및 지역 돌봄기관 협의체 운영 강화 • 저녁 돌봄연계 강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 3-4학년 중심 운영	• 5-6학년까지 확대 운영 • 학기말 및 재량휴업일 등 운영 내실화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연계형	학년초	• 3월초 돌봄교실 운영	•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개학 전후돌봄 체험 기간 운영
	방학중	• 학부모 수요 및 학교여건에 따른 운영	•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오전부터 오후(학기 중 운영시간)까지 운영

자료: 교육부(2016d1), 보도자료 "2016년 행복더하기 초등돌봄교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욱 탄탄하게".

6) 도시숲 조성(산림청)

산림청은 도시 숲을 이용하여 활력 있는 일터, 쉼터, 더 나아가 삶의 터로 재창조하고, 산림복지를 활성화하여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녹색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산림서비스의 혜택을 증진하고자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생활림조성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도 세부 정책사업 내용으로는 생활권에 도시숲을 확충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1,620백만 원(6개 조성, 12개 관리),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 1,450백만 원(25개소 조성, 20개소 관리), 복합경관숲 조성사업 1,000백만 원(1개소), 대관령 지역 경관숲 조성 400백만 원, 도시녹화운동 홍보 100백만 원 등에 총 6,624백만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도시녹화운동을 확산함과 동시에 도시숲 조성 예산 확대 및 집행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14] 연차별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투자계획

구분	계	'15	'16	'17	'18	'19
사업비(백만원)	13,140	1,620	1,620	2,800	2,800	4,300
사업규모(개소)	조성 48 관리 114	조성 6 관리 12	조성 6 관리 12	조성 10 관리 30	조성 10 관리 30	조성 16 관리 30

자료: 산림청(2015), 2016년도 예산요구서.

7)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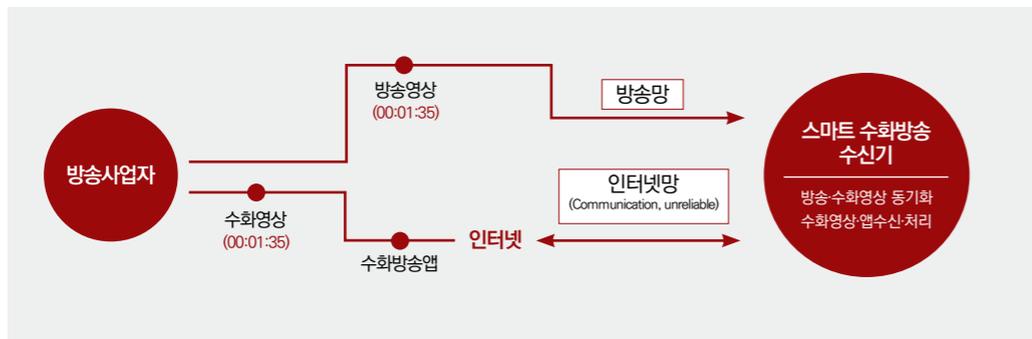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정책은 취약 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방송을 통한 정보습득과 여가선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시·청각 및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접근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16a1-a2). 이 정책은 크게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수신기 보급과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수신기 보급은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수신기(2000년), 난청노인을 위한 수신기(2001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2002년)의 순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자막방송수신기 6,257대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6,257대가 보급되었다. 장애인 방송(폐쇄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화면해설방송)의 제작지원은 2006년부터 지상파방송사와 공익 PP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2009년부터는 지상파방송사와 공익·보도·일반 PP 및 유선방송사(SO)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1년 7월 방송법의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이 의무화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다. 2014년 현재 57개 필수지정사업자(중앙·지방지상파, 위성방송, 종합편성·보도채널 PP)와 99개의 고시의무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인터넷망(수화영상)과 방송망(방송영상)을 융합한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의 기술표준의 지상파 시험방송을 거쳐 2015년 제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매체에서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5] 장애인방송수신기 보급 현황

구분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신청현황	보급대수	보급률	신청현황	보급대수	보급률
2011년	21,030	8,134	39.7	7,213	4,300	59.6
2012년	14,339	9,175	64.0	8,403	7,500	89.3
2013년	9,167	5,247	57.2	8,657	7,083	81.8
2014년	9,590	6,257	65.3	10,487	6,257	59.7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5a), 2016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림 3-4]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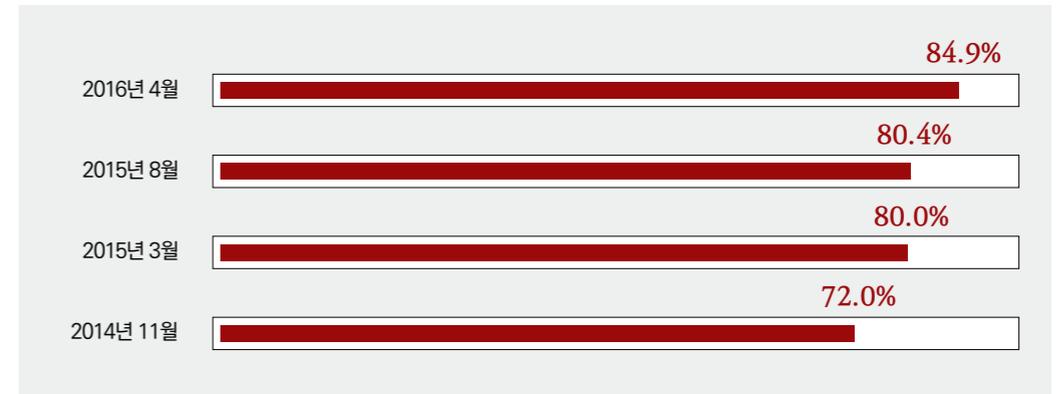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6a2),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8) 문화가 있는 날 확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월 '문화가 있는 날'을 처음으로 시행한 이래 지속적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 접점 시설에서 주민자치 문화예술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문화시설 인센티브 지원과 신진 문화예술인 및 지역민, 직장인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도 실시하여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러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확대한 결과, '16년 4월에 문체부에서 실시한 2016년 제1차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문화체육관광부, 2016a), 국민 참여 만족도는 84.9%를 보였고, 국민 인지도 57.6%, 참여율 38.1%를 나타내는 등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참여자의 만족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년 11월에 72.0%에서 최근 '16년 4월에 84.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사업의 대 국민 만족도 제고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5]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참여자의 만족도 추이



자료: 뉴스1, 2016. 5. 31 보도자료

9)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문화체육관광부)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정책은 세계적인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해외에 보급하는 대표적 기관인 세종학당을 세계 54개국에서 확대하여 운영하고, King Sejong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한국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재개발과 전문교원 양성 및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의 주요국가에서도 자국어의 해외 보급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영국의 브리티시카운슬, 중국의 공자학원,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 등이 전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적인 문화공정의 일환으로 공자학당을 119개국 1,09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형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5a; 2016a). 2015년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는 43,308명이며 수료생의 수는 14,854명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세종학당재단, 2015; 2016a). 또한 해외에서 부족한 한국어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 파견 전문교원을 2014년 39명, 2015년 50명, 2016년 90명으로 증원하였다.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정책의 소요 예산은 2014년 100억 원에서 2016년 18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6] 해외 세종학당 설치 현황

대륙	문화원 세종학당(수)	소계 (27개소)	일반 세종학당(수)	소계 (103개소)	합계 (130개소)
아시아	베트남(1), 인도(1), 인도네시아(1), 일본(2), 중국(2), 카자흐스탄(1), 태국(1), 터키(1), 필리핀(1)	11	네팔(1), 라오스(1), 말레이시아(1), 몽골(3), 방글라데시(1), 베트남(7), 스리랑카(1), 아랍에미리트연합(1), 우즈베키스탄(1), 이란(1), 인도(2), 인도네시아(1), 일본(2), 중국(22), 타이완(2), 카자흐스탄(3), 캄보디아(2), 키르기스스탄(2), 타지키스탄(2), 태국(2), 터키(5), 파키스탄(1), 필리핀(4)	68	79개소
유럽	독일(1), 러시아(1), 벨기에(1), 스페인(1), 영국(1), 폴란드(1), 프랑스(1), 헝가리(1)	8	독일(2), 러시아(3), 리투아니아(1), 벨라루스(1), 불가리아(1), 스페인(1), 영국(1), 우크라이나(1), 이탈리아(1), 체코(1), 포르투갈(1), 폴란드(1), 프랑스(1)	16	24개소
아메리카	멕시코(1), 미국(2), 브라질(1), 아르헨티나(1)	5	과테말라(1), 멕시코(2), 미국(5), 브라질(1), 칠레(1), 캐나다(2), 코스타리카(1), 콜롬비아(1), 페루(1)	15	20개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1), 이집트(1)	2	알제리(1), 짐바브웨(1), 케냐(1)	3	5개소
오세아니아	호주(1)	1	뉴질랜드(1)	1	2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안

10)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교육부)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의 주역인 SW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SW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초·중등생에 대한 SW교육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SW로 구현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인 초·중등 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중등 SW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900여개의 연구 선도학교를 육성하고, SW선도 교육청을 지정하여 특색 있는 SW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킴과 동시에 SW교육 인식강화 및 친 SW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체험활동 및 행사를 실시하는 등의 세부 운영계획과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 SW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3-17] 초·중고 2015년 SW 교육과정 개편 내용

구분	현행	개편안	주요 개편 방향
초등학교 (19년 ~)	실과 내 ICT 단원(12시간)	실과 내 SW 기초교육 실시 (17시간 이상)	- 문제해결과정,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체험 - 정보윤리의식 함양
중학교 (18년 ~)	'정보' 과목 (선택교과)	'정보'과목 34시간 이상(필수교과)	- 컴퓨팅사고 기반 문제해결 실시 - 간단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개발
고등학교 (18년 ~)	'정보'과목 (심화선택 과목)	'정보'과목 (일반선택 과목)	-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알고리즘, 프로그램 설계

자료: 교육부(2015e), 보도자료,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SW교육 청사진 나왔다(7월21일)

4. 외교안보정책 분야

1)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국방부)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발시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능력·태세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연합·합동작전태세 완비를 통해 전면전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화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도발 유형별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고위급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실화된 현실화된 북핵·WMD·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한국군 단독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정침인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4D) 개념'을 마련하고 한미 동맹의 사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사드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연합·합동작전태세를 완비하고, 한미연합 작전계획의 수립 및 작전지속 능력 보장과 실전적 훈련·연습을 통해 전면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후방지역의 적 침투와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는 '테러대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해군·해병대 신속기동부대를 편성·운영 중에 있다.

2)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국방부)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책의 주무 부처는 국방부로 인사기획과와 병영정책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06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신뢰받는 선진 병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군내 복무 부적응자 및 자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2014년 22사·28사 사고에 의해 군에 대한 심각한 신뢰저하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더욱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책의 세부 목표로는 장병 군복무 적응 지원체계의 강화와 군 복무의욕 고취 및 악성사고 예방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의 운영, 인성검사 실시,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의 실시, 현역복무부적응자 조치 개선,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장병사기 및 부대정신 측정 등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전 장병 및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이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총 903억 원으로 매년 110~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015년을 시작으로 예산액이 증가하였다. 2016년 이후에도 꾸준한 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외교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책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2,3과 담당 정책으로 한국과 중국의 정부 및 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92년 8월 중국과 수교 이래 24년 간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방중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의 이정표를 마련하였고, 2013년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양국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고, 2014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는 등 경제분야에서,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등으로 사회·문화적 분야에서 또한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을 명분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은 이 같은 조치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로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에서 집행하는 정책이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과 더불어 6자회담국 내 5자간 비핵화 공조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2016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0억 5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5천 5백만 원 감소하였다. 북핵 문제는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지난 20여 년간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 온 문제이다.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 핵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주변국들과의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정책이 시행되었다. 외교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주변국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2016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제4차, 제5차)으로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대선결과 공화당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북핵 및 북한 문제에 있어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국방부)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정책은 국방부 복지정책과 담당 정책으로 군복무의 소명과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함을 목표로 2013년부터 계속되어온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무복무 장병들의 봉급을 현실화 하는 측면에서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봉급 인상을 추진하며, 적금에 대한 지원과 보험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또한 장병들의 관심이 높은 급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는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 2015년부터는 장병의 급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만족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복류에 대한 설문조사도 시행하여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후 시설들에 대한 개선도 추진되는데, 복지회관, 군 마트, 체력단련 시설 등의 개선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세부 정책들을 통해 장병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에 2016년에는 병 봉급에 대한 예산이 2015년 7,195억 원에서 9,145억 원으로 1,95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 증가가 수반되었다.

6)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외교부)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정책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담당 정책으로 선진화 된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정책은 2013년 추진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34억 원이다. 사건사고 예방 시스템은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국제도, 각 국가에 대한 안전정보 SMS 서비스, 지역별 사건사고 영사회의, 위험지역 안전점검, 해외안전여행 홍보 등이 있으며, 사건사고 사후대응 시스템에는 영사콜센터, 신속해외송금제도, 긴급구난활동지원제도,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제도, 해외 수감자 관리제도 등이 있다(국제일보, 2013.3.27.). 이에 더하여 올해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아시아나와 「해외 대형 재난시 우리 국민 긴급대피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의 구조와 대피를 위해 전세기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외교부)

2008년 4월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George W. Bush) 미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기존의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21세기 전략동맹이란 단순히 군사동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하는 '포괄동맹'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이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수호 차원을 넘어 테러·기후 변화·인권·국지분쟁·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함께 대처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양국은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지속·발전시키는데 합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적 한·미 안보협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일치 및 공감대 형성이라는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총 3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도인 2015년(23.45억 원) 대비 큰 규모의 증액이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6). 구체적으로는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예산 총 39억 원 중 21세

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심화 발전에 4.24억 원(2015년 대비 1.8억 원 증액), 동맹기반 강화에 30.18억 원(2015년 대비 13.85억 원 증액), 동맹재조정 강화에 2.81억 원(2015년 동일), SOFA 운영 개선에 1.77억 원(2015년 대비 0.1억 원 감액)이 편성되었다(외교통일위원회, 2015: 34). 정책의 주요 내용은 한미 안보 동맹 강화 및 북핵-북한 문제 관련 굳건한 공조 지속, 양국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미 대선 대비 안정적 한미관계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보면, 금년 한 해 동안 두차례 정상회담 및 다양한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발효되었으며, 우주, 사이버, 보건안보, 북극 등 한-미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노력과 PKO, 핵안보,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노력이 행해졌다. 또한 미 대선 과정에서 양 후보 진영과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미관계 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8) 한-일-중 3국 협력 강화(외교부)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정책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1과 담당 정책으로 한일중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세안+3 정상회의의 계기로 최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1999년에 개최되었다. 이후 2008년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공식적으로 개최되고 2012년 까지 매년 진행되었으며, 2015년 3년 반만에 다시 개최되었다. 정상회의 외에도 20개 장관급 회의, 50개 이상의 실무자급 회의, 100개 이상의 협력 사업 등과 민간부문에서도 3국간 협력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3국 협력의 강화를 위해 2011년 국제기구로서 한중일 3국협력 사무국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3국간 분야별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고, 3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3국이 공동으로 북핵 문제에도 대응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경색과 과거사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관계 악화,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 등 3국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9)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외교부)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책은 정상외교 등을 통한 적극적 기업 지원 외교,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수입규제조치 해소 등의 활동 전개, 대외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 구축을 중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보면 정상외교 등을 통해 적극적 기업 지원 외교를 추진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과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7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22개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년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총 22개국과 경제공동위 및 경제협의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이처럼 정책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이를 위한 예산 역시 다양한 항목, 예컨대 정상외교, 지역

외교, 경제외교 등과 관련된다. 2016년 경제외교 예산은 71.53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4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32.3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7억 원이 감액되었다.

10)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은 통일부 공동체기반 조성국 정착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정책으로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탈북민들에게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물질·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금씩 다른 제도를 추가·수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개인에 대한 보호와 정착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의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에서 더 나아가 탈북민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형성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남북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약 300억 원이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정책이 보다 높은 실효성을 가질 것임이 기대되고 있다.

04

제4장 분야별 정책평가

본 연구에 포함된 40개의 정책들은 정부부처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정책은 정부부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정책평가가 나쁘다는 것이 반드시 정책의 실패로 단정되고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앞서서 밝혔듯이, 정책평가의 주요 목적은 환류를 통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 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평가의 결과는 다음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회마련의 초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제정책 분야 경제정책 분야 10개 정책 평균이 2.9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3.1점이었던 작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한 하락이 있었으며, 2년 전의 3.0점과 비교해도 다소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정책 분야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결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경제분야(2.9점), 외교안보분야(2.9점)를 상회하는 결과이며, 교육문화분야(3.1점)와 비슷한 수준이다.

교육문화정책 분야 평균은 3.1로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평가영역별로 편차도 드러났다.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을 포함한 구조 영역이 3.4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을 포함한 내용 영역이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외교안보정책 분야 평균은 2.8점으로 이는 경제정책(2.8), 교육문화정책(3.0), 사회복지정책(3.0)과 비교하였을 때 근소한 차이지만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분단의 특수한 현실과 최근 세계정치의 변화와 불안정 등으로 인해 외교안보정책들은 계속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결과의 효과성 및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올해 외교안보분야 정책의 각 지표별 평가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 경제정책 분야	072
2 사회복지정책 분야	130
3 교육문화정책 분야	192
4 외교안보정책 분야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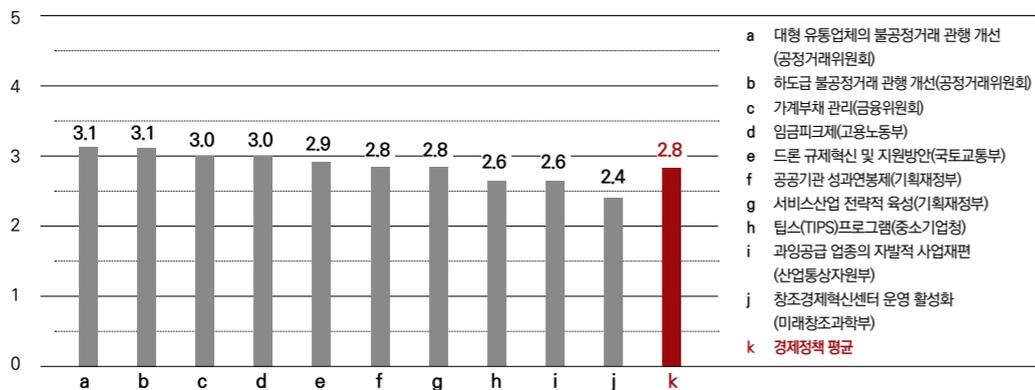
1. 경제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은 경제 분야의 정책별 설문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10개 정책의 평균은 2.8점으로 2015년 평가의 3.0점보다 다소 하락하였다. 지난 해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과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간에는 0.5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2015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 간에 눈에 띄일 정도의 체감 상 차이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의 박근혜 정부 스캔들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은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부패 스캔들과 연루된 정황이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의 악화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원샷법), 틈스,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 경제구조의 재편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 경제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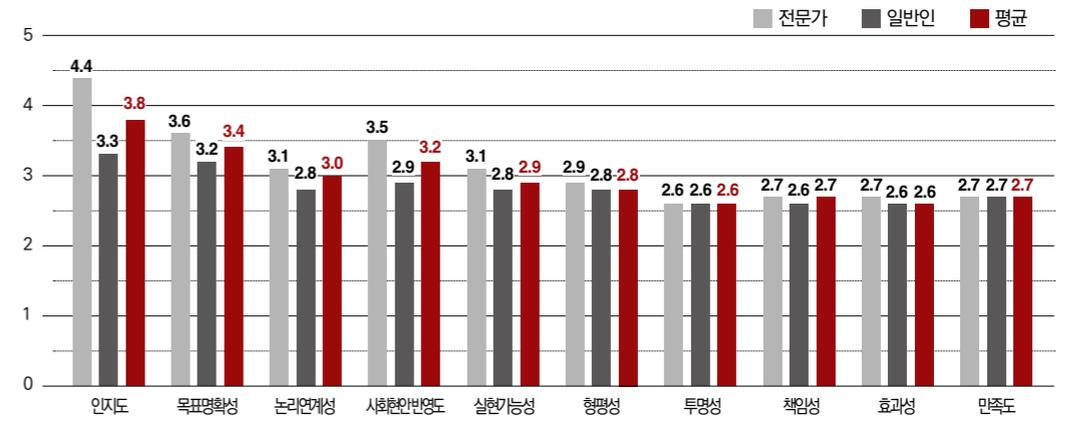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임금피크제

10%를 상회하는 청년실업률과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정책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전문가 4.4점, 일반인 3.3점).

[그림 4-2] 임금피크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임금피크제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의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6 점, 일반인 3.2점). 이는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3.1점) 일반인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8점). 임금피크제의 논리가 여전히 사회적인 합의를 얻지 못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3.5점) 일반인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2.9점). 아래의 항목들과 더불어 임금피크제가 사회적으로 사회현안을 반영한 정책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전문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3.1점) 일반인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2.8점). 본 정책에서 목표하는 임금피크제의 사회 전반으로의 확대에 대한 일반인들의 회의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9점, 일반인 2.8점). 노동고령화 및 청년미취업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은 전문가, 일반인 모두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이다(전문가 2.6점, 일반인 2.6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부재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 도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7점, 일반인 2.6점).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도입으로 인해 야기된 불신이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문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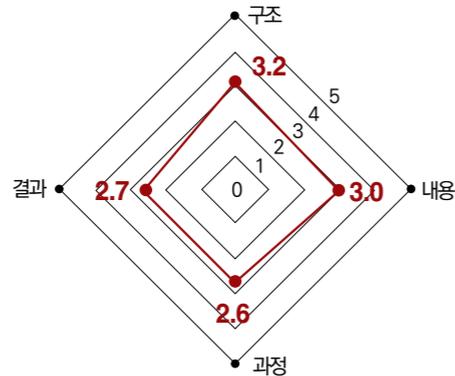
본 항목 역시 전문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7점, 일반인 2.6점). 높은 사내보유금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저조한 대기업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정책이 의도하는 대로 청년고용의 증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 및 실제 미미한 청년채용 증가규모가 부정적 평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 역시 전문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7점, 일반인 2.7점). 낮은 정책의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및 효과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용이 그 뒤를 따른다. 한편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구조와 내용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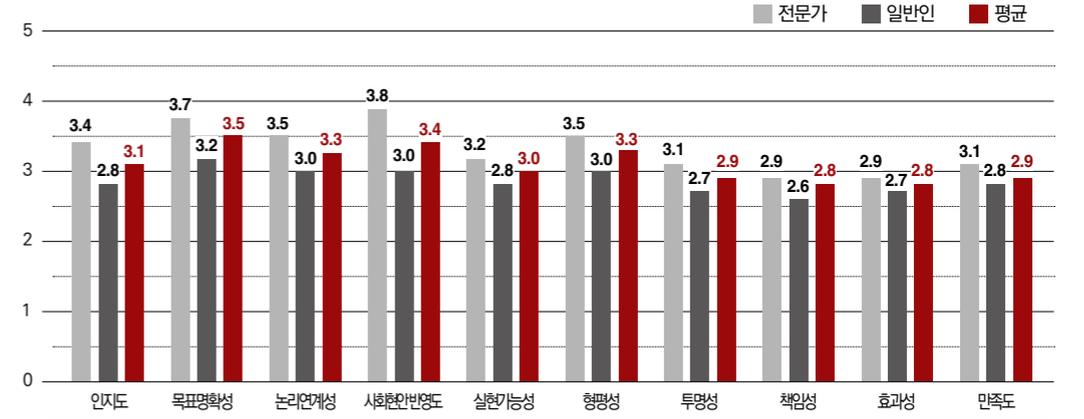
[그림 4-3] 임금피크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의 경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정책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는 반면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4-4]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의 목표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 집단 평균은 3.7점이고 일반인들 평균은 3.2점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해당 정책이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역시 전문가 및 일반인 집단 모두에게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전문가 3.5점, 일반인 3.0점). 이는 본 정책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논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 역시 두 집단 모두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3.8점, 일반인 3.0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위 '갑을 문화'가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대두한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평가 결과라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들을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3.2점) 일반인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2.8점). 일반인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만연한 상황이며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5점, 일반인 3.0점). 본 정책

의 목표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명확한 약자인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3.1점) 일반인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2.7점). 이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문화에서 정부 및 관료집단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9점, 일반인 2.6점). 이는 본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 중소기업 구제 및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내용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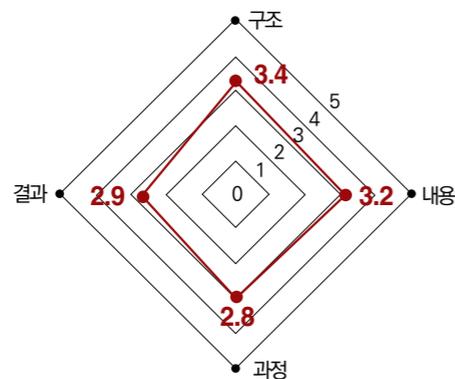
본 항목에서 전문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9점, 일반인 2.7점). 아직 불공정거래 관행이 획기적으로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해 보이는 평가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3.1점) 일반인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2.8점). 내용과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에 대한 의문과 불만족에서 다소 부정적 결과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이 과정과 결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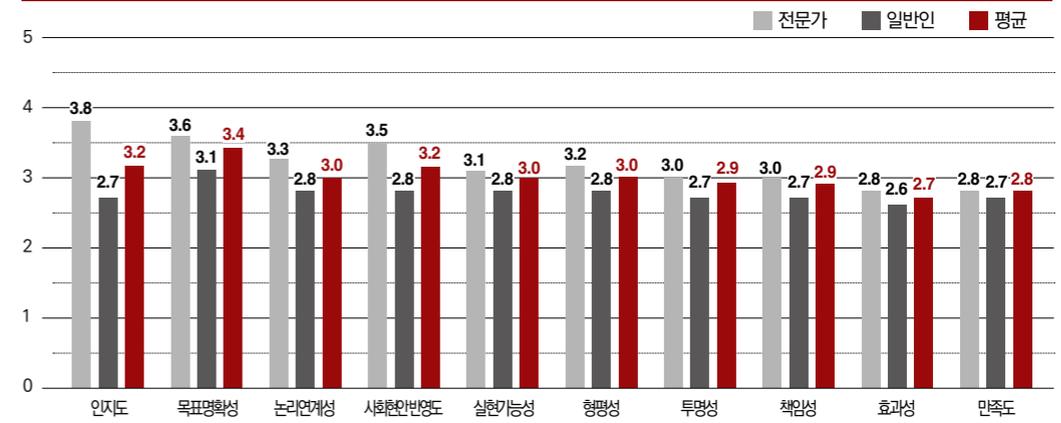
[그림 4-5]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은 전문가와 많은 괴리를 보이는 정책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인지도는 3.8점으로 경제 분야 10개 정책 중 3번째인데 비하여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2.7점으로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전문가의 '알고 있다' 응답은 68%인데 반하여 일반인의 '알고 있다' 응답은 23%임).

[그림 4-6] 가계부채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정책은 대체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다. 전문가는 3.6점, 일반인도 3.1점으로 평가하여 경제 분야 10개 평가 대상 정책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본 정책이 잘 부각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목표가 대체로 뚜렷하게 인식되어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전문가는 본 정책이 목적 달성에 최선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48.0%)이 부정적으로 응답(20.0%)한 비율보다 큰 반면에, 일반인은 부정적인 응답(36.2%)이 긍정적인 응답(25.4%)보다 다소 많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가계부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문가 집단의 것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응답에서 전문가는 3.5점으로 경제 분야 10개 정책 중 가장 높은데 반하여 일반인은 2.8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그 차이는 10개 정책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의 견해가 다소 엇갈렸는데, 그 차이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는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0%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인 26%보다 높았으나, 일반인의 경우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2점과 2.8점으로 경제 분야 10개 정책 중 상위권에 속하는 평가를 하였다. 형평성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반면에 일반인들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 측면의 평가는 전문가 3.0점, 일반인 2.7점으로 다른 분야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이 42%로, 긍정적인 답변 18%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일반인들이 본 정책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 측면의 평가도 투명성과 비슷하다. 전문가 3.0점, 일반인 2.7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며, 일반인들의 경우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의 두 배가 넘는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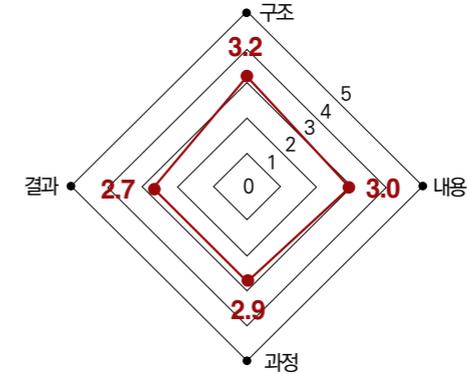
정책의 결과를 살펴보는 효과성과 만족도 관련 평가는 더욱 낮다. 효과성의 경우 전문가 2.8점, 일반인 2.6점으로 9개 평가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에도 부정평가가 40%, 긍정평가가 24%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훨씬 넘어섰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만족도도 전문가 2.8점, 일반인 2.7점으로 효과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만족도는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점수 차가 가장 적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전문가의 42%, 일반인의 43.6%)가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한 것에 기인한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이 과정과 결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는 경제 분야 10개 정책 중 상위권에 위치한 정책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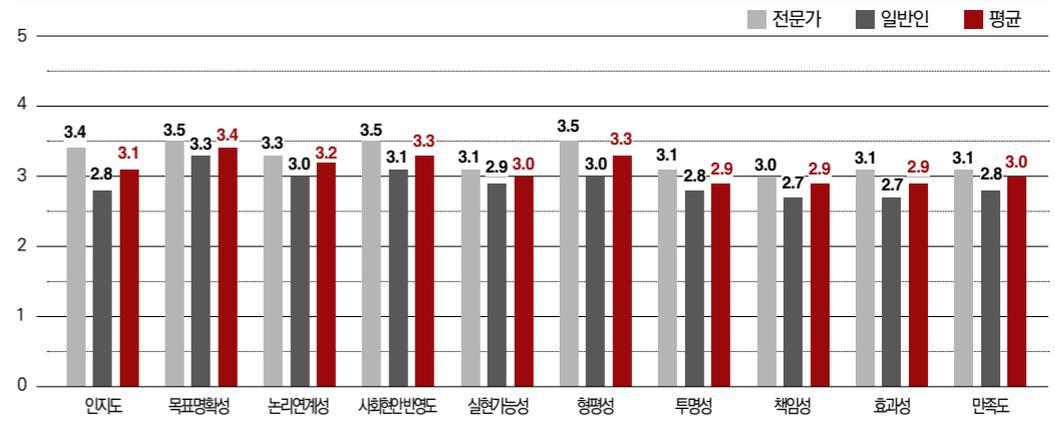
[그림 4-7] 가계부채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본 정책은 비교적 전문가들에게는 인지도가 높은 반면(3.4점)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2.8점). 이는 일반 소비자들이 유통분야와 관련된 본 정책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5점, 일반인 3.3점). 본 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사회적 문제인 '갑을 문화'의 일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책적 목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역시 전문가 및 일반인 집단 모두에게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3.3점, 일반인 3.0점).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개선 정책과 마찬가지로 본 정책 역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논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 역시 두 집단 모두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3.5점, 일반인 3.1점).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과 마찬가지로 '갑을 문화'가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대두한 것을 감안할때 자연스러운 평가 결과라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3.1점) 일반인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2.9점). 정부부처에 대한 불신이 일반인들의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5점, 일반인 3.0점).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명백한 약자인 납품업체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3.1점) 일반인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2.8점).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문화에서 정부 및 관료집단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3.0점) 일반인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2.7점). 이는 본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 납품기업을 구제 및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내용이 미약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3.1점) 일반인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2.7점). 일반인들의 부정적 평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하도급 유동업체들의 횡포를 심심찮게 경험하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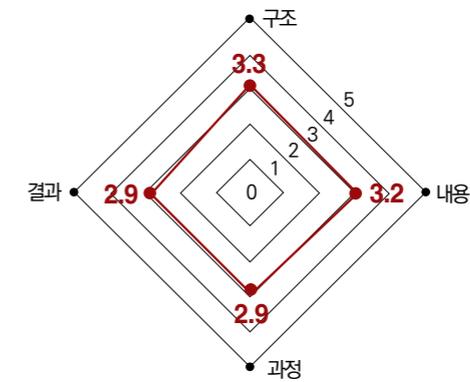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3.1점) 일반인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2.8

점).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과 마찬가지로 내용과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에 대한 의문 및 불만족에서 다소 부정적 결과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이 과정과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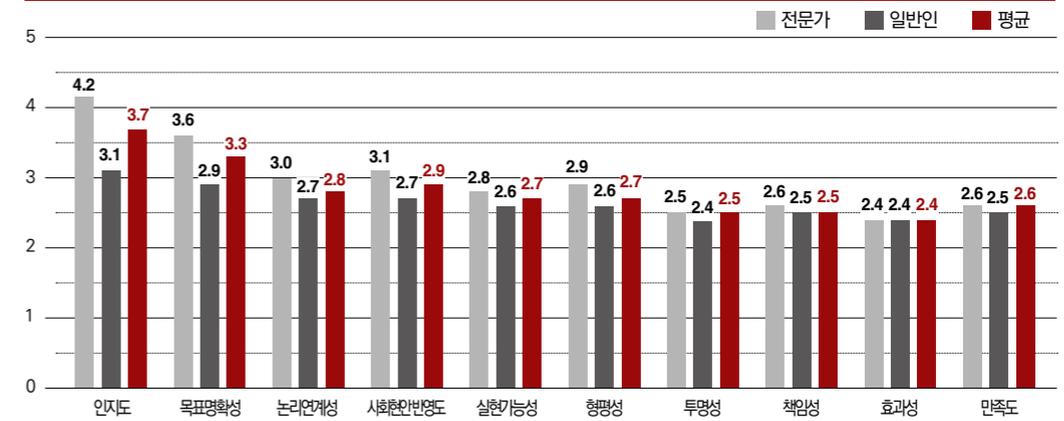
[그림 4-9]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본 정책은 전문가들에게는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4.2점) 일반인들 역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3.1점). 공공기관의 정책이 사회 전반에서 시행할 정책의 시범정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4-1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3.6점), 일반인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2.9점).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의 개선이라는 전반적인 목표에 전문가들은 동의하나, 그러한 목표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통해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중립적으로 평가한 반면(3.0점) 일반인은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2.7점). 공공부문은 효율성과 동시에 형평성, 공정성, 책임성 등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금전과 연계한 내부성과 강화 방식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 역시 전문가들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3.1점) 일반인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2.7점). 이는 해당 현안이 사회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8점, 일반인 2.6점).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금전보상에 대한 유인이 작다는 것과, 영미 국가의 실패사례가 존재한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평가라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9점, 일반인 2.6점). 공공부문의 효율성 저하는 공공기관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 내 협력강화, 전문지식을 지닌 경영인의 도입 등의 방식으로 극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효율성 제고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5점, 일반인 2.4점).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부재는 물론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의견수렴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6점, 일반인 2.5점). 본 정책은 과학적 연구에 기초해 입안되었기 보다는 집권 여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파적 결정에 가깝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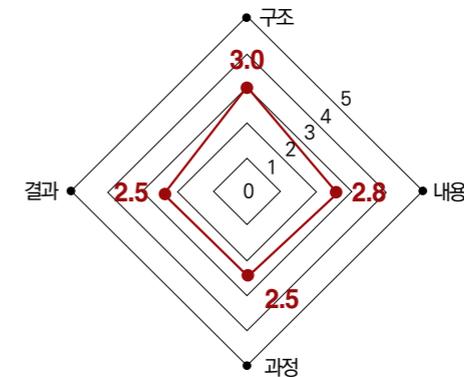
본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4점, 일반인 2.4점).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영미국가의 실패 사례, 학계의 연구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6점, 일반인 2.5점). 이는 본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물론 그 도입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암시한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비해, 과정과 결과는 다른 정책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과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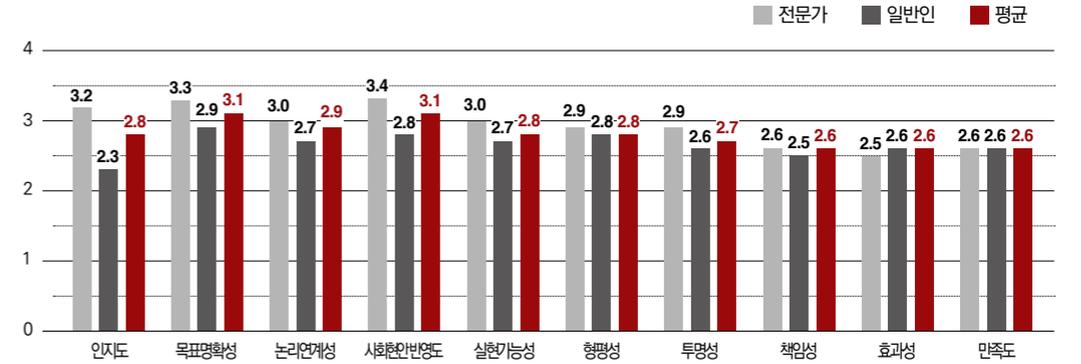
[그림 4-1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정책은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틈스와 함께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사업 중 하나이다. 일반인 중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의 56%이고, 전문가들 중에도 10%에 이른다. 그러나 본 정책은 여러 가지 전략적 육성 대상 중 특히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라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만큼 논란의 여지도 많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2]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은 2.9점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이한 점은 일반인의 응답이 '보통이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42%가 '보통이다'로 응답했는데, 이는 10개 평가 대상 정책 중 가장 높다. 이는 본 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의 측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는데 전문가 3.0점, 일반인 2.7점으로 10개 평가대상 정책 중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면서, 특히 일반인의 '보통이다' 응답이 매우 높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는 본 정책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은 항목으로 전문가 3.4점, 일반인 2.8점을 기록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다른 분야보다 사회현안 반영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약화되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라는 정도 포착되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전문가 3.0점, 일반인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역시 '보통이다'의 응답이 10개 정책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은 전문가 2.9점, 일반인 2.8점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이 35.8%, 긍정적인 답변 21.2%에 비하여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의 경우 전문가 2.9점, 일반인 2.6점으로 다시 차이가 조금 벌어졌으며, 특히 일반인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의 두 배가 넘는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은 전문가 2.6점, 일반인 2.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책과정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른 정책들 대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일반인의 부정적인 답변은 44.6%, 긍정적인 답변 13.2%에 비하면 세 배가 넘는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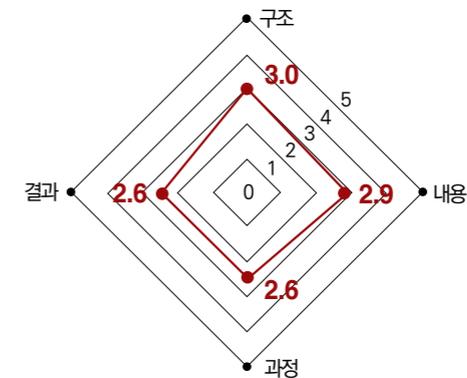
효과성은 전문가가 유일하게 일반인보다 낮게 평가한 항목이다. 일반인은 2.6점인데 비하여 전문가는 2.5점을 기록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는 52%, 14%에 그친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의 만족도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 2.6점으로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부정적인 의견과 '보통이다'의 의견이 43%, 42%로 비슷했는데, 전문가의 경우 52%, 28%로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요약하면,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정책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응답이 중간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일반인 모두에게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많은 편이었다. 위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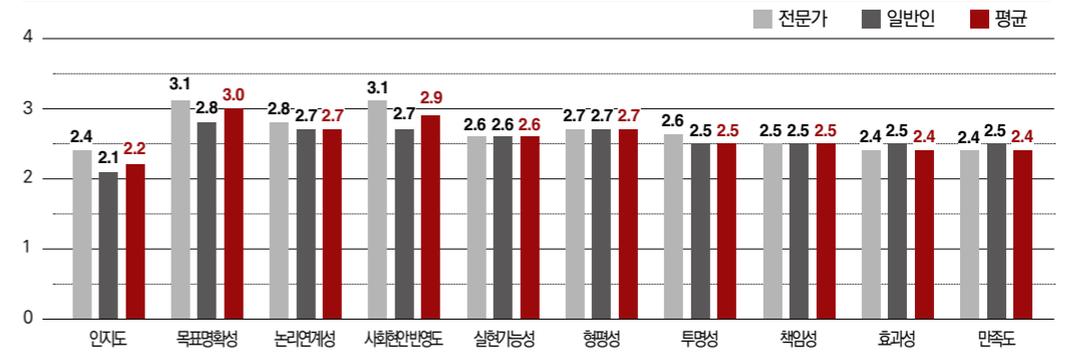
[그림 4-13]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일명 기업활력제고법 혹은 원샷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책이다. 인지도가 전문가 2.4점, 일반인 2.1점으로 경제 분야 평가 대상 10개 정책 중 팁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조선, 철강 등 한계에 다다른 과잉생산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급함에도 정책의 인지도가 이 정도로 낮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림 4-14]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정책의 목표에 대한 평가도 낮은 편이다. 전문가 3.1점, 일반인 2.8점으로 최근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제외하고는 10개의 경제 분야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2.8점, 일반인 2.7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부정적인 의견이 41.2%로 긍정적인 의견 18.6%의 두 배가 넘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과잉생산 업종 구조조정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평가 대상 정책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다분히 낮은 정책 인지도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 2.6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그런데 다른 항목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 일반인 모두 40% 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 측면에서도 역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7점으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하였다.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의 2배 이상이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 측면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전문가 2.6점, 일반인 2.5점으로 경제분야정책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의 경우 투명성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전문가, 일반인 모두 2.5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분야는 일반인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는데, 책임성 분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긍정 의견 8%에 비해 부정 의견 52%여서 7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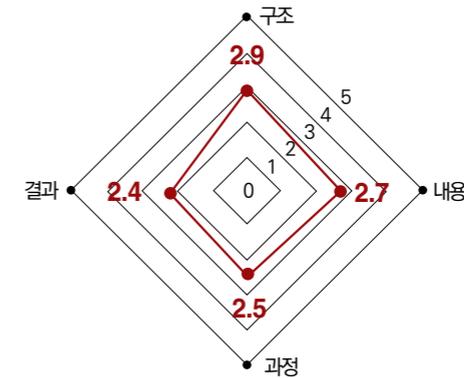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전문가 2.4점, 일반인 2.5점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전문가 2.4점, 일반인 2.5점으로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전문가의 경우 긍정 의견 6%, 부정 의견 64%로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위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대체로 정책의 구조와 내용은 과정과 결과에 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본 정책과 같이 구조와 내용에서도 3.0점대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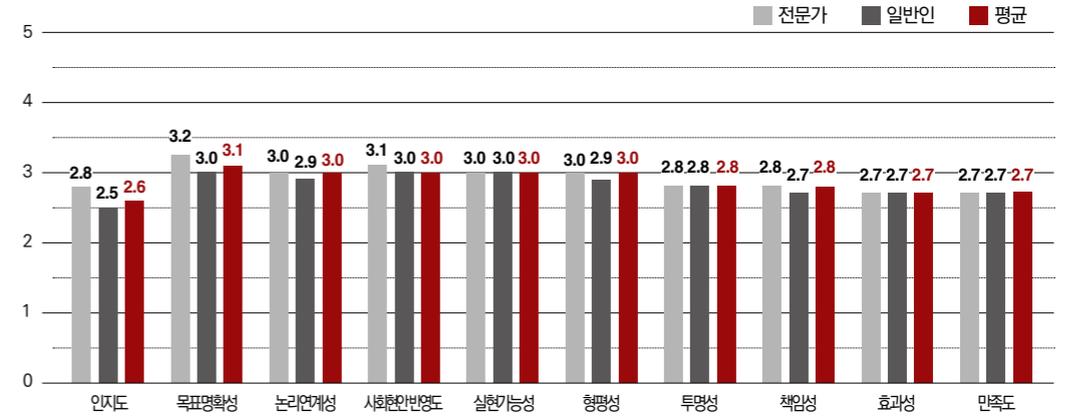
[그림 4-15]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본 정책은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전문가 2.8점, 일반인 2.5점). 드론이 비교적 새로이 등장한 이동수단이며 아직 그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림 4-16]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3.2점), 일반인은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3.0점). 소프트웨어적 혁신과 이를 위한 하드웨어적 규제 개선 정책이라는 점에서 목표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중립적으로 평가한 반면(3.0점) 일반인은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2.9점). 생소한 신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논리적 연계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 역시 전문가들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3.1점) 일반인들은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3.0점). 익숙하지 않은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본 정책의 특성에 부합되는 평가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0점, 일반인 3.0점). 이 역시 익숙하지 않은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본 정책의 특성에 부합되는 평가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중립적으로 평가한 반면(3.0점) 일반인은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2.9점). 일반인의 부정적 평가는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8점, 일반인 2.8점). 생소한 분야에 대한 정책임에도 사회적인 논의가 없었던 탓에 부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8점, 일반인 2.7점). 이 역시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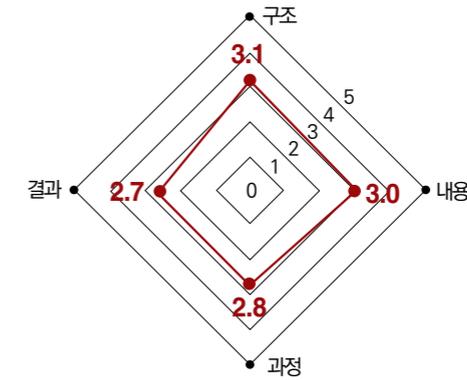
본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7점, 일반인 2.7점). 생소한 분야에 대한 정책임과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이러한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7점, 일반인 2.7점). 이 역시 생소한 분야에 대한 정책임과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이러한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 어지는 그림과 같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구조와 내용이 과정과 결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이 아직까지는 다소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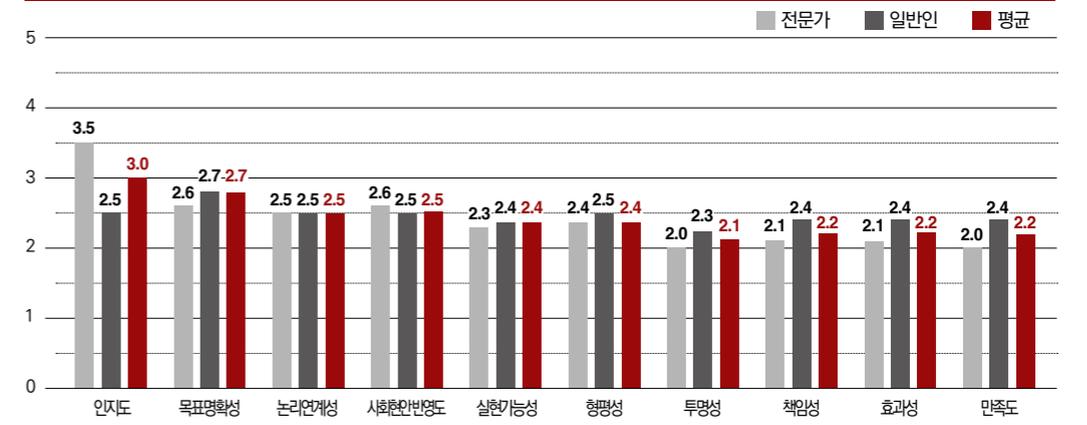
[그림 4-17]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은 현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3.5점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인 집단에서의 인지도는 2.5점으로 의외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다. 다만 본 정책은 최근 박근혜 정부 스캔들에 연루된 정황이 보도되어 평가결과에 다소 부정적인 편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4-18]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젊은이들의 창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가 그다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 전문가 2.6점, 일반인 2.7점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2.5점, 일반인 2.5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의 2배 이상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의 경우, 전문가 2.6점, 일반인 2.5점을 기록하였다. 다른 정책의 경우 대체로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보다 높은 편인데, 본 정책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의견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문가 집단 2.3점, 일반인 집단 2.4점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 대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는 72%로, 긍정 평가 8%에 비하면 9배나 높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에서도 전문가 2.4점, 일반인 2.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의 것보다 더 부정적이다. 실현가능성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부정 평가는 긍정 평가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은 2.0점으로 특히 부정적이었다. 이는 일반인 집단의 2.3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고, 경제 분야 평가 대상 정책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최근의 박근혜 정부 스캔들의 영향을 다소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의 경우에도, 전문가 집단은 2.1점, 일반인 집단은 2.4점으로 경제 분야 평가 대상 정책 중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부정 평가 76%, 긍정 평가 6%로 12배가 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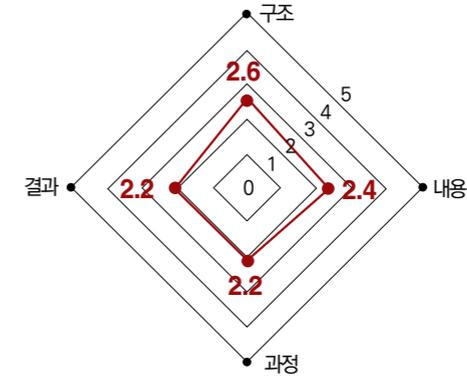
효과성은 전문가 2.1점, 일반인 2.4점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는 2%에 지나지 않아 76%에 이른 부정 평가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만족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관찰되는데, 전문가 2.0점, 일반인 2.4점으로 전문가의 평가가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위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대체로 정책의 구조와 내용은 과정과 결과에 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본 정책과 같이 구조와 내용에서도 3.0점대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거의 전 영역에서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의 평가보다 다소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정책에서 관찰되는 패턴과 다소 상이한 부분인데,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 스캔들에 본 정책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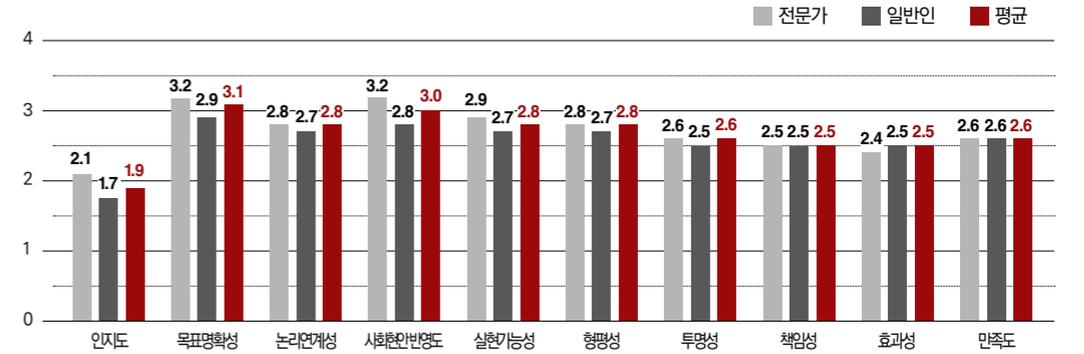
[그림 4-1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틱스 프로그램

틱스 프로그램은 벤처 창업에 대한 대표적인 재정지원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일반인 모두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인지도에서 본 정책은 전문가 2.1점, 일반인 1.7점으로 경제 분야 평가 대상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20] 틱스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인지도는 가장 낮지만 벤처 지원을 통한 기술 창업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뚜렷하다 보니 정책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전문가 3.2점, 일반인 2.9점으로 인지도에 비해선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의 측면에선 전문가 2.8점, 일반인 2.7점으로 평가 대상 정책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목표에 비해 정책의 내용은 다소 복잡하기에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출되는 평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회현안 반영도의 평가는 전문가 3.2점, 일반인 2.8점으로 여전히 하위권이지만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혁신 중심의 벤처 경제가 살아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전문가 2.9점, 일반인 2.7점으로 최악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의 2배 이상으로 전문가 집단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전문가 2.8점, 일반인 2.7점으로 일반인 집단이 역시 좀 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일반인 집단의 경우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전문가 2.6점, 일반인 2.5점으로 하위권에 속하지만, 인지도에 비해서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2.5점, 일반인 2.5점으로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 대비 본 정책의 특징은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간의 평가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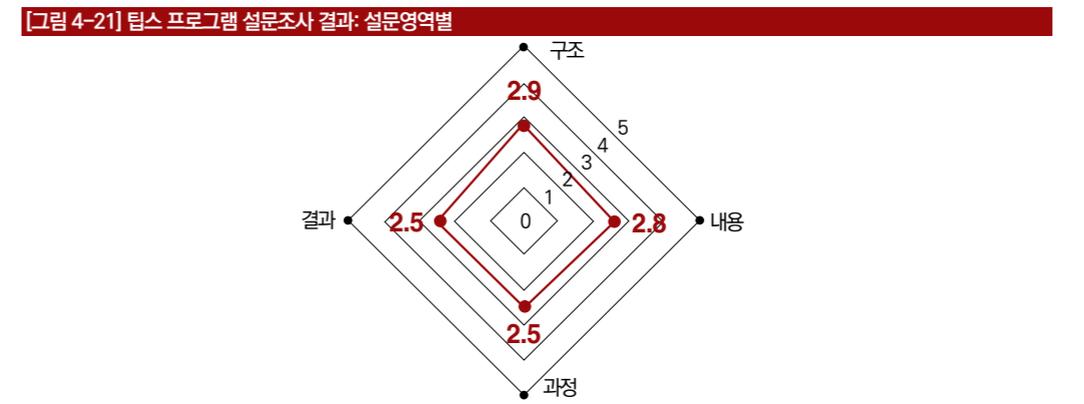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문가 2.4점, 일반인 2.5점으로 전문가 집단이 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전문가,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 일반인 모두 2.6점으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정책의 결과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인지도가 워낙 낮다보니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

위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대체로 정책의 구조와 내용은 과정과 결과에 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본 정책과 같이 구조와 내용에서도 3.0점대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그러나 본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전문가, 일반인 모두에서 매우 낮다보니 특히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실제 결과에 기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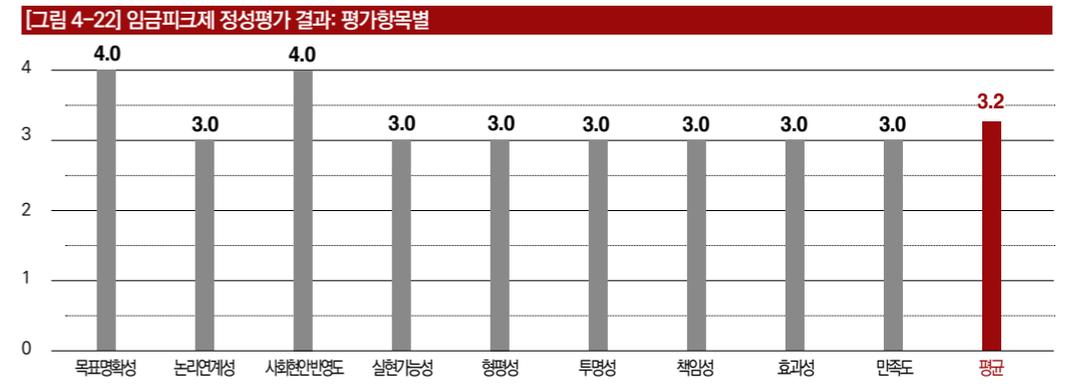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임금피크제

10%를 상회하는 청년실업률과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정책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년연장 및 청년실업이라는 이중고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임금피크제 목표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실업문제라는 이중의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정책이 이 문제들의 해결을 목표로 입안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연계성이 중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논리 자체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도 외적 요소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 임금삭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이 다른 전용 없이 청년들의 고용창출로 연결될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계약직의 확대를 통한 청년채용의 양적증가가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청년실업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큰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전쟁으로 묘사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년실업의 지속적 증가 및 고령인구 부담의 증가는 결혼 및 출산율의 저하, 일할 의욕의 상실 등을 야기하며 사회 및 경제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임금피크제의 실현가능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제도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의 실현여부는 정부가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노동인구 증가에 대처하여 대기업의 투자 및 채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상당한 현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채용 확대는 대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본 정책의 불균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임금피크제의 투명성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는 물론 이 정책에 따라 마련된 재원이 전용 없이 청년 채용 확장에 사용되는 것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보완적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상생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에 대한 평가 역시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책임성은 임금피크제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본 정책이 취하는 대책에 대한 평가라 볼 수 있다. 즉, 임금피크제가 청년채용의 증가라는 순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상만큼의 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서 중립적인 평가가 온당하다고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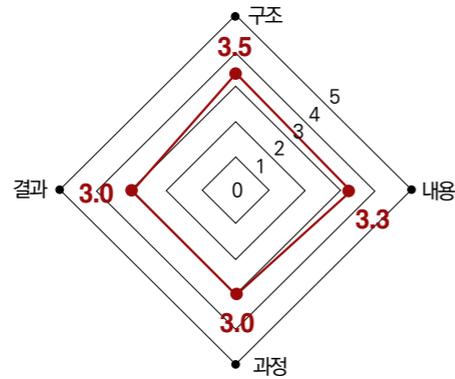
본 항목에 대한 평가 역시 중립적이다. 정책의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정책의 성공여부는 제도가 기업 및 노동자들의 경제행위에서 구속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제도 외적인 요소, 즉,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라는 연결고리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등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립적인 평가가 마땅해 보인다. 한편 본 정책의 제도적 지원책 역시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생고용지원금'의 경우 2016년 9월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85.2%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하며, 48.6%의 대기업이 내년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오직 11.4%만이 내년 신규채용 규모의 증가를 내다보는 등 임금피크제가 청년채용 증대라는 의도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도의 미미한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평가를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만족도에 대한 평가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임금피크제의 만족도는 결국 청년고용의 증대가 이루어질 때 증대될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급속한 청년고용의 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청년실업 문제의 획기적인 돌파구로서 임금피크제를 바라보기에는 그 신규채용 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채용 창출효과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에 대한 요약은 지난 해의 평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조 및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책자체의 완결도보다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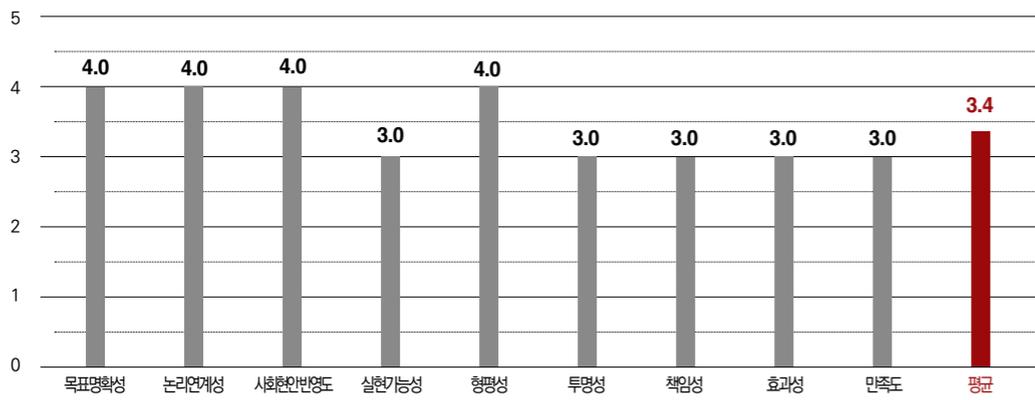
[그림 4-23] 임금피크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은 보통 수준의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전반에 널리 인식되는 공정한 거래문화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당사자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정책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4-24]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공감되는 고질적 문제이기에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복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 정책설계는 실질적인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시켜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소위 '갑을문화'가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저해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균형 잡힌 경제체질로의 개선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위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복우려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은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관행 개선상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장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관계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중소기업 역시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자력구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이 일방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해 제시한 본 정책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또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균형 잡힌 경제체질로의 개선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정책의 수혜대상은 보다 광범위한 국민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도 형평성이 높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본 정책의 명확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정치권과의 부리 깊은 정경유착의 문화와 특히 근래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의 도입 사례가 빈번했음을 고려해 볼 때, 정책 피드백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공개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중소기업은 일회적으로는 미지급대금을 지급 받는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향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정책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장기적 거래관계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고발자 보호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내용이 도입되어야 본 정책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임이 완수된다고 볼 수 있겠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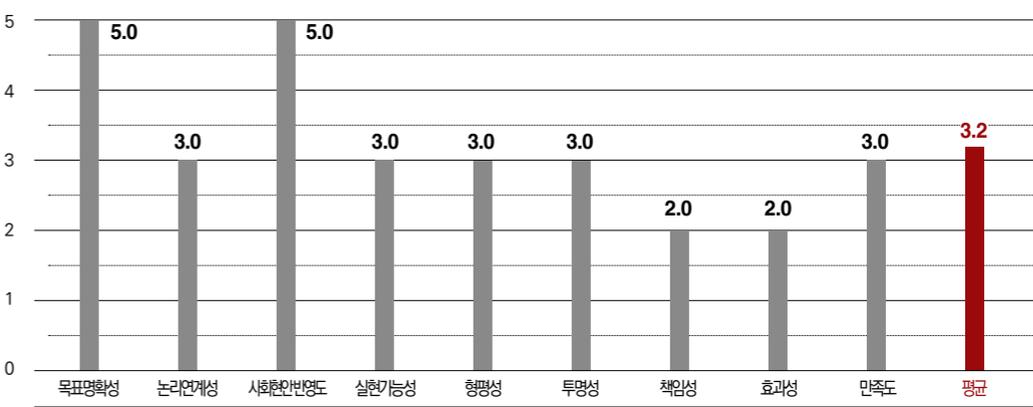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도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비록 정량적인 수치는 본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산출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본 정책의 근본적 목표가 불공정거래 관행 자체의 근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은 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감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 항목의 긍정적 평가는 결국 사회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되고 있다는 합의가 도출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실행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적 숙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책의 만족도는 결국 일회적·단발적인 불공정행위의 적발 및 시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측정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도출에 달려있다. 아직 이러한 장기적 목표달성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임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자면,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구조 및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적 측면은 현 시점에서는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현 시점의 것이며, 향후 긍정적 평가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림 4-26] 가계부채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016년 현재 가계부채의 규모는 1,300조원을 상회한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80% 수준으로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할 만한 수준이나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정책 목적으로 뚜렷하게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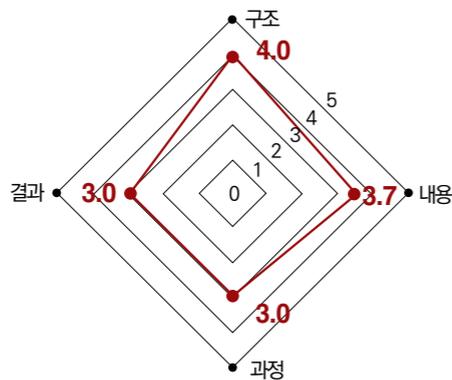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 소득 증대, 2) 주택시장 관리, 3) 부채관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대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수요에 있는데, DTI 규제 강화와 같은 수요관리를 위한 대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분양보증 심사 강화로 인해 공급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수요를 자극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현재의 주택수요 중 상당 부분은 지나친 전세금 상승에 따른 결과물인데, 전세금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조이는 경우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을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대출 관행이 정착되어 가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차차 개선되고 있으나(분할상환/고정금리 비율: '10년도 6.4%/0.5%, '16년도 41%/38.8%) 가계부채는 2015년 10.9%, 2016년 상반기 1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IMF는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한겨레, 2016.9.8.). IMF는 특히 노후 불안으로 증장년층이 대출에 기댄 영세 자영업에 진출하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흔히 지적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25]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이다. 현재 드러난 규모만 1,300조에 달하고, 숨어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기보다 부동산경기 부양이라는 기존의 정책기조와 충돌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가계부채의 두 축은 주택담보대출과 생계형대출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생계형대출은 경제성장 과 소득증대가 받쳐 주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책의 초점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맞추어 지는 것이 현실적이다. 문제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였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원래의 정책기조를 급격히 바꾸지 못하고 어정쩡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급격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부정과 같은 모순을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얼마나 둔화될지 다소 회의적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가계부채를 현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수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비 부족을 메우려는 수요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이러한 수요가 이자율이 높은 제2 금융권으로 넘어가 서민층에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주택 실수요자들 역시 지나친 전세금 상승 탓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단 대출을 규제해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조이게 되면, 이들은 전세금 상승과 대출 규제의 사이에 끼어 움푹달짝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부동산 관련 정책은 성격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 일반인들의 접근이 차단된다. 본 정책도 핵심이 부동산 관련 내용이다 보니 주택금융전문가 간담회 이외의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성격상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지나치게 협소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1차로 올해 8월 25일에 발표되었고, 그 내용이 미흡해서 시장이 오히려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이자(공급 감소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주택시장을 오히려 자극함) 11월 3일에 추가 보완책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시장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애초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과정에서의 혼란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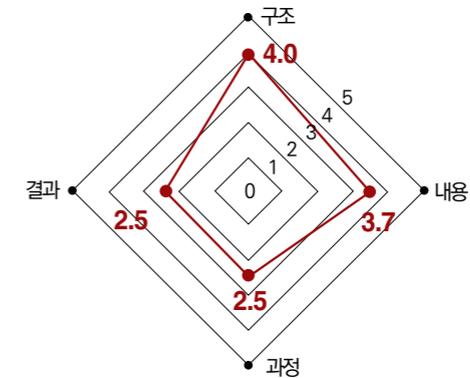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매우 한계가 많은 정책이다. 8.25 대책에 포함된 공급관리 방안은 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혀 이후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 자극했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 담보대출액 증가로 이어졌다. 원래 정책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뒤이은 11.3 대책에 포함된 전매권 제한 등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는 이미 상당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있는 후라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주 정책 대상이 강남 재건축 주택에 국한되어 강남 이외 지역의 경우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에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가계부채 감소와 관련하여 본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중요 대책들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로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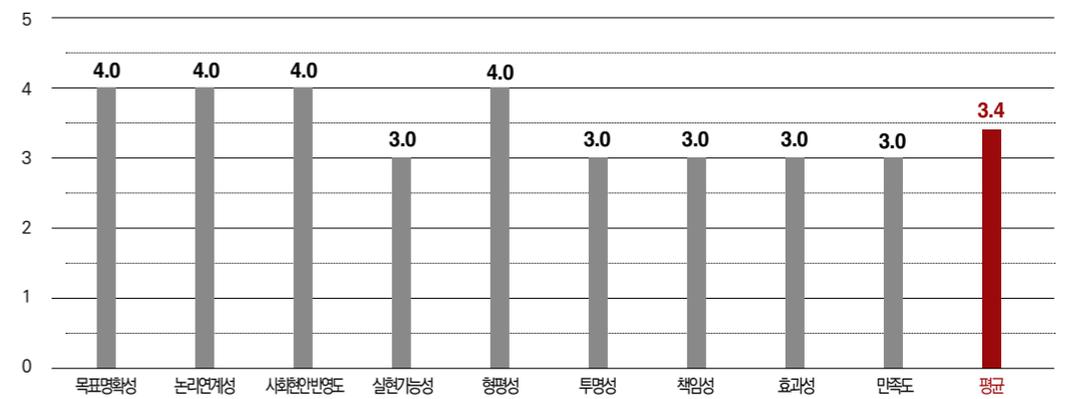
[그림 4-27] 가계부채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개선 정책은 이미 분석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과 그 궤를 상당히 같이 한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이 공감되고 있는 '갑을 문화'의 한 일면으로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정책 역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8]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과 마찬가지로 본 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고질적인 '갑을 문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역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복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 정책설계와 상시적인 불공정행위 감시 체계는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 역시 비교적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과 마찬가지로 소위 '갑을 문화'가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로 인해 대기업 중심의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기업 중심의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단순히 유통과정상의 불공정행위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차원의 문제로서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본 항목 역시 평가 근거가 하도급 불공정관행 개선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복우려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은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관행 개선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형 유통기업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납품기업은 장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대형 유통기업의 부당한 비용전가에 대하여 침묵할 개연성이 높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유통망에서 약자인 납품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해 제시한 본 정책은 높게 평가될 만하다. 또한 부당한 비용부담 전가의 억제를 통해 보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자리잡으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정책의 수혜는 보다 광범위한 국민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도 형평성이 높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과는 다르게 본 정책은 소비자들이 비교적 쉽게 그 정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팽배해 있고 정경유착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분야의 높은 가시성이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상쇄하여 중립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이 역시 상기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개선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정책의 책임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사전 방지와 사후 처벌보다는 유통망의 독점을 해소하고 경쟁이 증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방향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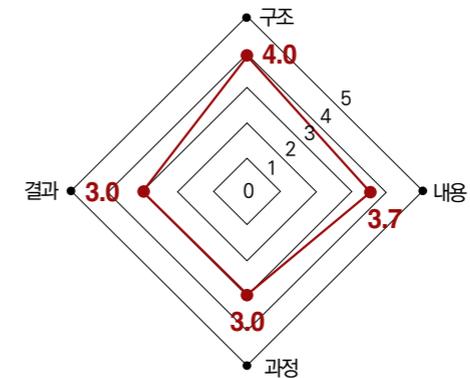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과 마찬가지로 본 정책의 근본적 목표가 불공정거래 관행 자체의 근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은 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감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보다 본질적으로 유통망 독점의 해소 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항목의 긍정적 평가는 결국 유통망 독점의 일부 해소와 이에 따른 납품업체가 선택 가능한 유통망이 다양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실행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적 숙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책의 만족도는 결국 일회적 단발적인 불공정행위의 적발 및 시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측정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도출에 달려있다. 아직 이러한 장기적 목표달성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자면,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과 마찬가지로 본 정책에 대한 구조 및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적 측면은 현 시점에서는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현 시점에 근거한 것이며, 장기적인 결과에 따라 긍정적 평가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그 장기적 결과의 성공여부는 유통망 독점의 해소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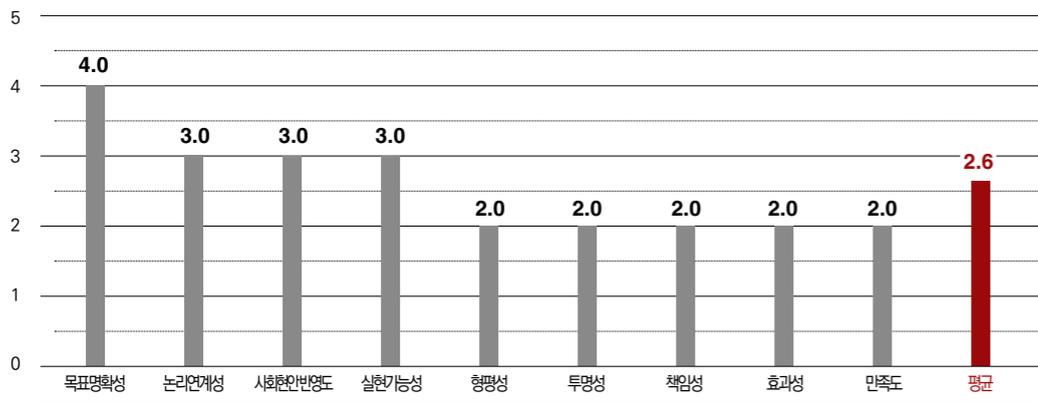
[그림 4-29]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기관 내부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 도입으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림 4-3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경영이라는 문제가 이미 오래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정책목표가 이처럼 명확하고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해서 본 정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본 정책은 민간부문의 주인-대리인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법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원활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그 책임성을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조직구조와 사업논리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과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이 시급한 사회현안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물론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의 과정과 심지어 공공부문 종사자들로부터 여론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생략한 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본 정책을 도입할 정도의 시급한 사회적 과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일할 분위기의 조성이라는 본 정책의 목표가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부재함을 들 수 있다. 성과연봉제는 분명 조직 내부의 경쟁적 업무문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개인 종사자 간 경쟁의 심화는 경쟁보다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존재 목적 자체와 어울리지 않는다. 즉, 본 정책은 공공부문이 이윤창출과 재산성보다는 공공복리와 후생을 증진하는 사회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성과연봉제가 우수 성과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액을 유지한 상황에서 저성과자의 임금 삭감으로 고성과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로섬 게임의 현행 방식은 경쟁의 제고보다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박탈감과 사기저하 조장 그리고 조직 내부의 협력을 저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또한 공공부문 서비스는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목표에 근거한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장기적 교육, 훈련 및 계발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경쟁력을 저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은 공공부문 개인 종사자의 나태한 근무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전문경영 지식이 부재한 소위 '낙하산' 인사들을 경영진으로 두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비효율 및 방만한 경영의 개선이라는 목표는 공공부문이 회전문 인사의 창구로 사용되는 정치적 고려의 연결고리를 끊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그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본 정책은 이러한 본질적 해법을 도외시한 채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필연적으로 재산성을 강조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저하시키며 이는 공공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업무특수성을 무시한 단일한 평가기준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와 관리자에 의한 일방적 평가방식은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정책이 이해당사자인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공공부문이라는 특성상 그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 정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심화할 뿐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책임성 역시 상당히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의 투명성 항목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종사자의 효과적인 의견수렴과정 역시 결여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부정적인 기존 문헌연구나 사례 등과 공공서비스

의 직접적 수혜자가 대다수 국민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정책적 이해관계와 궤를 같이 하는 본 정책의 일방적 도입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인 책임성과 반응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정책은 사회정책으로서의 공공부문을 포기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 및 국민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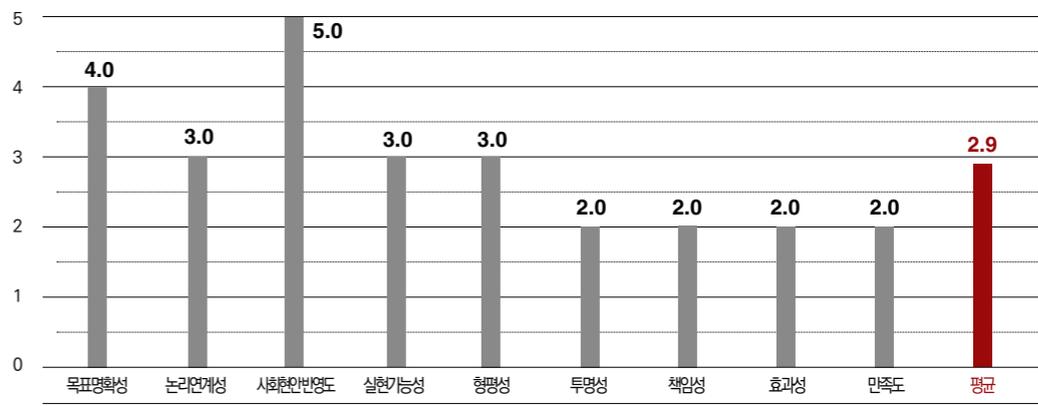
위의 항목에서 언급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정책의 효과성 역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결론적으로 본 정책의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에 대한 몰이해, 집권여당의 이해관계에 궤를 같이 하는 정책의 당파적 성격, 사회적 합의도출을 무시한 일방적 도입, 민주적 반응성과 책임성의 부재 등은 본 정책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본 정책은 정책의 과정 및 내용, 그리고 예측되는 결과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정책의 구조 부문에서는 그 목표의 명확성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목표가 명확하다고 해서 그 목표 달성에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정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림 4-32]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성장잠재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추진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세부목표가 있는데, 1) 서비스와 제조업 융합발전,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3) 의료, 관광 등 7대 서비스업 육성이 그것이다. 본 정책은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업종이 급속히 노후화되고 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서비스업종 육성을 통해 찾는다는 대체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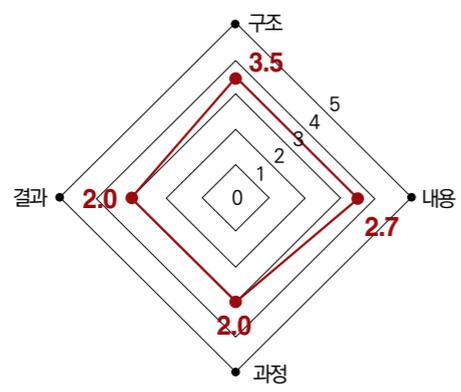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목표는 뚜렷하게 정의되어 있는 편이지만 논리적 연계성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본 정책의 폭이 매우 넓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초점을 가지고 묶이기 보다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듯하다. 또한 많은 경우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지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의료 허용과 진료정보 전자 송부를 위한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지 혹은 산악 및 해안 지대의 규제 완화와 공유숙박업의 허용으로 관광 경쟁력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논리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선도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이 어느 하나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거나 앞으로 수년 안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 분야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정책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방향성을 반영하는 사회현안 반영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한계에 다다른 중후장대형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시의적절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나, 제시된 정책만으로 의료, 관광, 금융 등의 핵심 서비스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의료 부분의 경우 민영화와 관련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원격의료 등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나 이미 호텔의 과잉공급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숙박업체 난립 및 성매매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공유숙박업에 대한 논란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은 단기간에 추진되기 어렵고, 본 정책의 성격상 추진된다 하더라도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다 보니 형평성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측면에선 부정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격의료는 지방의 중소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를 더욱 벌여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격·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의료 분야의 경쟁력 제고 논란이 민영화로 이어질 경우 의료가 가지는 공공성 상실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특히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MB 정부때부터 입법 추진이 되어 왔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인해 국회에서 오랫동안 묶여 있다가 2014년 처음 공청회를 열었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 공청회가 열렸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전달되었다. 2016년 11월에는 공청회 당일 의료관계 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도 있다. 그러나 많은 반대와 우려가 제기되어 온 의료 부문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입법 지연으로 인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 공유숙박업은 규제프리존법 제정, 인터넷은행 지분규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정책의 책임성을 평가하기엔 다소 이르다. 다만 앞서 투명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여러 기관에서 제기해 온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적절히 입법 내용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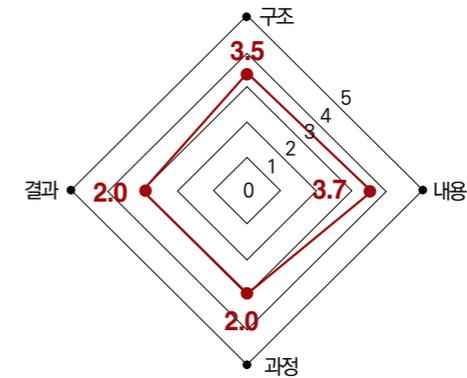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은 산업구조의 변화, 국민생활 패턴의 변화 등을 수반하고 있어 피부에 와 닿는 수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매우 긴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본 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므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기엔 다소 이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산업구조의 변화, 국민생활 패턴의 변화 등을 수반하고 있어 피부에 와 닿는 수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매우 긴 시간이 요구된다. 아직 본 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이라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 그러나 본 정책과 관련되어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의료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 실제 정책이 집행되더라도 높은 만족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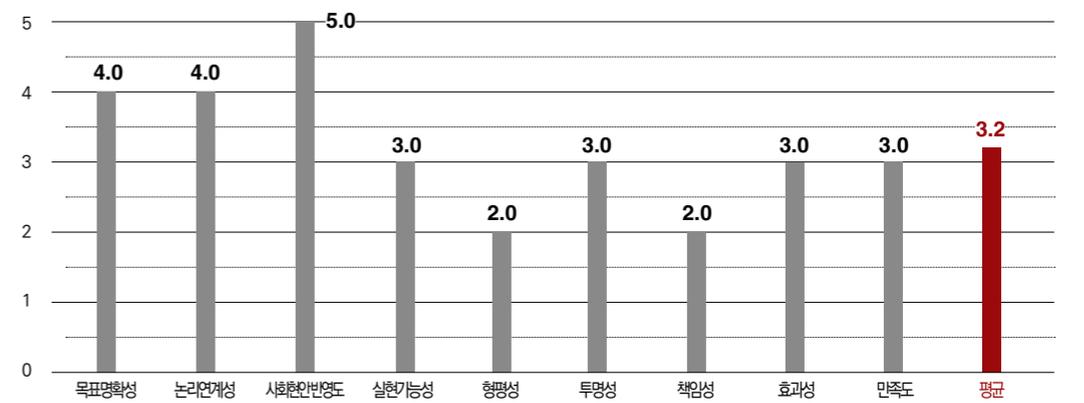
[그림 4-33]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조선, 철강, 정유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중후장대형 제조업들이 수명을 다하여 구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정책은 이러한 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야 합의로 마련되었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판단하긴 아직 이르지만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추진되어야 할 구조조정이 민간 자율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든다.

[그림 4-34]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조선, 철강, 정유와 같이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대체로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 산업들은 과거에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경제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어떤 형식으로도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명확한 배경 하에 추진되는 정책이기에 추구하는 목표도 명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신용등급 A 혹은 B의 정상기업이라도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의 한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정상업종이더라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기업들은 대부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3M은 광물회사였고, 노키아는 목재회사였다. 이들의 생존은 구조조정을 통해 가능했다. 물론 시장을 잃는 기업의 전략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생존의 필요조건이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변화를 피할 때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환경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현재 우리나라 대기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서 계열사 중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경우가 2015년엔 1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36%나 증가한 규모이다(한국경제, 2016.10.14.).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해운, 조선, 철강업종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집단에서의 한계기업 증가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3배나 빠르다는 데에 있다(뉴시스, 2015.12.6.). 본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은 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꼭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종별 상위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업종별 상위에 속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의사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2016년 11월22일 기준, 승인기업 7개 업종 10개 중 대기업은 3개). 예를 들면 최근 현대제철이 승인받은 분야는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적된 후판과 강관이 아닌 단강 제조설비 매각 건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누가 얼마나 생산시설을 감축할 것인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원샷법의 지원 대상이 특정 업종에만 국한되어 원래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기본적으로 장기적 관점의 구조조정은 민간 자율에 의해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지

만 철강이나 조선과 같이 구조조정이 시급한 업종의 경우 과연 민간 자율에 의해 어느 정도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본 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정책은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인수합병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 소액주주의 권리가 축소되고, 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 계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재편에 활용될 경우, 재벌의 경영권 승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지난 8월 13일 시행 이후 사업 재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 지침을 확정하였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법의 활용을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대상자 집단인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지난 8월 17일에는 경제9단체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무부처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 줄 만하다. 이러한 노력이 법 정착을 위한 초기 노력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될지는 향후 본 정책이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책수요자 혹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정책수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본 정책은 시작된 지 이제 3개월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아서 책임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집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으로 미루어 볼 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앞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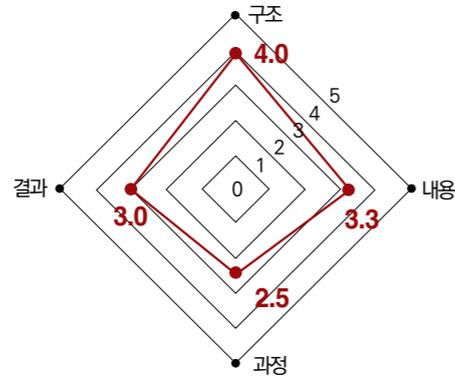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실행한지 3개월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신청 기업이 10개 정도 된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석유화학 및 조선 업종에서도 4~5개 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아시아경제, 2016.11.23.). 앞으로가 문제인데, 상위업체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지의 여부가 본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원샷법은 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에서 구조조정이 얼마나 절실한 이슈인지를 잘 보여준다. 다만 대기업 집단의 악용 우려에 따라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법 적용 대상을 현재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민간의 자율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자발적 조정을 통한 사업재편 효과가 나타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도 적용 가능해야 원래 법의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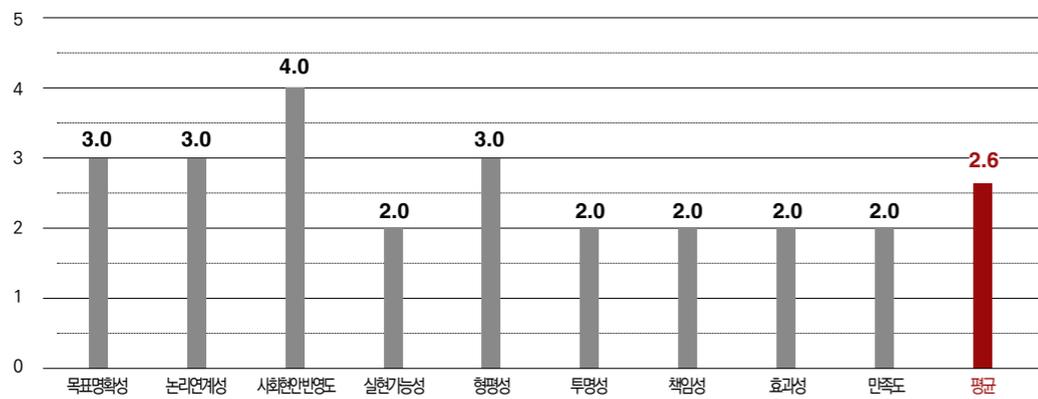
[그림 4-35]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본 정책은 드론이라는 생소한 이동수단을 통해 가능한 다양한 시장창출과 혁신적 창업아이디어의 촉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규제들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선제적 대응을 특성으로 하는 정책의 성격상 그 인지도가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6]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드론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시장의 창출이라는 소프트웨어적 혁신에 주목하고 이러한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하드웨어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표는 비교적 간명하고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창업 아이디어와 시장의 창출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목표가 비교적 광범위하여 정책적 지원의 방향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규제 개선이라는 하드웨어적 측면은 비교적 논리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드론을 통해 창출될 것이라 예상되는 시장의 성격이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부실한 까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의 개선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 연계성의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른 시대적 상황에서 기술적 혁신을 수용할 수 없는 오래된 규제의 존재는 잠재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하여 경쟁력을 잠식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본 정책은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드론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드론의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게 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실한 예측으로 인하여 현재 추진하는 규제 개선이 과연 드론 관련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정책의 낮은 인지도는 본 정책의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사적행위자들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에서 추구하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발생하게 될 손해집단은 실질적으로 부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드론 관련 산업의 동향 및 해외 드론 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드론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잠재적 손해집단에게 제공하는 등의 정부역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생소한 기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이라는 특성에서 본 정책은 그 투명성의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정책은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드론에 대한 잠재적 시장가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드론 산업의 미래 부가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규제 개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성공여부는 사실 규제 개선여부가 아니라 규제 개선을 통해 예측되었던 혹은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의 창출을 이루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정책은 현재까지는 그러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규제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선된 규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압도하는 부가가치 창출계획에 대한 부재가 본 정책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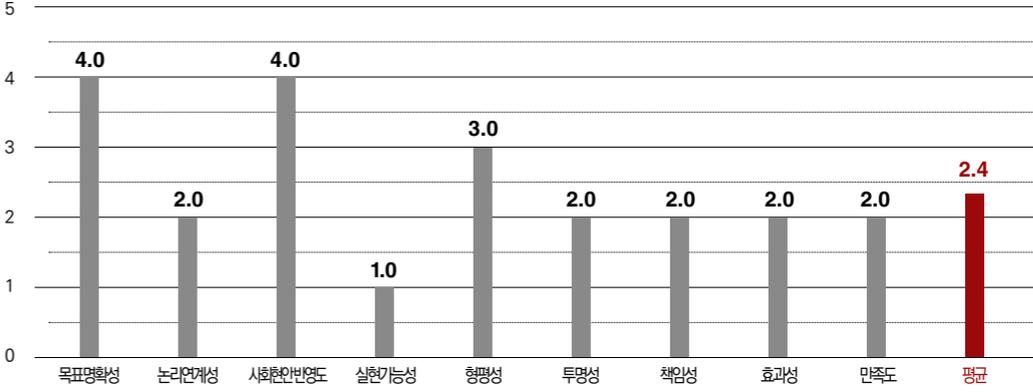
본 정책은 규제 개선과 부가가치 창출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취약한 관계로 그 효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통해 창출이 기대되는 보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에 대한 예측이 시급해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향후 기대되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 성격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만족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만족도가 다소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본 정책은 그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으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예측이 어려운 규제 개선의 효과 등의 이유로 인해 그 과정과 결과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8]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정책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자금과 노하우를 창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전달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투자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해 센터장을 대기업 임원이 맡는다. 벤처 창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를 목표로 한다는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사업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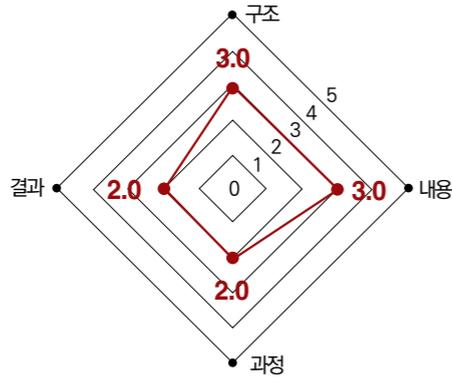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우선 벤처 창업 지원을 대기업이 맡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대기업과 벤처는 너무나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벤처 창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금지원과 함께 그 분야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이다. 엔젤투자자나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그 이유이다. 벤처 창업을 더 잘 알고 이해하는 엔젤투자자나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팀스 같은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대기업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다분히 전시행정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게다가 기술을 사고파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신기술을 뺏고 빼앗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대기업들이 지역을 분할하여 담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농업 중심의 전북에서 소재기업 효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울산에 기반을 둔 현대자동차가 왜 광주 지역을 맡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조선, 정유, 철강과 같은 중후장대형 제조업에 기반하여 성장할 수 없다. 기존의 모델은 이제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시점이고, 새로운 성장모델이 요구된다. 벤처경제는 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정책의 실효성과는 별개로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37]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정책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인위적인 접근으로 창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 성과로 제시된 자료 안에는 기술창업과는 동떨어진 활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박근혜 정부 스캔들과 관련되어 앞으로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실현가능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대기업이 담당하는 벤처 창업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술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대기업이 지원자가 아닌 신기술의 포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기업 중심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태계 구축 없이 창업 정책이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이다. 또한 대기업의 지역별 담당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벤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엔 형평성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구조상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핵심 지원자가 대기업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대기업은 신기술의 포식자가 될 개연성이 있는 집단이다. 게다가 지역별 담당 대기업이 하나씩 존재하므로 그 지역의 스타트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꼭 받기 원한다면 대기업과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타트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을 이유가 굳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비슷한 성격의 틱스 프로그램은 운용사를 20개 이상 선정하여 운용사 간의 경쟁체계를 만들었다. 운용사와 스타트업 간의 갑을 관계를 방지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따라서 본 정책은 국정과제의 성격상 상향식의 견수렴보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목소리가 투입될 수 있는 통로를 얼마나 만들고 이를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온라인을 통해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다지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반영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중심의 센터 운영, 원칙 없는 지역별 특화사업 배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방향성과 운영 면에서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에 대해서는 초기 출범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 부분은 앞서도 여러 번 언급된 바와 같이 대기업이 지역을 분담하는 형태가 적절하냐는 부분이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기업을 반강제로 참여시켜 투자하게 하는 것은 준조세에 해당되며, 이렇게 참여한다 한들 재정지원 이외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 정책의 기본구조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고 변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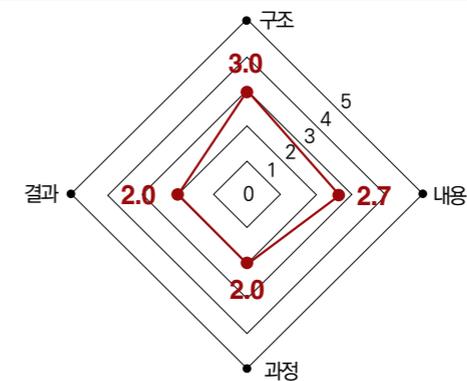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정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센터를 통해 1,135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고 2,834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아주경제, 2016.8.3.). 숫자만으로는 지난 3년 간의 성과치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분석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창업 기업 중 상당수(16.5%)가 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광주 센터에서는 대기업 패스트푸드점과 막걸리 생산업체, 미장원 등에 자금지원을 했고, 대구 센터에서는 결혼식 업체, 경남 센터에서는 건강식품 업체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술 창업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지역별로 지정된 특화 분야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토마토, 2016.10.17.). 이는 애초 지역에 따라 특화산업을 나누고 대기업이 분담하는 접근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전문가, 일반인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만족도가 매우 낮다. 이는 최근의 박근혜 정부 스캔들의 영향도 없지 않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책 자체가 가지는 만족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매칭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기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에서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성장 정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정권마다 중요 정책 이슈를 브랜드화해서 추진하고 다음 정부 때는 이들 브랜드 정책을 모두 지워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지워진 정권별 브랜드 정책의 이슈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다.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향점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퇴색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슈를 정치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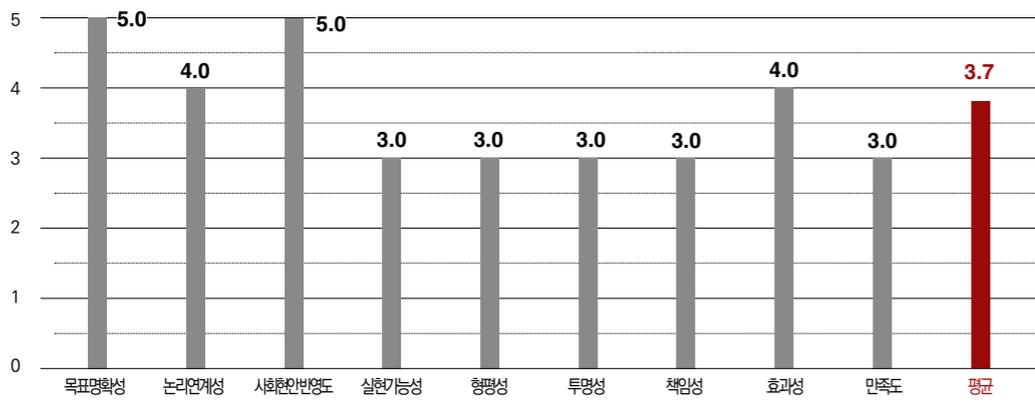
[그림 4-3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틱스 프로그램

틱스 프로그램은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 혁신을 위해 창업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접근으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공한 벤처기업인의 노하우와 정부의 재원을 접목하는 이스라엘식 모델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0] 틱스 프로그램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성공벤처인의 고급 역량과 정부의 재원을 결합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재원을 제공하고 틱스 운용사로 선정된 엔젤투자자 혹은 벤처투자자들이 이를 운용하여 기술 창업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틱스 운용사가 1억을 투자하면 정부지원을 최대 10억까지 확보할 수 있고 선정된 스타트업은 운용사의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창업자들이 생존에 있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초기 자금을 정부가 제공하고 그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공벤처인들의 경험을 접목시켜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매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기술창업의 필요조건은 기술과 아이디어이지만, 창업이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충분조건에는 자금과 관리가 반드시 포함된다. 본 정책은 바로 후자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지원 확보를 매개로 지나친 지분을 요구하는 틱스 운용사나 창업 성공보다는 정부 지원금만을 노리는 준비 창업자(이름만 바뀌서 여러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들을 어떻게 숙아내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전통적 경제 패러다임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자동차, 철강, 정유, 조선 등의 중후장대형 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거의 다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 중심의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먹거리는 추격형 경제 시대와 같이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밥그릇이 될 수 없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벤처경제로 나아가는 길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본 정책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좀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창업을 통한 성공은 결코 확률이 높은 게임은 아니다. 다만 100개 중에 1, 2개가 성공하면, 나머지의 실패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보상이 따른다. 따라서 본 정책도 높은 성공률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벤처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지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성공한 초기 벤처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다. 성공한 1, 2개의 벤처기업이 나머지 실패한 벤처의 손실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으려면 거대 시장을 선점하여 초기에 많은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에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좁다. 우리나라 시장만으로는 구조적으로 벤처가 성공하기 힘든 것이다(예를 들면, mp3 플레이어를 세계에서 처음 내놓은 우리 벤처기업 아이리버의 혁신의 과실을 취한 것은 세계시장을 선점한 ipod임). 따라서 초기 성공 벤처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 지원도 함께 요구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틱스는 청년 기술창업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창업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관련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대기업이 아닌 기술 중소기업 창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틱스 운용사 더벤처스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더벤처스와 같은 엔젤투자 혹은 벤처투자의 수익창출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투자한 규모에 비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틱스 운용사들도 대체로 비슷한 접근을 하는데, 틱스 지원을 받아주는 대가로 투자금보다 지나치게 많은 지분을 스타트업에서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제도적으로는 2배까지만 허용).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전통적인 엔젤투자자나 벤처투자자가 제도에서 투자액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틱스 운용사들은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나누고 있다. 따라서 제도에서 허용한 수준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는 일부 틱스 운용사의 관행이 적절치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운용사들이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틱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투자금 이상의 지분을 그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벤처 창업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요구된다(주간동아, 2016.11.16.).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팁스 프로그램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수렴 노력은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 초에 있었던 더벤처스 사건을 계기로 운용사들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투자 매뉴얼도 만들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팁스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정책이라 일반 대중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는 크지 않다. 따라서 정책의 책임성 여부는 정책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창업가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적극적인 정책 수정의 노력은 없었으나, 최근 중기청은 팁스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특히 운용사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용사의 수를 대폭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 보완 노력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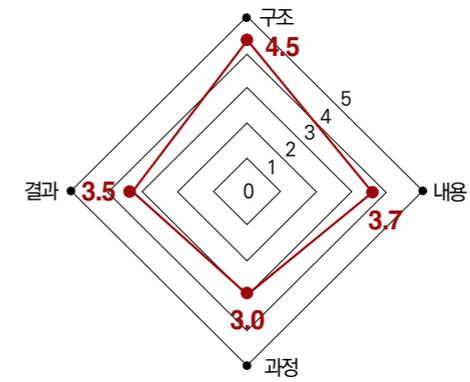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팁스 프로그램은 짧은 기간에 고급기술인력 창업 유도와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기술창업 육성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 컨설턴트로 15년간 경험을 쌓은 인물을 팁스타운의 기획본부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현재 역삼동 팁스타운에는 8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올해까지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아 창업한 기업은 189개에 이른다. 이 중 3개 업체가 프로그램을 졸업하였고 27개 업체가 해외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약 60여 개의 업체가 유치한 후속 투자금도 2,000억 원 정도 되며(아이티투데이, 2016.10.27.), 해외 엔젤투자사와 벤처캐피털로부터 3,000만 달러 정도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렸다. 아직 흔히 이야기하는 '대박' 정도의 성과는 없지만 2013년에 시작하여 3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프로그램에서 나온 성과로는 주목할 만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반인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점수가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물론 올 초에 더벤처스의 호창성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으나, 본 정책의 의미와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여러 군데 존재한다. 우선 최근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부분은 원래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업코리아, 2016.11.25.).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운영주체는 대기업인데, 팁스의 취지는 자금 지원을 통한 성공한 벤처기업인의 노하우 전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도 지적했듯이 기술 창업 성공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정부 지원금을 노린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그림 4-41] 팁스 프로그램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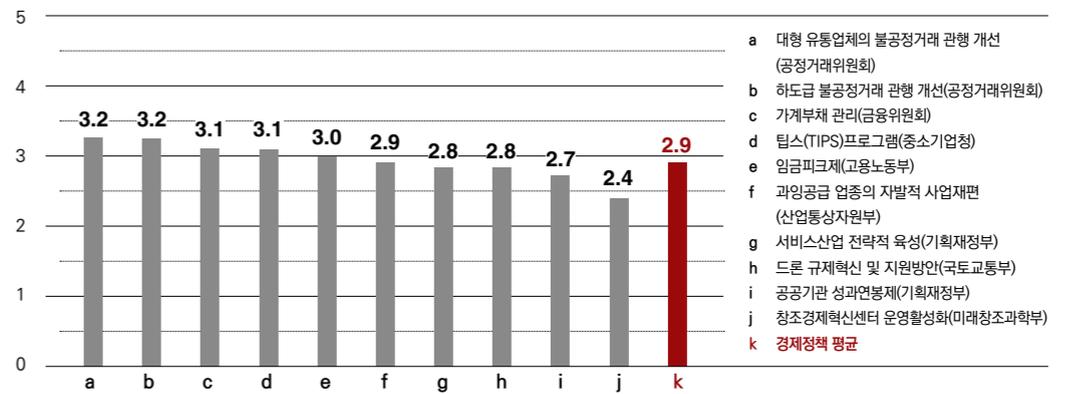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경제정책 분야 10개 정책에 대하여 일반인과 전문가, 그리고 본 연구진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균이 2.9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3.1점이었던 작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한 하락이 있었으며, 2년 전의 3.0점과 비교해도 다소 차이가 난다. 특히 작년 평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와 비교해서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교육문화분야와 비교해서는 동일한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엔 보건복지와 교육문화 분야가 모두 3.1점으로 경제분야와 차이가 났다. 이는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야기된 정부 정책 신뢰 및 만족도의 하락과 청년실업, 빈부격차확대, 경기침체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42]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을 비교해 보면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화두와 무관하지 않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은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갑-을’ 문화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 2년 간 가맹점주 권리 강화 정책이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책과 같이 시장의 공정성·형평성에 초점을 둔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3, 4위에 위치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나 틱스 정책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응전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는 현재 우리 경제 앞에 놓인 가장 큰 지뢰를 제거하려는 노력이고 틱스 정책은 한계에 다다른 중후장대형 제조업 경제를 실리론밸리형 창업경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들은 정책의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긴 영향도 없지 않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창업경제를 활성화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과 같은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공기업 성과연봉제도 민주주의 사회의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상당한 문제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별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실업문제 해소라는 어찌 보면 다소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소 상충되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임금피크제가 직접적으로 청년 고용 창출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논리적 연계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 등 정책의 과정 측면에서 다소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갑-을’ 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복의 우려를 최소화한 정책설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약자인 중소기업을 주요 정책 수요자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계부채는 현재 1,300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구조, 과정, 결과 전반의 질은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TI 규제와 같은 수요관리가 빠져 1차 대책 발표 이후엔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자극제로 작용했다는 부분은 매우 아쉽다. 이는 어찌 보면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로 인해 발생한 정책의 태생적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은 경제 분야 10개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으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정책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정책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갑-을’ 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유통망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존재함을 고

려할 때, 이의 시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정책이지만 수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공공기관 업무의 성격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찾기 어려운데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많은 경우 수익성뿐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 업무의 성격에 맞게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현행과 같이 저성과자의 몫을 빼앗아 고성과자에게 돌려주는 제로섬 배분방식은 조직 전체의 건강과 직원의 사기를 해칠 우려가 있어, 좀 더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여섯째,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OECD와 IMF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 특히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우리 경제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정책에서 나열한 대안들이 실제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면 본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원격진료나 공유숙박업소 활용은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에 있어서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일곱째,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함께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경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다루는 정책이다. 그러나 형평성 이슈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매우 제한적인 업종에만 적용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부분은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책이 특별히 고려하는 업종들은 장기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자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타율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민간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구조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드론 규제 및 지원 방안은 새로운 시장창출과 혁신을 위해 시장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려는 정책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그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 현재의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기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의 특성상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명백하게 불법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분야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하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아홉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는 우리 경제를 전통적 중후장대형 제조업 경제에서 창업 경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책의 수단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대기업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기술시장이 미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위험한 발상이며, 지역별로 전담 대기업을 임의 배정하는 접근도 타당성이 매우 낮다. 또한 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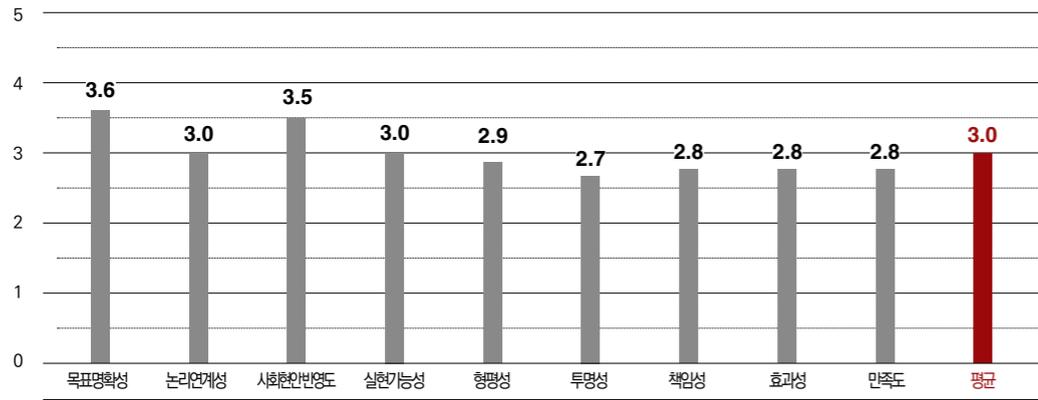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려도 취약하다. 전반적으로 정책 구조의 디자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열 번째, 틱스 프로그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창업 지원정책이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특징은 공공부문의 자원과 민간의 노하우를 본 프로그램을 통해 결합한다는 점이다. 본 정책은 창업지원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를 경쟁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금 지원뿐 아니라 창업 과정에서의 컨설팅과 해외진출까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디자인 하였다.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적절히 결합하여 잘 디자인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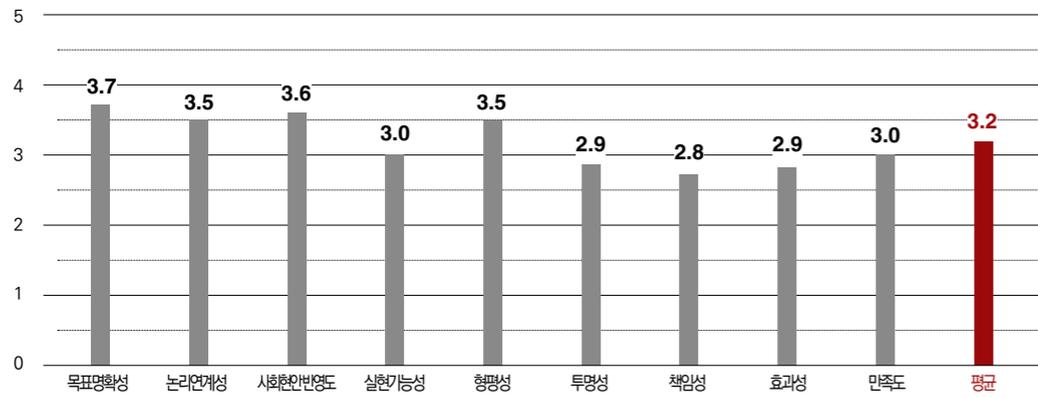
경제분야 10개 정책에 대한 분야별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한 평가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그림 4-43]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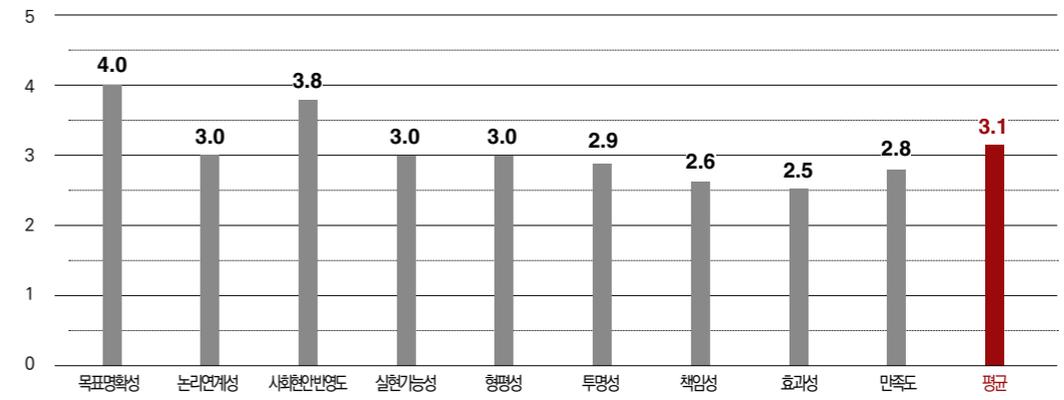
임금피크제(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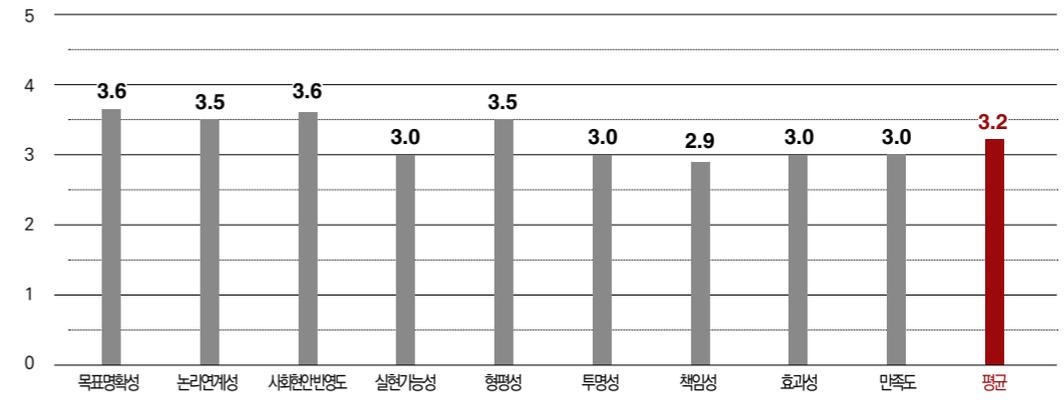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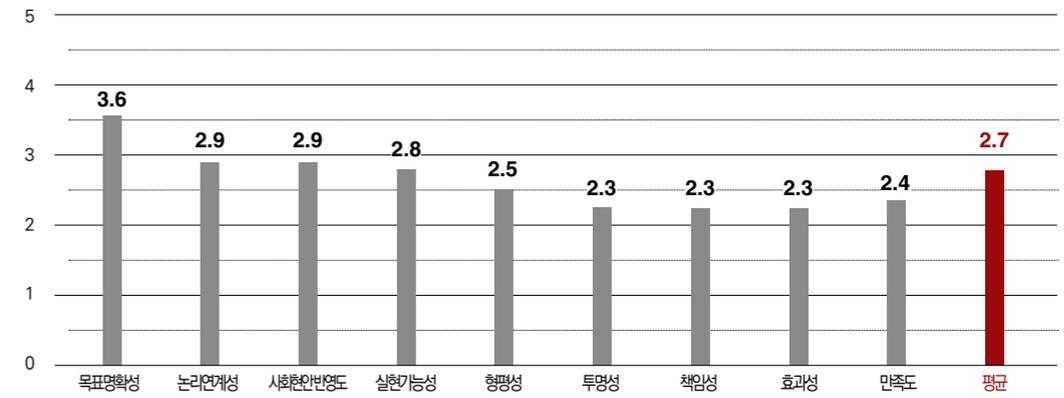
가계부채 관리(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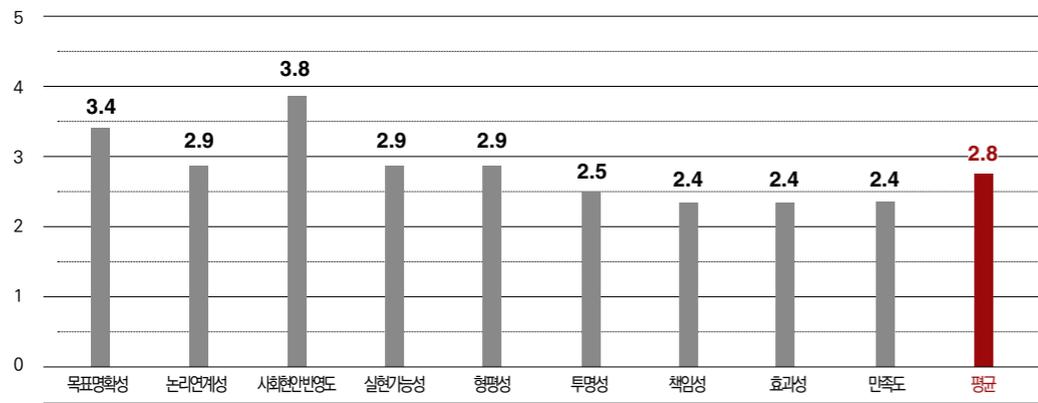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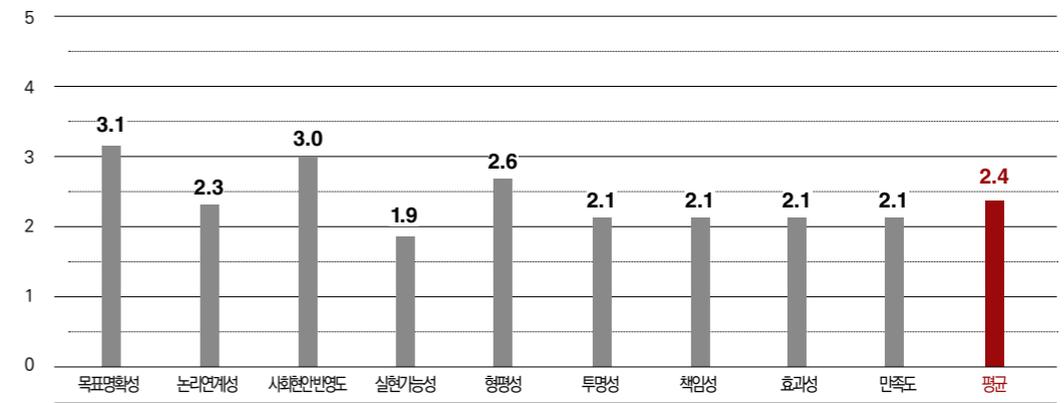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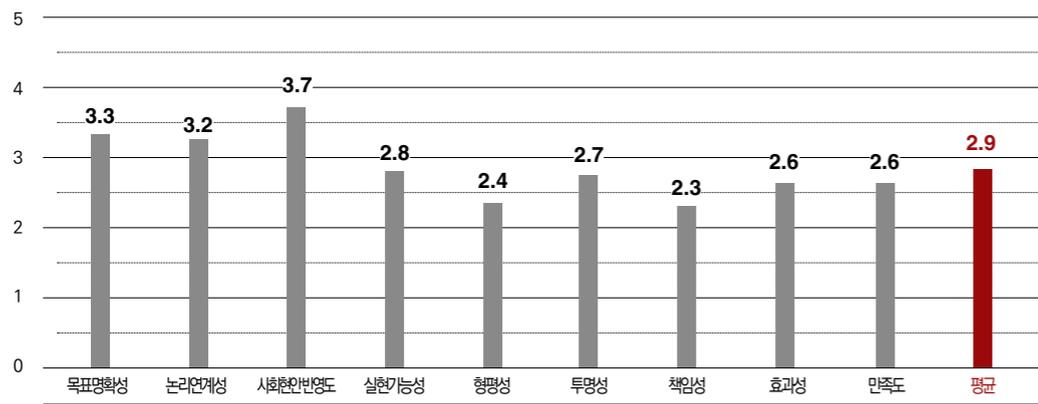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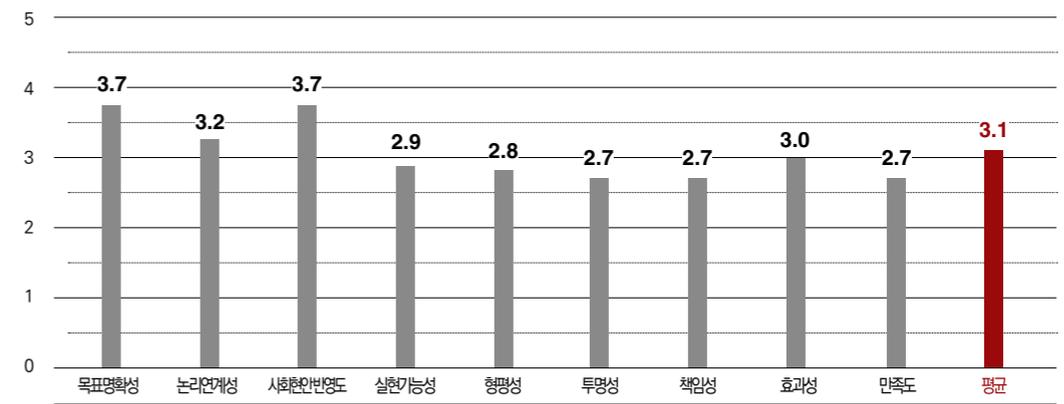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미래창조과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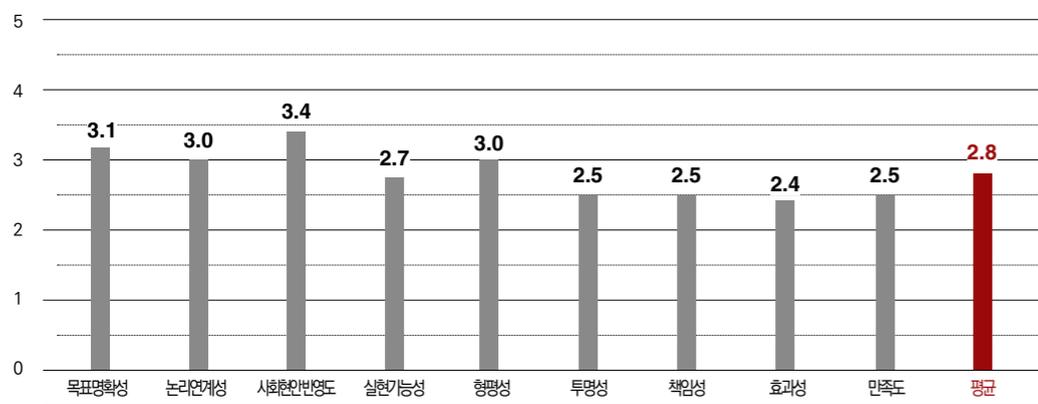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산업통상자원부)



팁스(TIPS)프로그램(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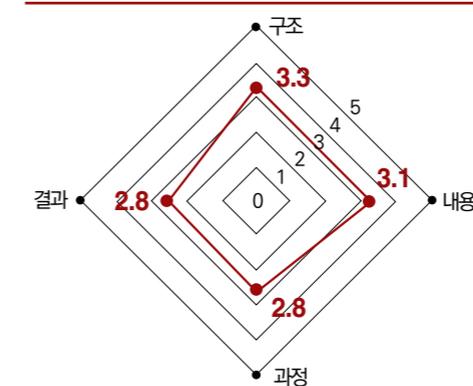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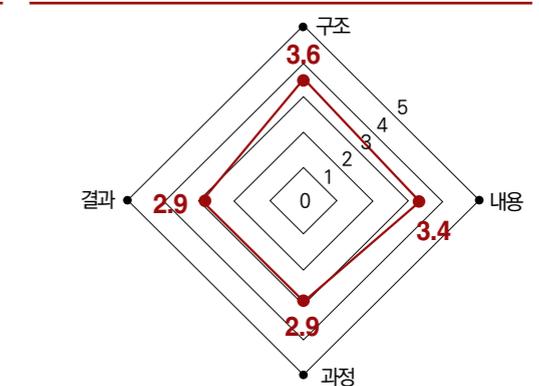


[그림 4-44]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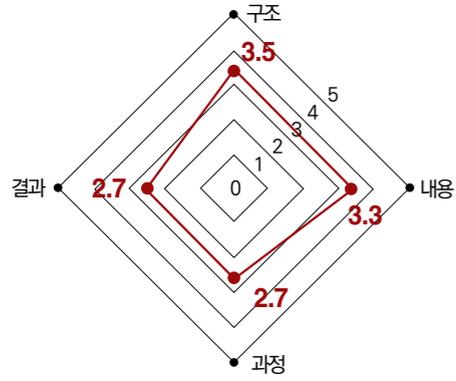
임금피크제(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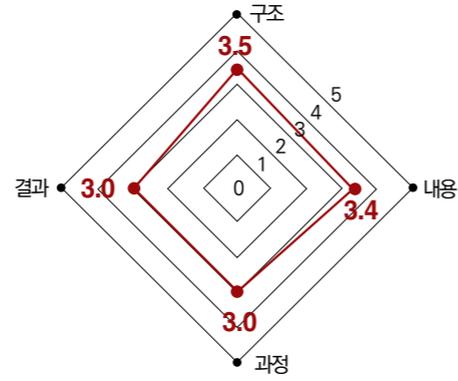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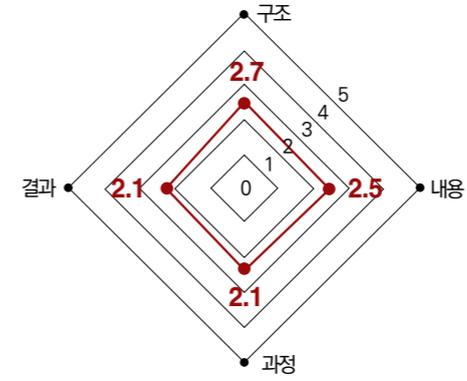
가계부채 관리(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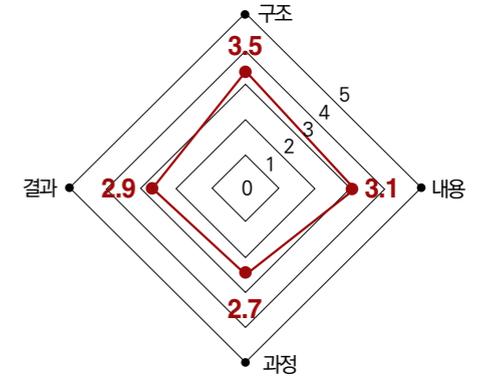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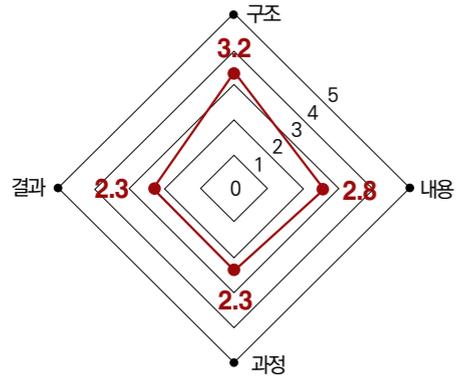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활성화(미래창조과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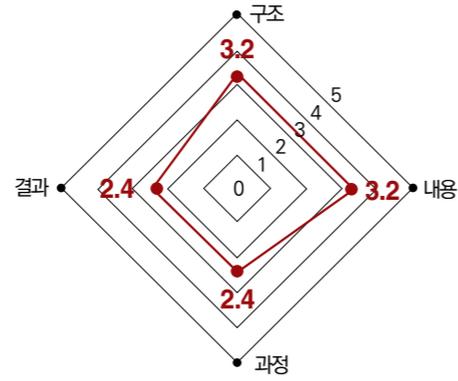
팁스(TIPS)프로그램(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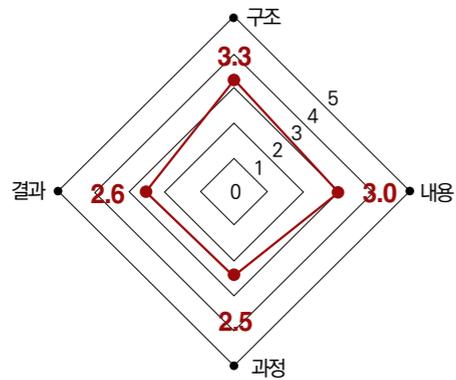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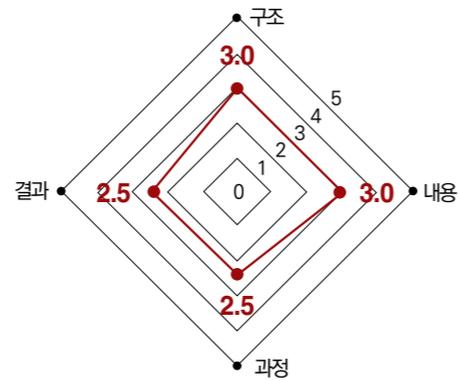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획재정부)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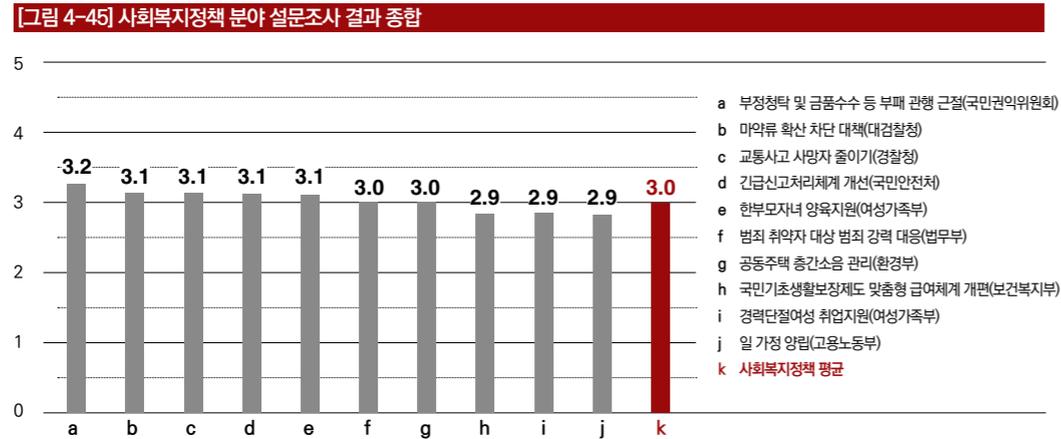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국토교통부)



2. 사회복지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그림 4-45]는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정책별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의 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사회복지분야 정책들은 3점 내외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 사이에는 0.3점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작년 평가에서 나타난 0.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격차는 줄었으나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 사이에는 적지 않은 체감상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 간 차이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며, 마찬가지로 높은 평가를 받은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의 경우 최근 SNS나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마약 공급책과 연락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크게 보도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환기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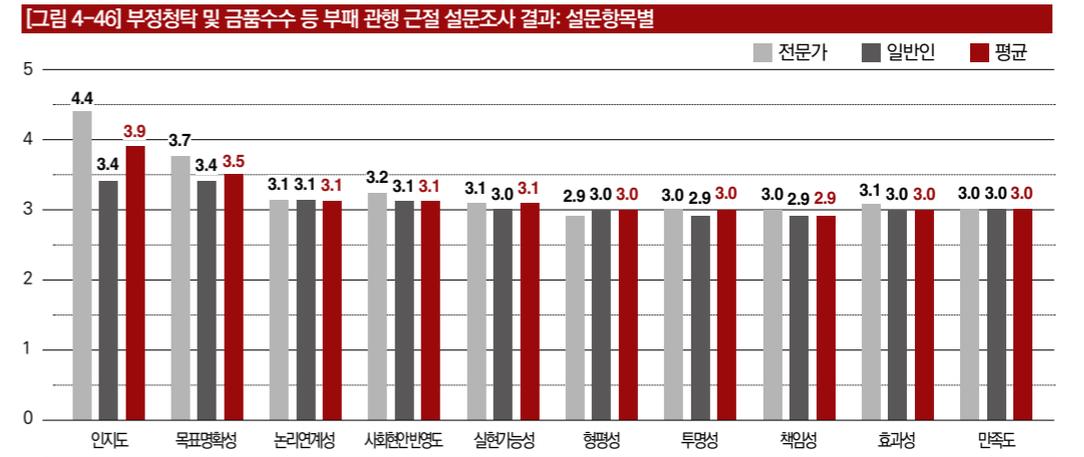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일 가정 양립 등의 양성평등 정책 등 정책으로 인한 수혜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복지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정책의 내용이나 과정, 결과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거나, 불투명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타 정책에 비해 사회적 주목을 덜 받았다는 점과, 복지정책의 특성 상 정책의 수혜 계층과 비수혜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들 집단이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점수가 낮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청탁금지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공히 여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인 집단에서 사회복지정책 대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보통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은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3.7점, 일반인이 3.4점의 점수를 주었는데, 특히 전문가들의 평가가 매우 높았다. 특히 정책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전문가의 70%, 일반인이 52%가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3.1점으로 정책 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높은 평가와는 달리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특히 각 집단에서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더라도, 긍정적인 인식이 전문가 집단의 42%, 일반인 집단에서 38%에 그쳤다는 것은 문제의식과 목표의 명확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

과는 별도로 청탁금지법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 제외 등의 입법 미비와 청탁금지법 시행을 둘러싸고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이 사회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3.1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주었다. 각 집단에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전문가 48%, 일반인 39%로 나타나, 타 평가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1점, 일반인은 3.0점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집단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집단에서 48%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26%에 비해 약 22%p 차이로 높은 반면 일반인의 경우 긍정 33.6%, 부정 29.4%로 그 차이가 매우 적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이 언론을 통해 크게 부각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은 3.0점으로 다른 평가 항목과는 달리 오히려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일반인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각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 역시 일반인은 34.6%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 29.6%를 상회한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 42%, 부정 44%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이 더 많았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성격 상 전문가 집단이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의해 직접 규율 받거나 혹은 규율 대상과 접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현재 청탁금지법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까지 규율하는 반면, 국회의원 등 일부 집단이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남겨두었다는 비판 등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3.0점, 일반인은 2.9점으로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에서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긍정 28.8%, 부정 37.8%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거꾸로(긍정 46%, 부정 34%)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 입법과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입법 및 시행 과정에서 홍보 및 소통 측면에서 미흡하였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 전문가 3.0점, 일반인 2.9점으로 전문가 집단이 소폭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각 집단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투명성 측면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우세한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이는 투명성 측면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국민 대상 홍보와 소통이 미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보통 수준을 넘는 3.1점, 일반인 집단의 경우 보통 수준인 3.0점을 부여하여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주었다. 각 집단에서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간 비율을 비교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48%, 부정적 응답이 32%로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온 데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34.2%, 부정적 응답이 33.2%로 나타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가 2016년 9월 말로 설문 시점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풍토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대부분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아직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의미 있는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것이 2016년 9월 말로, 정책 시행과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전문가: 3.0, 일반인: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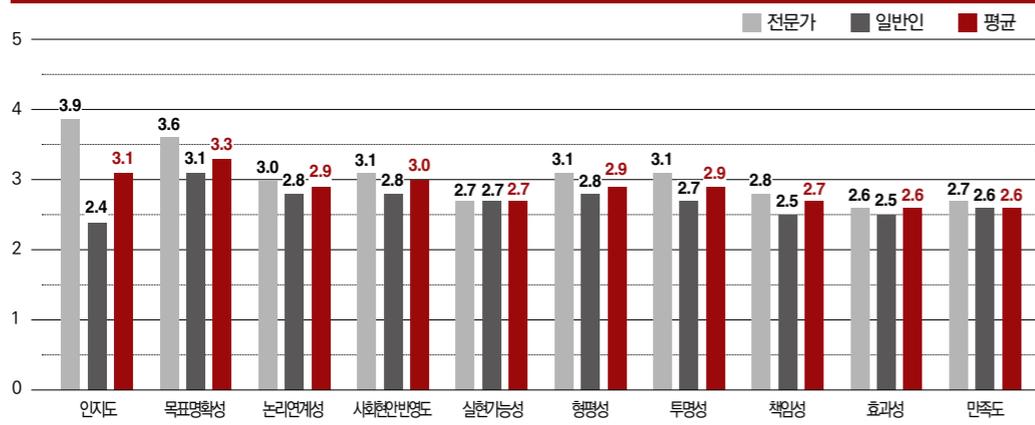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네 가지 분야별로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상대적으로 정책의 구조(3.3)와 내용(3.1) 측면이 결과(3.0)와 과정(2.9) 측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입법과 본격적인 시행으로부터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논란이 과정과 결과 측면의 낮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본 정책에 대하여 다시 평가한다면 결과와 과정 측면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일 가정 양립

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9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2.4점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전문가 사이에서는 78%, 일반인 사이에서는 16.4%로 나타난 것에 비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에서 12%, 일반인 중에서는 50.8%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 간 정책에 대한 확연한 인지도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4-48] 일 가정 양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 설문하였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는 3.6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목표가 명확한지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각각 평가한 항목을 살펴 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70%, 일반인 34.6%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12%, 일반인 24.8%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인들은 전문가에 비해 일 가정 양립정책의 정책목표가 불명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원래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내에서 3.0점, 일반인 내에서는 2.8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가 34%, 일반인 23.6%로 집계되었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28%, 일반인은 37.2%로 나타났다.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인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1점, 일반인 2.8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

가 내에서는 46%, 일반인 내에서는 27.2%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24%, 일반인 3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일 가정 양립정책이 적어도 일반인 사이에서는 주요 사회 현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2.7점, 일반인은 2.7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24%, 일반인의 경우 20.8%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 36%, 일반인 40.4%로 집계되었다. 일반인 사이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1점 그리고 일반인은 2.8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4%, 일반인 24.2%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26%, 일반인의 경우 36.2%로 나타나 일반인 사이에서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1점, 일반인 2.7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40%, 일반인 18%로 나타났고, 전문가 중 26%, 일반인 중 38.2%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2.8점, 일반인은 2.5점을 주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24%, 일반인 집단에서는 16.4%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36%와 일반인의 48.2%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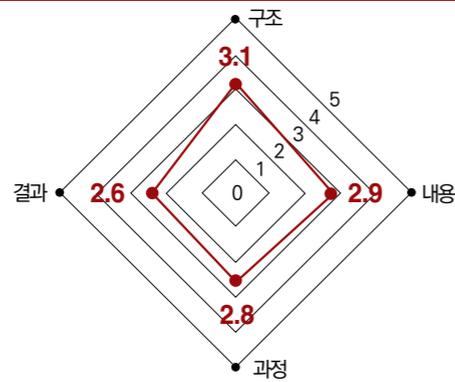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의 경우, 전문가는 2.6점, 일반인은 2.5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24%가 긍정적으로, 48%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16.4%가 긍정적으로, 47.2%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만연한 것을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7점, 일반인은 2.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24%, 일반인의 19%는 긍정적으로 대답한 데 반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46%, 일반인 42.6%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인지도 또한 전문가 집단이 훨씬 높았다. 특히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간 다른 방향성을 보이며 서로 상반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1), 내용(2.9), 과정(2.8), 결과(2.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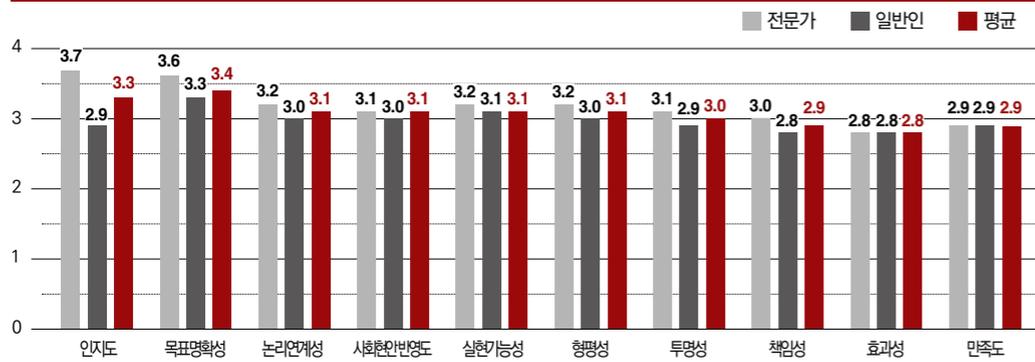
[그림 4-49] 일 가정 양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3.7점, 일반인 2.9점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6%, 일반인 내에서는 30.4%였고,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10%, 일반인의 경우 34.2%였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정책의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정책에 대한 인식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을 주었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68%, 일반인 44%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인 전문가 14%, 일반인 18%에 비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제시된 원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3.2점, 일반인 3.0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42%, 일반인의 경우 31.2%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인 전문가 18%, 일반인 25.8%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해당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3.1점, 일반인 3.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2%, 일반인 35.8%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인 전문가 28%, 일반인 29.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 3.2점,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38%, 일반인 내에서는 3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의 14%, 일반인의 23.4%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2점, 그리고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46%, 일반인의 경우 30%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22%, 일반인 28.4%로 집계되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 중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1점, 일반인이 2.9점을 주었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38%, 일반인 23.4%로 나타났고, 전문가 중 22%, 일반인 중 33.4%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0점, 일반인은 2.8점을 매겼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30%, 일반인 집단에서는 22.4%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28%와 일반인의 35.2%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은 전문가 집단에 비해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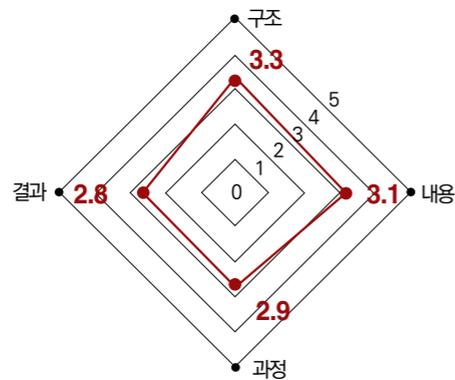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의 경우, 전문가는 2.8점, 일반인은 2.8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경우 22%가 긍정적으로, 3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일반인의 경우 24.6%가 긍정적으로 33%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9점, 일반인은 2.9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가 24%, 일반인이 24%이며, 이에 반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34%, 일반인 31.6%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부정적 의견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인 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의 책임성 외의 평가항목에서는 두 집단 모두 긍정 혹은 부정적인 평가에 있어 같은 방향성을 보였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3), 내용(3.1), 과정(2.9), 결과(2.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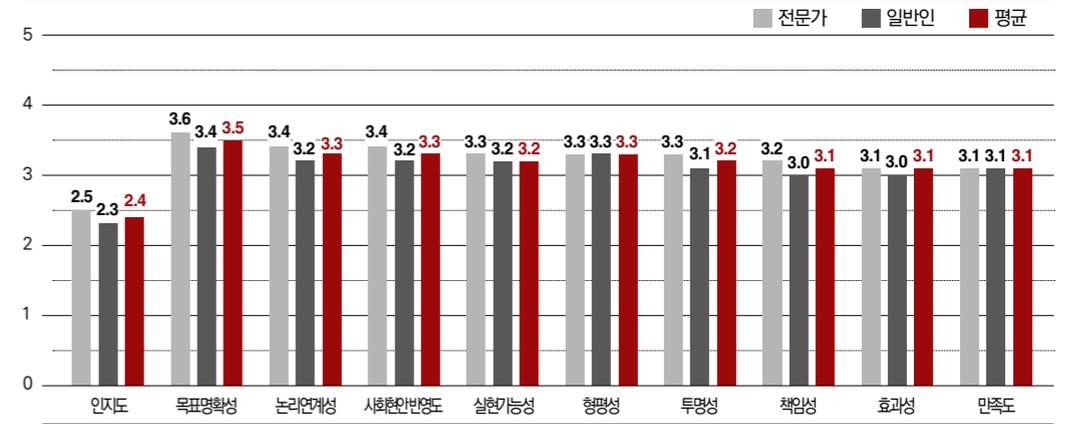
[그림 4-51]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최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신종 유통 수단을 통해 마약류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확산 차단과 단속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2.5점, 일반인 2.3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3.0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별로 인지도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면, 전문가 집단의 16%, 일반인 집단의 13.8%만이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마약류 확산과 단속이라는 정책 이슈 자체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고,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도에 비해 다른 항목들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4-52]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3.6점, 일반인이 3.4점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에서 정책 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중은 전문가 64%, 일반인 49.2%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확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가 매우 간결·명확하고, 단속과 처벌 건수, 압수 실적 등으로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3.4점, 일반인 3.2점으로 사회복지분야 여타 정책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제시된 정책 대안이 특송화물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 강화 등 마약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 측면,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예방, 중독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등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유입과 단속, 차단 등 논리적인 일관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이 사회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역시 전문가 3.4점, 일반인 3.2점으로 여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본 정책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마약류 확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마약류 확산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단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2점으로 사회복지분야 10개 평가 대상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의 비중은 전문가 48%, 일반인 35.8%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전문가 16%, 일반인 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차단과 단속,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본 정책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복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로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은 3.3점으로 역시 사회복지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정한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특성 상, 형평성 측면에서 특별히 고려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1점으로 전문가 집단이 소폭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 결과는 여타 사회복지정책 대비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에서 투명성 측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 역시 전문가 50%, 일반인 32.4%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18%, 일반인 20.4%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측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투명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 결과를 보인 것은 정책 특성 상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 전문가 3.2점, 일반인 3.0점으로 여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의 투명성 측면과 마찬가지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과정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실제로 마약류 확산 단속을 위하여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등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내용과 단속과 처벌, 치료라는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책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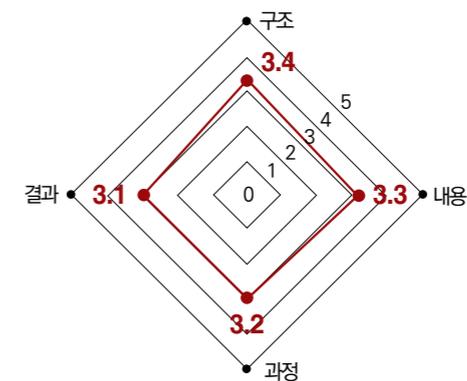
정책이 실제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효과성 측면에서, 일반인은 3.0점, 전문가는 3.1점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이는 여타 정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마약범죄 백서 등 관련 통계를 통해 정책 성과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때때로 마약류 국내 반입과 유통에 대한 검거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3.1점으로, 이는 여타 정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책의 특성 상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마약류 반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네 가지 분야별로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비록 인지도는 낮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정책의 구조(3.4)와 내용(3.3) 측면이 결과(3.1)와 과정(3.2) 측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명확한 정책 목표와 대안의 높은 논리적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명확하게 정책의 결과를 계량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정책의 특성 상 국민 대부분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논란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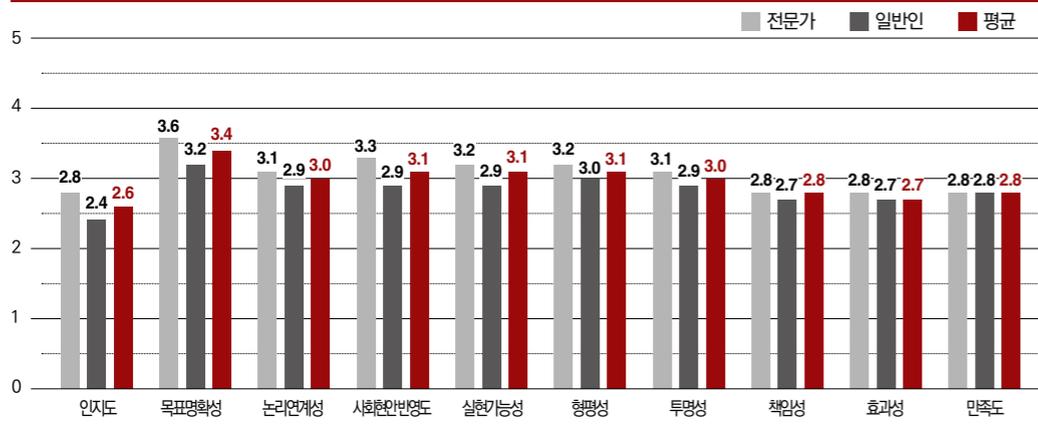
[그림 4-53]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등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범죄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6점(전문가 2.8점, 일반인 2.4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여타 사회복지분야 평가 대상 정책이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4-54]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3.6점, 일반인이 3.2점으로 여타 사회복지분야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각 집단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비중 역시 전문가 64%, 일반인 42.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라는 정책 목표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결, 명확하여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은 2.9점을 주었는데, 이는 정책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여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사후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정책 이외에도 양극화 심화, 사회적 불신 증가,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감소, 공동체의식 약화 등 강력범죄를 야기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 대신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요법 중심으로 정책대안이 구성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이 사회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는 3.3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일반인 집단에서는 평균 2.9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 집단에서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33.4%로, 긍정적인 응답의 30.6%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여성 등에 대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 집단은 3.2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2.9점으로 보통 수준을 밑도는 점수를 주었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33.2%로 긍정적인 평가 27.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 대안이 범죄 발생에 대한 1차적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은 3.0점으로, 사회복지분야 10개 정책 중에서는 중상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정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정책의 주요 수혜 계층이 여성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전문가 3.1점, 일반인 2.9점으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응답(30%)이 긍정적인 응답(24.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확산 차단 정책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에 대한 대응과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이 정책이 특정한 사회 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 자체보다 여형 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보다 더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시행과 관련된 홍보와 소통의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마약류 확산 차단 정책보다 본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와도 합치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2.8점, 일반인은 2.7점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38%, 일반인 집단의 38.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적 응답(전문가 20%, 일반인 20.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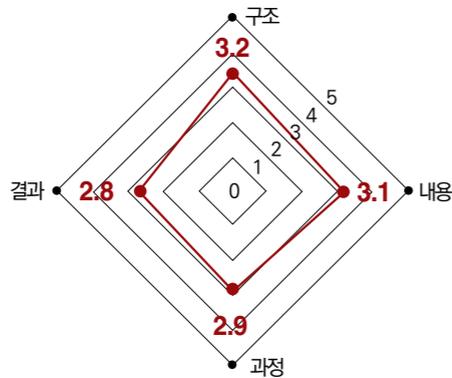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전문가 2.8점, 일반인 2.7점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을 밑도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투명성, 책임성 측면의 부정적 평가와도 관련되어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 역시 전문가 2.8, 일반인 2.8점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각 집단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문가가 36%, 일반인 37%로 긍정적 응답(전문가 18%, 일반인 22%)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효과성 측면의 부정적인 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네 가지 분야별로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상대적으로 정책의 구조(3.2)와 내용(3.1) 측면이 보통 수준 이상의 결과를 받은 반면, 결과(2.8)와 과정(2.9) 측면은 보통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명확한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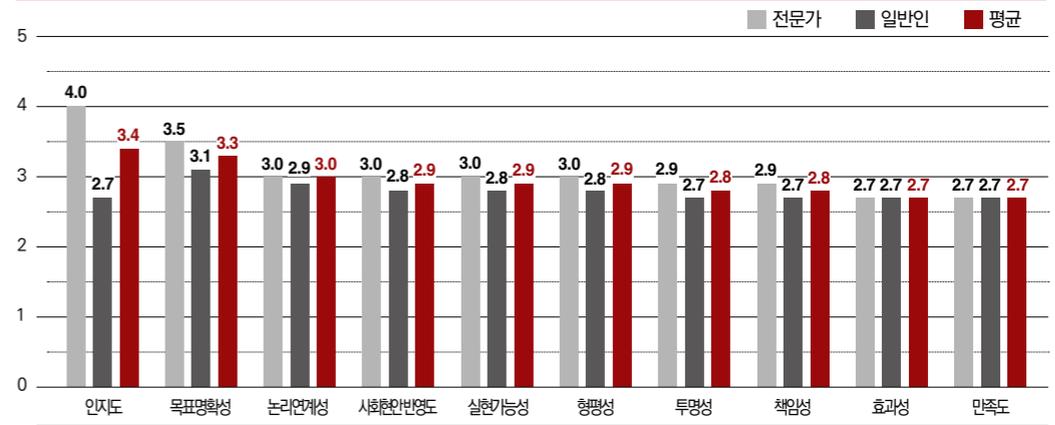
[그림 4-55]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4.0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2.7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23.6%가 안다고 응답하고 38.8%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3.5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가 64%, 일반인 33.6%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20%, 일반인 24.8%보다 크게 나왔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0점, 일반인이 2.9점을 주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2%, 일반인 25.2%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32%,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33%로 일반인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0점, 일반인 2.8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40%, 일반인 내에서는 27%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34%, 일반인 36.2%로 나타났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반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 3.0점, 일반인 2.8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42%, 일반인의 경우 26%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36%, 일반인의 36%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0점, 일반인은 2.8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4%, 일반인 24.8%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42%, 일반인의 경우 35.2%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2.9점, 일반인이 2.7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32%, 일반인 내에서는 17.8%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34%, 일반인의 40%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9점, 일반인은 2.7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38%, 일반인의 18.2%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34%와 일반인의 40.6%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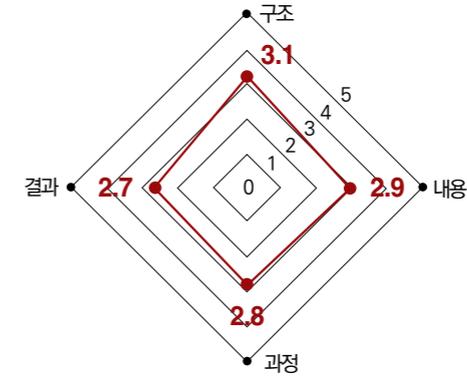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2.7점, 일반인이 2.7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28%가 긍정적으로, 42%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18%가 긍정적으로, 38.8%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2.7점, 일반인은 2.7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28%, 일반인이 19%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44%, 일반인 40%로 집계되었다.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책인지도도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간에 긍정과 부정적인 의견이 상충되게 나왔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1), 내용(2.9), 과정(2.8), 결과(2.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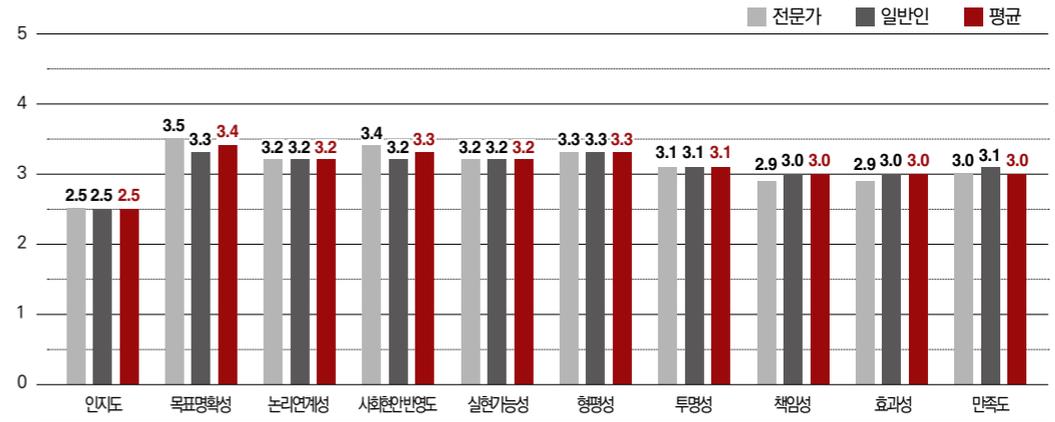
[그림 4-5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그동안 부처별로 각각 운영해 오던 신고번호를 크게 119, 112, 110의 세 번호로 통합하고, 이를 통한 부처 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전문가 일반인 집단 모두 2.5점으로 나타나, 여타 사회복지분야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에서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을 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8%, 일반인 49.8%에 달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각각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시범 운영과 홍보가 제대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58]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3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 역시 전문가 56%, 일반인 47.4%로 부정적인 응답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긴급신고번호 통합과 신속한 대응 강화라는 정책 목표가 다른 정책에 비해 매우 간결하며,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각각 3.2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각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 역시 전문가 46%, 일반인 37.6%로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고, 번호 통합과 시범운영, 운영 확대 등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역시 다른 정책 대비 명확하게 대안과 목표 간의 연계가 관찰되기 때문일 것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이 사회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2점으로 여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사건 등 재난에 대한 초기상황 대응 미흡이라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신고 대응 강화라는 정책의 목표가 적실성을 갖고, 또한 국내에서 최근 증가하는 지진 발생 등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경계와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2점으로 여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는 평가 대상인 정책 자체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운영하던 콜센터를 통합하고,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비용만으로 쉽게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3.3점으로 여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각 집단에서 긍정적인 인식 역시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특성 상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가에 대한 물음에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1점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특성 상 특별히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정책 시행에 앞서 공청회와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문가 2.9점, 일반인 3.0점으로 보통 수준을 밑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받은 것과는 달리 책임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정부의 정책설명에도 불구하고 긴급신고전화를 운영하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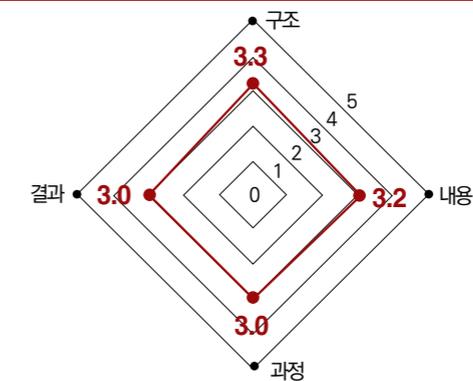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2.9점, 일반인은 3.0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긴급신고전화 통합 이후 효과로 신고 후 출동까지 소요 시간 감소와 부처 간 통합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것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효과성이 미미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 3.0점, 일반인 3.1점으로 사회복지분야 전체 정책들 중에서 중상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들에 대한 만족도 응답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정책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 과정과 효과 측면에 대한 낮은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네 가지 분야별로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의 구조(3.3)와 내용(3.2) 측면이 결과(3.0)와 과정(3.0) 측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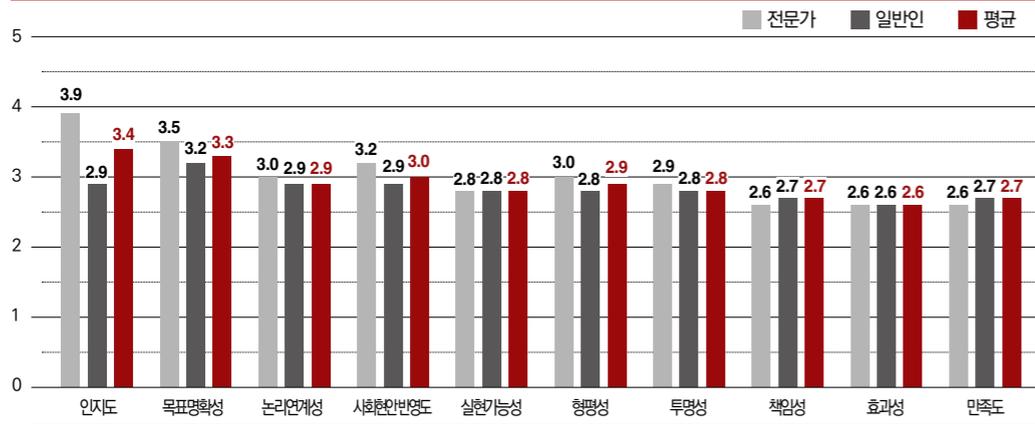
[그림 4-59]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3.9점, 일반인 사이에서는 2.9점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74%, 일반인 내에서는 31.2%로 집계되어 전문가 집단에서의 인지도가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4%만이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35%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6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가 3.5점,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56%, 일반인이 40%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14%, 일반인 23.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원래 기대되었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내에서는 3.0점, 일반인 내에서 2.9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28%, 일반인 25.2%로 집계되었고, 이를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인 전문가 26%, 일반인 34.4%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인 사이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는 3.2점으로, 일반인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42%, 일반인 내에서는 27.4%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전문가에서 22%, 일반인에서 36.6%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2.8점, 일반인은 2.8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20%, 일반인의 경우 22.8% 정도인 반면, 전문가의 36%, 일반인의 36.6%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0점을, 일반인은 2.8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30%, 일반인 26.4%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28%, 일반인의 33.6%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2.9점, 일반인이 2.8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26%, 일반인 19.4%였고, 전문가의 30%, 일반인의 35.2%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전문가는 2.6점, 일반인은 2.7점을 주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18%, 일반인 집단에서는 16.4%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중 44%와 일반인 중 40.2%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두 집단 모두에게서 전반적으로 많이 보임을 알 수 있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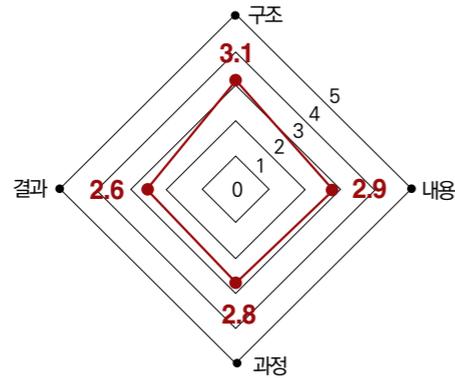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2.6점, 일반인은 2.6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경우 10%가 긍정적으로, 4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일반인의 경우 15.6%가 긍정적으로, 43.8%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6점, 일반인은 2.7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14%, 일반인이 19.6%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44%, 일반인 40.2%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훨씬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데 반해 일반인 집단은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1), 내용(2.9), 과정(2.8), 결과(2.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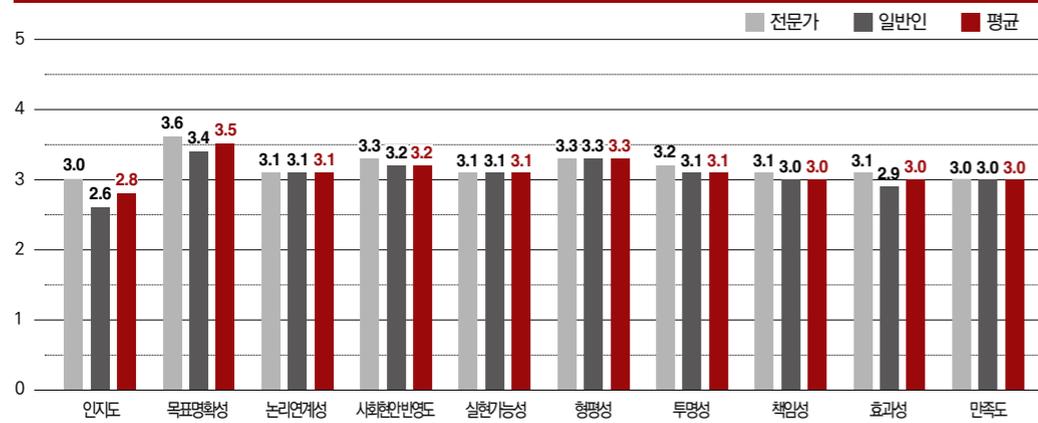
[그림 4-6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OECD 대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 3.0점, 일반인 집단에서 2.6점으로 여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문가 28%, 일반인 20.8%로, 잘 모른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26%, 일반인 45.4%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정책인 것을 감안하면,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정책에 대한 홍보, 교육 등 국민 대상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정책에 노출되어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으로 인식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4-62]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3.6점, 일반인이 3.4점을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매우 명확하고, 목표 역시 사망자 수, 교통사고 건수 등으로 쉽게 계량화하여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대안과 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1점으로 여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과 노인 등 취약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용 차량 관리 강화 등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 대안이 비교적 잘 구조화되어 있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이 사회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2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각 집단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역시 전문가 52%, 일반인 37.2%로 부정적인 응답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망자 수는 많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행자로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각각 3.1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대안과의 높은 논리적 연계성을 감안할 때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의 긍정적 평가는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3.3점으로 여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이 국민 전체의 안전을 증진하는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노인과 아동 등 교통 취약자들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3.1점으로 나타나 여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관 중심의 일반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운수업체 등 민간 기업, 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함께 추진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도 전문가 3.1점, 일반인 3.0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등 다수의 부처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책의 특성 자체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등으로 쉽게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책임소재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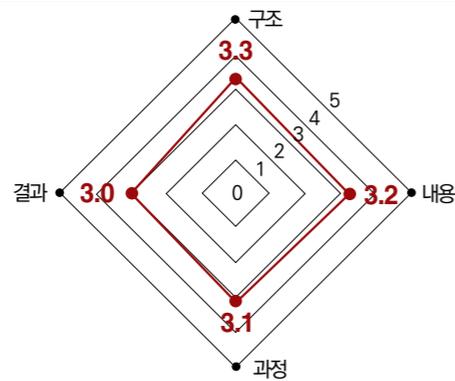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3.1점, 일반인은 2.9점으로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나 여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구조 측면과 내용 측면, 과정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네 가지 분야별로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정책들 중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의 구조(3.3)와 내용(3.2) 측면이 결과(3.0)와 과정(3.1) 측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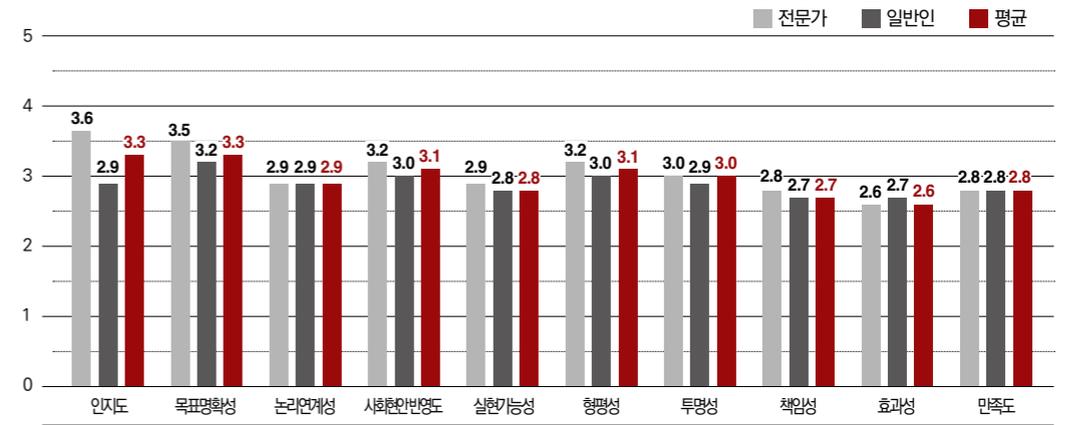
[그림 4-63]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3.6점, 일반인 사이에서는 2.9점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중 62%, 일반인 중 32.4%로 나타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 14%, 일반인 30.4%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반인 집단에서의 인지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4]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2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6%, 일반인 39%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16%, 일반인 21.2%보다 크게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2.9점, 일반인이 2.9점을 주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32%, 일반인의 경우 25.4%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인 전문가 38%, 일반인 33%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3.0점을 매겼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52%, 일반인의 경우 34.6%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30%, 일반인 27.4%에 비하여 많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2.9점, 일반인은 2.8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가 20%, 일반인이 22.8%에 그치는 반면, 전문가의 32%, 일반인의 34.8%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2점 그리고 일반인은 3.0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36%, 일반인 32%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24%, 일반인 26.8%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경우 3.0점, 일반인 집단의 경우 2.9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가 32%, 일반인이 26%였고, 전문가의 28%, 일반인의 27.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8점으로, 일반인은 2.7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20%, 일반인의 17.6%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중 38%와 일반인 중 38%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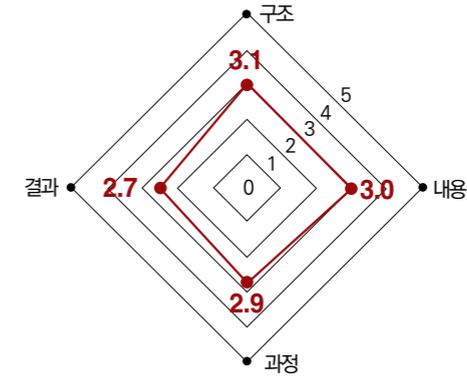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2.6점, 일반인은 2.7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경우 16%가 긍정적으로, 5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18%가 긍정적으로, 40%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효과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2.8점, 일반인은 2.8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20%, 일반인 19.6%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40%, 일반인 33.4%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정책 인지도 또한 높았다. 다른 정책들에 비해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집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모든 평가 영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1), 내용(3.0), 과정(2.9), 결과(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5] 공동주택 중간소유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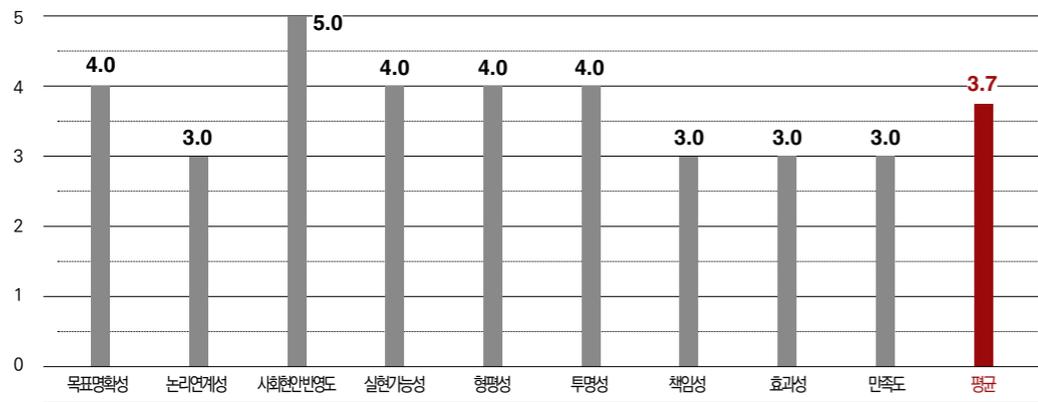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정책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입법을 통해 기존 부패방지 관련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법제화하여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사학교원과 언론인 등 비공무원 행위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의 적절성 문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타당성 문제,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산업 분야의 부정적 영향 등의 영향으로 논리연계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66]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정책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5년 3월 제정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정책 의지와 2002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강력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부패 관행 근절을 위하여 <청탁금지법>을 2015년 3월 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정과 이에 따른 교육과 홍보, 상담과 설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규정이 제외되어 실제 의도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면 법 규정만으로 쉽게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논란 속에서도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만으로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청탁금지법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2012년 보고서를 짜깁기한 줄속보고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경향신문, 2016. 10. 17 보도) 다양한 비판을 고려하여 보통 수준(3.0점)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한국 사회의 부패인식도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부패하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의 59.2%에 이를 정도로, 공직사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대정부 불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공직자들이 대규모 연루된 부패·비

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패방지법 입법을 통해 기존 부패방지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종합적인 부패 예방 대책을 수행한다는 목적을 가진 본 정책은 사회 현안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4점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공직사회의 부패 예방을 위한 중요 법률로서 청탁금지법의 입법 성과와 청탁금지법 입법 이후 공직사회에서의 풍토 변화(업무추진비 삭감, 접대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미비로 인하여 초래된 혼란이 있지만, 국민들의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감시와 신고가 활성화되는 등 제도에 발맞춘 행태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모든 공직자와 교직원 및 언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패 관행 근절로 인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전 국민에 고루 미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부패방지법 시행을 둘러싸고 공무원이 아닌 사학교원과 언론인을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국회의원 등 부패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규율한다는 비판은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점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청탁금지법 입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입법과 관련된 절차들이 모두 준수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는 한편으로 이러한 논란을 통해 정책의 당위성과 목표, 수단에 대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부패 관행 근절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명확한 법령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관리 및 책임성 소재는 일견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나타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한 적절한 환류가 미흡한데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부터 실제 정책 집행의 결과와 환류, 책임소재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성 측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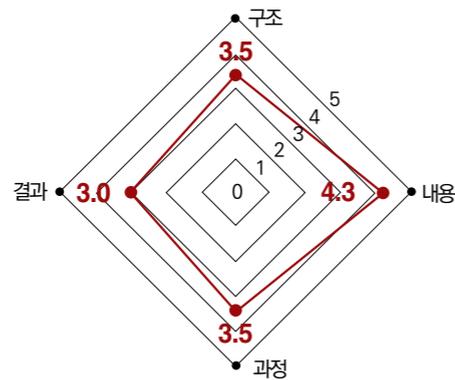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것은 2016년 9월 말로,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최초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준의 적절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시행 이후 나타나는 결과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청탁금지법 이후 사회에 만연한 접대 문화가 개선되어 '더치페이 문화'로 변화할 것이고, 실질적인 부패 방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 실질적으로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농·수·축산물 판매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한 농어촌 피해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었다는 문제제기 역시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면적 평가를 감안하여 정책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정책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내용(4.3), 구조(3.5), 과정(3.5),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여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67]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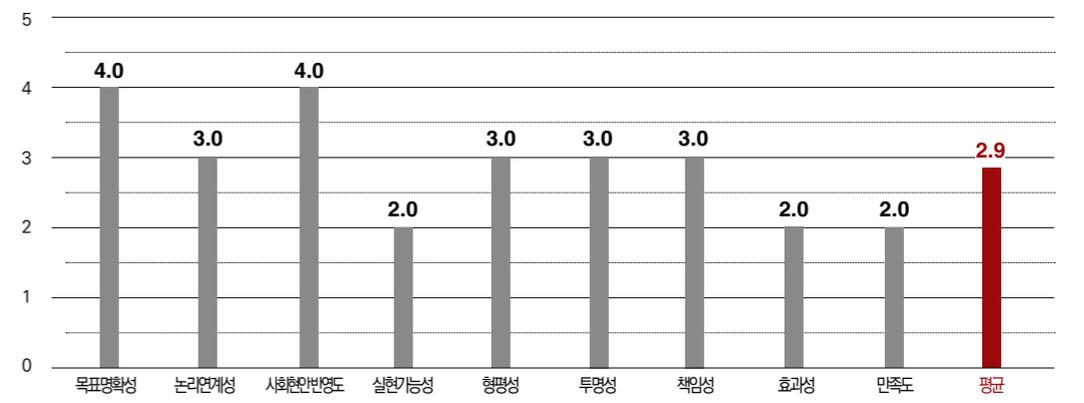


(2) 일 가정 양립

고용노동부(공공부문: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2007년에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으로 개정하며 도입된 정책이다. 일을 중시하던 기존 근로자들의 인식에서 이제는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추세를 감안하고, 기업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가족 친화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위

한 제도적 토대를 만들고자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공직사회에서의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일·가정 양립제도의 안착 및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이다. 일련의 세부사업들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며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고 정부 부처별 연가 활용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 항목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목표의 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만족도 측면에서는 보통을 밑도는 다소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그림 4-68] 일 가정 양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가족 친화적 제도 도입이 필요한 점을 감안,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볼 때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일 가정 양립정책은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제도 안착 및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대비하였을 때 현저히 낮으며,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임신·출산과 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여성 취업의 확대와 여성노동의 주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일 가정 양립정책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일 가정 양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성역할 구도에 따라 일 가정 양립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탈피하여 해당 정책이 가족의 육아를 넘어선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정책으로 이해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무제 등 주요정책에 대해서 상사 및 동료들의 눈치와 승진, 평가에 불이익이 따르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정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기업문화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아직은 낮다고 보여진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일 가정 양립정책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출산과 육아 문제가 조부모의 경제적·육체적 부담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시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정책의 형평성이 달성된 편으로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일 가정 양립정책의 핵심인 임신·출산·육아 지원은 기존에도 계속 논의 되어온 주요 사회정책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넓고 투명하게 다뤄져 왔다. 고로 정책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추진에 있어 관련 부처는 크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며, 근거법령에 의해 각 부처의 추진 업무와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일 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연도별로 일 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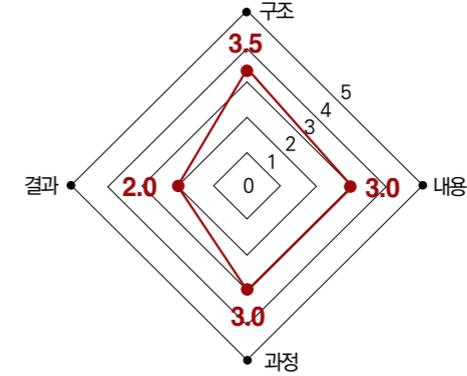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및 공직사회에서의 연가 활용 활성화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에는 정책의 성과가 미미하고 아직 남성위주의 기업문화가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해당 측면을 고려할 때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일·가족 양립지원제도가 사기업의 문화적·제도적 변화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일반 국민들이 정책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 과정(3), 결과(2)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만족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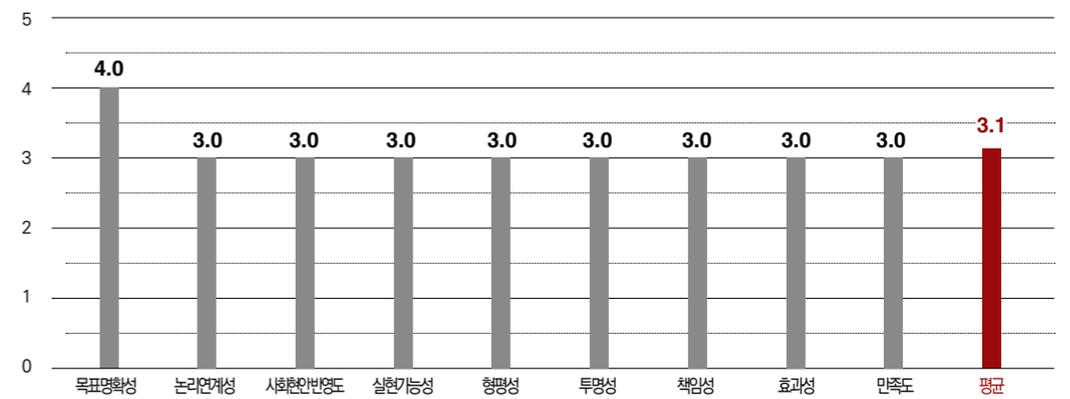
[그림 4-69] 일 가정 양립 정책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재개정되며 시행되었다.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한부모자녀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한 가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골자로 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주택, 교육, 생활지원을 통하여 한부모가정의 교육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도와주며, 나아가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대상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서비스신청을 온라인화함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평가항목별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목표의 명확성은 4점, 기타 항목에 대한 평가는 3점으로 종합적으로 중상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책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한부모자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주택, 교육, 생활지원을 통하여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도와주며 나아가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이혼율 증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18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다. 정책 내용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등 주로 수급 대상자에 대한 정책 급여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은 정책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관련 예산은 2014년 515억 원, 2015년 722억 원, 2016년 724억 원, 2017년 952억 원(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 폭 역시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증액된 예산이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인한 소득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 전에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이혼 경력이 있는 편모나 편부의 가정 뿐 아니라 미혼모 가정 및 청소년이 가장인 가정, 그리고 조손가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혜범위가 넓으며 정책의 형평성이 평균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세미나와 포럼 개최, 한부모가족 사례발표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과정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어 추진 주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 의해 한부모가족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이혼 후 의무행과 관련하여 가정법원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고,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등 기초보장제도와 대상자 중복 및 중복급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간 연계성 강화 및 급여 성격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 성과로서 연도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현황을 보면, 2014년까지 지원 대상 가구가 2007년 대비 약 두 배인 14만 가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감치 집행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정책 결과를 고려할 때 정책이 어느 정도 의도한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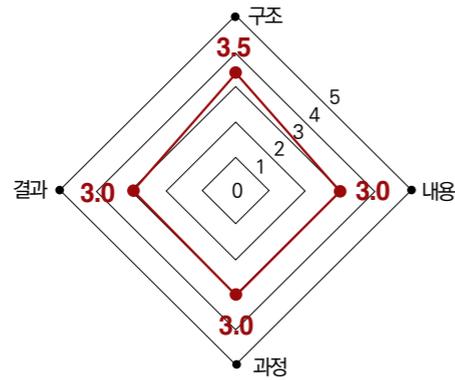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는 높다고 하기 어렵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나 한부모의 근로 시간, 취업 형태 등에 따라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정책은 대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비해 높은 소득수준과 높은 자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아버지와 자녀간 관계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들은 소득지원보다는 관계 형성과 정서, 심리 측면에서의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c).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유형과 환경, 자녀 연령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조손가정,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역시 수급자의 상황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부모가족의 유형별, 자녀연령별, 취업형태, 환경 등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급여 중심의 지원 외에도 건강, 심리, 정서적 지원 역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의 문제 등에도 정책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저소득 중심에서 일반 한부모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 과정(3), 결과(3)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목표명확성이며 다른 항목들은 평이한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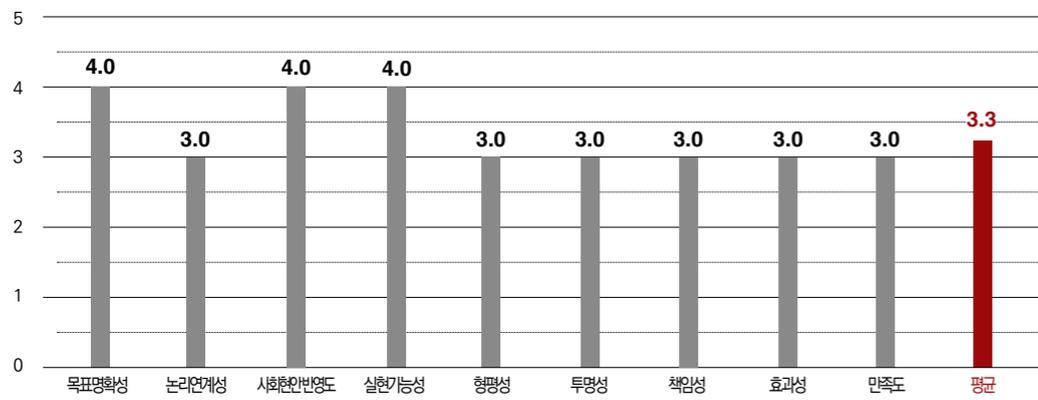
[그림 4-71]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은 인터넷이나 SNS,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하여 국내·외 마약 공급책과 보다 쉽게 연락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새로운 수단을 통한 마약류 국내 유통과 확산이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마약류 확산 차단과 마약범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불법유통 차단, 오남용 예방,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가항목 중에서 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항목들은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2]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국내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과 마약범죄 근절 등 비교적 분명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은 크게 국내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온라인 마약거래를 24시간 자동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단속, 마약류 불법사용과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활용한 집중관리, 제약사,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으로 마약류의 국내 반입과 유통, 취득과 사용, 중독자에 대한 치료 등으로 잘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과거에 비해 손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고, 특송화물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손쉽게 마약류를 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마약류 확산 차단의 필요성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매우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마약류 국내 확산 차단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이를 위한 유입, 유통, 중독자에 대한 치료 등 정책대안이 비교적 잘 구조화되어 있으며, 단속과 처벌, 치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책 특성 상 수혜자와 피해자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 비교적 국민의 반발 없이 손쉽게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마약류 확산 차단은 특정한 사회 계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니며, 정책 결과를 통한 국민 건강과 안전의 증진은 전 국민에게 고르게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소, 공항과 항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내 범죄예방정책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운영하여 기관 간 활발한 정보 공유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마약범죄자에 대한 자수기간 운영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마약류 확산 차단 정책에는 법무부(대검찰청, 출입국관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항, 항만 등 다수의 기관이 관리되어 있으나, 마약류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류 포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점, 연차별로 마약범죄 백서를 발간하는 등 기본적인 평가 및 환류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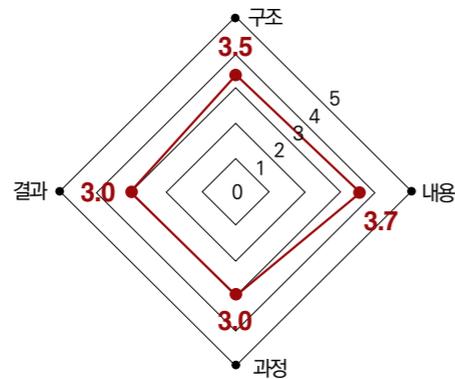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는 마약류 사범 검거 및 마약류 압수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마약 사범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기준 약 1만 2천명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압수량 역시 2013년 76.3kg에서 2015년 93.6kg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마약류 반입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마약류 단속과 적발, 차단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결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이 국민 안전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마약류 확산 방지가 국민 생활과 아직까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 특성이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내용(3.7), 구조(3.5), 과정(3.0), 결과(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분야 정책 가운데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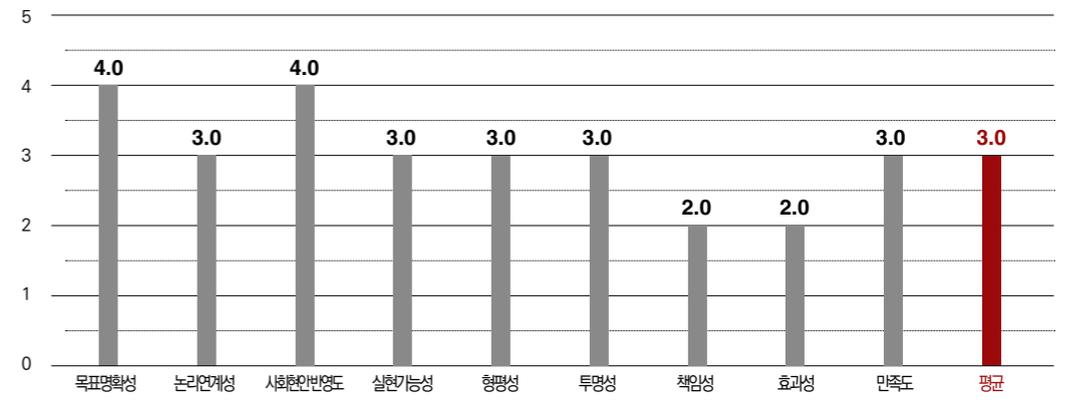
[그림 4-73]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범죄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흉악 강력범죄에 강력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보호관찰제 활용을 통한 관리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4]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강력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한 국민 안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상대적으로 간결·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발생 예방과,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폭력사범에 대한 무관용원칙 적용, 보호관찰제 활용을 통한 집중 관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등 범죄 예방과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비교적 잘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이나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사회적 불만, 소통 부족, 상대적 불평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중적인 요법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측면이 국선변호인 강화,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강화 등 다소 원칙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강남역 살인 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 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비교적 범죄의 발생과 대응, 재발방지라는 차원에서는 비교적 완결성을 갖도록 잘 구조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편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층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특별 대응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할 때 큰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의 경우 사회적 여성혐오 범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라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으므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유관 기관 간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 범죄피해자 중 취약계층의 비중 등으로 정책의 성과에 대한 관리와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을 제외한 기타 범죄 취약계층의 강력범죄에 대한 관리 측면은 미흡한 면이 있고, 또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과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정책성과에 대한 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게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중은 본격적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이슈화된 2012년 이후에도 여전히 2014년 기준 84.7%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았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통계 역시 해외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며, 범죄신고율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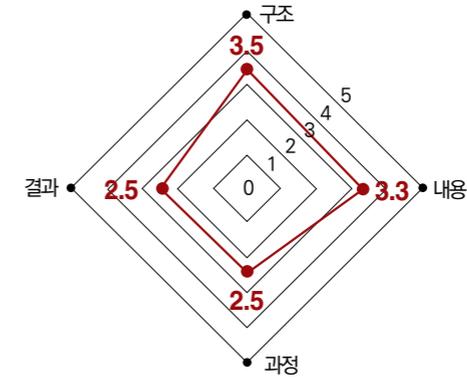
또한 강력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폭력사범 비율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 만족도 측면에서 여성 등 범죄에 대한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책 만족도 측면은 양면을 다 감안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3)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과정(2.5), 결과(2.5) 측면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정책 가운데서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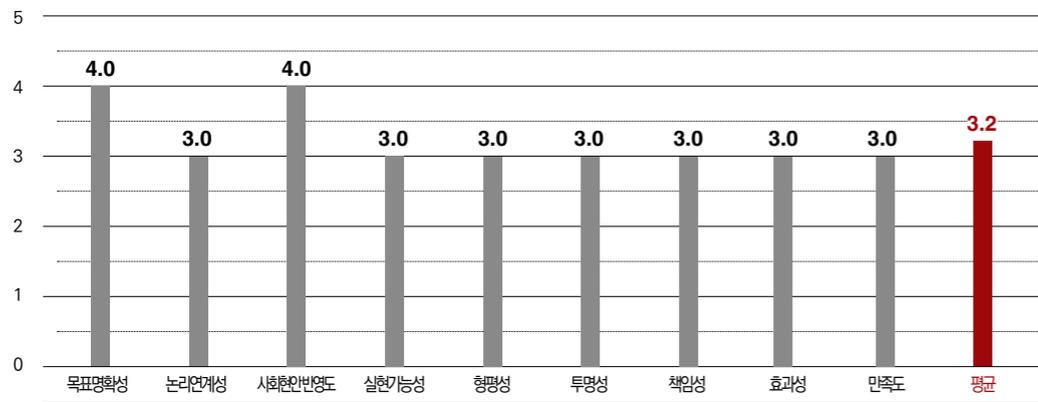
[그림 4-75]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정책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2013년도부터 입안된 정책이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원 받았던 모든 급여가 일시 중단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상황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근로 등으로 소득이 늘어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2014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함으로써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개편 이전에 비해 수급대상자가 27% 증가하였고 보장성이 강화되었으며 신청 탈락자 지원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가 축소되었다. 평가항목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목표의 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기타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전체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중상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적극적인 자립에 나설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원되었던 급여가 일시에 모두 중단되는 한계점을 개선하였으며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인상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기존 제도 하에서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원됐던 모든 급여가 일시 중단되는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상황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근로 등으로 소득이 늘어도 지원중단 없이 단계적으로 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지원하였음을 고려할 때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비교적 평균적으로 잘 지켜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모든 지급이 중단되는 All-or-nothin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급자의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급여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지속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격한 기준의 잣대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했다. 해당 정책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다층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급여 수준의 현실화, 적극적인 신규 수급자 발굴이라는 정책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기존의 최하위 계층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에 게도 그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이 평균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보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은 2013년 전문가, 학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에서 담당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시행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보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2000년 10월 이후 15년 만의 변화이다. 기존 통합급여 방식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경직성, 낮은 급여 수준, 넓은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의 성격별로 선정 기준과 수급액을 다층화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개편 이후의 성과로서 수급자 수의 증가, 개인별 평균 급여 수준 상승, 탈락자에 대한 기타 지원제도와 적극적 연계 강화 등을 말하고 있으나, 맞춤형 개편의 목적 중 하나인 자립을 통한 탈수급 촉진이라는 면에서 성과평가 및 환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되며, 현재 급여별로 소관부처가 나누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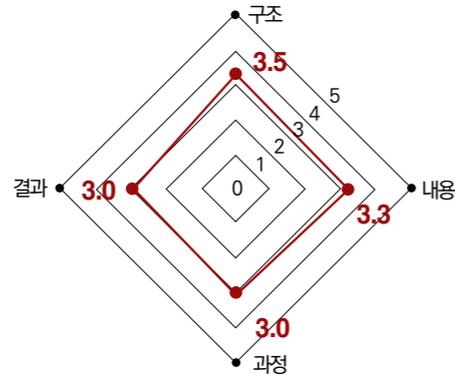
개편 8개월 경과 시점인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 수가 167만 명으로 나타나 개편 이전 132만 명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당 급여 수준이 증가하는 등 개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 탈락자에 대해 타 지원 사업과 연계시키는 등 지속적인 수급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6). 이러한 면에서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기존의 최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측면에서 정책에 대하여 만족도가 평균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3), 과정(3), 결과(3)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이며 다른 항목들은 평이한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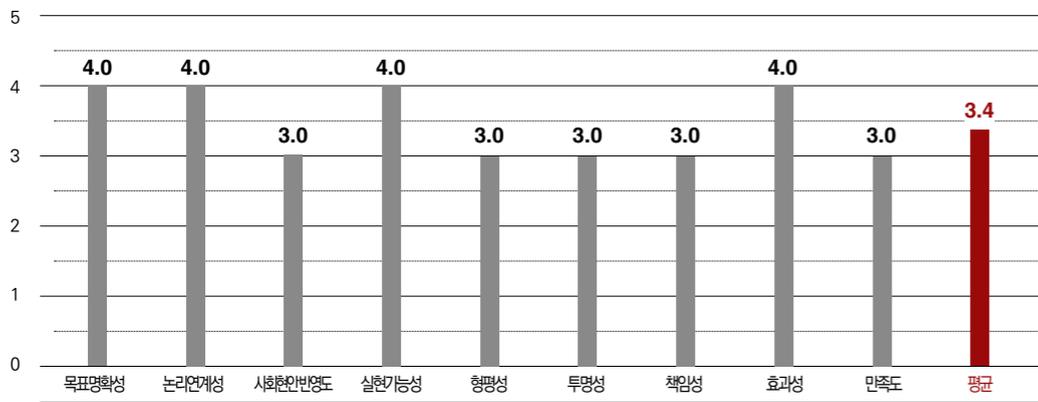
[그림 4-7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던 20여 개의 긴급신고전화번호를 3개로 통합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목표로 하는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사회복지분야 정책 중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평가항목 중에서는 목표 명확성,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8]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부처별로 각자 운영하던 긴급신고번호를 3개로 통합하여 국민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고,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목표에 대한 번호 통합과 자동 신고 이관, 공동대응 등의 정책 내용은 정책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재난과 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긴급신고와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2015년 2월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추진단이 구성·운영되어 왔고, 동년 10월에 통합체계 구축 협약 체결 후 2016년 시범 서비스와 전면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 부처 내부에서 비교적 적은 예산과 조직을 빠른 시간 안에 구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정책은 특정한 사회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개선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형평성 측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신고전화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이미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절차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국민안전처 내에 통합추진단을 두어 통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한 시범운영과 결과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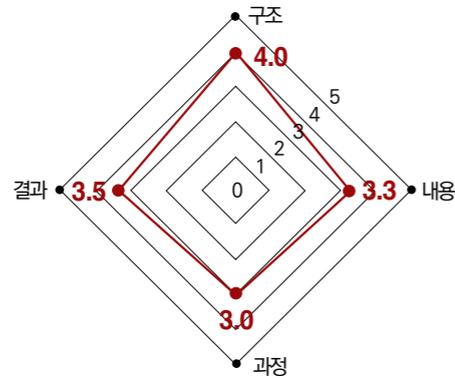
긴급신고전화 통합과 처리체계 개선을 통해 긴급신고로부터 출동에 이르는 시간이 괄목할 정도로 단축되었고, 유관 부처 간 공동대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민 편의가 증진되고 기관 간 중복투자 요소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높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아 실제 국민 생활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4.0), 결과(3.5), 내용(3.3), 과정(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분야 평가 대상 정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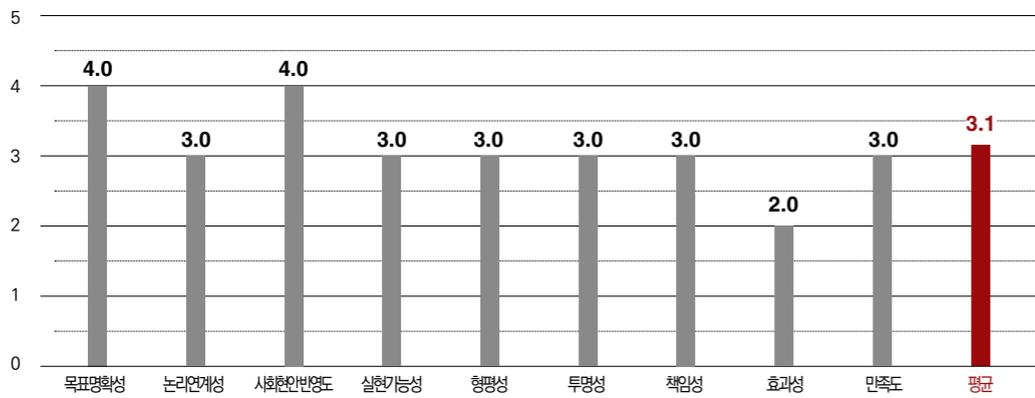
[그림 4-79]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09년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선진국과 달리 상당수의 여성이 가사 및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재취업 시 근로조건의 하향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였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여성이 재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재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을 담고 있다. 소기업의 성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성과를 증진시켰다는 점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 등이 있다.

[그림 4-8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선진국과 달리 상당수 여성이 가사 및 육아 부담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재취업시 근로조건 하향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도모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성장 도모한다는 면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여성이 재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자 하고자 하는 정책임을 고려할 때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비교적 평균적으로 잘 지켜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 57.9%로 OECD 평균 63.0%, 주요 선진국(미국 66.9%, 영국 72.5%, 덴마크 75.3%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달리 많은 여성이 가사 및 육아 부담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시 고용의 질이 하향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여성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미스매칭 현상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공제혜택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진, 보건복지 분야 제도 개선과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그리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라는 정책세부내용을 볼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보면 결혼과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넓게는 해당 여성뿐 아니라 여성의 가족에게도 중요한 정책임을 고려할 때 정책의 형평성이 평균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보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기반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에 있어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2013. 5월)를 통해 여성 6천여 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수렴(2014. 11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2014. 11월) 등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해 볼 때 정책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보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4조에 근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공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기반한 것으로, 지난 1차 기본계획(2010~2014)에 대한 평가 결과와 변화한 정책 및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현재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대상별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새일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등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책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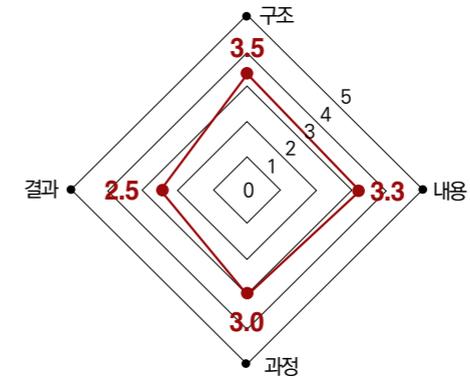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과는 2013년 10만 8천명, 2014년 13만 명, 2015년 14만 명 취업 등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만족도가 2015년 기준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가 점차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취업성과가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저임금의 단기취업에 머물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이 기존에 일했던 직장에서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거두고 있는지의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재취업 건수는 연간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취업 후 기업 및 근로자의 만족도 역시 높아 외견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13년을 기준으로 재취업여성의 월 평균임금은 119만원으로 전체 취업여성의 평균 임금인 171만원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2013년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재취업여성의 임금 수준이 사실상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평균 고용기간 역시 고용 1년 시점에 56.3%에 그치고 있어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들이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량적 성과 역시, 30대 여성의 센터 이용 및 경제활동 참가율 개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만족도 측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3), 과정(3), 결과(2.5)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효과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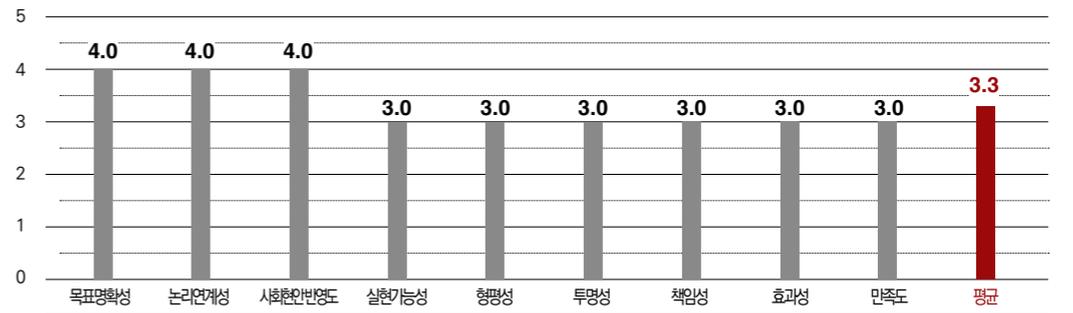
[그림 4-8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과거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동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과거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감소하는 등 정책의 추진에 따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한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항목 역시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아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2]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라는 정책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목표는 곧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라는 지표를 통해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크게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 환경 개선과 맞춤형 안전 대책 마련,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및 홍보, 교통사고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 대상 관리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은 것은 주로 보행자의 사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책대안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선진국 대비 최고 수준(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10.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영국(2.8명)의 3배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교통사고와 사망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높은 사회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 안전띠 착용 단속 등 여타 정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환경 개선, 교통과학장비 도입 및 관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안전 관련 예산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제외하면 교통안전 활동 및 교통과학장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체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감안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내용 중에서는 아동과 노인 등,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대책과 교통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교통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곧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증진하고, 다른 계층의 편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인프라 등 교통 환경의 개선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등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정책이다. 지난 20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상당 수(39%)를 차지하는 노인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인안전 종합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2016. 6. 13), 여기에는 유관 기관, 전문가, 일반국민 등 170여 명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정책의 투명성 측면은 큰 문제가 없고,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 많은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여전히 경찰청 중심의 적발/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도별 정책성과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어떤 식으로 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과평가 체계나 환류 과정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교통사고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에 대한 꾸준한 추적과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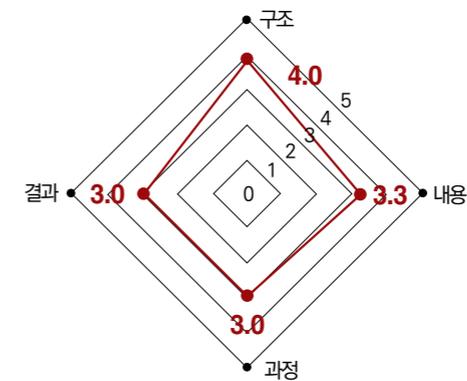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5년 4,621명으로 사상 최초로 연간 5,000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업용 차량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장비 개발 등의 측면에 있어서 성과가 미진하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 이후 가시적인 사망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측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가 일반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몇 건의 대형교통참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본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 역시 여타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평가시 감안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4.0), 내용(3.3), 결과(3.0), 과정(3.0)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대상 정책 중 중상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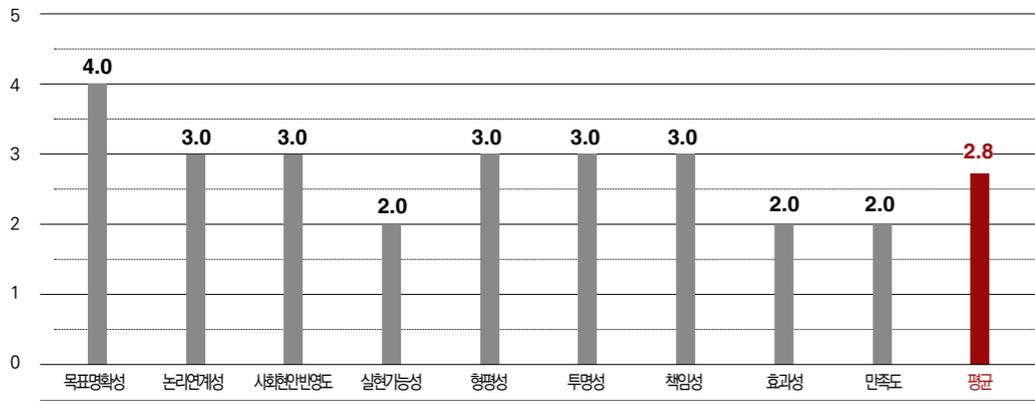
[그림 4-8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정책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책이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증가로 인해 사회문제가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쟁 감소를 통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정책의 세부내용으로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맞춤형서비스실시가 있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여 피해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맞춤형서비스의 운영 실적은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층간소음 예방행동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4-84]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정책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현재 국민 대다수(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이러한 분쟁을 감소시키고 공동체생활 여건을 마련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목표가 명확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는 면을 볼 때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의 여부를 묻는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항목은 평균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이후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주거 양식 역시 1980년대 이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현재 국민 3명 중 2명은 공동주택에서 거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소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바닥충격음의 경우 인접세대에 더 쉽게 전달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단순한 분쟁을 넘어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당정책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제시된 예방교실이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컨설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국민 대다수(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할 뿐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의 형태(원룸, 빌라, 오피스텔)를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며 정책의 형평성이 평균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보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주최로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 관련 측면은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공동주택 건축, 시공 등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변화 없이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조정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충분한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벽간소음 문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건축과 시공 문제는 타 부처(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다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 및 서비스 성과가 증가하고 있고, 종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비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며,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실적은 2014년 40건으로부터 2015년 90건, 2016년 8월 기준 9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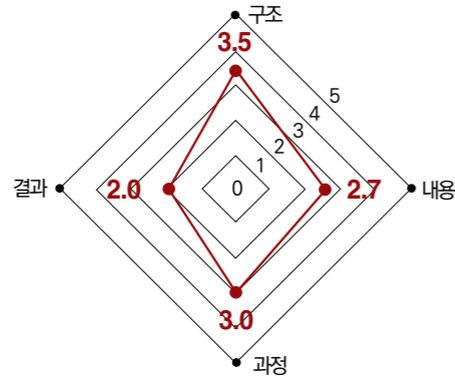
간소음 예방 행동에 대한 인지도가 교육을 통해 큰 폭으로 상승(교육 이전 69.4점에서 교육 이후 89.4점으로)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인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결과는 미미하다고 보이며 특히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관련 규제가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포괄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다루었듯 근본적인 면에서 주택관련규제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책의 만족도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과정(3), 내용(2.7), 결과(2)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목표명확성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만족도이다.

[그림 4-8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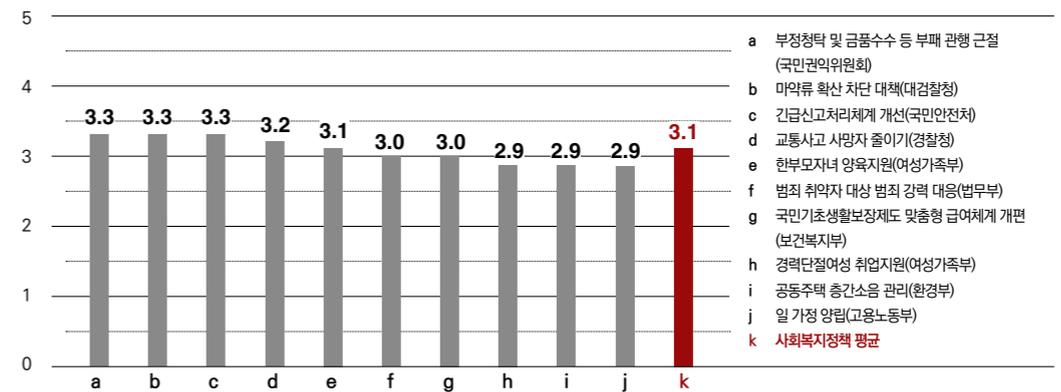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에 대하여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본 연구진의 정성평가 결과를 거쳐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한 결과,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결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경제분야(2.9점), 외교안보분야(2.9점)를 상회하는 결과이며, 교육문화분야(3.1점)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복지분야 10개 정책에서 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정책, 이어 마약류 확산 차단 정책,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정책이 각각 3.3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정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복지정책이 아니라 일반행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특별한 소득조건이나 자산조건에 따라 차별적인 혜택 내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재난과 사고와 관련된 국민안전 확보 문제, 마약류 확산 문제, 청탁금지법 입법을 둘러싼 논란 등의 주요 사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높은 필요성과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들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과정(투명성과 책임성), 정책결과(효과성과 만족도)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4-86]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반면 평균 이하의 낮은 평점을 받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일 가정 양립 정책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정책의 성격은 대체로 특정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형평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낮은 평가의 원인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정책과 같이 정책 인지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여타 정책 대비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정책도 있고, 한편으로는 일 가정 양립 정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과 같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고 국민 평가도 좋지 않은 정책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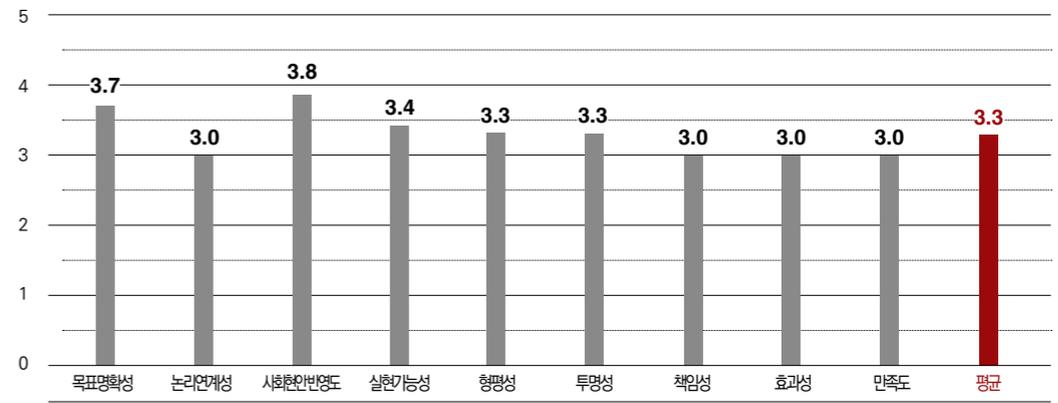
평가 대상 정책 중에서는 본 연구진의 평가와 전문가, 국민 간의 평가 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일 가정 양립 정책,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 등이다. 예컨대 일 가정 양립 정책의 경우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는 낮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진의 경우 일 가정 양립 정책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 다양한 한국 사회의 문제의 원인으로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대체로 단속과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정책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특정한 사회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대체로 복지정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여기에는 정책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 대한 낮은 평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인지도 측면에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투명성과 책임성 등 과정 측면, 그리고 정책 결과의 효과성과 만족도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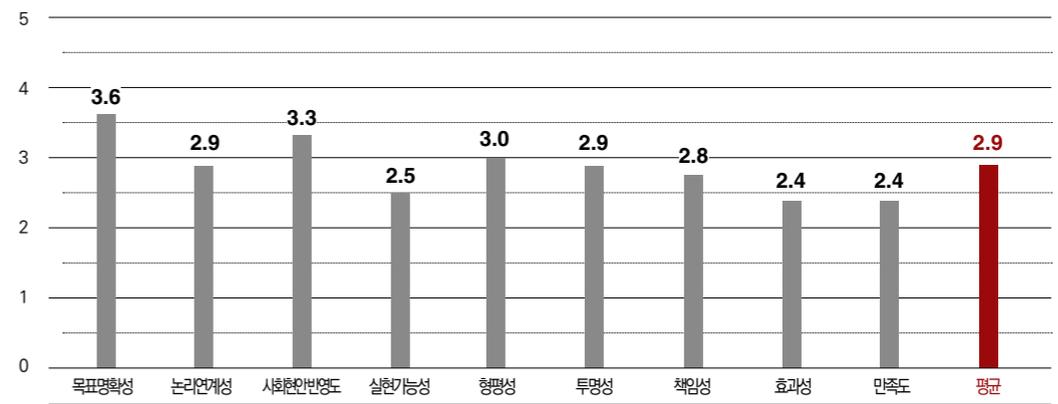
정책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 다시 말해 사회복지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책 결과와 이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실시해 온 다양한 정책홍보 활동과, 정책 집행에 따른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했음에도 설문 결과와 같이 낮은 인지도를 보이거나, 정책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 평가했다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활동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정책과정과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림 4-87]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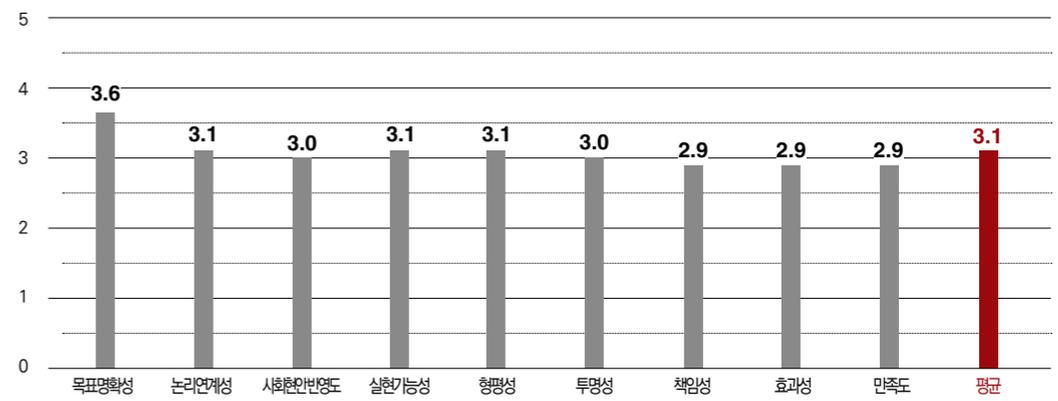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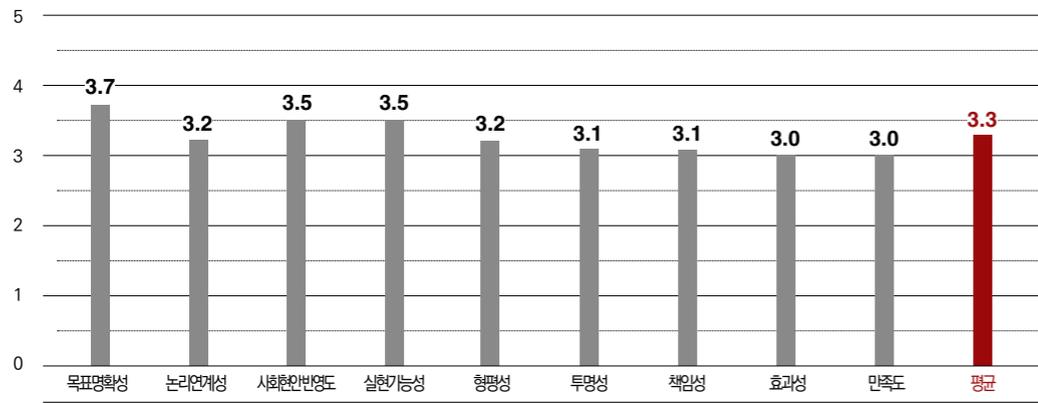
일 가정 양립(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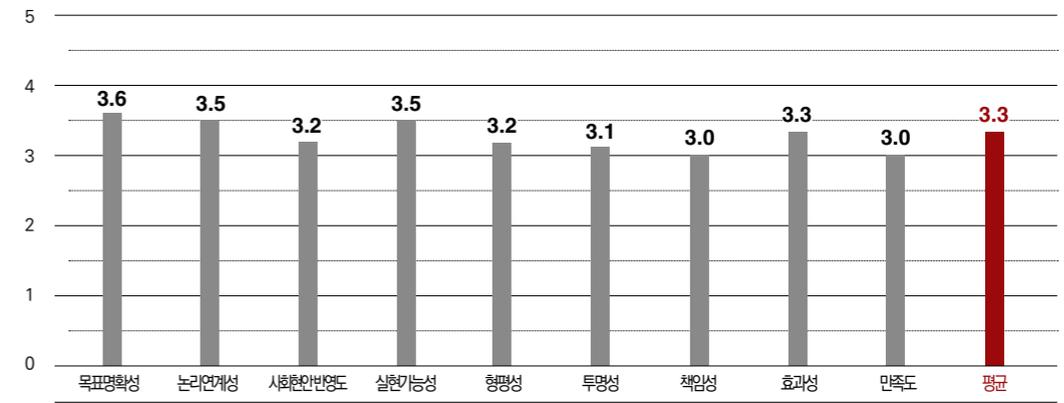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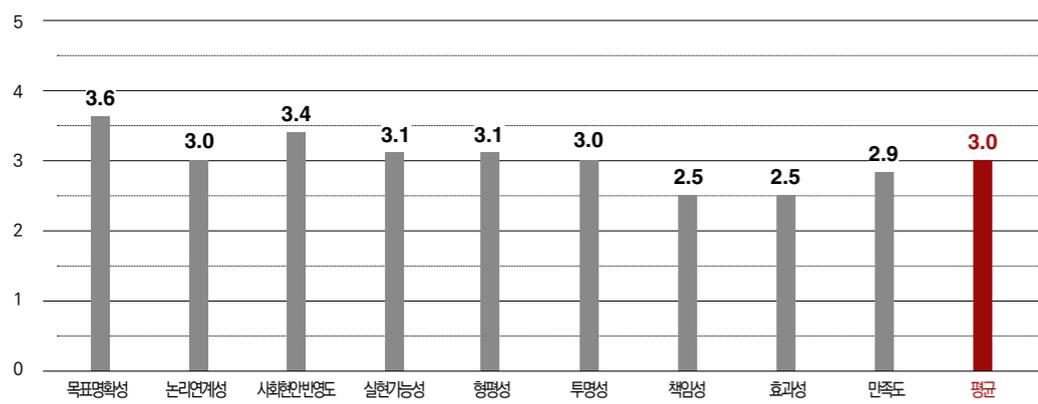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대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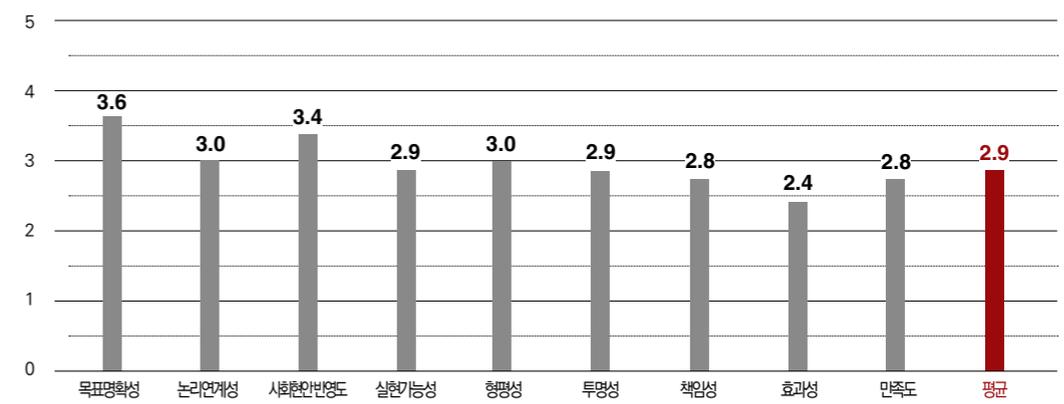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국민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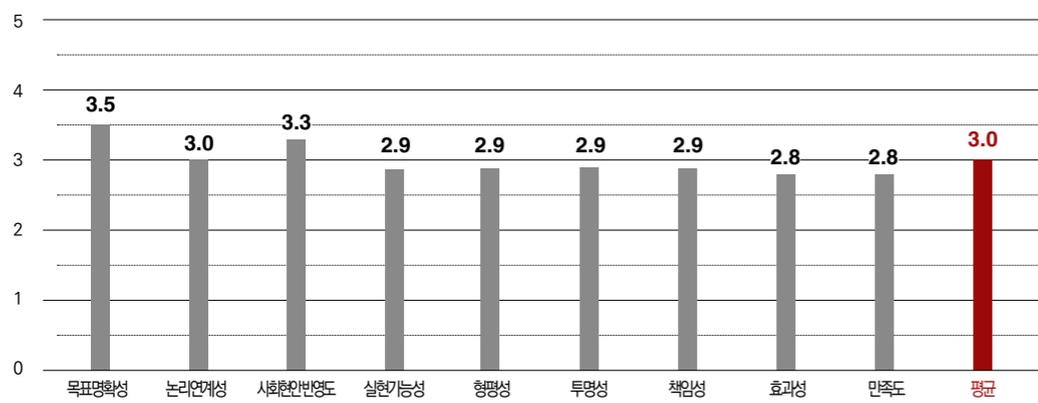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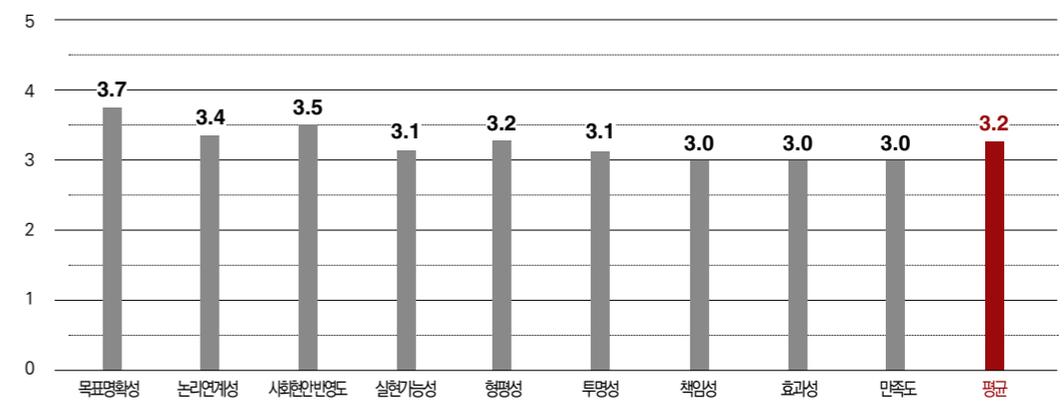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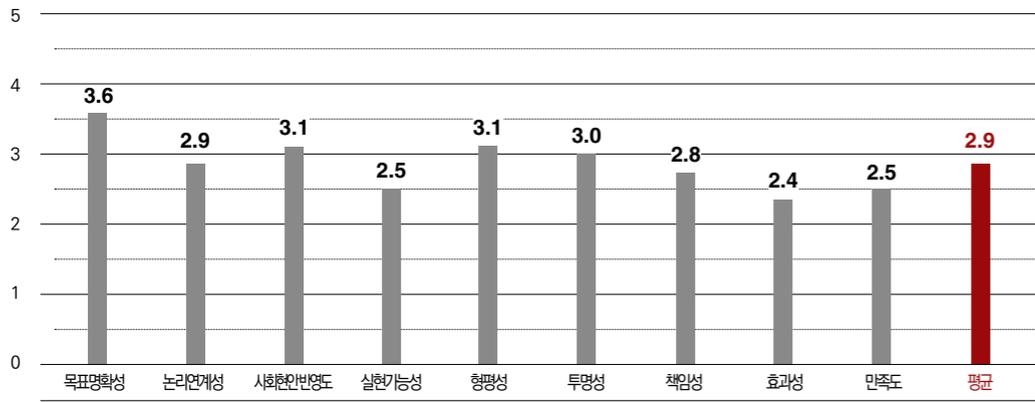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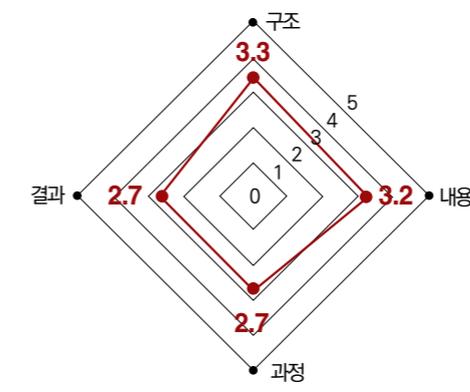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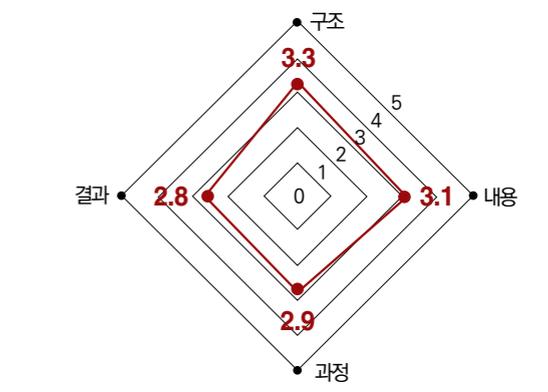
공동주택 중간소음 관리(환경부)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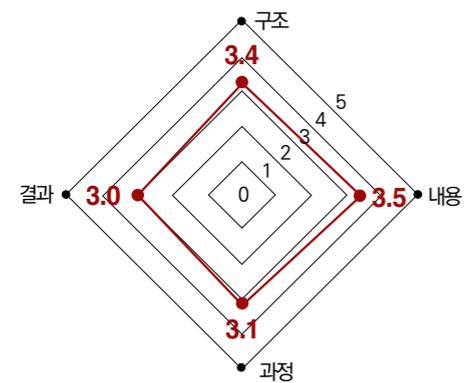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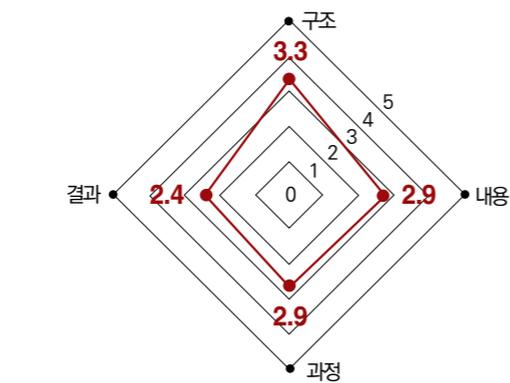


[그림 4-88]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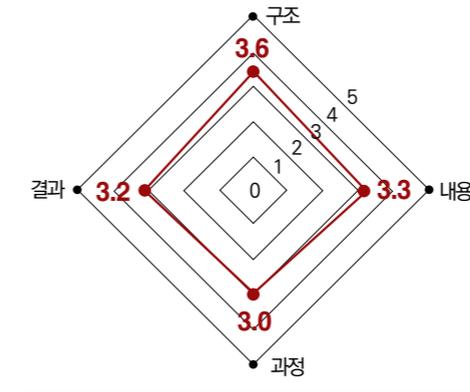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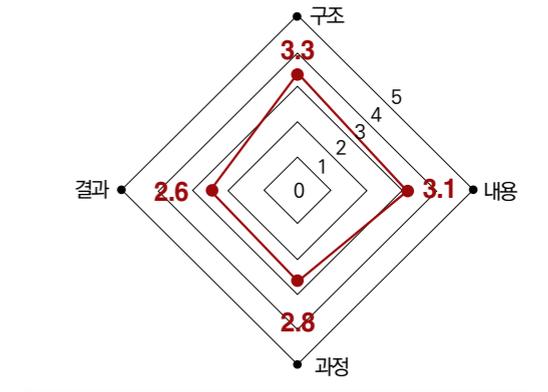
일 가정 양립(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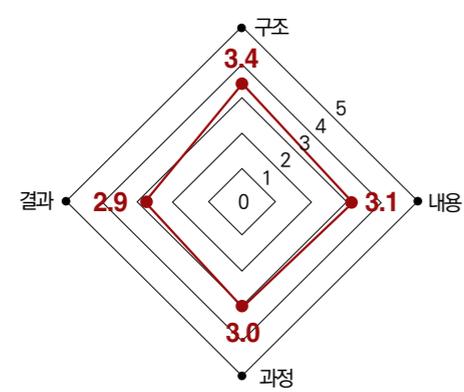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국민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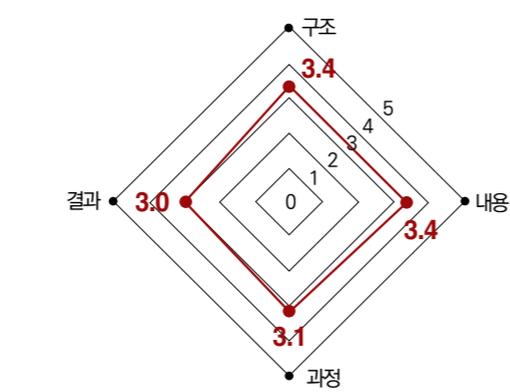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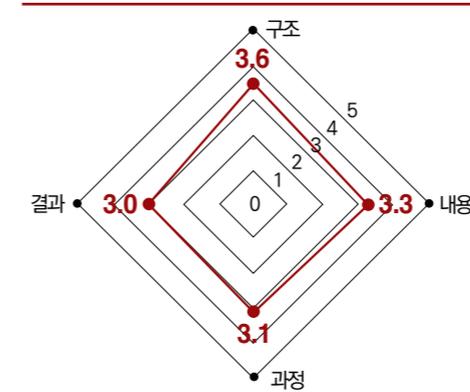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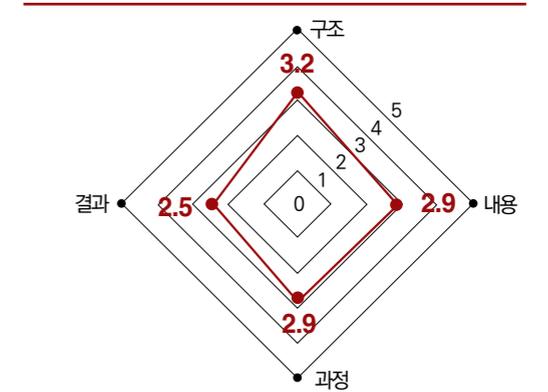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대검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경찰청)



공동주택 중간소음 관리(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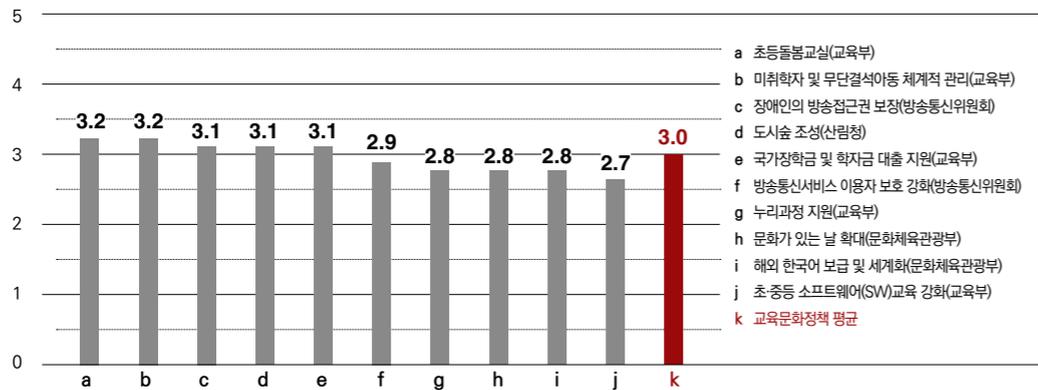
3. 교육문화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정책이 3.2로 최고점을 받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정책이 2.7로 최저점을 받았다. 교육문화의 분야의 평균은 3.0이며 10개의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3개의 순위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상위 집단(초등돌봄교실,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도시숲 조성,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의 정책에 대해서 목표명확성 및 논리연계성(정책구조), 사회현안반영도 및 실현가능성과 형평성(정책내용)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중위 집단(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의 정책에 대해서는 목표명확성(정책구조)과 사회현안 반영도 및 형평성(정책내용)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과정(투명성, 책임성) 및 정책결과(효과성, 만족도)는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하위 집단(누리과정 지원, 문화가 있는 날 확대,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초·중등 SW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목표명확성(정책구조)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내용(사회현안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정책과정(투명성, 책임성) 및 정책결과(효과성, 만족도)의 측면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89] 교육문화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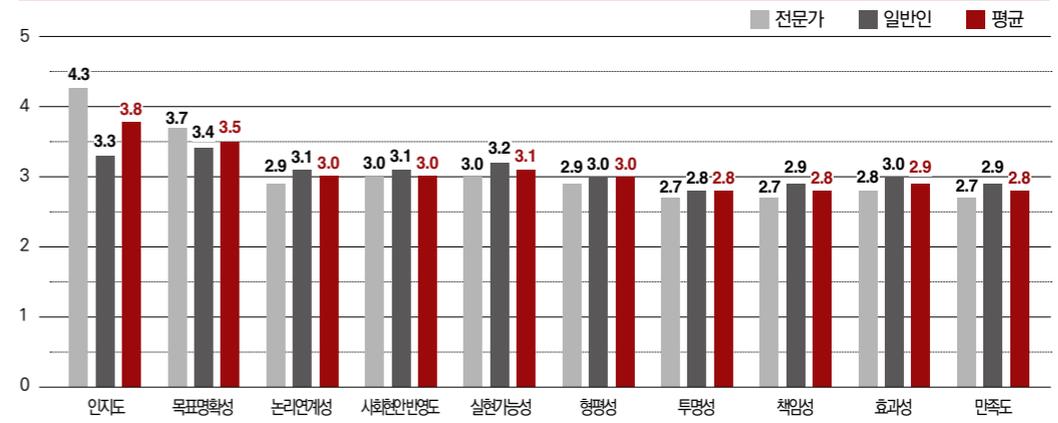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정책은 3개의 개별지표(논리연계성 및 형평성, 효과성)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다소 상이하다. 특히 인지도에서는 매우 뚜렷한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의 인지도는 4.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 상이하게 일반인의 인지도는 3.3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전문가 평가에 있어서 투명성, 책임성, 만족도에서 다소 낮은 점수가 나왔다.

[그림 4-90]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3.7, 일반인 집단은 3.4로써 두 집단 모두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개별지표 중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해당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동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비하여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2.9와 일반인 3.1로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0, 일반인 집단은 3.1로 두 집단 모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0, 일반인들은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3.0으로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2.7, 일반인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2.7 일반인 2.9로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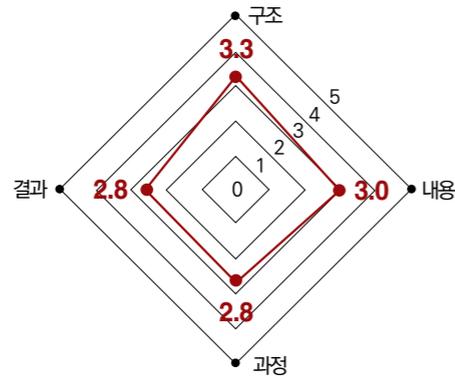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2.8, 일반인 시민들이 3.0으로 전문가 집단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전문가가 2.7, 일반인은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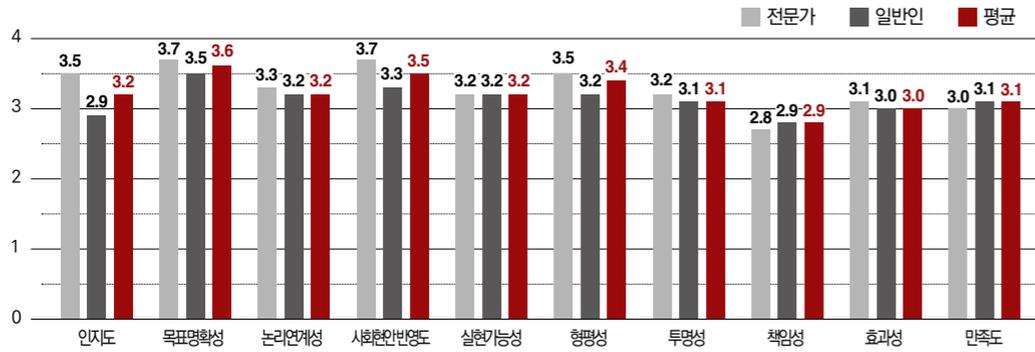
[그림 4-91]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정책은 전문가의 인지도 3.5에 비해 일반인의 인지도가 2.9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두 집단 사이에 적지 않은 격차가 있다. 개별지표 중 책임성을 제외한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논리적 연계성(정책구조), 사회현안 반영도와 실현가능성(정책내용), 형평성과 투명성(정책과정), 효과성 및 만족도(정책결과)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의 평가가 모두 3.0 이상으로 긍정적이다.

[그림 4-92]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3.7로 높게 평가하였고 일반시민도 3.5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취학 아동과 학생에 대한 정확한 소재 파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도 구축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비하여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각각 3.3, 3.2로 긍정적인 편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7, 일반인 집단은 3.3으로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에 부응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연이은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이 동일하게 3.2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3.5 일반인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집단 간 평가에 차이를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 3.2,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2.8 일반인 2.9로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해당정책의 다른 지표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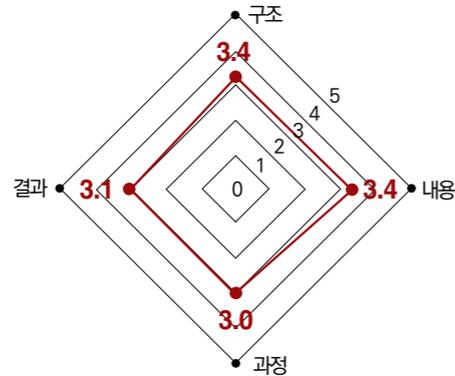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3.1로 일반인은 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문가는 3.0, 일반인 집단은 3.1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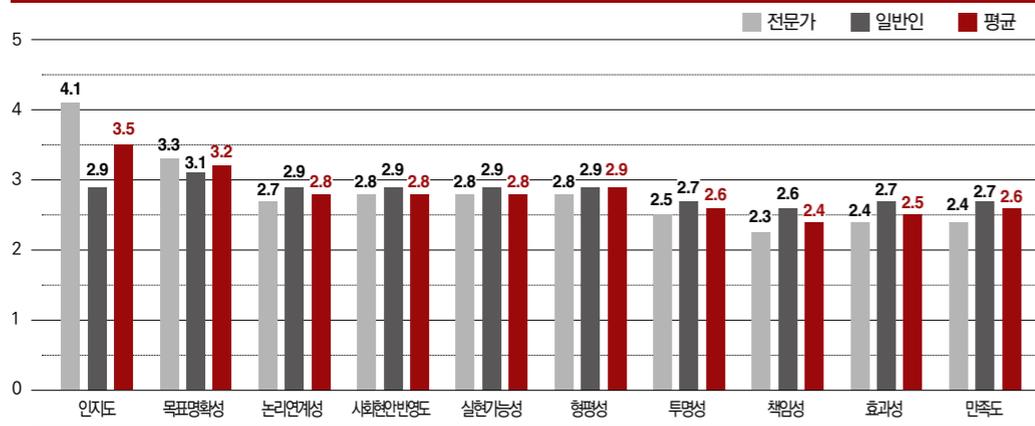
[그림 4-93]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정책은 인지도와 목표의 명확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별지표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다소 부정적이다. 인지도 지표에서 매우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데 전문가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4.1에 비해 일반인의 인지도가 2.9로 매우 낮았다. 정책의 명확성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지표인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및 실현가능성과 형평성(정책내용), 투명성과 책임성(정책과정), 효과성과 만족도(정책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해당정책에 대해 3.0 이하로 평가하였다.

[그림 4-94] 누리과정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3.3과 일반인 3.1로 두 집단 모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각각 2.7, 2.9로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를 보이며 평가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이 각각 2.8과 2.9로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이 각각 2.8과 2.9로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2.8 일반인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각각 2.5, 2.7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각각 2.3과 2.6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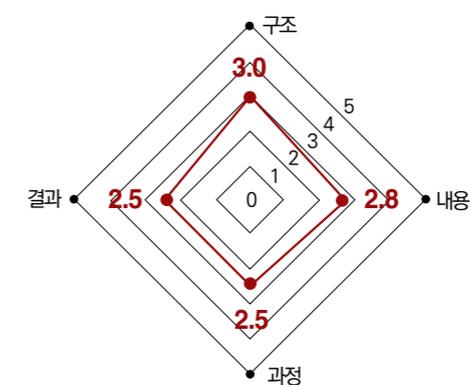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이 각각 2.4, 2.7로 평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전문가는 2.4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시민들도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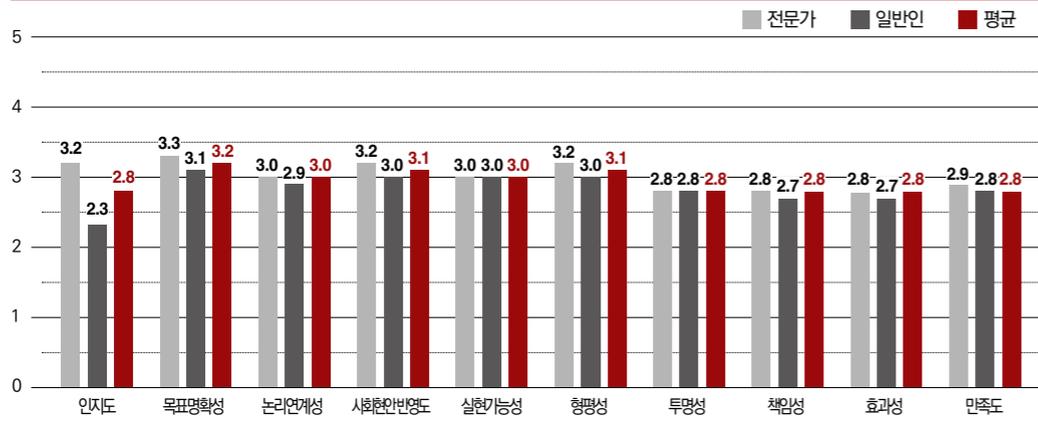
[그림 4-95] 누리과정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 강화정책에 대해서는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및 실현가능성(정책내용), 형평성에 있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 모두 3.0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개별지표 중 인지도에 대하여 일반인 집단은 2.3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일반시민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명성 및 책임성(정책과정)과 효과성 및 만족도(정책결과) 지표에서도 평균 3.0 이하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4-96]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 3.3 일반인 집단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는 낮게 평가되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각각 3.0과 2.9로 일반인 응답자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2로 평가하였고 일반시민은 3.0으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를 통해 신종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의 사건들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동일하게 3.0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들이 각각 3.2와 3.0으로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이용자 보호 강화정책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에 대한 소통과 홍보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2.8과 2.7로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게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에게서 전반적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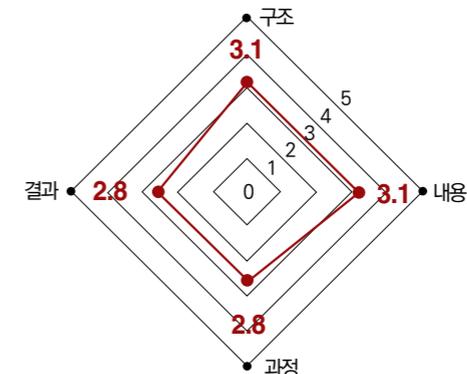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 응답자 집단이 2.8로 다소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응답자 집단도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평가결과가 2.8로 해당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등 정책설계의 차원에 비해 정책의 결과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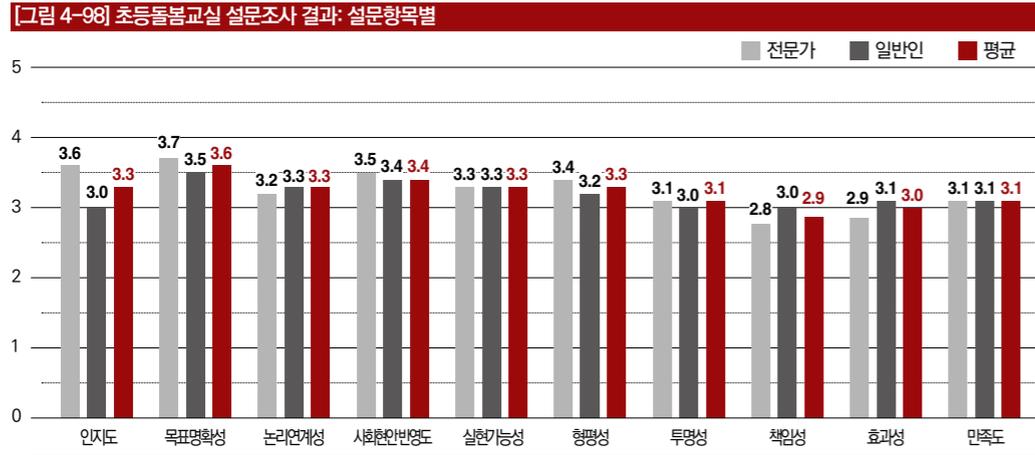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효과성과 유사하게 전문가의 평가는 2.9로 낮았고 일반시민의 평가는 더 낮은 2.8이며 평균결과는 2.8이었다. 따라서 정책결과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만족도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설계차원의 측면과는 달리 책임성 및 효과성, 만족도 등 정책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의 강화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4-97]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모든 개별지표 중 인지도 측면에서 일반인의 평가점수가 3.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책의 수요를 위해서 해당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성 및 효과성을 제외한 8개별지표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의 평가가 모두 전반적으로 3.0 이상으로 긍정적이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은 각각 3.7과 3.5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은 각각 3.2과 3.3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평가로 두 집단 간 동일한 시각을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5, 일반인 집단은 3.4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정부 정책인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정책수요에 부응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3.3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3.4 일반인 3.2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들이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3.1 일반인 3.0로 모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에서 2.8과 3.0으로 두 집단 간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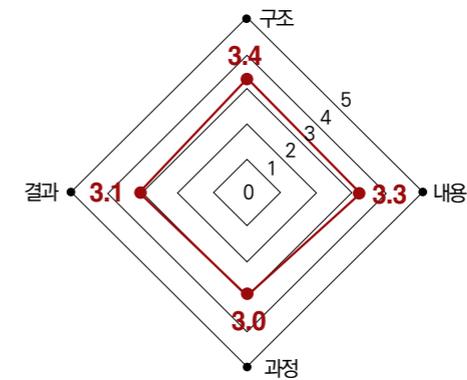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 2.9 일반인 3.1로 전문가 집단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가 더 회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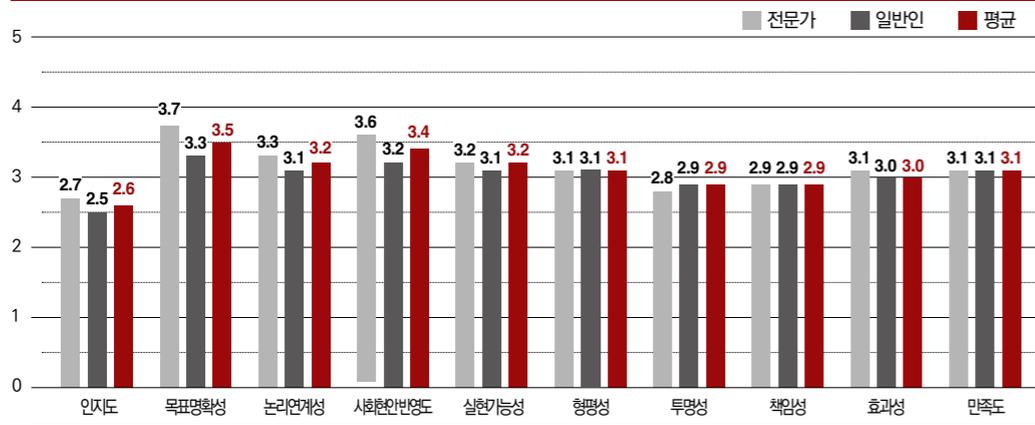
[그림 4-99]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도시숲 조성

도시숲 조성정책은 인지도에서 전문가 집단이 2.7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이 2.5로 평가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해당정책에 대해 두 집단 모두에서 인지도의 평가점수가 3.0이하의 낮은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정책의 인지도를 다른 어떤 전반적인 측면보다도 우선순위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정책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개별지표 모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에서 3.0이상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두 집단 간 비슷한 평가를 보였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3.0이하로 다소 부정적 평가되었으며 정책과정에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00]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7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3.3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도시숲 조성 정책에서 모든 개별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은 각각 3.3과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6 일반인 집단은 3.2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2 일반인 집단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 집단 모두 3.1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 2.8,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응답이 동일하게 2.9를 나타내며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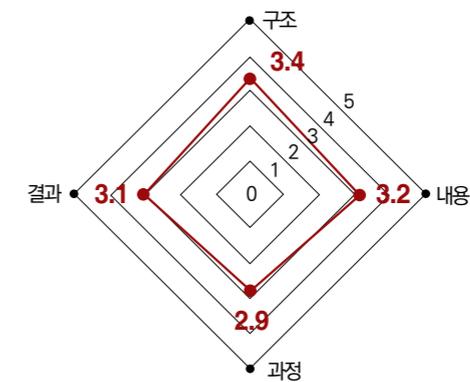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각각 3.1, 3.0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동일하게 3.1로 다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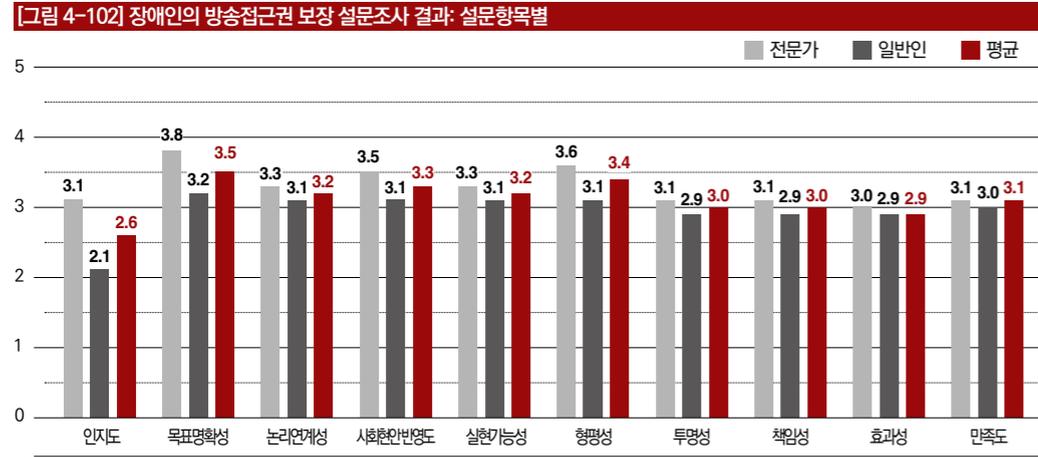
[그림 4-101]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정책의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이 3.1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이 2.1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모든 개별지표 중에서 인지도가 평균 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해당정책의 대상이 장애인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해당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수 있지만,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평가지표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긍정적이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반인 집단이 전

문가 집단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은 각각 3.8과 3.2로 전문가집단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방송을 통한 손쉬운 정보습득과 여가선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시·청각장애인들이 방송취약 계층에 대한 방송접근의 확대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각각 3.3, 3.1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5 일반인 집단은 3.1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정책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이 각각 3.3과 3.1로 두 집단 모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3.6 일반인 3.1로 전문가 집단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평가에 비해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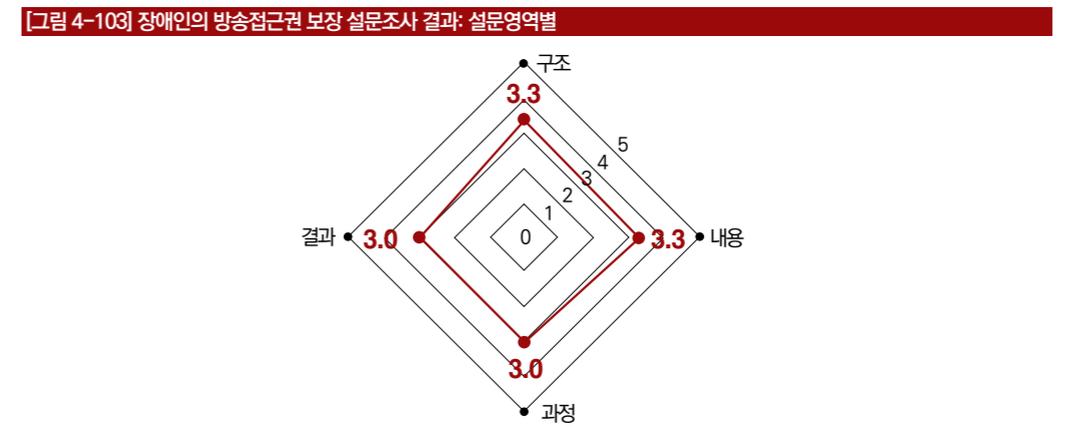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은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0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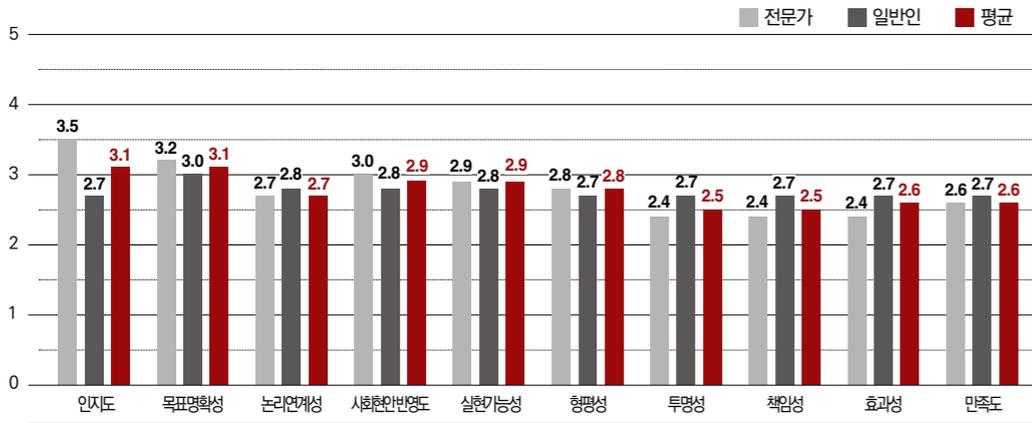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각각 3.1, 3.0으로 두 집단 모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8)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은 인지도에서 전문가 3.5 일반인 2.7의 수준으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가 목표명확성에 대해서만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일반인 집단이 3.0 이상으로 평가한 개별지표는 목표명확성이 유일하다. 전반적으로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및 실현가능성과 형평성(정책내용), 투명성과 책임성(정책과정), 효과성 및 만족도(정책결과)에 대해 양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4-104]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3.2와 일반인 3.0으로 두 집단 모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각각 2.7,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목표의 명확성보다 점수가 낮으며, 정책수단의 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이 각각 2.9과 2.8로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처럼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일반인 모두 2.8점과 2.7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 2.4, 2.7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동일하게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 2.4, 2.7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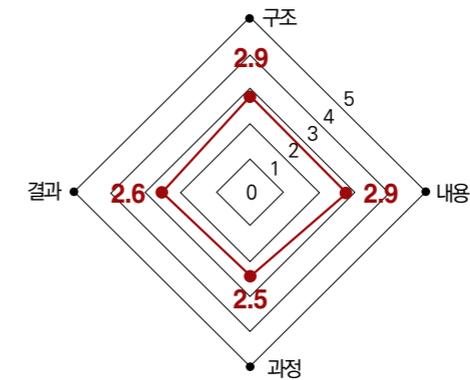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책임성과 마찬가지로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 2.4, 일반인 집단 2.7, 평균 2.6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 2.6, 일반인 집단 2.7, 평균 2.6으로 부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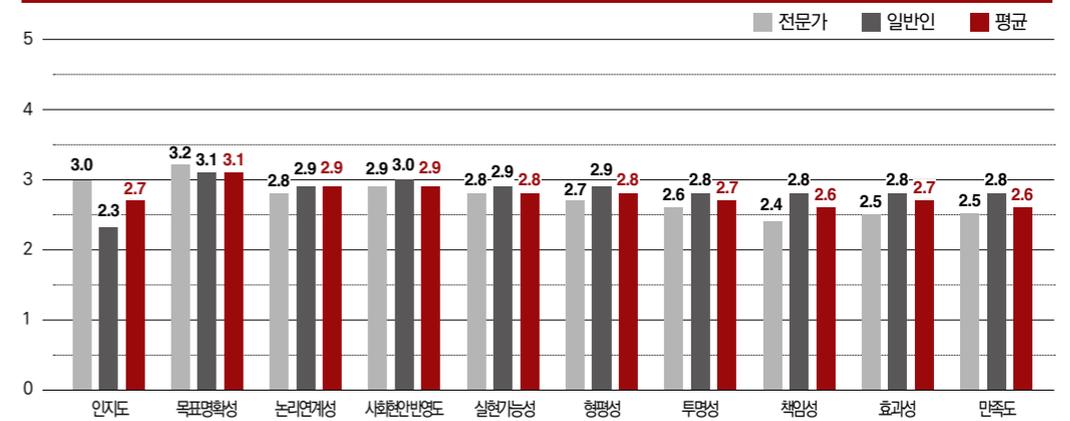
[그림 4-105]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전문가 3.0 일반인 2.3의 수준으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 수혜대상이 일반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 목표명확성을 제외한 모든 개별지표에서 평균 3.0 이하의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해당정책의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모든 차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06]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이 각각 3.2와 3.1로 평가하여 개별지표 중 가장 긍정적이었으나 다른 9개의 정책들에 비해서는 낮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각각 2.8,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에게서 2.9와 3.0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 2.8 일반인 집단 2.9로 두 집단이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 2.7 일반인 집단 2.9로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 2.6,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4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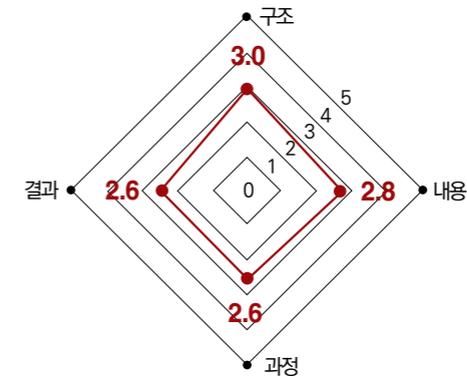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2.5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반인은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 2.5, 일반인 집단 2.8, 평균 2.6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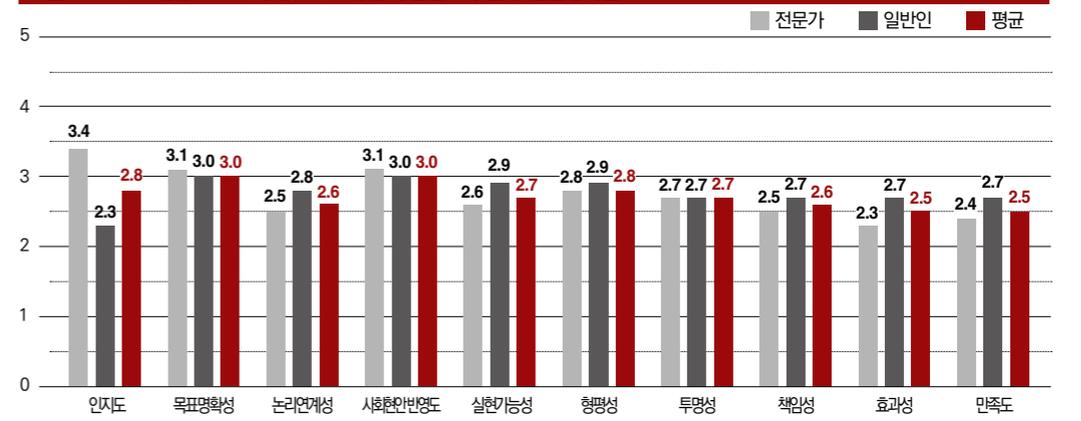
[그림 4-107]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전문가 3.4로 높았으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2.3으로 매우 낮았다. 초·중등 SW교육 강화 정책의 수혜당사자가 학생이기에 일반시민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를 제외한 7개의 개별지표에서 두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7개의 개별지표에서 3.0 이하로 평가하였고, 특히 논리연계성, 책임성, 효과성 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2.5 이하로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일반인 집단의 평가도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서 3.0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08]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3.1, 일반인 집단이 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2.5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3.1, 일반인 집단이 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다른 개별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2.6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 또한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관련해서도 전문가 집단 2.8, 일반인 집단은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동일하게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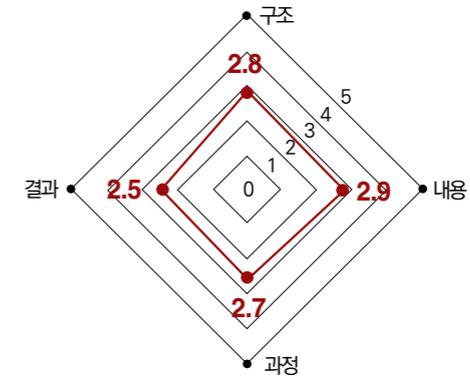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은 2.3으로 개별지표 중 가장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7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아직 실행의 초기 단계여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이 2.4로 개별지표 중 정책의 효과성 다음으로 낮았고 일반인 집단도 2.7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그림 4-109]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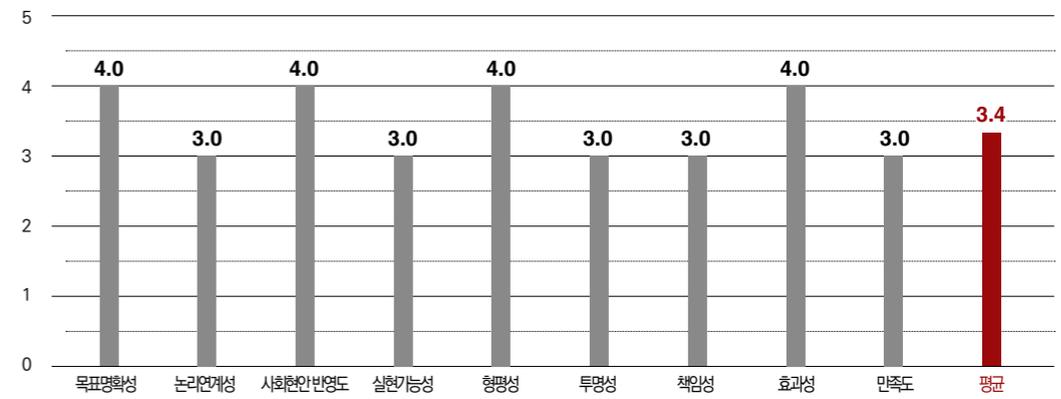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그림 4-110]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대학교육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을 경감시켜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사회진출의 기본 토대로 여기고 치열한 입시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형평성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가계의 사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비의 부담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정책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맞춤형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평균등록금 72%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 수단을 개선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도 취업후 상환제도(든든학자금)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상환이자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맞춤형 차등지원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소득분위의 경계가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되어 신청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a1-2). 또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중복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급하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신청자의 편의성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의 행정적 비효율성과 공신력 하락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당초 반값등록금이라는 슬로건으로 확대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정책은 최근 급격한 경제의 침체로 가계의 사정이 악화되면서 대학교육 비용부담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과 대상 소득분위의 확대 등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최근 3년간 국가장학금의 신청자 중에서 지원을 받는 비율은 69%에 이르고 있어 일견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지원금의 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기초분위 480만 원에서 8분위 67.5만 원으로 편차가 심한데 반해 매 학기에 소득분위의 경계값이 변동되므로 사후적으로 확정되므로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또한 대학자체의 노력에 연계되어 있는 유형 II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다양한 대학평가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적 보증성과 관련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는 함정도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소득분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대학교육 기회의 편차를 해소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수혜자의 관점에서 지원자격과 지원기준이 모두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소득분위에 의해 변동되므로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보증성 미비의 문제가 있다. 사전적으로 제반 자격요건과 기준이 확정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주기적으로 출연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 재단의 재정구조는 다양한 계정으로 분할되어 있고 금융투자자에 발행한 채권으로 재

원을 조달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2015년은 정부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기반을 완성하는 시점으로 등록금 총액 14조 원 중에서 7조 원을 확보하여 평균 50%를 경감시킨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재원은 3.9조 원이고 나머지 3.1조 원은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동결 및 인하와 장학금 확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재정적 노력이 어떤 수준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대와 다른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반값등록금이라는 슬로건에 매몰되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여 좀 더 유연하게 대학교육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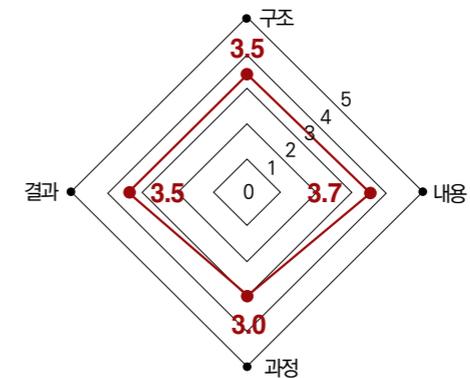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의 확대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최근 3년간 약 95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으로 받았고 약 80만 명의 학생들이 든든학자금 제도를 통해 취업할 때까지 대출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확대로 인해 학자금 대출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추세 변화에서도 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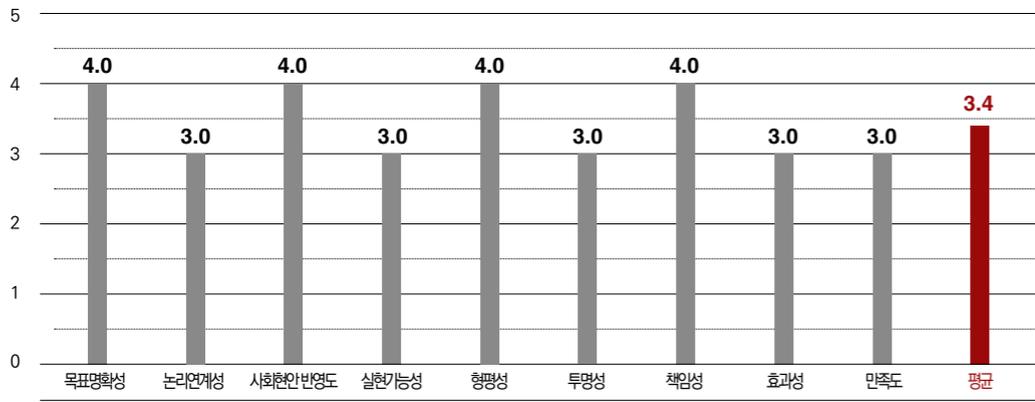
대학등록금 지원 정책의 제반 요건과 기준이 가능하면 사전적으로 정해져서 수혜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된다면 그에 따라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고등교육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만큼 그러한 혜택이 수혜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개선하면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1]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 아동 체계적 관리

[그림 4-112]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 아동 체계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목표는 상당히 명확한 편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무단결석학생들의 관리미흡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처 필요성과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안간의 논리적 연계성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제시된 정책대안들 - 예를 들면,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 배포와 전담기구 및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직원 및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등 - 간 연계성이 크지 않거나 제시된 정책 대안만을 가지고서는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미흡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피해아동 및 학생들에 대한 소재파악을 위해서는 교육부는 물론 경찰청,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간의 실질적 협업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는 최근 미취학아동들의 부모 학대와 무단결석학생들의 관리미흡 등의 문제로 우리사회가 당면한 현안 중에 하나이다. 특히 미취학아동 및 무단결석아동에 대한 소재파악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은 최근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의 증가 현상과 맞물려 사회불안과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의 실현가능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교육부와 타 부처 간 협력과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정책의 실

현 가능성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아동에 대한 소재파악과 신원확인을 위한 타 부처(예를 들면, 경찰청, 법무부, 그리고 행자부)와의 제도적 협력기반은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직접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약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거나 지역적으로도 낙후된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수혜집단의 특성을 볼 때 본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정책의 투명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관리 정책 내용 가운데, 학교장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신속한 소재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등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의 개인정보 관리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정책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권리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동보호에 대한 권익보호와 함께 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권에 적절한 보완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정책의 책임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본 과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매뉴얼 배포,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위원회 운영, 학교장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담당자 교육실시 등의 정책 실효성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취학 및 무단결석을 관리하기 위한 가정방문, 내교 요청 등 현장에서 집행하기에 상당한 고충이 따를 수 있음은 추가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항목에 대한 평가 역시 중립적이다. 정책의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정책의 성공여부는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에 대한 현장에서의 신속한 소재파악과 교육부와 타 부처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교육담당자들의 현장방문과 내교 요청에 따른 집행력 확보에 상당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행정자치부 간의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에 대한 실질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본 과제의 효과성 제고에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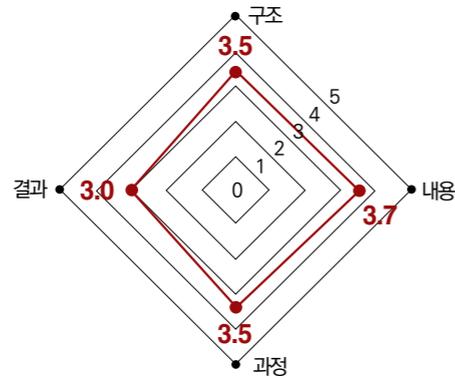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과제의 만족도는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정책의 목표와 사회현안 반영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수단 간의 연계성과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집행

의 어려움과 타 부처와의 협력 이슈 등이 본 과제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과제의 만족도 제고는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가정방문과 내교 요청을 통한 미취학자와 무단결석아동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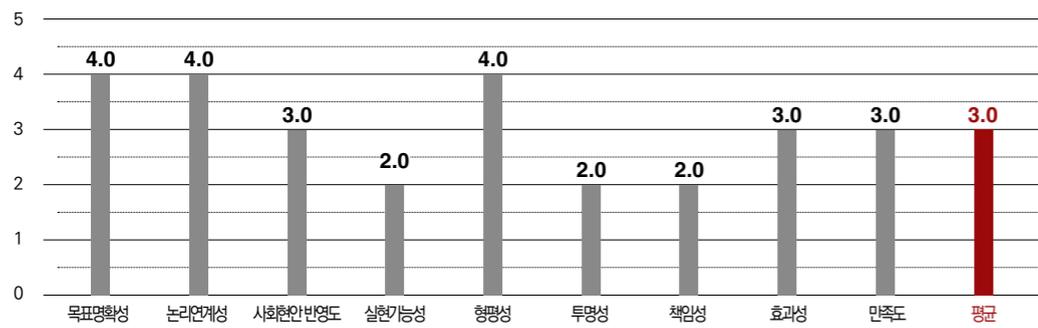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는 구조, 내용 및 과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있지만 결과적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책자체의 완결도 보다는 정책추진을 위한 보완대책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13]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 아동 체계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누리과정 지원

[그림 4-114] 누리과정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교육부의 누리과정 정책의 목표는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 2015c). 국가가 만 3-5세 유아에게 양질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균등한 생애출발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5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책임을 완성하기 위한 중추로서 누리과정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누리과정 정책의 내용은 크게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표준교과와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리과정의 내용은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5개 영역의 연령별 공통교과과정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신체운동 및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5c; 이진화 외, 2015).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2013년부터 만 3-5세 전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 기준 유아 1인당 매월 29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및 교원 확충, 교육과정 운영시간 확대, 교원능력개발 및 평가제 확대 등의 추가적인 방안들도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하기 정책수단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누리과정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완수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 특히, 급격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육아 및 보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누리과정 정책은 향후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아 교육 및 보육의 비용을 공적재원으로 경감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소요 재원의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지자체의 끊임없는 갈등은 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교과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재정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중앙, 지방 정부 당국의 갈등에 오히려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 만 3-5세 유아들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반면에 소요 재원을 둘러싼 정부 당국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재정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 중앙정부는 2015년에 총 4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 2.1조 원, 유치원 1.9조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하였고 2013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과 2015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교육부, 2016c1-c4). 그러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누리예산의 의무지출 경비 지정이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법적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까지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2016). 2016년에 3월 새학기가 시작하기 이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방교육청 및 지자체는 2개에 불과하였고, 7개 지역이 9월 이후에 편성하였고, 2개 지역은 연말까지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2016c2). 이러한 정부 당국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의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보육시설(어린이집)과 교육시설(유치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계층의 모든 가정에 혜택이 제공된다. 이 정책의 수혜자는 2013년 126만 명에서 2015년 13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보편적 교육서비스를 통해 미래 세대의 학습기회를 균등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급증하는 노인부양의 책임을 걸머지게 되는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 및 보육을 전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아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과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누리정책은 수립과정에서 교육부와 관련부처의 TF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관부처인 교육부의 의견수렴은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2015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3-4월) 방안을 발표하면서(5월) 전문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교육부, 2015a1).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청과 지자체로 하여금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의 적용 범위와 소요 예산의 부담 비율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및 지자체의 갈등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 당국자들이 2015년 기준 130만 명에 이르는 만 3-5세 유아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곤란과 불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관장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복지부, 재원을 마련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집행해야 하는 시도교육청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원의 부담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과 중앙부처가 갈등을 일으켜 운영체계의 불안정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여·야 정당 간의 타협이 필요한 정치적 이슈로 확장되어 결과적으로 행정 당국의 책무성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두고 정부 당국자들이 저마다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등의 각종 법령과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관할권 등을 운운하며 서로 다투면서 오히려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만3-5세 누리과정 정책을 책임진 운영체계의 책무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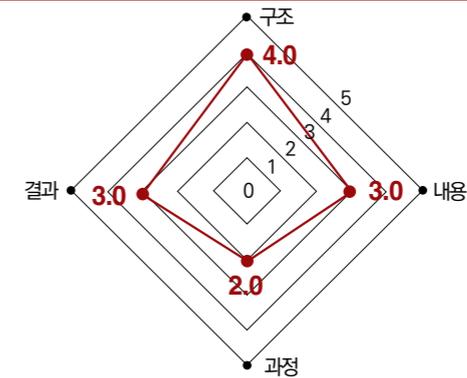
이 정책은 만 3-5세의 유아를 키우고 있는 모든 가정에 정부가 교육비와 보육비를 보조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키는 단기적 효과는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에

게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누리과정의 교과내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개 영역의 연령별 공통교과과정이 완비되어 있으며,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및 교원 확충, 교육과정 운영시간 확대, 교원능력개발 및 평가제 확대 등의 추가적인 방안들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아교육의 혜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정책이 자칫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여 사회적 갈등의 촉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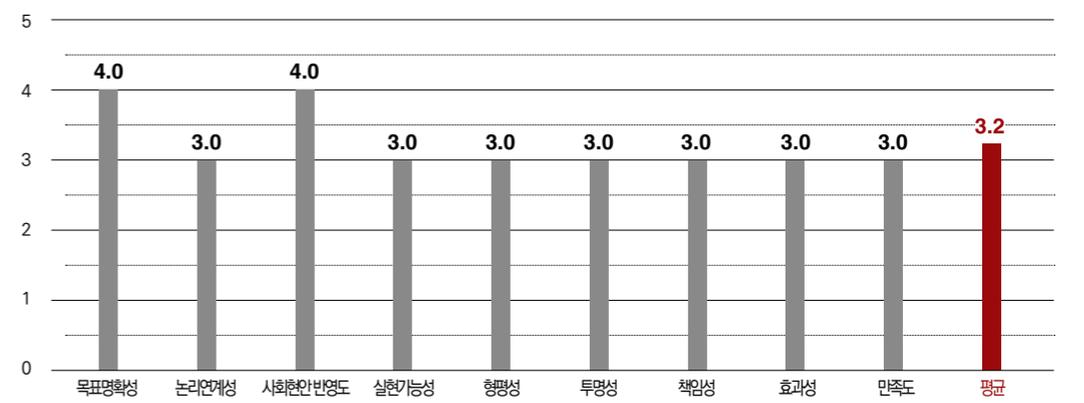
연간 4조 원의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입하여 130만 명의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편적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므로 정책에 대한 수혜자 집단과 일반 시민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앙, 지방의 정부당국자들과 여·야 정치권의 참여한 갈등이 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5] 누리과정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그림 4-116]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목표는 상당히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및 단말기 유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추징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하여 통신서비스 시장과열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구체적 해결 목표의 명확성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높은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안 간의 논리적 연계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시된 정책대안들 - 예를 들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규제 통합, 피해구제 강화 위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마련, 이용자 안내 계약서 표준안내서 도입, 보이스피싱 등 신종 피해 정보 제공 등 - 간의 연계성이 크지 않거나 제시된 정책대안들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14.1월 카드사, 3월 이통사)와 다양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통신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사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모바일 앱을 이용한 유료 콘텐츠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민원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통신서비스 사용자간의 과열 경쟁에 의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이용자 안내를 위한 계약서 표준안내서 도입, 보이스피싱 등 신종 피해 정보 제공 등의 정책대안들이 최근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및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등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스마트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의 미디어 격차 해소와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기반 문제는 적극적인 대처의지를 밝히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책의 형평성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특히 스마트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통신정보서비스 약자들에게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책적 배려와 특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최

근 5년간 계층별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적이 노령층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취약계층(예를 들면 농어민, 외국인, 일반주부, 장애인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 역시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책이 사업자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정책 목표와 실행방안이 연계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신서비스사업자간의 과열경쟁에 의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사고의 원인 제공이 주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부실 등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여전히 본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 또한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정책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IT기반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및 신규 방송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이용자 보호도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 어느 분야의 규제도 받지 않는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활용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정비が必要하다고 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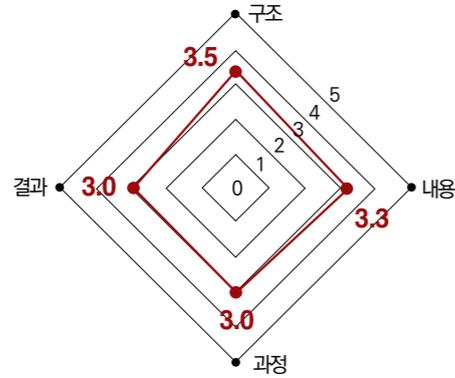
본 항목에 대한 평가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투명성, 책임성 항목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정책의 성공 여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침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서비스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과제에 대한 만족도 또한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정책의 목표와 사회적 현안 반영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수단 간의 연계성과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과제의 만족도 제고는 어떻게 본 과제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것인지 통신서비스 이용자입장에서 현안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bottom-up방식의 문제해결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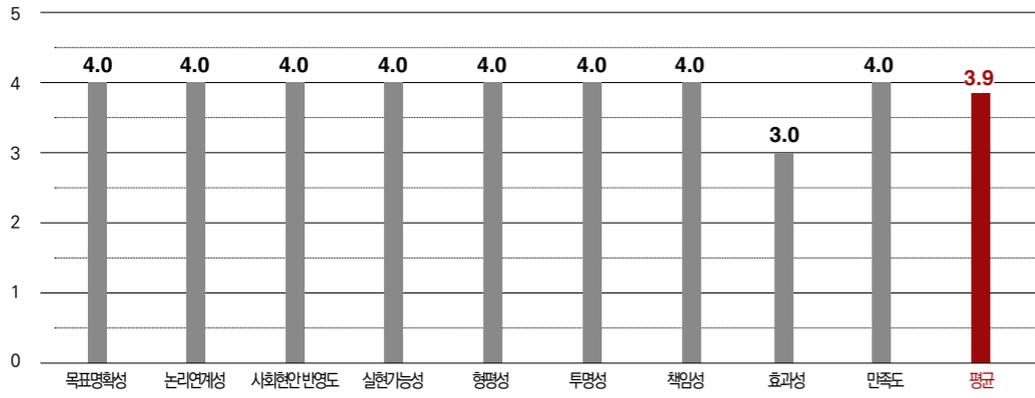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는 구조 및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지만 그 과정 및 결과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책자체의 완결도 보다는 정책추진을 위한 보완대책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17]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초등돌봄교실

[그림 4-118]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수요자 중심 운영,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 강화,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초등돌봄교실의 정책수단은 3대 중점과제(수요자 중심,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협력)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수요자 중심 운영을 위해 학년특성에 맞는 서비스 다

양화, 학기초방학중 운영 내실화, 돌봄 운영시간 유연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놀이안전프로그램 강화, 돌봄전담사 전공성 교육, 저녁돌봄 안전귀가, 급간식 다양화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지역의 아동센터, 지역별 교육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 및 학부모, 퇴직교원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정책목표와 정책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수단을 개선하는 과정이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증가, 방과후 나홀로 학생의 증가, 양육사교육비의 증가, 여성이 사회진출 확대에 의해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거나 저녁돌봄 이후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등 학교외부의 환경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정책대상 집단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환류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도 확립되어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앞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초등돌봄교실의 정책수단은 3대 중점과제(수요자 중심,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협력)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예시와 사례, 학생생활 안전관리에서 업무협약서에 이르는 표준양식, 수요조사와 만족도조사의 방법 등이 각 세부과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상세한 운영매뉴얼의 작성은 초등돌봄교실의 모범적 사례를 확산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고 학생,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신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편적인 체계의 근간을 제공하여 표준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초등돌봄교실은 가정의 취약한 양육환경을 국가가 양질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면서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보편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는 1-2학년 중심의 돌봄교실은 주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6학년 중심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 결과 2015년에 총 5,972개 학교가 돌봄교실을 개설하여 239,798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데 이르고 있다. 학생 수요,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도 현장의 조건에 대한 높은 적응성을 보이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전담인력, 학부모 및 대학생 봉사, 지역의 기업 및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보사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정, 학교,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적인 양육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체계는 학교의 돌봄교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와 정보가 생성되고 공유될 수 있는 장점을 보인다. 지금까지 돌봄교실 모델학교(2013), 범정부 통합지원 시범(2013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2014년 8-10월), 정책토론회(2015년 10월), 교육기부&방과후학교 박람회(2016년 9월) 등의 공개적 활동을 연이어 펼쳐서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과 개방성은 정책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초등돌봄교실은 학생,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신축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집단 및 관련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집행이 된다. 이와 같이 분권화된 과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모니터링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기관들로 구성된 개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토론회와 박람회의 공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장의 정책성과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채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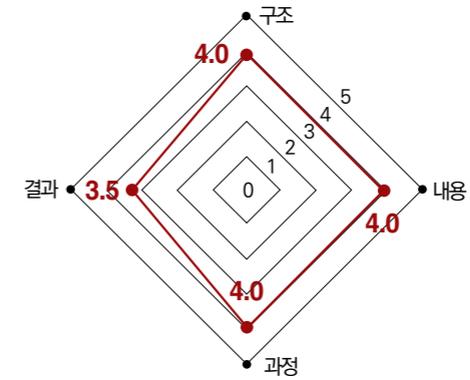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초등돌봄교실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개선 그리고 수혜대상의 확대와 시설의 확충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혜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본돌봄, 여가, 학습, 안전의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당초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의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되고 있다고 본다. 다만, 2016년 교육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육청에 교부된 총 3,922억 원 중에서 실제로 편성된 예산이 평균 80%(도교육청)에서 86%(시교육청)에 머물러 전년 대비 12%이상 하락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률이 7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교육부, 2016d3).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인해 좀 더 시급한 다른 문제에 재원이 쓰인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재정적 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누리과정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초등돌봄교실에 전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생기기 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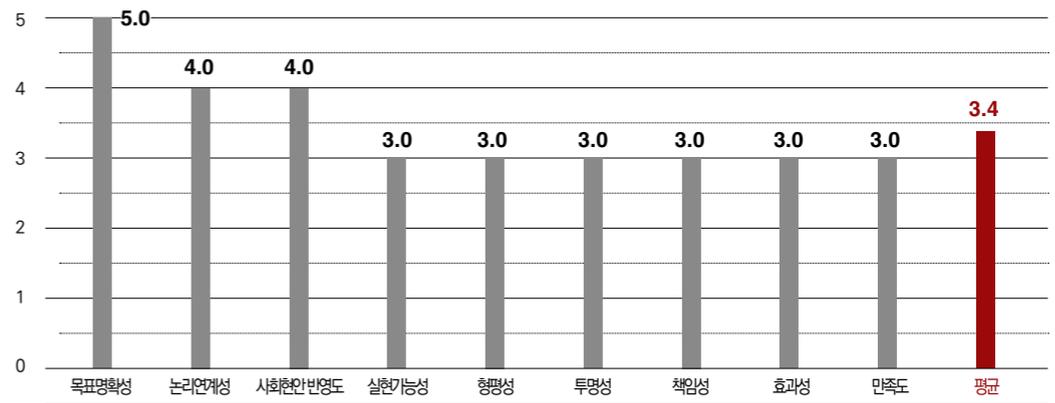
현장중심의 초등돌봄교실 정책에 대한 대상집단과 시민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교육부의 돌봄교실 참여 학부모 전수조사(20만 6천명) 등(길혜지, 2016)의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 4-119]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도시숲 조성

[그림 4-120]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를 활성화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산림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비록 본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전문가나 일반인 모두 낮게 평가되었으나 본 정책의 취지와 목표에 대한 명확성에는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도시숲 조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들 -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복합경관숲 조성사업, 대관령지역 경관숲 조성, 도시녹화운동 홍보 등 - 간의 연계성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의 연계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도시숲 조성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함께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본 과제는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확대되고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과 건강증대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숲의 확대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을 완화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목표명확성, 정책수단간 논리적 연계성, 그리고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중립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2015년도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에 의하면 도시숲 조성(생활림조성관리)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결과 보통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시숲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후술할 정책의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및 효과성 등에서 본 과제가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이는 점과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도시숲 정책의 형평성은 중립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계속사업으로서 여전히 도시지역의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생활환경 숲 조성이나 산림공원 등에 대한 투자가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비록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경우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확보를 위해 별도의 토지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클 우려가 있는데, 기존 사업이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 간 산림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시 거주민이나 생활환경 숲 이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도시숲 조성이나 산림공원 투자가 일반 국민들의 공론화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정책의 시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시급성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전년도와 정책의 투명성의 비교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다소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난 점은 본 정책수행 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공론의 과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도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정책이 도시숲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가 얼마나 일반 국민들의 요구와 수요

에 시급함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본 정책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산림청이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못지않게 본 정책을 통한 정책 홍보의 필요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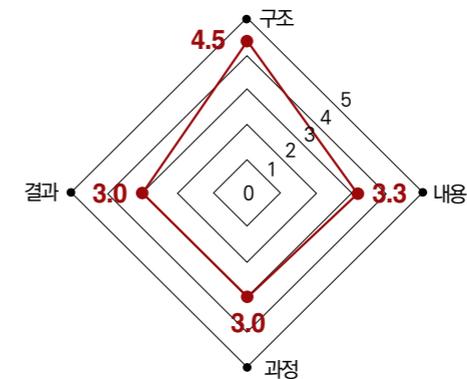
본 항목에 대한 평가 역시 중립적임과 동시에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되지 않았다.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투명성, 책임성 항목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정책의 성공 여부는 도시숲을 자연 체험형 공간화하고 도시숲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산림청의 정책효과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궁극적으로 계속과제로서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과제의 만족도는 역시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에 매우 높은 만족도 평가(4.0)에서 중립적 평가(3.0)로 낮아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서 도시숲 조성 정책이 어떠한 정책결과를 유도할 것인지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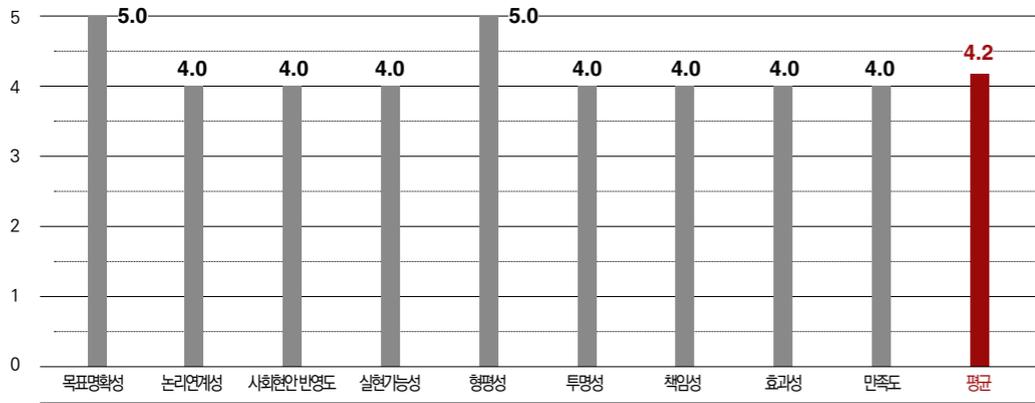
도시숲 조성 정책은 구조면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정책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과정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본 과제가 계속과제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본 정책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와 함께 계속과제로서의 본 과제의 효과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4-121]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그림 4-122]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정책은 취약 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IC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향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와 함께 미디어의 콘텐츠 생산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시민의 문화생활에서 미디어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과 문화향유가 보편화된 시대에 시·청각 및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접근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크게 증대되었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정책은 우리나라의 IC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한다는 매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방송수신 장비의 보급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수신기(2000년), 난청노인을 위한 수신기(2001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2002년)의 순으로 방송수신 장비 보급이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장애인 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폐쇄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제작지원은 지상파방송사뿐만 아니라 비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 PP, SO, IPTV)를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하여 확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IC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망과 방송망을 통합한 차세대 장애인방송서비스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미디어 기술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의 수는 2009년 245,801명에서 2014년 252,779명의 수준이고 시각장애인의 수는 2009년 241,237명에서 2014년 252,825명의 수준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15a). 또한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노인난청장애인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 변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해야 할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취약계층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수요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정책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하고 있는 취약 계층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 수단들을 다각도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장애인 취약계층이라는 명확한 대상과 다양한 방송기술의 활용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고시 등 관련 법·제도적 기반도 이미 확립되어 있다.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방송접근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2011년, 2012년, 2015년의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에서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정책의 실제 집행은 상당부분 지상파방송사와 공익·보도·일반 PP, 유선방송사(SO), IPTV 방송사업자들이 이미 구축한 방송네트워크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지원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가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재원도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방송수신기의 보급은 소득계층과 장애등급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이고, 2순위는 장애등급 1급-3급이며, 3순위는 장애등급 4급-6급의 순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15a). 또한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장애인용으로 재제작하여 보급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방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방송물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장애인방송의 편성비율의 목표는 사업자에 따라 자막(70-100%), 화면해설(5-10%), 수화통역(3-5%)의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정책의 내용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미디어 환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정책은 방송통신위원, 장애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중파방송사, 지역방송사, PP-SO-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개선하고 집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장애인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융합하는 기술표준을 개발하고 KBS의 시험방

송, 유료방송사의 실험방송을 거쳐 2018년부터 본방송을 시작하게 된다. 방송수신기 활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장비의 성능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방송의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정책대상집단인 장애인 이용자들의 피드백이 정책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문화컨텐츠가 양산되는 시대에 방송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보편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방송접근권이 법적 권리로 확립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와 미디어 기술의 개발에 의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정책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국가 재원으로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방송수신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노력으로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책대상이 시·청각 장애인 취약계층, 노인, 학생의 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 사회적 가시성은 높지 않으나 정책의 행정 및 재정적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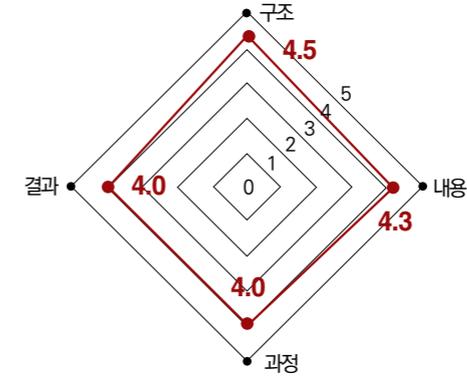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정책의 소요 예산은 2011년 62억 원 수준에서 2015년 94억 원 수준으로 증액되었으나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크지 않은 재원으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였다. 장애인방송장비 보급의 규모는 2002년 자막방송수신기 2,362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1,000대, 난청노인용수신기 5,000대에서 2014년 자막방송수신기 6,257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6,257대, 난청노인용수신기 3,033대로 증가하였다. 또한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장애인용으로 재제작하여 자막방송 2,7000편, 화면해설방송 430편을 보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방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방송물 25편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장애인방송의 편성비율의 목표는 사업자에 따라 자막(70-100%), 화면해설(5-10%), 수화통역(3-5%)의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 2016년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 2015a; 2016a2; 2016b). 따라서 이 정책은 사회적 가시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실질적인 효과와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큰 사례라고 평가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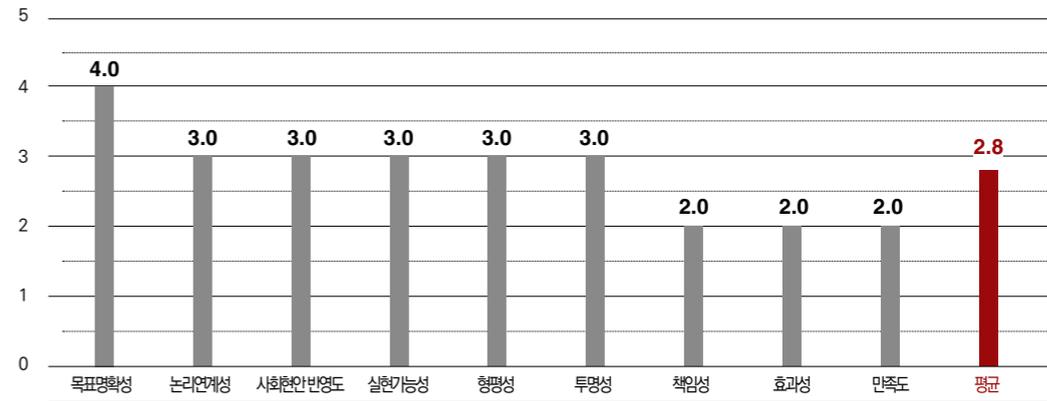
이 정책은 장애를 가진 취약 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중심의 문화생활이 보편화된 시대에 시·청각 및 발달장애인 취약계층, 노인,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송사업자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본다.

[그림 4-123]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그림 4-124]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을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서 본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비록 본 정책 목표가 명확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계속사업으로서 본 정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수단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시설 인센티브 지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 등의 정책대안들이 본 정책목표의 달성에 여전히 미흡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전년도에 비하여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평가결과(3.0)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음은 정책대안의 추가 발굴과 정책대안 간 연계성 확보에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또한 전년도(3.0)에 비하여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과제가 계속과제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사회현안 반영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결국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기회확대와 문화여가 수요 충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문화가 있는 날 정책실행을 위한 예산 투자가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비록 적은 예산으로 생활 속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시설 이용을 촉진을 하는 과제의 속성상 제한된 예산으로 국민들의 문화여가 수요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하여 정책실행가능성 평가항목에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은 본 정책 재정투자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급증하고 있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절대적 부족이 이러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은 문화가 있는 날의 정책수혜집단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문화의 날의 정책 수혜는 일반적으로 각종 공연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 등이 위치한 거주민이 될 것이며,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주요한 대상으로 잡지 않았더라도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다. 대도시권에 근무하는 국민들과 지방이나 문화적 시설물이 거의 없는 지역 간의 형평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계속과제로서 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와 계층간 문화시설 이용권의 보호 등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업과 기관 및 지자체의 참여와 이들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은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과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문화시설 이용 촉진을 위한 할인 혜택의 확대와 시설 이용권 인센티브 제공 등은 본 정책의 참여 확대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정책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체부의 본 정책에 대한 확산 노력과 타 부처와의 협력노력이 요구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은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문화융성 정책사업의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문화여가에 대한 정책수요와 요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본 과제의 정책수단들 간의 연계성 그리고 재정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확대,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의 배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의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의 발굴과 재정투자는 정책의 책임성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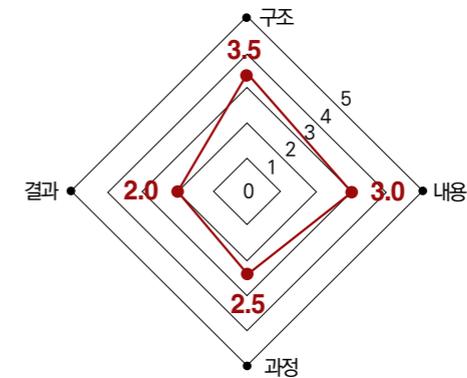
본 항목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문화의 날 정책목표는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실현가능성과 투명성, 책임성 평가항목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에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정부가 적절한 대응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과제의 만족도는 역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전년도에 중립적인 만족도 평가(3.0)에서 부정적으로 낮아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이한 점은 문체부가 문화의 날 인지도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의 날' 참여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16년 4월에는 84.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본 설문조사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의 차이는 개별 '문화의 날' 행사나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더라도 본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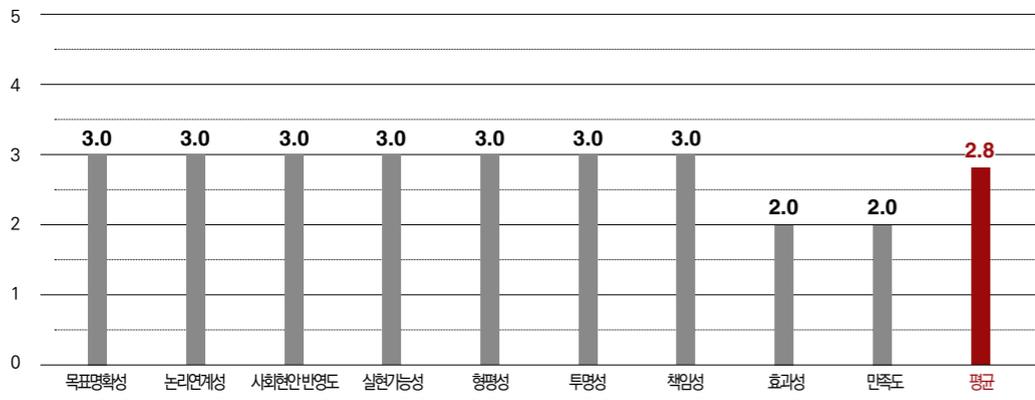
문화의 날 정책은 구조에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정책의 내용과 결과 및 과정에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속과제 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25]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그림 4-126]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정책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정책은 2009년 국가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 국어기본법의 개정으로 세종학당재단을 대표기관으로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및 확산이 세계적인 국가브랜드의 핵심적인 요소인지, 또한 이를 통해 국내의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고취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외 한국어 교육의 추진 주체는 문체부(외국인 한국어 보급), 외교부 및 교육부(재외동포 모국어 교육)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를 문체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종학당으로 통합하고 국가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은 주요과제로 해외 한국어 학습자 및 교육기회 증대, 교육과정 표준화 및 품질 강화, 온라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 선진 경영체계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세종학당재단, 2016a-d).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하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걸맞는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어 보급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a; 2016b1-2). 이는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책대안에 대한 정당화도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정책대안의 범위도 세종학당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에서 현지인들의 한국문화 향유 및 확산과 장기적 혹은 전략적인 국익의 실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세계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시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대부분 세종학당으로 통합 및 브랜드화로 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대표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교원의 파견 등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과연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한국어 보급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세종학당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이 기관을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더욱 확대해서 설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정책의 인과관계가 다소 모호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작은 시도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이 분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자칫 중국의 공자학원에 대응하는 국가경쟁의 차원이거나 단순히 해외 현지인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나누어 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해외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세종학당을 증설하고 전문교원의 파견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해외 현지인들과 재외동포들이 좀 더 쉽게 우리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세종학당은 54개국 130개소에 설치되었는데 이를 이용한 수강생의 수가 4만 3천여 명이다. 아직 통합 및 브랜드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지역별로 연간 이용자의 수가 많다고는 볼 수 없다. 세종학당 프로그램의 중장기 운영전략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문화브랜드의 대표기관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도록 한 만큼 세종학당재단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필요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으로 관할권이 재편되고 해외 문화원과는 별도로 세종학당 조직을 확대 설치하는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교육부가 재외교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한국어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문체부가 관할하는 세종학당으로 통합하면서 해외 한국어 교육의 표준모델로 일원화하고, 관련 교재의 개발에 관한 업무도 교육부에서 문체부가 관할하는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관할권 조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재외교민 사회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와 세종학당과 이들 비공식적 한글교육프로그램의 관계도 아직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해외 한국어 교육의 추진 주체는 문체부(외국인 한국어 보급), 외교부 및 교육부(재외동포 모국어 교육)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를 문체부 중심으로 통합하였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세종학당과 해외 공관 및 문화원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재외교포 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하여 현지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제고하고 동시에 현지 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과 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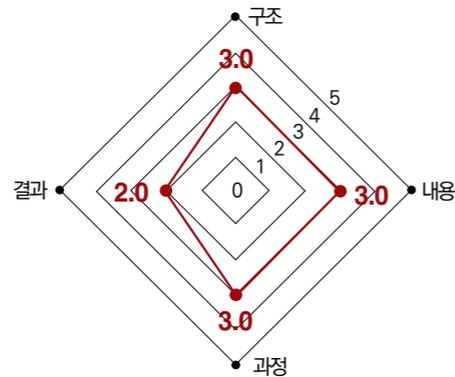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2015년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는 43,308명이며 수료생의 수는 14,854명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종학당재단, 2015; 2016a). 또한 해외에서 부족한 한국어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 파견 전문 교원을 2014년 39명, 2015년 50명, 2016년 90명으로 증원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학당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더욱 확대해서 설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실질적 국익 증진을 확인하기 어렵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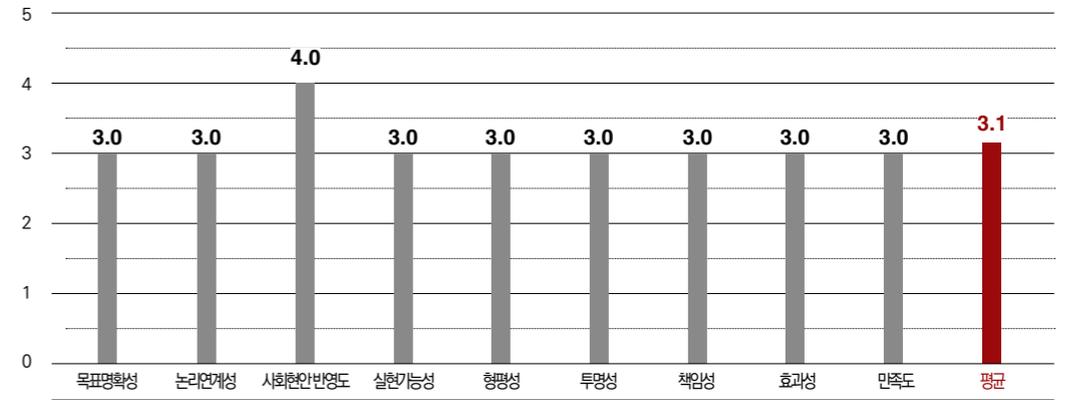
이 정책의 주된 대상 집단은 해외의 현지인들이다.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체계의 재편으로 기존에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재외교민들과 자생적 한글학교의 이용자들을 위한 문화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해외 외국인을 주된 대상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어 및 문화 보급 정책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27]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그림 4-128]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 목표의 명확성은 중립적인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초·중등 SW인재 양성이라는 정책목표가 전문가(3.1)는 물론 일반인(3.0)에게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가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된 점을 놓고 보면, 본 정책의 사회적 수요 반영은 제대로 되었지만, 정책의 목표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초·중등 SW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간 연계성은 중립적인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초·중등 SW연구 선도교육청 및 학교 지정 육성, SW교육 모델 발굴 확산, SW인식 강화 체험활동 강화 등의 정책대안들이 상호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비록 2015년도에 SW교육과정 개편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2018년도부터 필수화되는 SW교육 기반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일정과 추진과제들이 그 시급성에 비하여 정책대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의 주역인 SW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SW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교육부가 정책현안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SW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

년까지 초·중등생 SW교육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SW로 구현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정책의 로드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한 예산투자 규모와 적정사업계획이 사전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시된 로드맵과 사업계획은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초·중등 SW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않음은 문제라고 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 또한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아직 본 과제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체계적으로 종합화되어 있지 않아서 본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대상기관이나 집단에 대한 평가도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W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당국, 기업, 대학 등이 함께 SW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SW교육 기회의 격차에 따른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도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초·중등 SW교육 과정 강화는 교육부는 물론 미래부 그리고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교육부가 미래부와 함께 SW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단계별 목표, 그리고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실제 민관협력을 위한 산업계와의 SW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 SW교육을 담당할 교육자 및 강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교육부, 미래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SW교육 강화 정책의 책임성도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록 SW교육 강화 정책시행이 초년도라고 하더라도 정책시행 준비기간과 SW교육 강화의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 노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점은 급변하는 ICT SW 환경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책목표의 명확화와 함께 정책수단 간의 연계성, 범정부적·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한 SW교육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교육현장 특히 SW교육 담당인력의 예측과 양성을 위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의 선결과제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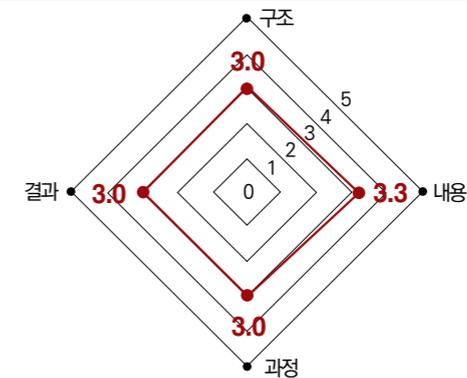
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중립적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적절한 정책수단의 발굴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민관협력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과정에 범정부적 공동대처 노력과 함께 교육현장 특히 SW교육담당인력의 참여와 인력양성에 대한 설득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과제의 만족도는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되었다.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중등 SW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본 정책의 사회적 현안 반영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어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수단간 논리적 연계성이나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에서는 낮은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본 정책의 추진과정이나 정책효과성 제고 통한 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SW교육 강화 정책은 구조와 내용은 물론 결과와 내용에서 중립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과제 초년도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초·중등 SW교육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과 교육현장 담당자들과의 적극적 참여유도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선결적으로 진행된다면 본 과제의 사회적 반영도가 높음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 제고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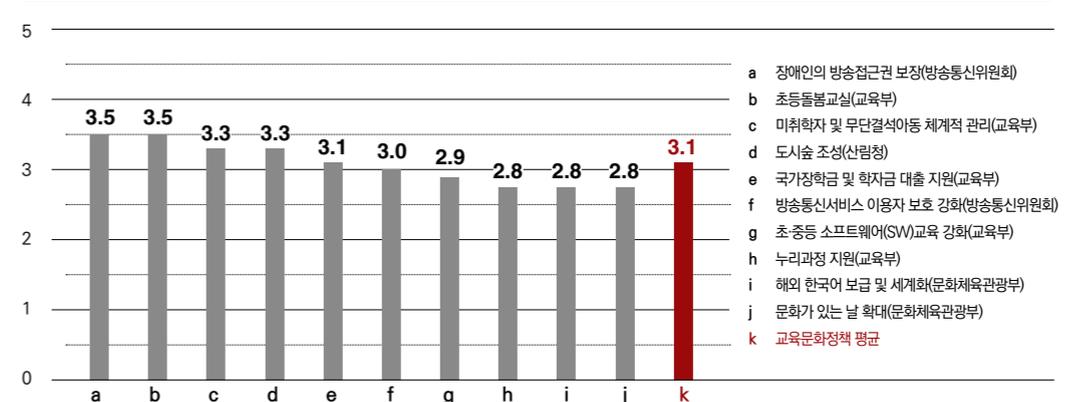
[그림 4-12]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그림 4-130]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교육문화 분야의 10개 정책에 대한 설문평가와 정성평가의 결과를 가중합산하여 종합적으로 전체 순위를 확인하였다.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개 정책의 평균은 3.1로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평가영역별로 편차도 드러났다.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을 포함한 구조 영역이 3.4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을 포함한 내용 영역이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한 과정 영역과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포함한 결과 영역은 모두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초등돌봄교실이 3.5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 아동 체계적 관리와 도시숲 조성 정책이 3.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책이 각각 3.1과 3.0으로 중립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정책이 2.9로 중립 이하로 평가되었고, 누리과정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정책이 2.8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정책은 구조(3.3), 내용(3.2), 과정(2.9), 결과(3.1) 영역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부 평가항목들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편차가 있다. 목표명확성(3.7)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 뒤를 이어 사회현안 반영도(3.4), 형평성(3.3), 효과성(3.3)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논리연계성(3.0)과 실현가능성(3.1)은 중립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나 투명성(2.8), 책임성(2.9), 만족도(2.9)는 중립에 다소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 아동 체계적 관리는 구조(3.4) 내용(3.5), 과정(3.2) 영역이 결과(3.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목표의 명확성(3.7), 사회현안 반영도(3.7), 형평성(3.6)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나머지 평가항목들인 논리연계성(3.2), 실현가능성(3.1), 투명성(3.1), 책임성(3.3), 효과성(3.0), 만족도(3.0)에 대해서는 중립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앞의 세 평가항목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았다.

누리과정 지원 정책은 평가 영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구조(3.3) 영역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내용(2.9)과 결과(2.7) 영역은 보통 수준에 다소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과정(2.3)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낮게 평가되었다. 구조 영역의 목표명확성(3.5)과 논리연계성(3.2)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내용 영역에서는 형평성(3.3)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사회현안 반영도(2.9)는 중립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실현가능성(2.5)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과정 영역의 투명성(2.4)과 책임성(2.3)은 모두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결과 영역의 효과성(2.7)과 만족도(2.7)는 모두 중립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책은 구조(3.2)와 내용(3.2) 영역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과정(2.9)과 결과(2.9) 영역에서는 중립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별 평가항목 중에서 목표명확성(3.5)과 사회현안 반영도(3.4)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뒤를 이어 논리연계성(3.0), 실현가능성(3.0), 형평성(3.1)이 중립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평가항목들인 투명성(2.9), 책임성(2.9), 효과성(2.9), 만족도(2.9)는 중립에 다소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구조(3.6), 내용(3.6)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표명확성(3.7), 논리연

계성(3.5), 사회현안 반영도(3.6), 실현가능성(3.5), 형평성(3.5)의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3.5 이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과정(3.3)과 결과(3.2) 영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투명성(3.4), 책임성(3.3), 만족도(3.4)에 대한 평가결과가 효과성(3.0)에 비해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도시숲 조성 정책은 구조(3.8) 영역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목표명확성(4.0)은 특히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 논리연계성(3.5)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내용(3.3), 과정(2.9), 결과(3.0) 영역의 평가는 구조 영역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 중에서 사회현안 반영도(3.6)가 매우 높았고 나머지 평가항목들인 실현가능성(3.1), 형평성(3.1), 효과성(3.0), 만족도(3.1)에 대해서는 중립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투명성(2.9)과 책임성(2.9)은 중립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정책은 구조(3.8)와 내용(3.7) 영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목표의 명확성(4.0)과 형평성(3.9)의 평가항목에 대해 높게 평가되었다. 논리연계성, 사회현안반영도, 실현가능성도 모두 3.5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과정(3.3)과 결과(3.4) 영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두 영역의 세부 평가항목들인 투명성(3.4), 책임성(3.3), 효과성(3.3), 만족도(3.4)에 대해서 고르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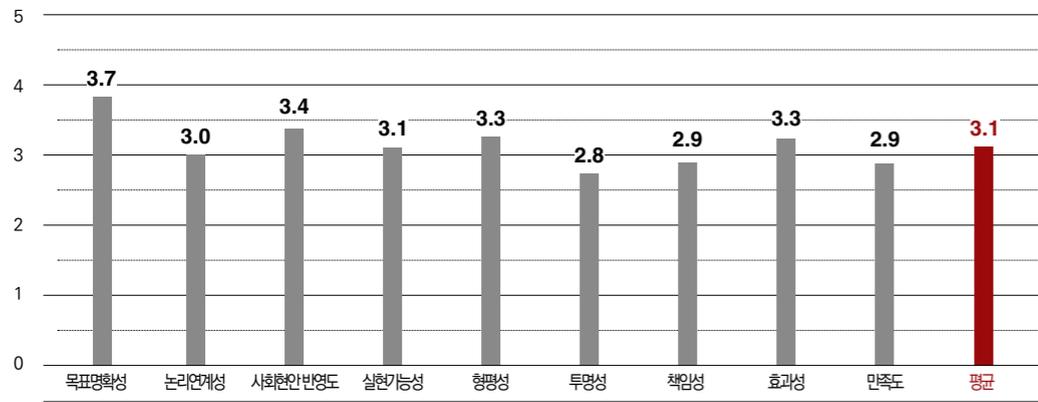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정책은 구조(3.1) 영역에서 중립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내용(2.9) 영역에서 중립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조 영역의 항목들 중에서 목표명확성(3.4)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논리연계성(2.8)은 중립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현안 반영도(2.9), 실현가능성(2.9), 형평성(2.9)의 내용 평가항목들도 중립에 미치지 못하는 못했다. 과정(2.5) 영역과 결과(2.4) 영역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투명성(2.7)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중립에 미치지 못했고, 책임성(2.3), 효과성(2.4), 만족도(2.4)는 모두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정책은 구조(3.0), 내용(2.9), 과정(2.8) 영역에 비해서 결과(2.4) 영역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세부 평가항목 중에 목표명확성(3.1)이 중립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고 나머지 평가항목들은 모두 중립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논리연계성(2.9), 사회현안 반영도(2.9), 실현가능성(2.9), 형평성(2.9), 투명성(2.8), 책임성(2.7) 등의 평가항목에서 모두 중립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2.4)과 만족도(2.4)의 결과 영역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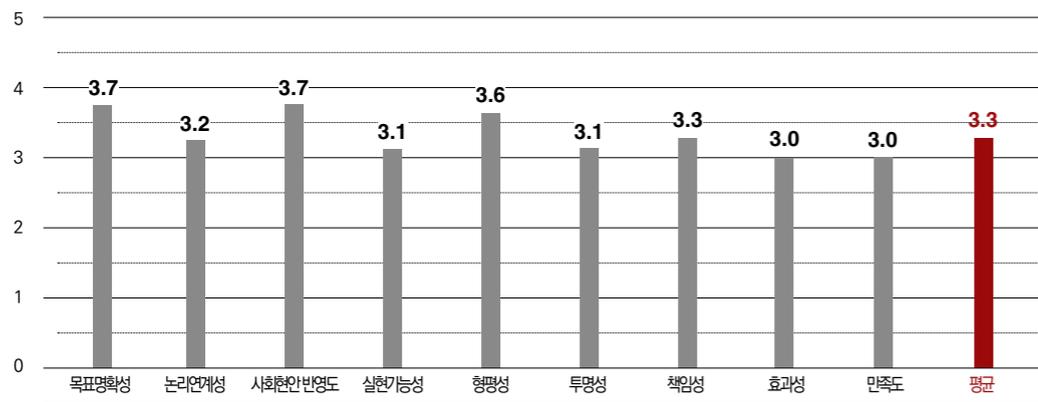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정책은 내용(3.0) 영역에서 중립으로 평가되었고 과정(2.8), 결과(2.7) 영역에서는 중립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평가항목 중에서 사회현안 반영도(3.4)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목표명확성(3.0)도 중립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다른 평가항목들인 논리연계성(2.7), 실현가능성(2.8), 형평성(2.9), 투명성(2.8), 책임성(2.7), 효과성(2.7), 만족도(2.7)에 대해서는 모두 중립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131]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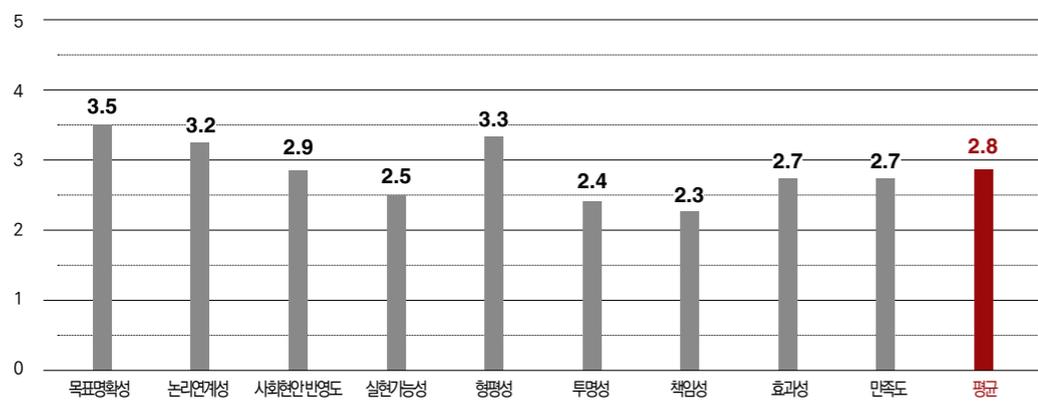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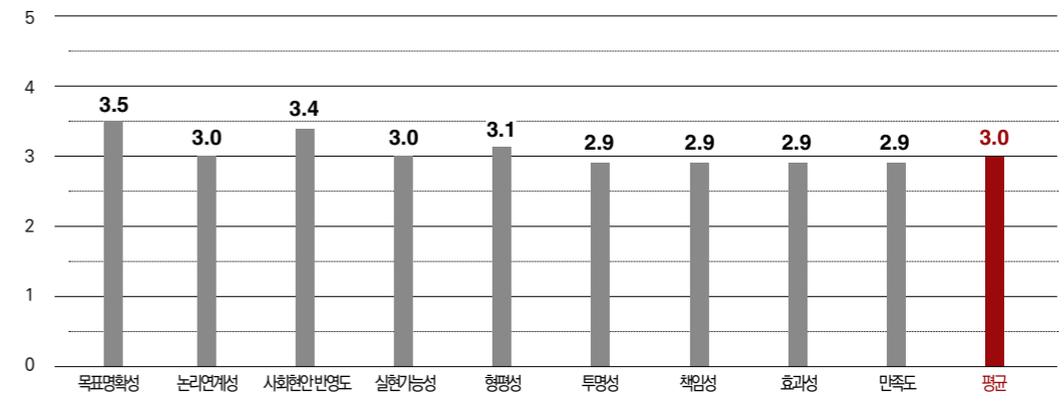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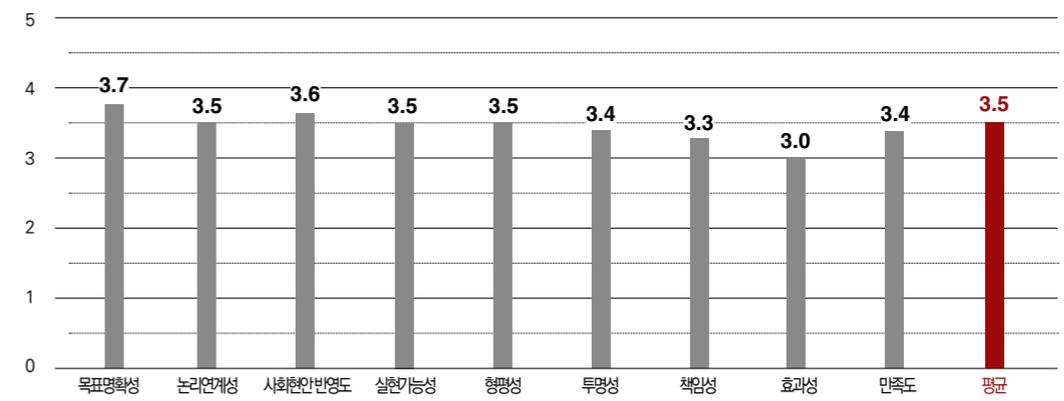
누리과정 지원(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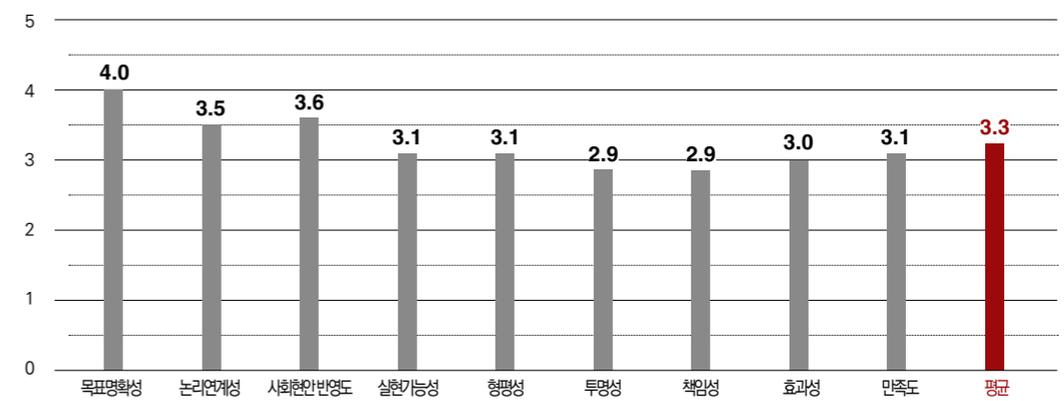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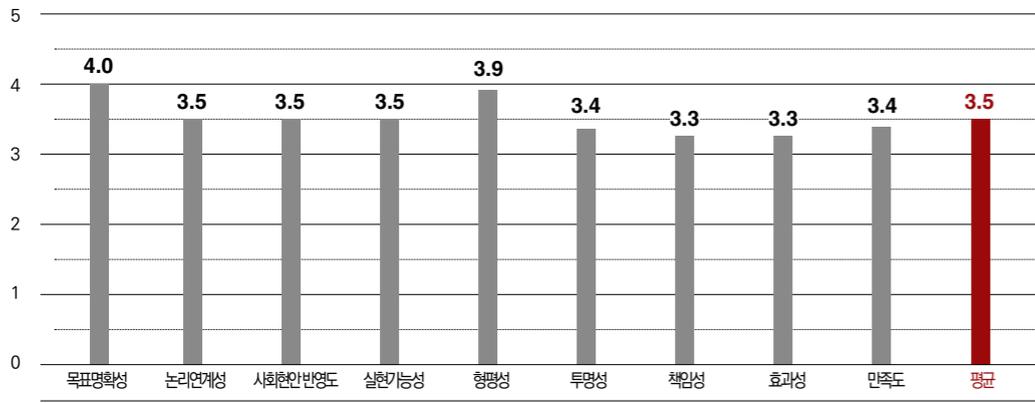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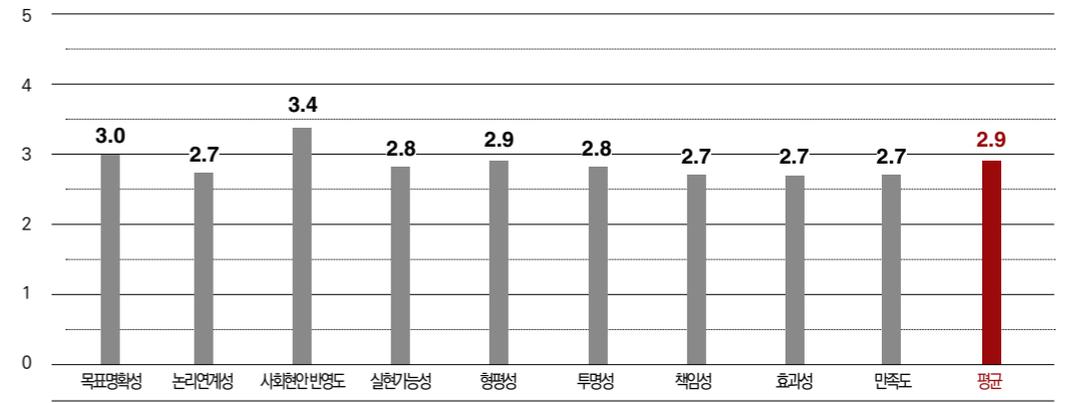
도시숲 조성(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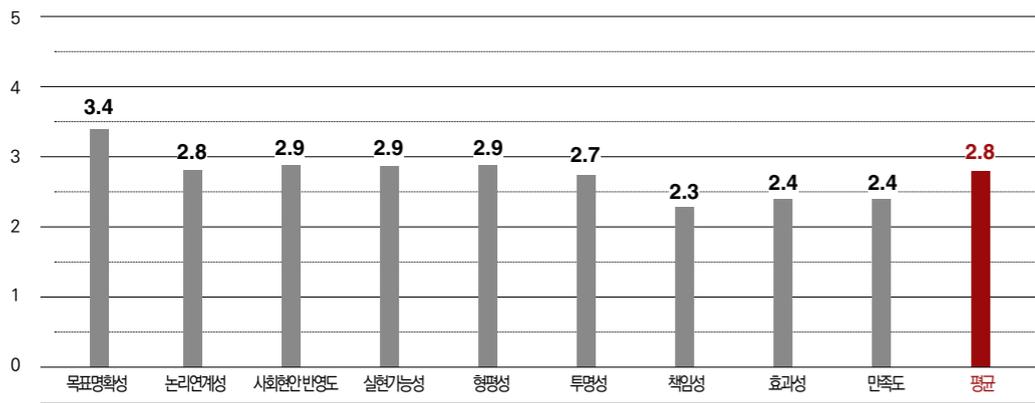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방송통신위원회)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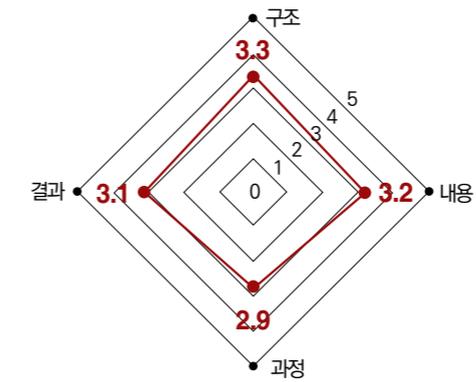


문화가 있는 날 확대(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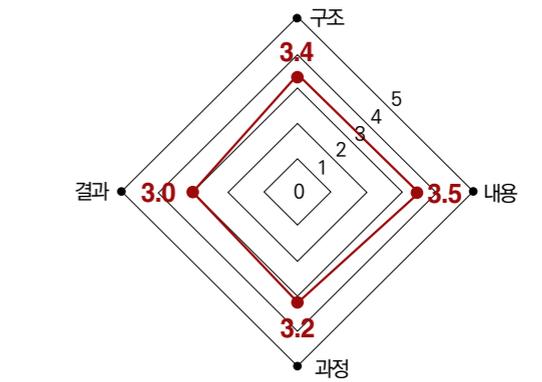


[그림 4-132]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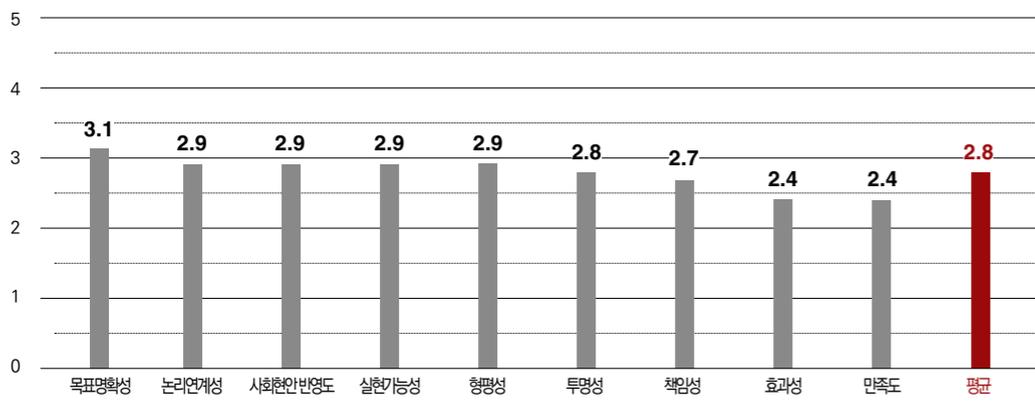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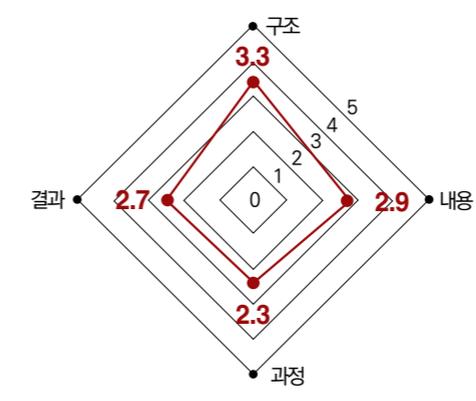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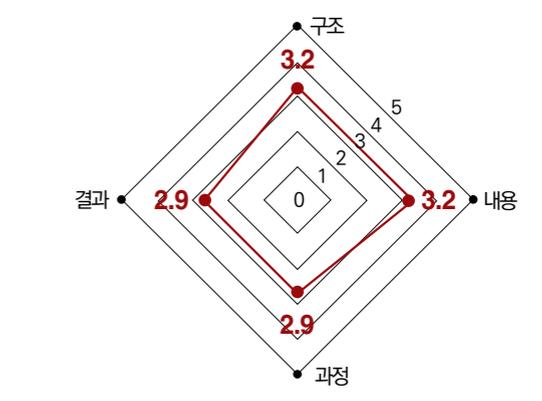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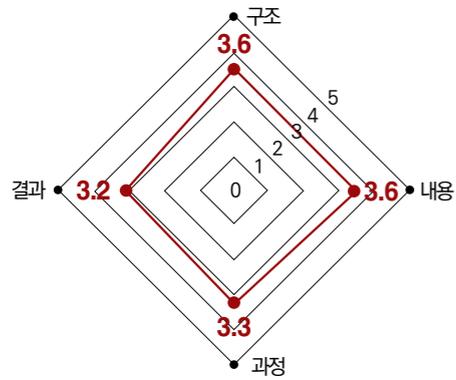
누리과정 지원(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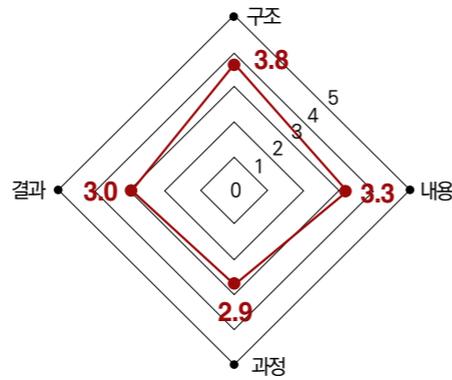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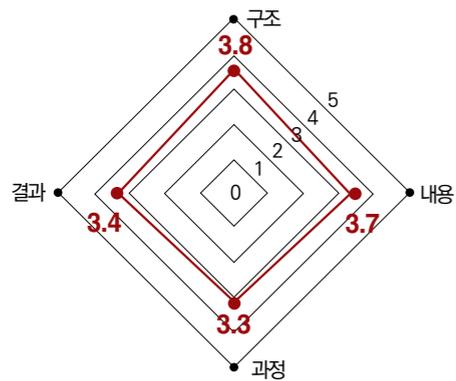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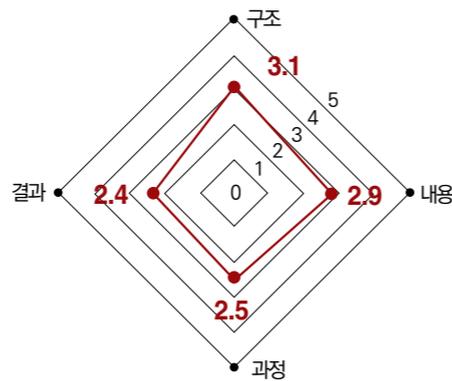
도시숲 조성(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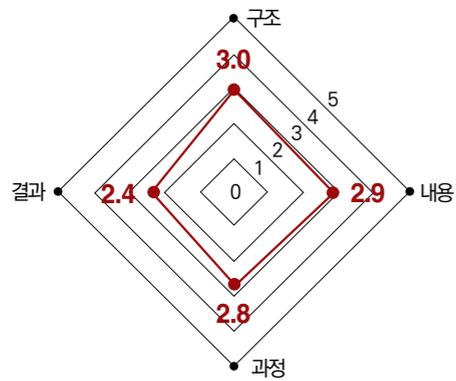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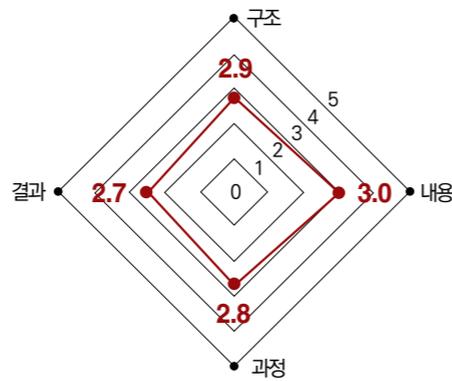
문화가 있는 날 확대(문화체육관광부)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문화체육관광부)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교육부)



4. 외교안보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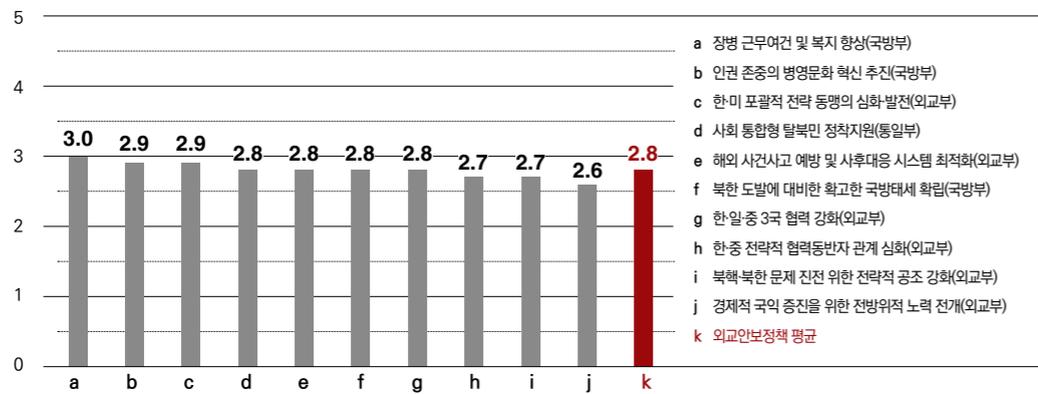
가)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모든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외교안보 정책분야는 2.8점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는 경제정책(2.8), 교육문화정책(3.0), 사회복지정책(3.0)과 비교하였을 때 근소한 차이지만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분단의 특수한 현실과 최근 세계정치의 변화와 불안정 등으로 인해 외교안보정책들은 계속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결과의 효과성 및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올해 외교안보분야 정책의 각 지표별 평가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정책 인지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은 매년 외교안보분야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교안보정책들에 대한 전문가의 평균 인지도는 3.5점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인지도 평균은 2.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한 대부분의 외교안보정책별 평가에서 전문가의 평가점수가 일반인의 평가점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은 그 특수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움과 부족, 타 정책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의 측정과 증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반인에게 생활체감정책으로 다가오기 힘든 측면이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직접 출판한 외교안보 성과집 등의 자료들은 객관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어(조선일보, 2015.9.15.) 일반인이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종합적으로 외교안보분야 10개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 각 정책의 평균 점수는 [그림 4-133]에 나타나듯이 2.6~3.0에 해당하여 근소한 편차를 보였다. 각 정책의 평균을 순위별로 언급하면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3.0),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2.9),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2.9),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책지원(2.8),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2.8),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2.8), 한·일·중 3국 협력 강화(2.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2.7), 북핵·북한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2.7),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전개(2.6)정책 순이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 3.0으로 평가된 상위 한 개의 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들은 모두 평균 2.9점 이하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졌다. 이는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교안보정책의 특수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의 측정과 증명이 어렵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외교안보정책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만큼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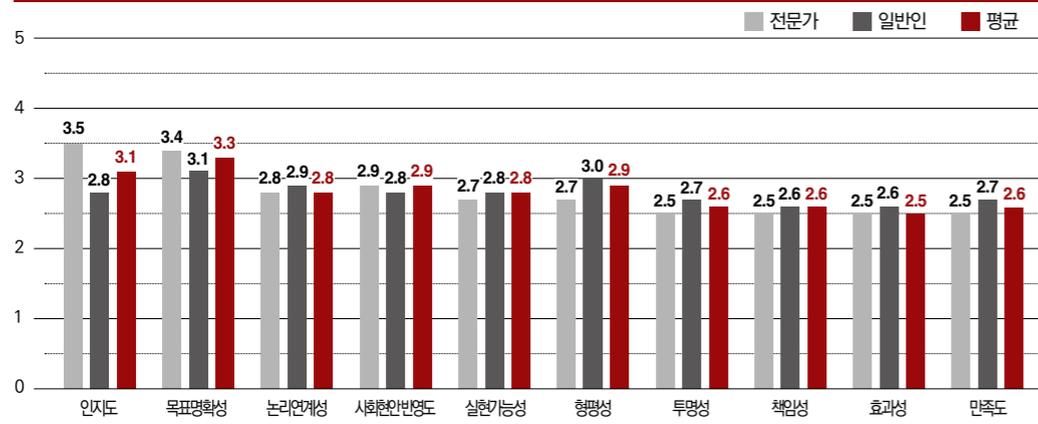
[그림 4-133] 외교안보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그림 4-134]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3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연속적으로 강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거듭된 도발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행동을 보여, 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매우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어, 목표의 명확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에 비하여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정책의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국민들이 체감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과,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기존에 이루어졌던 군사훈련이나 국방태세에 다소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이슈화가 많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국방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비해 국방부의 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어, 해당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방산비리나 군기문란 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불신, 북한과 비대칭 전력의 심화 등으로 인해, 군의 확고한 의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도 싹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9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국방서비스는 모든 국민에 대해 제공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높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는 부대의 배치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 감수해야 할 사항이나, 최전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형평성이 다소 저해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6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 국방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사드(THAAD) 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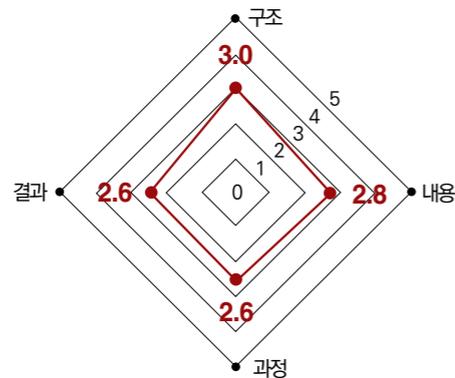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제제조치와 함께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다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 정책에 대한 이슈가 가장 부각된 한해였던 것과는 비교하여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잘 해왔던 한미 동맹의 군사훈련 이외에도 국민과의 소통, 외교적 노력 등이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책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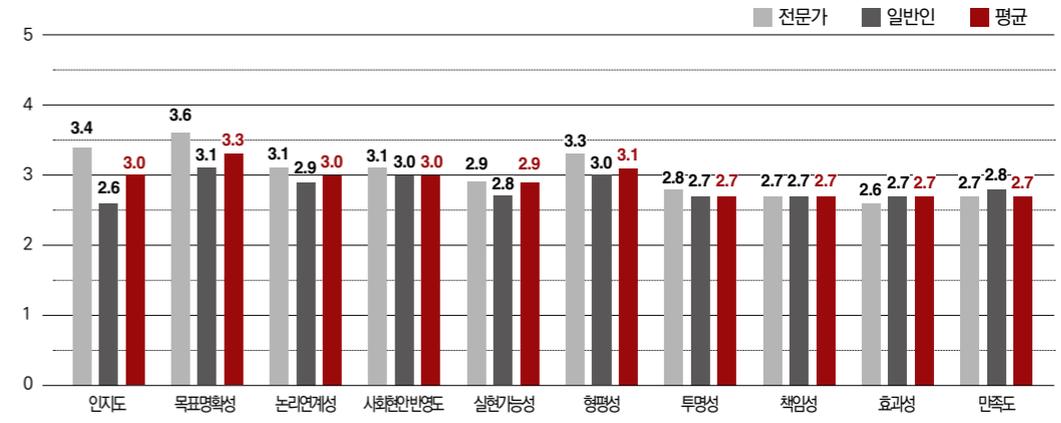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0), 내용(2.8), 과정(2.6), 결과(2.6)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35]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그림 4-136]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대의 계급에 따른 강압적인 문화와 집단문화로 인해 꾸준히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만큼 반 인권행위자 처벌 강화와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기존의 잘못된 군대문화를 혁신해 나가 고자 하는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반인권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늘 주장되고 있지만 해마다 계속되는 군대 내의 반인권범죄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설문에 답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당해 정책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점수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자식을 둔 부모세대에 있어 병영문화의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국방헬프콜'이나 수신전용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부대에서 고립되어 고통 받는 군인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마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특정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혁신적인 법제도를 구축하고, 부대에서 개인만의 생활공간이나 시간을 확충하며,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대상자가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평가가 내려졌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그간 군내 인권존중을 위한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하여 국방부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형식적인 노력들을 보였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살펴보면 실제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군 가혹행위의 실제 해결과정, 장병 자살사건 및 의문사 등에서의 국방부의 폐쇄적 태도들은 병영 정책 전반의 투명성에 관하여 일반인의 부정적 평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군사법원보다는 항소심에서 더 강력한 처벌이 결정되고, 이러한 비율보다는 경징계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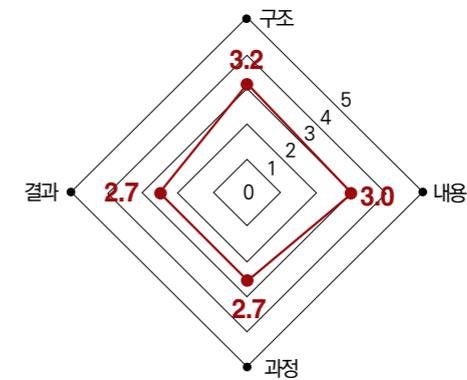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세부 대책들을 추가하여 관련 지표들이 소폭 개선되는 추세에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언론에서 접하게 되는 군대 내의 가혹행위나 성추행 등의 사건을 보면서 정책의 효과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관심이나 정책의 목표에 비해, 이에 대한 정책이 폐쇄성을 띄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높아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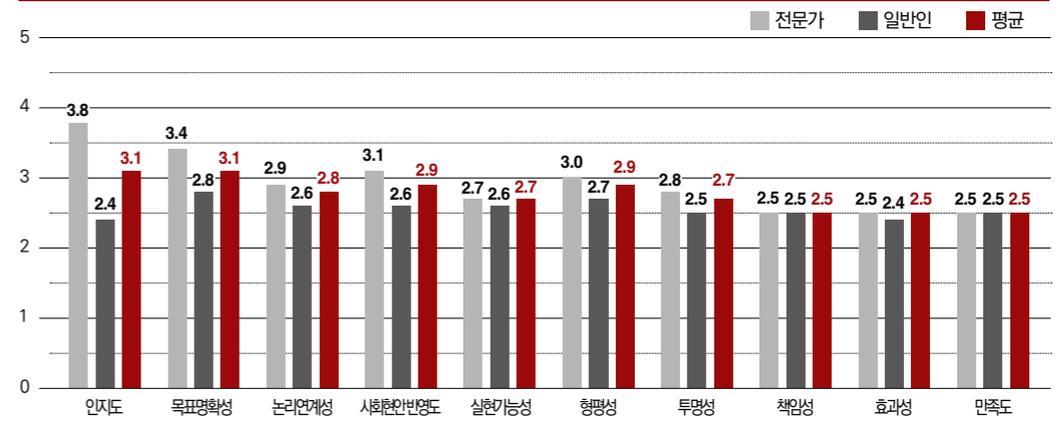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2), 내용(3.0), 과정(2.7), 결과(2.7)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37]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그림 4-13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균점수는 3.1점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정책목표의 명확성 점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점수를 보면 전문가 3.8점, 일반인 2.4점으로 10개의 항목별 점수 차이 중 가장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생경한 일반인들의 경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정책 목표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에 비하여 대안의 연계성 지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명목상으로는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보통 수준의 기준인 3.0점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중 관계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지만 응답자들은 더 시급한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보통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정책의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낮지 않다는 응답자들의 판단이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 수준이 보통으로 책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을 묻는 문항에서 전문가는 비교적 보통 수준의, 일반인은 낮은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중 외교 관계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정책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또한 외교부 홈페이지나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한중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이 투명성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책임성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것은 정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반도 내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이 중국과의 관계 경색을 가속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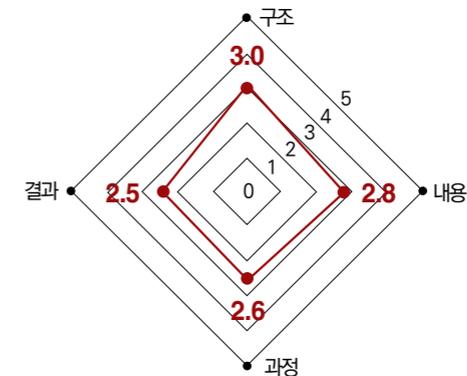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드 배치의 보복으로 중국에서 한한령 혹은 금한령 즉 한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제한하고 나서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서울경제, 2016.12.12.). 이는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로 이와 같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응답자들의 정책 효과성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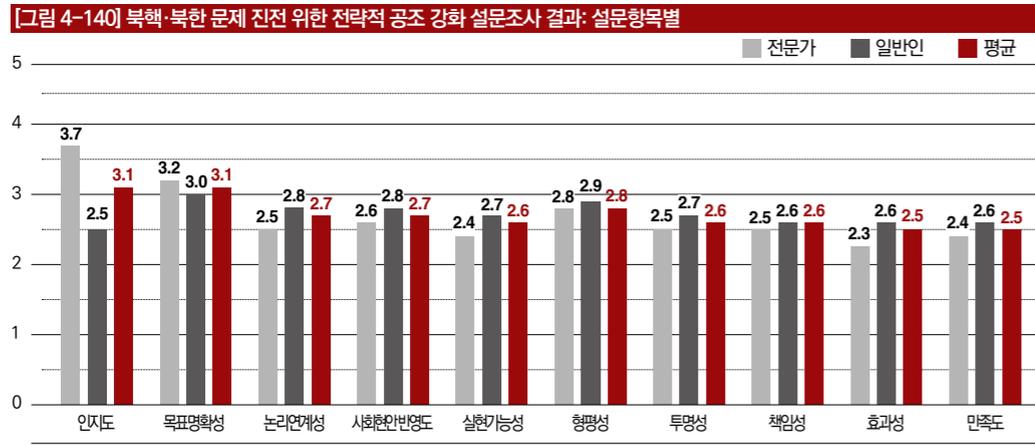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두 응답자 집단 모두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한중 관계를 심화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0), 내용(2.8), 과정(2.6), 결과(2.5)로 나타났다.

[그림 4-139]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서 다른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명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정책은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의 진전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다른 정부에서의 북핵 문제 대응 방식과 매우 유사하므로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비교적 목표가 명확하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최선의 방안이냐의 질문과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에서의 논리적 연계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데, 이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과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가 북핵 문제의 진전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북한에서 2번의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이 정책에 대한 사회현안 반영도 점수는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를 통해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이 정책이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국과 국제 상황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4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무력도발, 이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대북제재조치 등으로 남북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정책 자체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목표와 혜택을 받는 대상의 일치 여부를 고려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은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핵 문제는 개인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문제이며,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가 높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정책이 사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 정책에 대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 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정책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가 수혜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이 책임성 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끼친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3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은 본 정책의 다른 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 또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정책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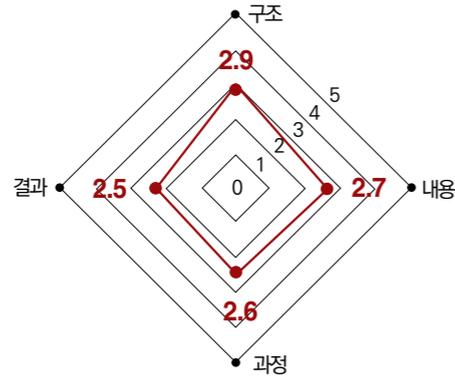
판단되고 있으며, 북한 핵실험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4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매우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고, 그 목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이 만족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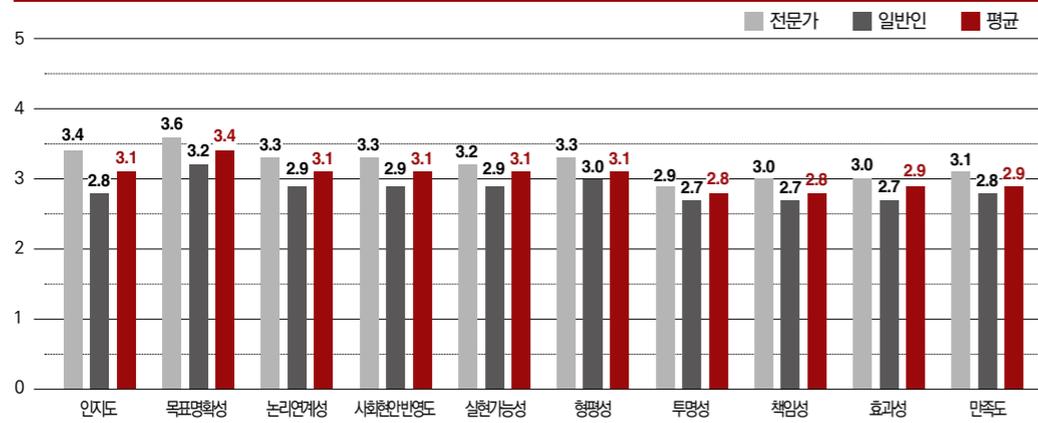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2.9), 내용(2.7), 과정(2.6), 결과(2.5)로 나타났다.

[그림 4-141]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그림 4-142]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병사들의 근무여건개선과 복지향상은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 정부에서 실제로 단계적 인상이 꾸준히 이루어진 만큼, 정책의 목표는 명확한 것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장병의 근무여건 및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2012년 대비 2017년 봉급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지만, 기존의 봉급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병사들의 근무여건이나 복지가 큰 폭의 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인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병사들의 처우개선이 사회현안을 반영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봉급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급식 및 피복도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생활관의 개선이나 물품조달 등의 개선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잘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보상은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들 중 일부만이 혜택을 받는 군 가산점 이외에는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마저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위험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봉급인상 정책 등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정책은 아직 그 정도는 작지만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과거 조달에 비리가 제기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이 시행되는 중에서도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높지 않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책의 투명성과 마찬가지로, 정책 과정에서 국방부가 꾸준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현안들에 대한 대응에 급급한 정책추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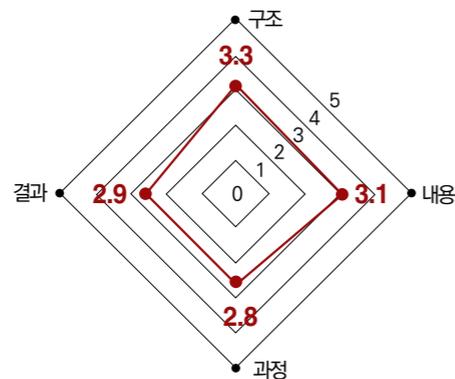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병 급식 및 피복류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사들의 봉급도 실제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설문조사의 반영의 정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병사들의 경우 적금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워낙 봉급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다소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인식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병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관심에 비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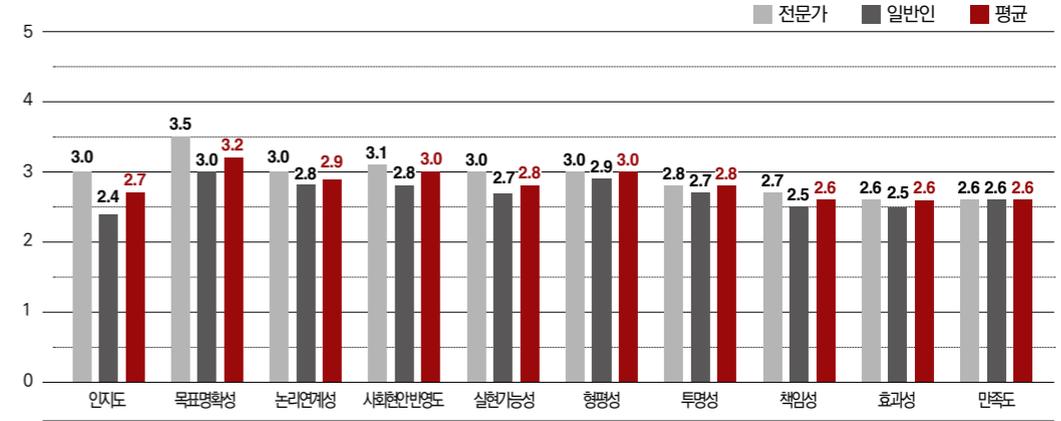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3), 내용(3.1), 과정(2.8), 결과(2.9)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43]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그림 4-144]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목표는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구체적으로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볼 때,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가 상당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항목들의 점수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정책으로 여행경보제도 운영 및 홍보, 국가별 맞춤형 로밍 문자 발송, 사건사고 빈발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영사콜센터 운영, 애형위난시 대응팀 혹은 전세기 파견 등의 구난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이 이 정책에서 제시하는 세부 정책들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에 평이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에서는 재난 사고와 납치살인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잠시 머무르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교부의 본 정책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현안 반영도 점수가 보통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 정책은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과 사회현안 반영도도 보통 수준이다. 이러한 점이 정책의 실현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여행 중인 혹은 체류와 여행을 계획 중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즉 정책의 대상자는 모든 국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없고, 여행의 경우에도 여행을 계획한 기간이 지나면 이 정책의 수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정책은 모든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는 않는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으나 정책의 종류, 정책의 집행 과정, 정책의 수혜 방법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나 기사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투명성 점수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도출되었다고 생각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책임성 지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피해 받는 우리 국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러한 점이 응답자들의 정책 운영에 관한 책임성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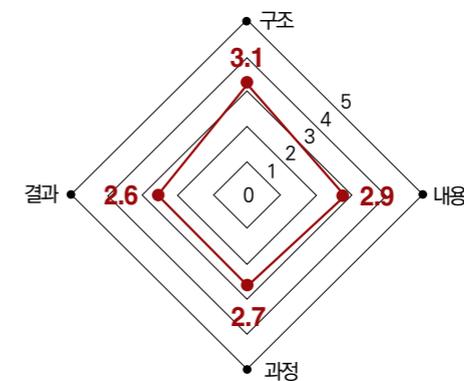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모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결과는 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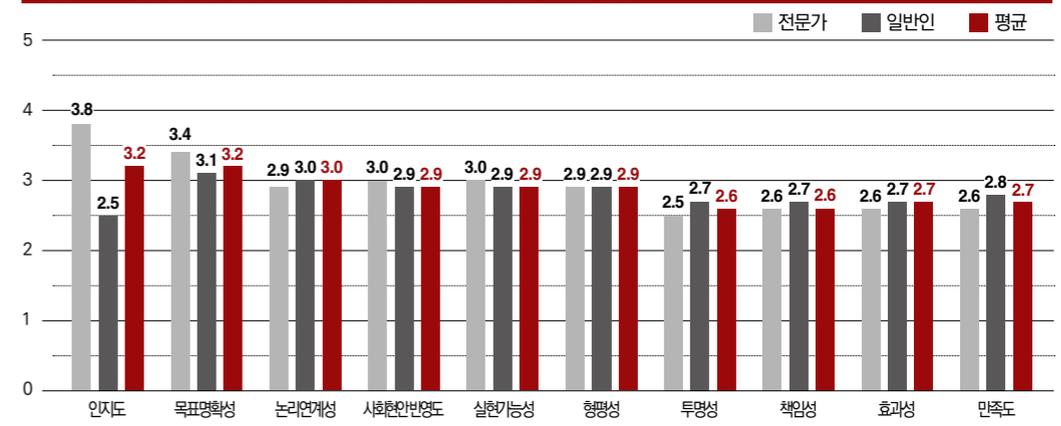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1), 내용(2.9), 과정(2.7), 결과(2.6)로 나타났다.

[그림 4-145]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그림 4-146]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근소하지만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외교안보정책 중 한미관계, 한미동맹에 관한 정책의 경우 국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점, 안보협력이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라는 점으로부터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높은 평가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즉 종합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안보와 경제동맹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명확한 측면이 있지만,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평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전문가들은 36%, 일반인의 경우에는 27.8%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일한 정책에 대한 2014년의 평가에서 전문가의 54%, 일반인의 29.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해볼 때 전문가 집단의 입장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중요성을 가짐에 분명하지만, 최근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영향과 국제적 경제협력의 대상이 다각화됨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역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4%, 27.4%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평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32%, 일반인의 경우에는 26.2%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내용이 안보와 경제협력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수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형평성 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정책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의 투명성은 다른 지표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인 평가 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 22%, 일반인 설문에서는 21.8%가 이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회의 또는 세미나 등이 존재하지만,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의 책임성 역시 다른 지표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0%가 긍정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난 점은 별도의 내부 모니터링 제도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의 입안이나 이행과정 등에 대한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만 정책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민에 의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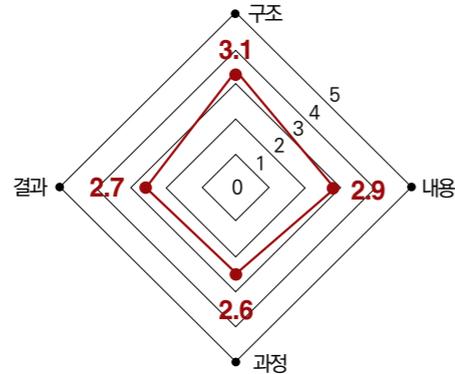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과정 영역에서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서 전문가의 26%와 일반인의 21%가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결과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성과와 비교할 때 미국과의 전략동맹의 가시적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만큼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 만족도에 있어 비교적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26%, 일반인의 경우 20.4%가 이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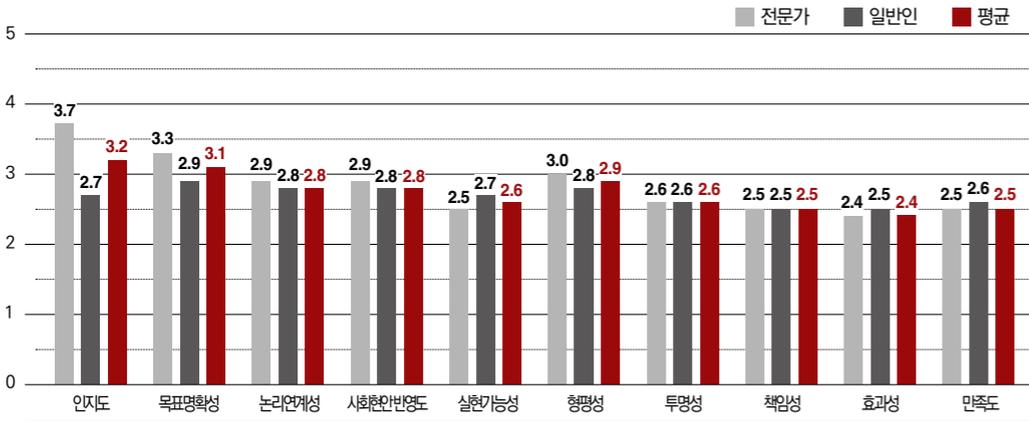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1), 내용(2.9), 과정(2.6), 결과(2.7)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47]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그림 4-148]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보통 수준이며,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은 한일중 3국 협력을 통해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인적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자 한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명확성 점수보다도 그 점수가 낮다. 즉 응답자들은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정부 간 협의체 운

영 등 세부 정책들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즉 응답자들은 이 정책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 급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3국간의 관계가 담보 상태 혹은 악화되는 상황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3국간의 관계에 따른 수혜는 국민 전체가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정책은 형평성을 담보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결과를 체감할 확률이 낮다. 이 때문에 보통 정도 수준의 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한일중 관계의 진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일반 국민들의 참여 통로는 거의 부재하다. 이에 정책의 투명성을 묻는 질문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책임성을 묻는 질문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한일중 관계가 좋지 않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또한 밝지 않다. 따라서 3국간 관계 진전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는 여지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이 책임성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4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

은 2.4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의 관계는 대립적이며 3국 간 적대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중 협력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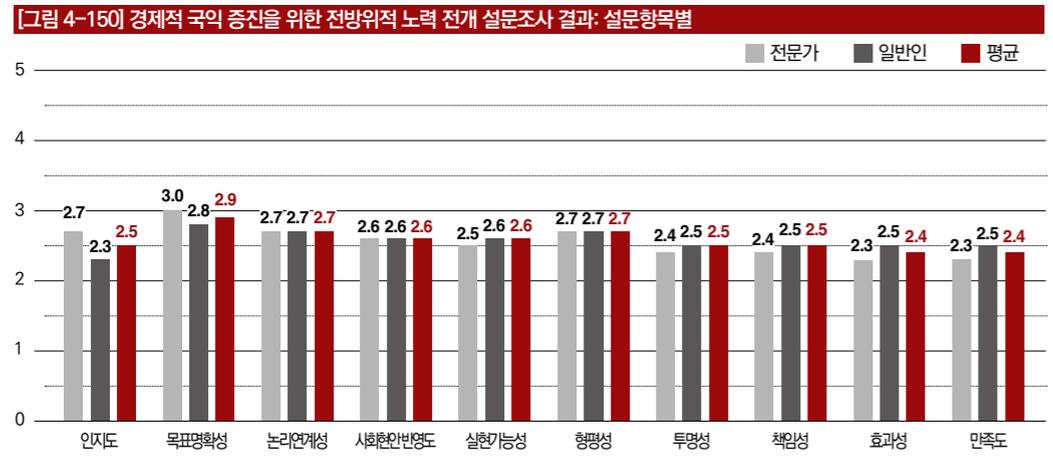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점수 또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책임성 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비하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지 않으므로 이 정책에 대한 만족 또한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0), 내용(2.8), 과정(2.6), 결과(2.5)의 평가를 받았다.



(9)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이 정책의 목표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34%, 일반인의 경우 23.8%가 이 정책의 목표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국익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는 명확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목표이며 정책대안들 역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높게 평가되지 않고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대안이 목표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서 전문가의 16%와 일반인의 17.6%만이 이 정책의 대안들이 정책목표의 실현과 논리적 연계성을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이 정책의 대안들이 매우 다양하며, 정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10%, 일반인의 경우 17.4%만이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적 국익증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정책대안들이 제시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경제적 국익증진의 효과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서 전문가의 8%와 일반인의 15.8%만이 이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정책의 대안들이 제시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경제적 국익증진의 효과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16%, 일반인의 경우 19.4%만이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 국민이 수혜자임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과정 영역 중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2.4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서 전문가의 8%와 일반인의 15.2%만이 이 정책의 추진과정이 투명하다고 평가하였다. 이 정책의 경우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나 참여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4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6%, 일반인의 경우 12.6%만이 이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책임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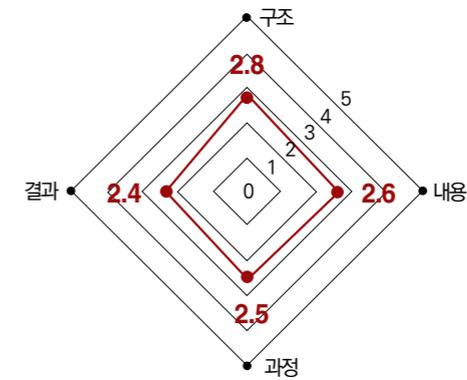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에서 먼저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전문가 평가점수와 일반인 평가점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3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4점으로 나타났다. 체적인 평가답변에서 전문가의 4%와 일반인의 12.6%만이 이 정책의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세일즈 외교'가 실질적 성과는 전혀 얻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효과성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 역시 전문가 집단은 2.3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2.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4%, 일반인의 경우 12.8%만이 이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한 만족을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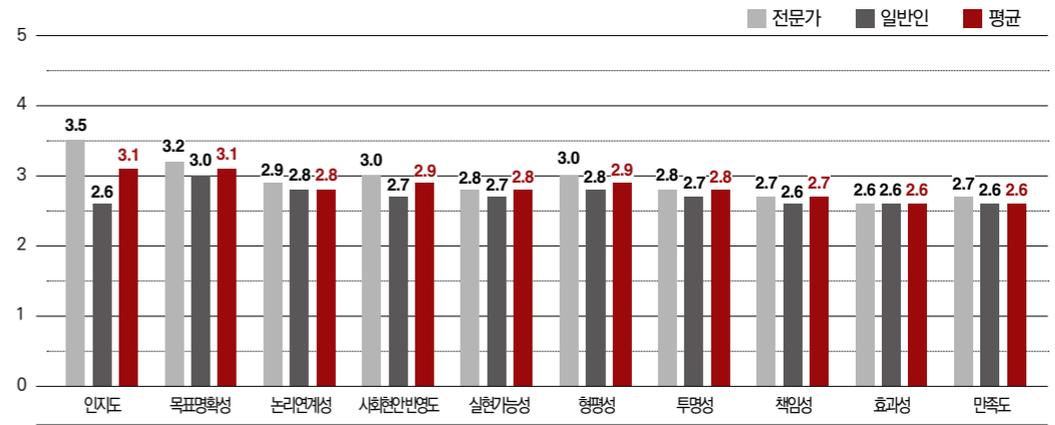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2.8), 내용(2.6), 과정(2.5), 결과(2.4)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51]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그림 4-152]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본 정책에서 관련 다른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명확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명칭을 보았을 때,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통합형 정착지원 체계 구축'과 '탈북민 인식개선 등 사회 통합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 또한 구체적이며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최선의 방안이냐의 질문과 관련하여 본 정책의 평가 결과 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의 명확성 점수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 이것은 정책이 기대하는 결과에 비해 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에 가까운 평가 결과가 나타났으며, 본 정책 내 다른 항목의 점수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치만 보았을 때 조사 대상자들은 본 정책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즉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탈북민 지원정책의 시의 적절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정책의 다른 항목에 비해 낮지 않은 점수이나, 수치상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즉 국민들은 현 탈북민 지원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본 정책 내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점수 자체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보통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정책목표 대상이 탈북민으로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정책 내의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보통 수준이지만,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이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회의 또는 세미나 등이 존재하지만,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것은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인식이 어느 정도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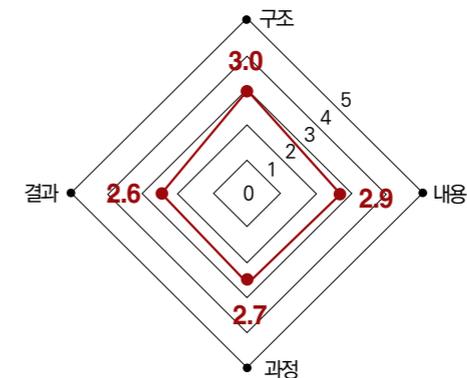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정책의 효과성이 낮은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 및 융화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탈북민 지원 정책이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0), 내용(2.9), 과정(2.7), 결과(2.6)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53]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2.0점, 결과 측면에서 2.5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평균 3.0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6위에 해당했다.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평균 3.3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3위에 해당했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의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은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2.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3.0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6위에 해당했다.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책의 책임성과 정책의 효과성,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2.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3.0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8위에 해당했다.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논리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 정책대안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4.0점, 내용 측면에서 4.0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평균 3.6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1위에 해당했다.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정책의 형평성과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4.0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

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3.4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2위에 해당했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논리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투명성, 책임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4.0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2.0점, 결과 측면에서 2.5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평균 3.1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5위에 해당했다.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형평성과 투명성, 책임성, 만족도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0점, 내용 측면에서 3.0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2.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2.8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9위에 해당했다.

경제적 국익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실현가능성, 형평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 측면에서 2.0점, 결과 측면에서 2.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평균 2.8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9위에 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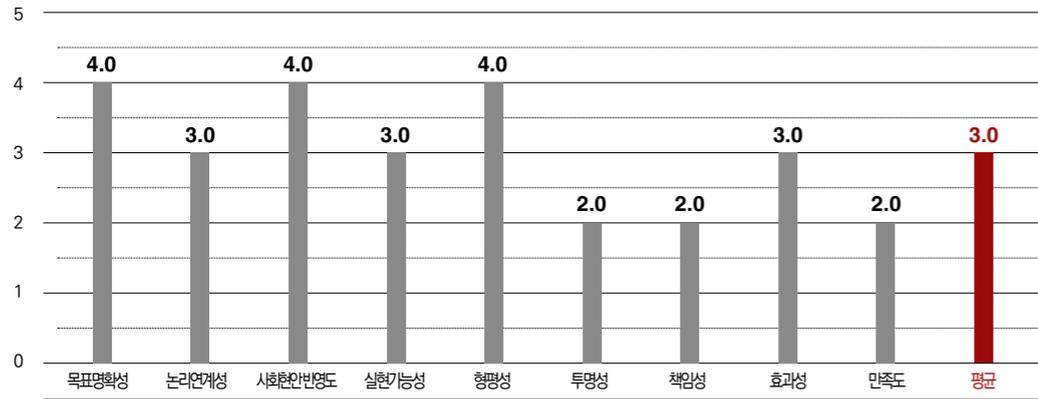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지표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3.2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4위에 해당했다.

다음에서는 각 지표에 대한 상세한 평가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정책별 정성평가 결과

(1)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그림 4-154]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일관된 우리의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발시에는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미국과 합동훈련을 통해 도발시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에 비해 비교적 일관성 있고 명확한 목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는 보통이라고 평가된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여야 하며, 미사일, 핵무기 등을 이용한 도발은 결국 북한정권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강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치국면을 완화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이수석, 2015: 23-28). 즉,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방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으로 북한의 전통적인 협상 전략을 미연에 차단함과 동시에,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마찰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신축적 상호주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김재철, 2013: 185-188). 하지만 올해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어 외교적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은 필수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과 평화적 노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2015년에는 북한을 기본적으로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

는 입장보다, 기본적으로 적대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이 북한은 협력할 수도, 적대할 수도 있는 이중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국방부, 2016a)는 점에서, 안보태세 확립과 동시에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올 한해는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크고 작은 도발이 무려 20여 차례나 있었다.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연이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까지 감행함으로써 인해 국가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안보인식조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69.3%, 2015년 53.2%(국방부, 2016a)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매 분기 실시하는 여론 조사 중 3/4분기 여론 조사에서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54.9%로 조사되었다(통일신문, 2016.11.24.)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국방부는 이 정책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날로 고도화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무장과 더불어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우리의 무장에 대해 중국, 러시아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외교적인 공조 없이 무장만을 강조할 경우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가 무너질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주한미군 주둔 분담비용의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국방비 부담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등 우리의 안보여건에서 불확실성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안보의 강조와 더불어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기본적으로 국방은 국민 전체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물론 최전방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이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형평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국방부는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배치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기 보다는 7월 13일 배치 장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수행방식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으며,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전자파에 대한 의혹 등 언론이 각종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이를 해명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하여 많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부지 선정지인 성주군에서 공식적으로 대체부지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9월 30일 대체부지로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C.C가 선정되었다(뉴시스, 2016.11.16.). 부지선정과정에서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논란은 잠잠해 지고 있지만,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투명성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에서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점이 정책의 책임성에서 낮은 평가로 이어졌다. 물론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구체적인 위협이 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자세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방부의 국정감사에서도 부지선정과정에서의 결정기준의 일관성 미흡이나, 국민들에 대한 설명 및 설득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국회사무처, 2016).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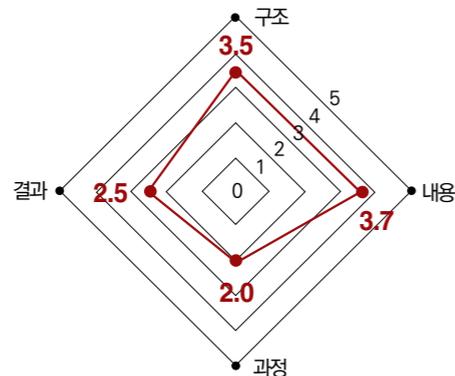
정부가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대한 공조도 이끌어 낸 만큼 정책의 효과성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가 도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때 명확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구조나 내용은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책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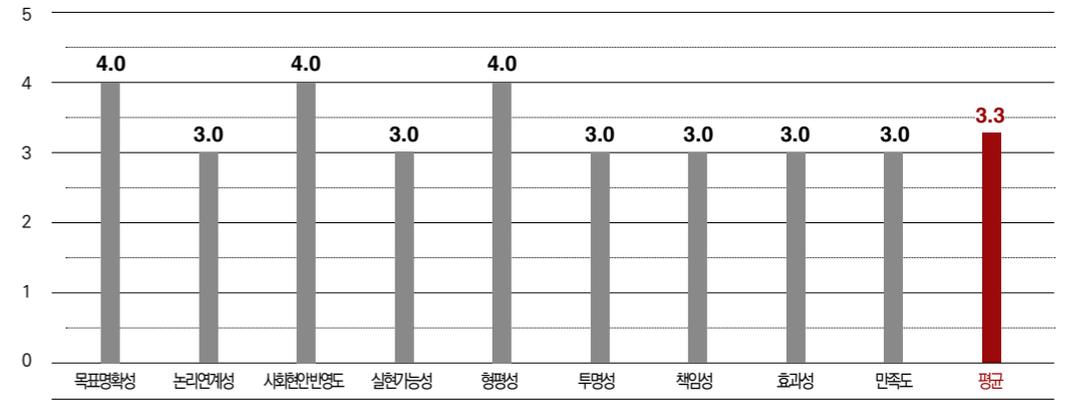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7), 과정(2.0), 결과(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5]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그림 4-156]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군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군내 비인권적 행위들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여 신뢰받는 선진 병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뢰의 확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장병 인성교육의 확대와 고충신고의 편의성 확보, 가혹행위 처벌 강화와 신고자 보호 제도 구축이라는 세부 목표들 또한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인권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인권 및 법무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인권상담관제 운영, 여군 고충처리 강화를 위한 여성고충상담관제 운영,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 국방헬프콜 프로그램의 실시, 수신전용 휴대전화 도입, 그린캠프 상시운영 등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세부 대안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는 있지만 보다 혁신적인 정책대안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그린캠프의 경우 단순히 현역입영대상자를 걸러내는 역할이 아닌 보다 실질적으로 부적응 대상자에 대한 치유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내 전문가의 편성과 환경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한재원, 2016: 88). 또한 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을 감시·평가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통해 중요한 인권 침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홍성수, 2014: 46).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2014년 윤일병 사건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진 이후 2015년 자살사고나 군무이탈사고는 각각 45%, 31%가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를 보였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국방부, 2016a). 폭행이나 가혹행위와 같이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로 인한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인권침해로 인해 병영생활 고충상담을 한 건수가 1592

건에 이를 만큼 군내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문제이다(국방부, 2016a). 또한 최근에는 여군 관련 성범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성 중심의 군 조직 문화가 심각한 문제로 개선이 요구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국회국방위원회, 2015).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군 가혹행위자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740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1.4%만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로이슈, 2016.9.23.)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최근 법원도 항소심에서 성폭력 사건 등에서 군사법원의 판결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군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연합뉴스, 2016.11.17.).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은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장병들이다. 하지만 여군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개선되지 못한 인권의식으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 정책으로 잘못된 상급자의 태도나, 여성에 대한 인권개선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물들어 있는 반인권적인 요소를 개선해 간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전 연령층과 성별에서 고르게 관심을 보였으며, 직접적인 정책대상자인 20대 남자보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 더 높으며 여성들도 관심이 높았다. 이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은 공청회,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당사자 및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 논의되어왔던 군인권 보호관 제도와 같은 옴부즈맨을 두는 것에 대하여 국방부가 해외의 여러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다. 옴부즈맨을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국회사무처, 2015). 올해 6월 시행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면서도, 제2항에서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아직까지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b). 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민간 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점진적 개선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병영문화 전반에 대해 기존 제도와 관행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과 인식 변화, 제도 혁신 등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내·외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국방부, 2015). 군 내부적 대응만으로는 그동안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직시하고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그동안 군은 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결해 왔다. 사건이 터지면 개선방안을 내놓지만 동일한 잘못이 되풀이되는 문제는 올해에도 계속되었다. 최근 전방 GP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해당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군인권센터, 2016).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또한 평시 군사법원 철폐 등과 같은 강력한 제도변화도 검토하여 안심하고 군대에 갈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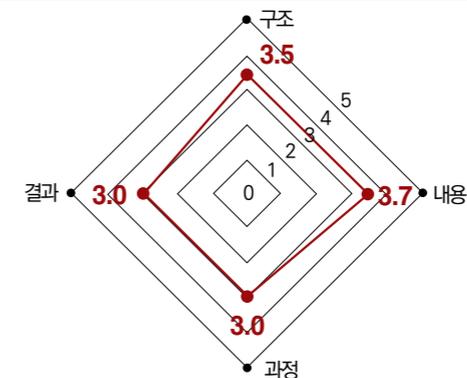
국방헬프콜의 이용 건수가 도입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나, 고충해결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국방부, 2016a)에서 이 정책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접수된 건 중 해당 부대로의 실질적 연계는 불과 6.2%에 그쳤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구타 가혹행위를 목격하고도 군의 조치를 신뢰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향도 존재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6a). 군대의 특성 상 개인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문제를 전화상담 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인권보호관 제도와 같이 보다 객관적이고 구속력 있는 제도를 구축해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세부 정책을 통해 군인권 병영 문화개선을 꾀하고는 있지만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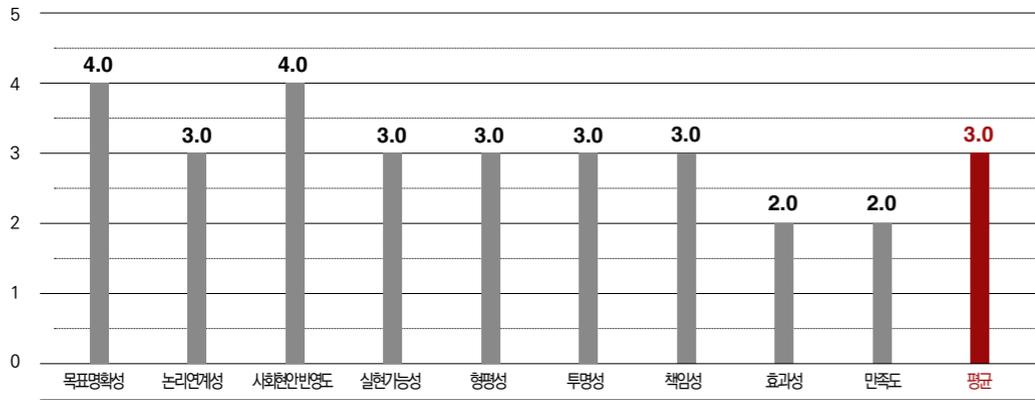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7), 과정(3.0), 결과(3.0)로 나타났다.

[그림 4-15]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그림 4-15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책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한국과 중국의 정부 및 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제반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여 동북아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이 정책의 목표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세부 목표 또한 비교적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높은 수준이라 평가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에 비하여 대안의 연계성 지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교안보 라인이 한중 관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교·안보·통일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국제일보, 2016.12.1.). 다시 말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한국과 중국은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두 국가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조업, 금융,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양국의 협력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가운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책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동북아 국가들의 정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구상은 동북아 지역의 양·다자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진전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동북아의 정세, 특히 중·일 관계와 한·일 관계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더 해가고 있다. 게다가 남북관계의 개선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진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변창구, 2015) 이 부분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경우,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의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박휘락, 2016). 이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은 안보정책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혜의 대상자가 불분명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에 있어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외교부가 핵심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반대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어떤 정부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경과는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은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은 외교부 주도 정책으로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을 중요한 외교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두 국가의 관계가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긴밀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참여하였다. 또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박휘락, 2016). 이것은 한국이 여타 국가보다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중국과의 수교 과정과 성과를 비교적 소상히 기술하고 있어 외교부 및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해 어느 정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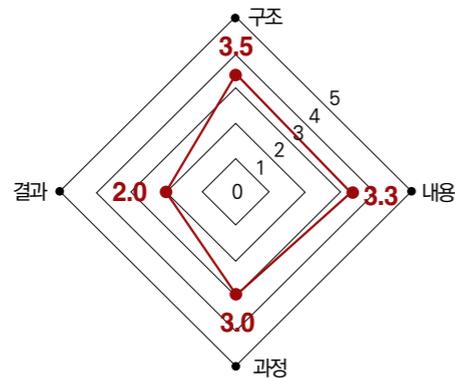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안보 및 통상 등 다차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핵포기와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한중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제반 분야의 교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가 발효된 지 2016년 현재 1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한국일보, 2016.12.11.). 한편, 한국은 중국 및 미국과 각각의 관계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설정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 판단된다. 2016년 중국과의 별다른 교류 성과가 없는 것 또한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은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지만,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에 따라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의 부족이 의심되어 정책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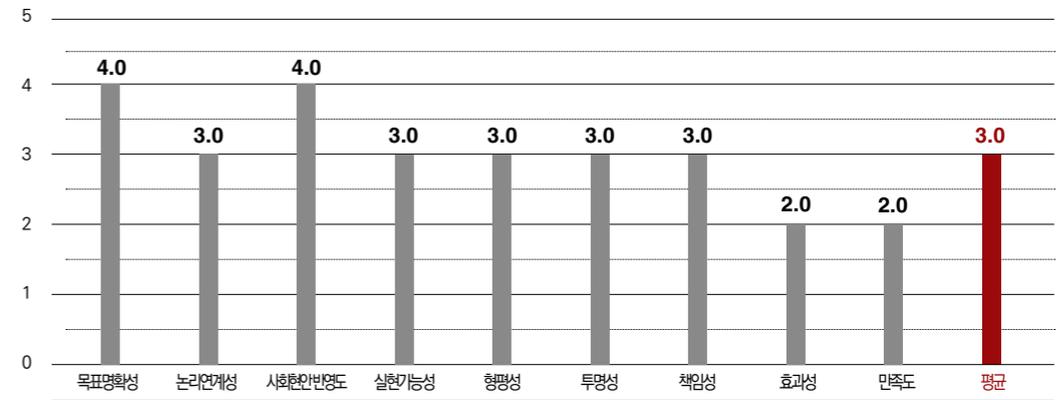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3), 과정(3.0), 결과(2.0)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9]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그림 4-160]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주변국들과의 회담 방식, 안보리결의와 대북제재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될 것이라 생각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과 더불어 6자회담 틀 내 5자간 비핵화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6자회담이 2008년 이후 개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로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북한의 핵실험과 핵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요구하게 된다. 즉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기존의 방법보다 보다 더 북한 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현재 북한은 북한 핵 무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동아일보, 2016.9.25.).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차기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 위협을 우선순위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중앙선데이, 2016.11.20.). 한편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반도는 세계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으며(KBS, 2016.11.28.),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YTN, 2016.11.28.). 이를 보았을 때 북한의 한국에 대한,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평가를 위한 외교부의 올해 정책 자료집을 살펴보면, 이 정책의 주요 성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결의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월 북한의 제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11월 28일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69개국으로 다른 대북제재 결의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수이다. 2009년 제 2차 핵실험에 대해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당시 채택 8개월이 지난 시점 48개국, 2013년 제 3차 핵실험에 대해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당시 24개국이 제출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에 압박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연합뉴스, 2016.11.29.). 그러나 결의 채택 직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 거부하고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외교부, 2016)과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핵 위협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또한 이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 결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외교부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북핵 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 정책의 정책 대상은 국민 전체이다. 따라서 원칙적인 의미에서 정책의 형평성은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북한의 위협 강도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았을 때 정책의 형평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회담 및 협의체 참여, 의회 인사 교류 등 대외 교섭업무를 통하여 수행되는 외교부 고유사업이다. 사업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다른 나라와의 직접적인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격'의 문제로 인한 외교 정책의 특성상 일반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산하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외교부, 2015).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의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동맹국들은 물론 비동맹국들과의 외교적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 또한 수행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핵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6자 회담이 무기한 연기 혹은 현

재 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강력한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국제 사회에서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에 대한 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무력도발의 수위 또한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두 차례 북한의 핵실험이 자행되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에 대해 우려를 넘어서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외교부의 북핵 대응 정책과 전략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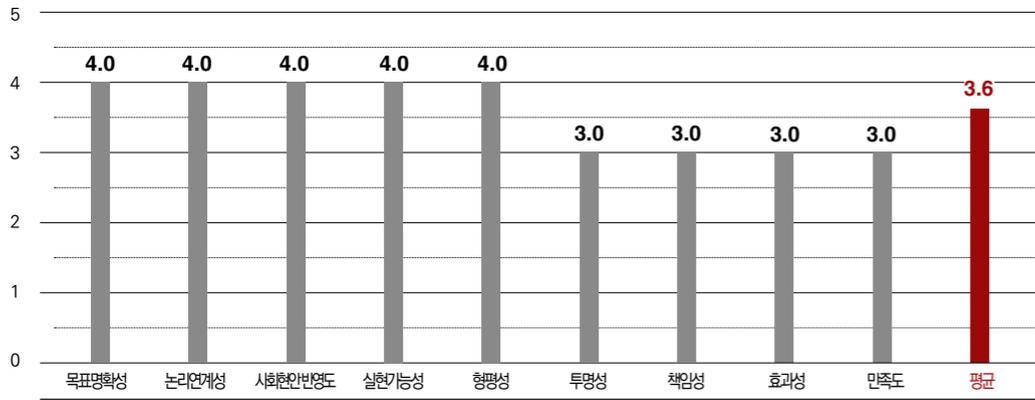
2015년 KBS 통일외교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일반 국민들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설문에서 '북한의 우선적 핵 포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른 응답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한국의 적극적 해결노력', '중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이 있다. 즉 국민들은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압박이나 회유보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2005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에는 응답항목 순서대로 33.1%, 24.3%, 21.7%, 20.9%로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에 기대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5년 그 비율은 19.3%, 16.7%, 27.7%, 36.2%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의지를 가장 큰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국과의 공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 외교부 정책에 회의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3), 과정(3.0)순으로 나타났다.



(5)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그림 4-162]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의무복무에 종사하는 장병들이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장병들의 봉급을 2012년 대비 2017년에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세탁기 공급 등, 복무하는 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개선하며 장병의 급식과 피복류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품질을 개선하며, 전역 후 자기개발을 위한 적금마련, 사망보험 가입 등 장병들의 군 복무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국방부, 2016)에서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방부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장병들의 봉급을 2012년 대비 2017년에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무하는 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개선하며, 장병의 급식과 피복류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품질을 개선하며, 전역 후 자기개발을 위한 적금마련, 사망보험 가입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국방부, 2016). 피복류와 급식의 경우 선호도 조사를 반영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정책의 효과는 뛰어날 수 있다. 또한 적금을 들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부족한 봉급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매년 15%의 인상을 통해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지급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은 군 입대를 꺼리는 입영 대상자나,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은 정책이다. 올 한해는 고용절벽과 더불어 청년실업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청년실업률은 2016년 10월 8.5%를 기록했다(통계청, 2016). 이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

고수준(헤럴드경제, 2016.12.12.)으로, 등록금 마련과 취업문제로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에 대하여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강조하는 정책인 만큼,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도 높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에 있어,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 보다는 증액의 폭이 크지 않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국방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 봉급을 15% 인상하는 데에는 전년대비 1,193억 원의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며, 노후 관물함 교체, 세탁기 교체에는 157억 원이 증액 소요되며, 따뜻한 병영생활을 위한 온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22억 원이 소요된다(기획재정부, 2016). 입소 장병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에도 37억 원의 증액 등 비교적 큰 폭의 예산증가 없이도 목표한 바를 실현할 수 있고, 이것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은 모든 의무복무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남북분단의 현실로 인해 의무복무제도를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군인이 공직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전체 의무복무자가 아닌 공무원 응시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반한 차별적인 제도이므로 1999년 만장일치로 위헌결정¹⁾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다 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부활을 위해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위헌결정당시의 논의를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지원방안은 사병 급여의 현실화와 더불어 전역 시의 경제적 지원, 사회복지로의 지원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김선택, 2011: 281-283). 현 정책의 방향성은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증진에 높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병 봉급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민간의 최저시급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국방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히 정책을 홍보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식비나 기타 처우개선의 경우 예산확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으며, 예산안에서 기본급식 항목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실제 배급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등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국회국방위원회, 2015) 투명성은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병 봉급 인상은 처음 공약대로 정책이 이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 목표로 했던 2017년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봉급 인상이 중기 계획으로 지속성 있게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편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보장하기가 어렵고, 국정감사의 지적이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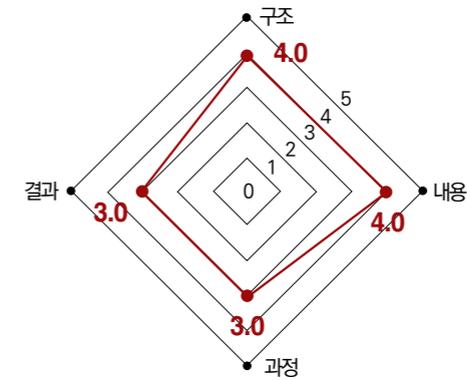
적은 예산 증가로 다양한 정책 효과를 의도한 것은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예산 없이는 생활관의 시설이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에는 부족한 점이 따른다. 예를 들어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대부분의 군 생활관에는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내년 예산안에 이 사항이 반영되었지만, 아직까지 생활시설 곳곳에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군 간부비율 증가에 따른 인건비도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병 봉급의 15%를 인상하는 데는 1,193억 원이 증액되지만 간부 봉급을 공무원 봉급 인상과 같이 3% 인상하는 데는 2,988억 원이 증액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국방부, 2016c). 현역 병 임영대상자가 줄어들고, 군의 구조적 개편이 가속화되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의 효율화를 통해 군 조직의 비대화와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국회국방위원회, 2015).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세부 정책을 통해 장병들의 실질적인 근무여건 및 복지에 대한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어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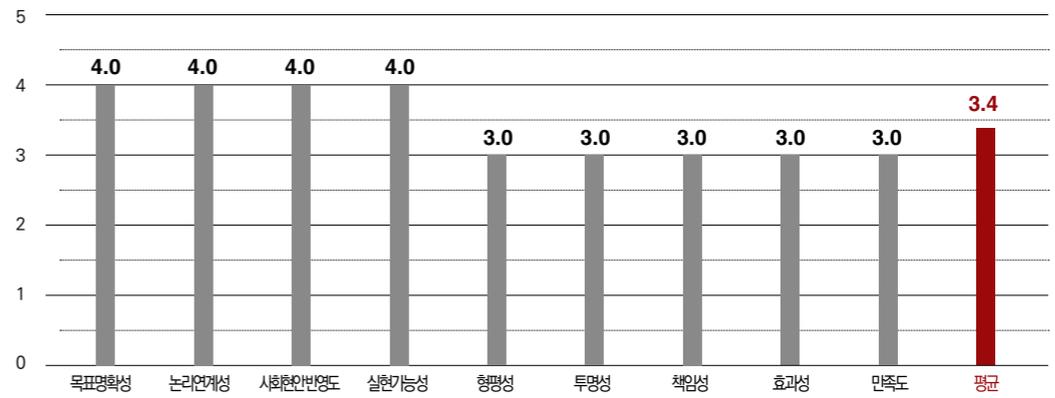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4.0), 과정(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3]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그림 4-164]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선진화된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여행경보제도 운영 및 해외 안전여행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되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세부 목표 또한 비교적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선진화된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예방을 위해 여행경보제도 운영 및 홍보, 나라별 맞춤형 로밍문자 발송, 사건사고 빈발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고, 사후 대응을 위해 영사콜센터 운영, 대형 위난시 현장 신속대응팀 파견, 긴급구난 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세부 정책들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평이한 수준의 정책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48만 명이던 해외출국자 수는 2015년 1,930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피해 건수도 3,716건에서 8,29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뉴시스, 2016.11.4.). 해외출국자 수의 증가 정도보다 피해건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특정 국가에서 강력 범죄를 당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외교부의 ‘필리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에서 실종되어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한인은 58명으로, 외교부는 현재 필리핀 거의 모든 지역에 여행 금지지역을 포함, 여행 자제 권고를 한 상태다(파이낸셜뉴스, 2016.11.27.).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책은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은 그 정책 목표가 명확하고, 정책대안의 연계성 또한 높다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책의 실현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약 85억 원에서 2016년 약 1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15). 2017년 예산은 올해 배정된 예산보다 더 증가될 전망이다. 이를 볼 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대상자는 모든 국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없고, 여행의 경우에도 여행을 계획한 기간이 지나면 이 정책의 수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더라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은 정책의 수혜자가 되고, 어떤 국민은 시스템 운영의 미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정책의 형평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의 서비스 전달은 일방향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정책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정책 과정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²⁾에 대해 국민의 45%만이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홈페이지 방문 경험이 있는 국민은 41%에 불과했다(이데일리, 2016.10.8.). 한편,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 출국하려는 국민들은 국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책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음 또한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성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정책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외교부 본부 및 11개 재외공관에 대한 영사업무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외교부는 재외국민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급상황에 연결되어야 할 긴급연락처의 확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 전화 연락을 위한 영사 핫라인도 29개 공관에서 잘못된 번호이거나 없는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6.4.5.). 즉 책임감 있게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외교부가 정책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부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이 정책의 책임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앞선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교부의 ‘영사 핫라인’의 부실한 운영,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와 관리 미흡이 드러났다. 또한 재외국민을 상대로 벌어지는 각종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소재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사례에 해당하므로 효과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높은 실현 가능성에 비해 효과성이 낮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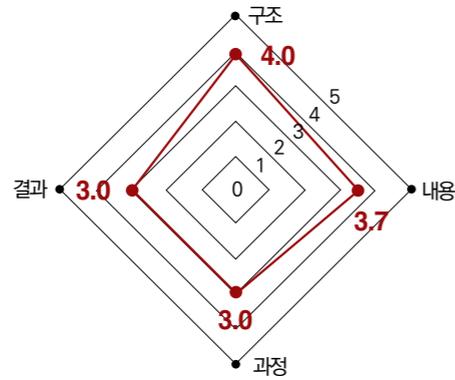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외출국자 수의 증가 정도보다 피해건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긴급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24시간 운영되는 ‘영사 핫라인’ 중 절반 이상이 먹통인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일보, 2016.4.5.). 한편, 기존의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 또한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3.7), 과정(3.0), 결과(3.0)순으로 나타났다(과정과 결과는 동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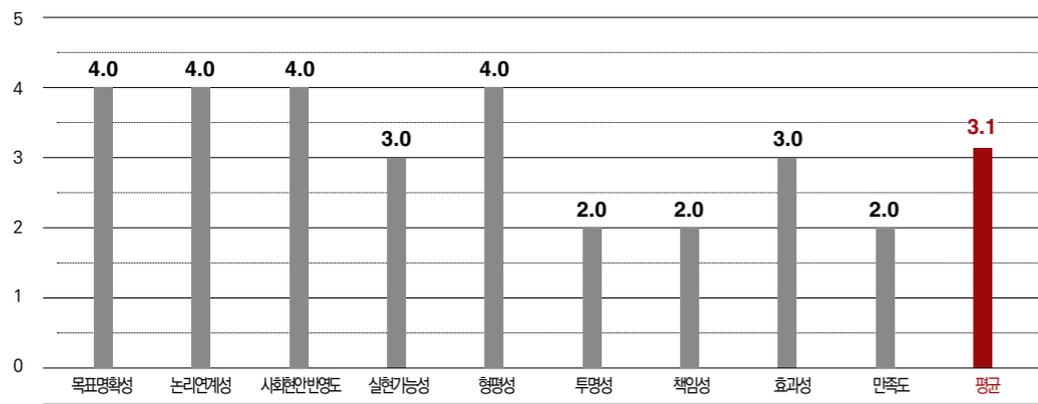
2) 방문국의 여행경보단계와 같은 안전정보와 현지 치안상황, 국가별 최신 안전소식, 사건·사고 현황, 여행 시 유의사항, 한국 공관과 긴급 연락처 정보 등을 제공

[그림 4-165]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그림 4-166]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목표 하에 전통적 한-미 안보협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 일치 및 공감대 형성을 그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목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 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은 한미 안보 동맹 강화 및 북핵북한 문제 관련 굳건한 공조 지속, 양국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미 대선 대비 안정적 한미관계 발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보면, 금년 한 해 동안 두차례 정상회담 및 다양한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

고,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발효되었으며, 우주, 사이버, 보건안보, 북극 등 한미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노력과 PKO, 핵안보,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노력이 행해졌다. 또한 미 대선 과정에서 양 후보 진영과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미관계 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대안들은 정책의 목표와 논리적 연계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함에 있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국의 자율성이 증진되는 방안이 보다 모색될 필요가 있다(김건홍, 2014: 46-51).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일련의 도발적 언사와 같은 긴장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포괄적 전략동맹은 안보동맹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각각의 대안들이 모두 사회현안 반영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안보 측면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해볼 때, 인력이나 예산 측면의(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15: 34) 실현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정책의 결과 측면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높지 않게 평가됨으로써 실현가능성 역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비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호성, 전략적 유연성 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건홍, 2014: 52-53).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은 한미 간 안보와 경제적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정책이며,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전 국민에 관련되는 정책인 만큼 정책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보다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회의 또는 세미나 등이 존재하지만,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포괄적 전략동맹의 성공은 국민의 지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군사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양국협력의 청사진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김건홍, 2014: 46-47). 특히 사드배치와 관련한 논란은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켰는데(뉴스속보, 2016.7.11.), 정책을 추진해감에 있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의 책임성 역시 앞서 살펴 본 투명성과 함께 다른 문항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즉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정책은 별도의 내부 모니터링 제도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의 입안이나 이행과정 등에 대한 자료가 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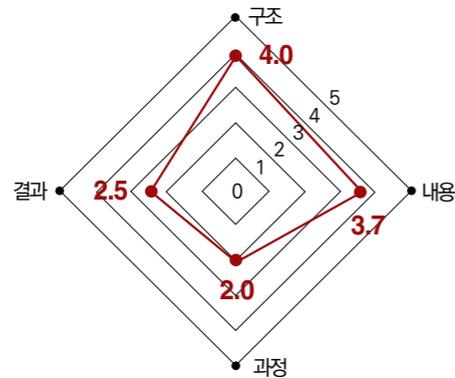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에서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성평가 결과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한 효과는 안보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계속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경제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성과와 비교하여 보다 명확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에 이 정책의 효과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의 만족도는 정성평가에서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정상급-고위급 회담이 수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양국 관계가 진전되었음을 알기 어려운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드배치 문제 등에서 불거진 논란과 신뢰 훼손 등도 정책의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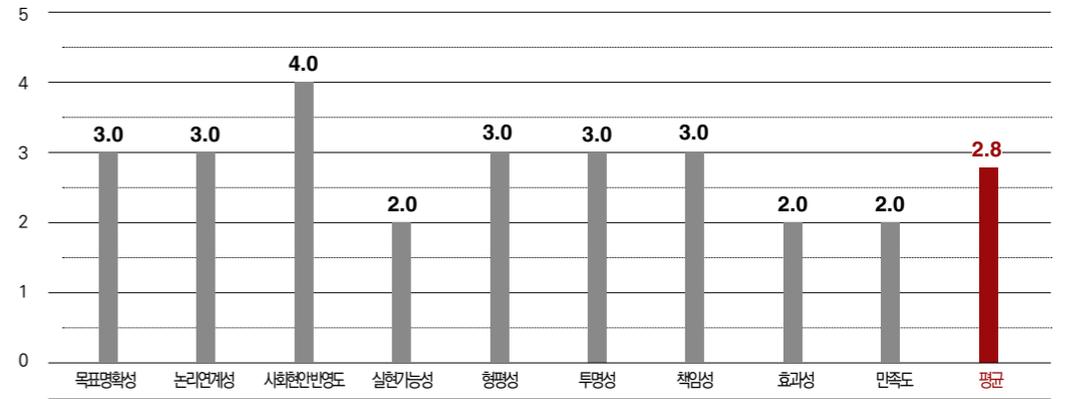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3.7), 과정(2.0), 결과(2.5)로 나타났다.

[그림 4-167]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그림 4-168]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한일중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국간 분야별 공통 현안 정책의 공조와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3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또한 3국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다소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보통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세부목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를 지속하며 북한 핵 문제에 공동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채택한 3국 협력 VISION 2020(외교부, 2010)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3국 협력 목표를 알 수 있다. 첫째, 동반자적 협력관계 제도화 및 강화, 둘째, 공동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셋째,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넷째, 인적·문화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이다. 이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평이한 수준의 세부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정책들도 인해 한일중 3국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3국 간 역사와 영토,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주축국이자 인접국으로서 3국간의 협력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로 국제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북한의 도발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적해 있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3국간의 관계는 역사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15년, 3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민감한 사안은 언급되지 않은 채 그 논의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진정한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또한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 악화로 올해 일본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한일중 정상회담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해졌다. 정상회담은 3국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까지 가결되는 등 급변하는 한국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수혜대상은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다. 각 국가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대체로 국익 전체의 증진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즉 이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따라서 정의상 정책의 형평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의, 여러 분야에서의 3국 협의체 운영, 3국 청년 교류 등 국민이 직접 정책 결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형평성은 보통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일반 국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나, 3국 협력 사무국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의 성과는 무엇인지, 3국 간 교류 및 협력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부는 일본과 중국과의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국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매해 각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3국 협력 정책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현재 우리나라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정책의 책임성은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한일중 관계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2013년과 2014년 3국 정상회담의 단절이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 경색으로 3국은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 어렵게 재개된 정상회담에서도 3국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으며(연합뉴스 TV, 2015.3.22.),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 국내의 대통령 탄핵 가결 상황과 중국의 회의 개최에 대한 입장 불표명으로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내년에도 중국이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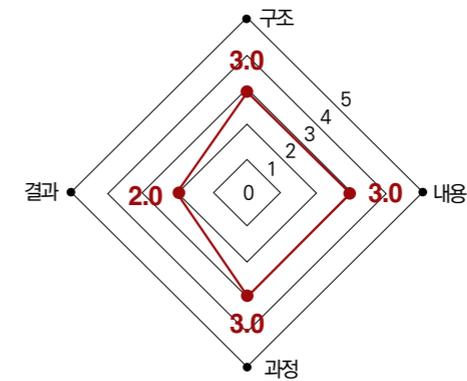
중관계를 이유로 회의 참석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어 이 회담의 재개를 예측하기 어렵다(동아일보, 2016.12.11.).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이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3국간의 관계 회복 및 발전의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현재 3국 간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 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증대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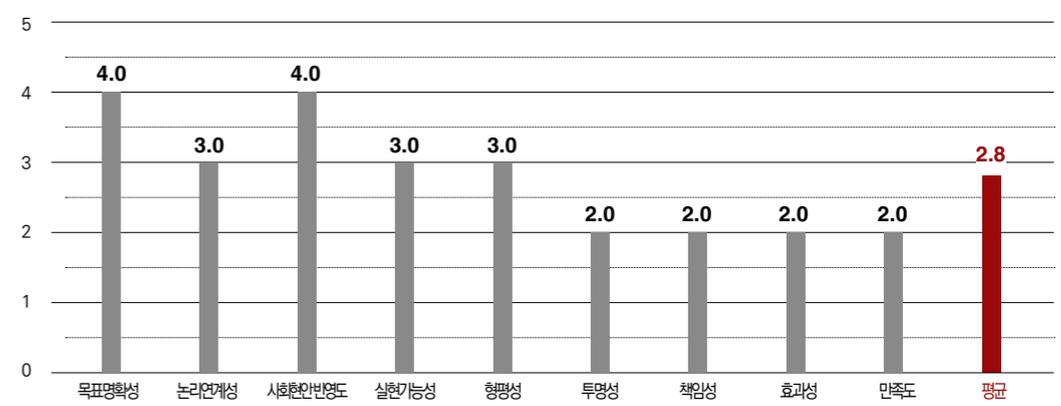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0), 내용(3.0), 과정(3.0), 결과(2.0)순으로 나타났다(구조, 내용, 과정은 동순).

[그림 4-169]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그림 4-170]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경제적 국익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목표이며 정책대안들 역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높게 평가되지 않고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대안이 목표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정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특히 대통령의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대해서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조선비즈, 2016.11.10.; 주간동아, 2016.11.16.). 또한 정상 외교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고두보로 활용하고자 했던 방안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참여절차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일요신문, 2016.12.5.).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이다(메디컬타임즈, 2016.12.14.). 이 정책의 대안들은 매우 다양하며, 대안의 내용 자체로는 정책과 논리적 연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정성평가 결과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국익증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른 평가결과이다. 외교부는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부흥 선도'를 우리 외교정책의 기조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³⁾ 그러나 이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경제적 국익증진의 효과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과 비판이 존재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역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상외교 등을 통한 적극적 기업 지원 외교, 기업에로사항 해소 및 수입규제조치 해소 등의 활동 전개, 대외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 구축을 중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 중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안들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실현가능성을 갖추고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일즈 외교',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정성평가 결과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 국민이 수혜자임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지적

될 수 있으나, 경제적 국익의 증진은 모든 국민과 관련성을 갖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한 것처럼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의 경우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나 참여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의 지지없이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성평가 결과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책임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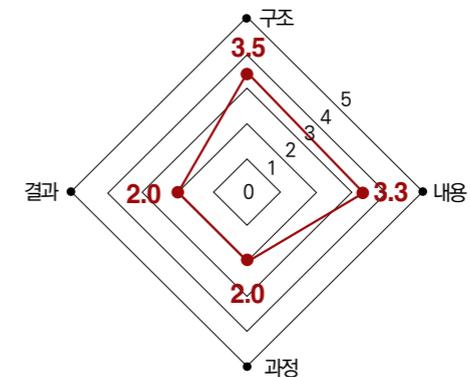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에서 먼저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정성평가 결과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세일즈 외교'가 실질적 성과는 전혀 얻지 못했고, 중소기업 및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추진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효과성 판단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 역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한 만족을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3), 과정(2.0), 결과(2.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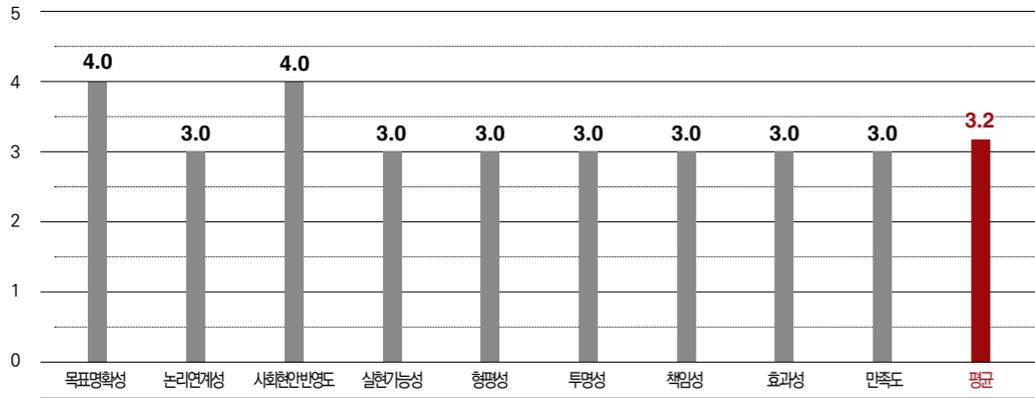
[그림 4-171]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trade/purpose/keynote/index.jsp?menu=m_30_10_10 참고.

(10)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그림 4-172]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형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탈북민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통합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국민 일반에게 쉽게 이해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부 목표 또한 비교적 구체적이는데,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영농 등을 지원하고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운영을 통해 그들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며, 탈북민들의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남북주민 간 교류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정책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목표 설정이 매우 명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탈북민의 국내정착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의 평균 수준에는 지표마다 차이가 있을 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015년 기준 전체 국민이 229.7만원인데 비해 탈북민의 경우 154.6만원으로 약 1.5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일부, 2016). 한편, 올해 사회통합형 지원 정책으로 개선함에 따라 기존 탈북민 지원 정책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선 부분이 지원금을 늘린다는가 탈북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보강하는 수준이어서 크게 차별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 수준이라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의료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즉, 탈북민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탈북민 개인의 입장에서

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 이후 남북주민 간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탈북민 지원 정책은 ‘지원’이 정착정책의 중심이 되면서 남북주민이 만나 생활공간에서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초기 문제의식이나 탈북이주민과 남한주민간의 의사소통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와 같은 사회통합에 관한 주제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비판 받기도 하였다(김화순·최대석, 2011). 그러나 2016년 탈북민 지원 정책의 경우 이러한 비판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착의 초점을 ‘보호와 정착’에서 ‘복지와 통합’ 쪽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한겨레, 2016. 11. 27.).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탈북민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을 통해 탈북민의 자립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탈북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고 그 효과도 성과지표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파악해보면 탈북민의 생활 개선 정도는 지표로 나타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한국에 정착한 지 5년 미만의 탈북민을 채용할 경우 ‘탈북민 고용 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몇몇 회사에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인 탈북민을 고용하였다가 시간이 지나 지급이 중지되는 시기가 오면 그들을 이유 없이 해고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여전히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데일리NK, 2016.11.4.). 이를 보았을 때,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들은 계획대로 이행되었으나,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의 이해관계자는 탈북민 전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한 주민들이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정도가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2015)에 따르면 탈북민에 대한 친근도 조사 결과 2007년 2.32점에 비해 2015년 2.46점으로 소폭 상승⁴⁾하였다. 한편, 한국으로의 탈북자 수용에 대해서는 그 수치가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2%)임에 반해 2015년 41.1%로 10%p이상 감소하였고, 선택적 수용에 대해서는 2007년 37.2%에서 2015년 41.1%로 소폭 상승하였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10%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에 대해서는 2007년 59.1%가 동의하였지만 2015년에는 50.5%로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일반 국민들이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체감하는 형평성의 정도는 보통 수준이라 할 수 있다.

4) 4점 척도: 1점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4점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탈북민 지원정책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하여 집행하는 정책으로 협의회는 외교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9개 부처와 기관의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와 같이 탈북민 지원정책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민간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라는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탈북민이 배제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탈북민 지원 정책이 제정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볼 때(테일리NK, 2016.11.4.),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정책은 보통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을 통해 지원받으려는 탈북민들은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정착지원 매뉴얼이나 통일백서, 통일부 홈페이지, 각 지역의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찾고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협의회를 통해 탈북민에 대한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 등에서 탈북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탈북민 지원 정책의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일부, 2016). 이는 제도 상 탈북민 지원 정책이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정책의 각종 지표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책임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탈북민 지원정책으로 인한 성과로 실업률 하락(2013년 9.7% → 2015년 4.8%), 고용률 증가(2013년 51.4% → 2015년 53.1%), 생계급여수급률 호전(2013년 35.0% → 2015년 25.3%), 월평균소득 증가(2013년 137.7만원 → 2015년 154.6만원) 그리고 학업중도탈락률 감소(2013년 3.5% → 2015년 2.2%)를 들 수 있다. 정책으로 인해 탈북민들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국민의 고용률 60.7%, 실업률 3.4%, 생계급여수급률 2.6%(2013년 기준), 월평균소득 229.7만원, 그리고 학업중도탈락률 0.93%(2014년 기준)과 비교해보았을 때, 일반 국민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은 남북민의 통합 또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서 보았듯이 탈북민에 대한 친근도나 수용도가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는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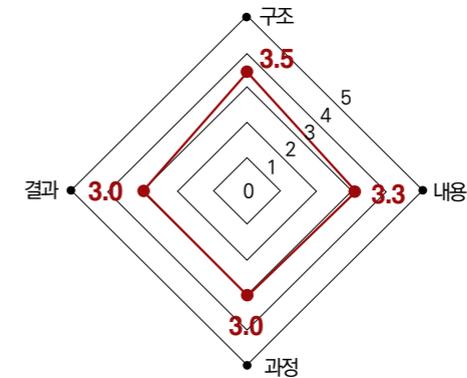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탈북민 63%가 남한 생활에 만족하며, 3.4%가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통일부, 2016). 한편,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20%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 남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6.8%와 비교하였을 때,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실제 탈북민의 고용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단순 노무직이거나 서비스직이 대부분이며,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에 달했다(YTN, 2015.2.9.).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3), 과정(3.0), 결과(3.0)순으로 나타났다(과정과 결과는 동순).

[그림 4-173]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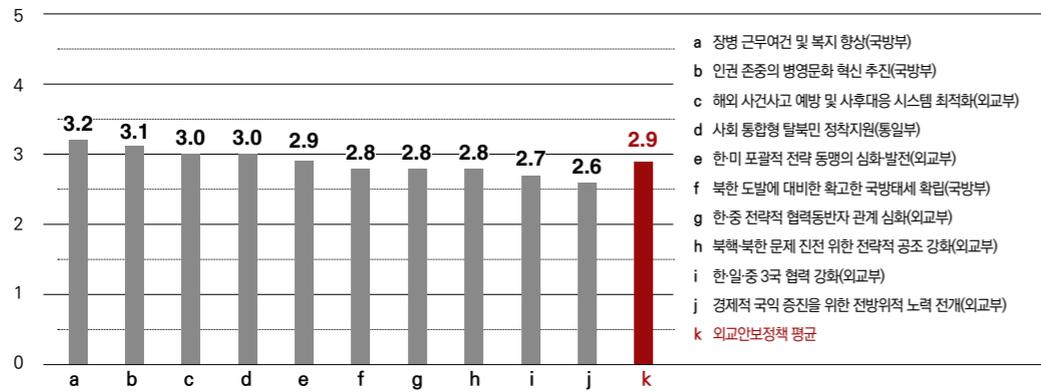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상기한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를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2점의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정책이다. 이어 인권 존중의 병영 문화 혁신 정책이 3.1점으로 2위를,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정책과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이 3.0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하여 외교안보분야에서 4개의 정책이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정책이 2.9점으로 5위를,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정책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책,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이 2.8점으로 공동 6위,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정책이 2.7점으로 9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책이 2.6점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려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6개의 정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종합 순위 결과는 앞서 제시하였던 설문조사 결과와 정성평가 결과의 순위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표별로 살펴봤을 때 목표의 명확성 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6점의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정책,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정책이었으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림 4-174]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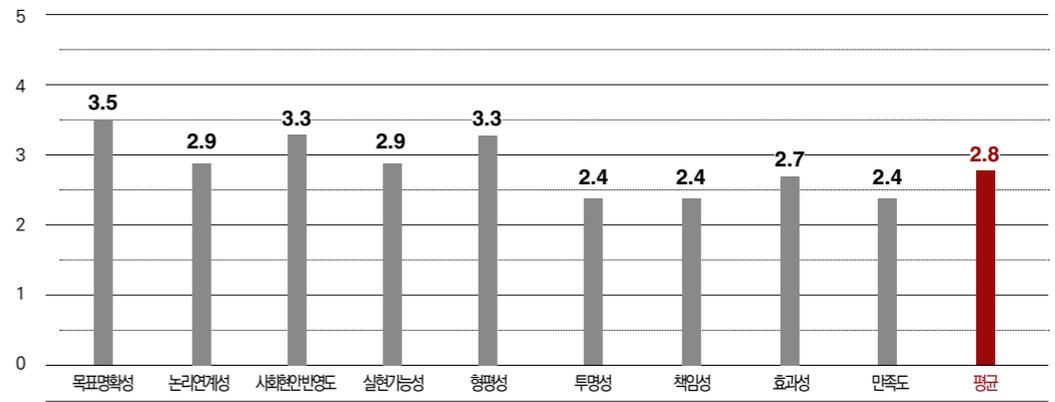
정책은 3.1점의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정책이었다. 논리연계성 지표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지표는 2.8점의 북핵·북한 문제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과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책이었으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4점의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정책이었다. 다음으로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있어서는 3.4점의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정책,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정책이었으며, 3.1점을 받은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또 한 번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실현가능성 지표에 있어서는 3.4점의 가중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정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2.4점의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정책이 가장 하위를 차지했다.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 있어서는 3.4점의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정책,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정책이 최상위를, 2.8점의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책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책의 투명성 지표에 있어서는 2.9점의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정책,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다시 한 번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책이 가장 낮은 점수인 2.3점을 나타내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정책의 책임성 지표에 있어서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정책이 2.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책이 2.3점으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효과성 지표에 있어서는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정책이 2.9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역시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책이 2.2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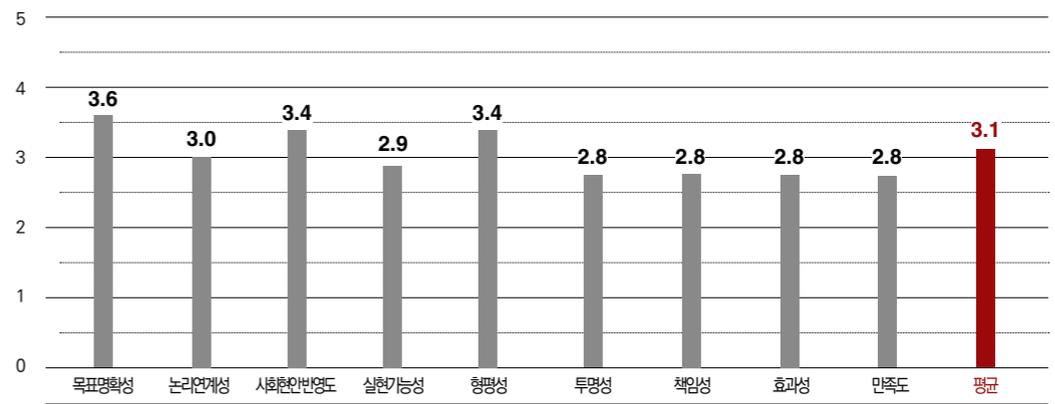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만족도 지표에 있어서 또 한 번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정책이 3.0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2.3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책,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책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75]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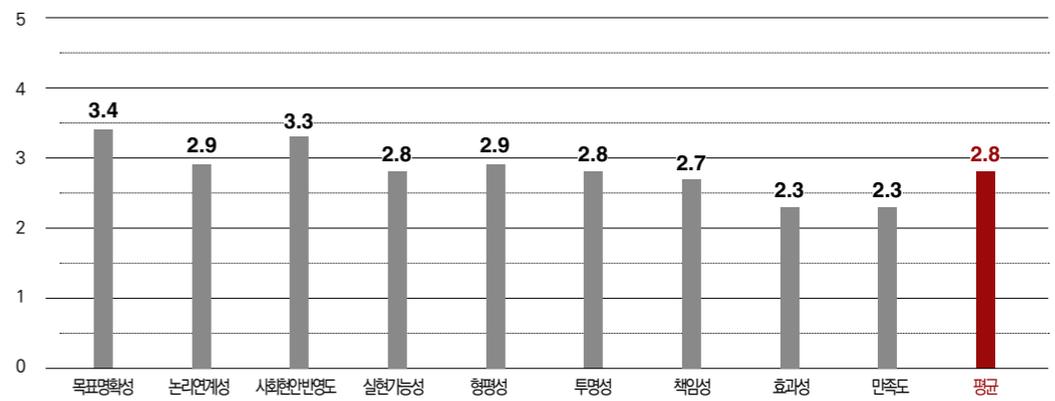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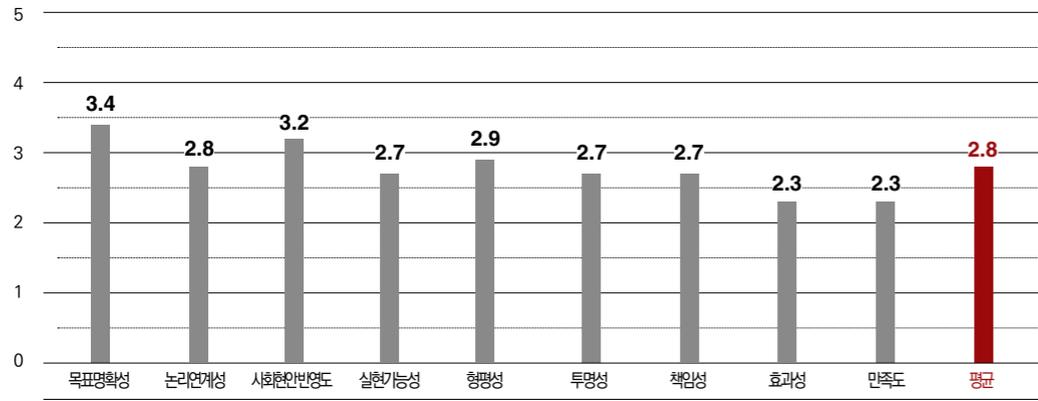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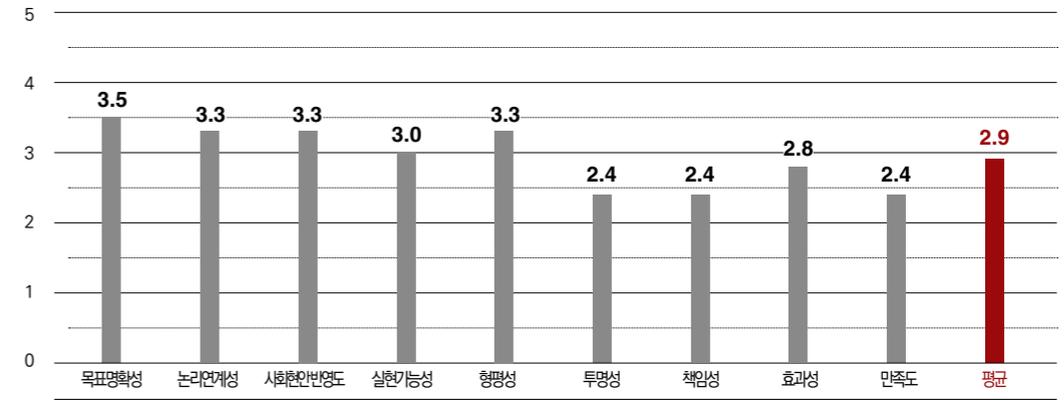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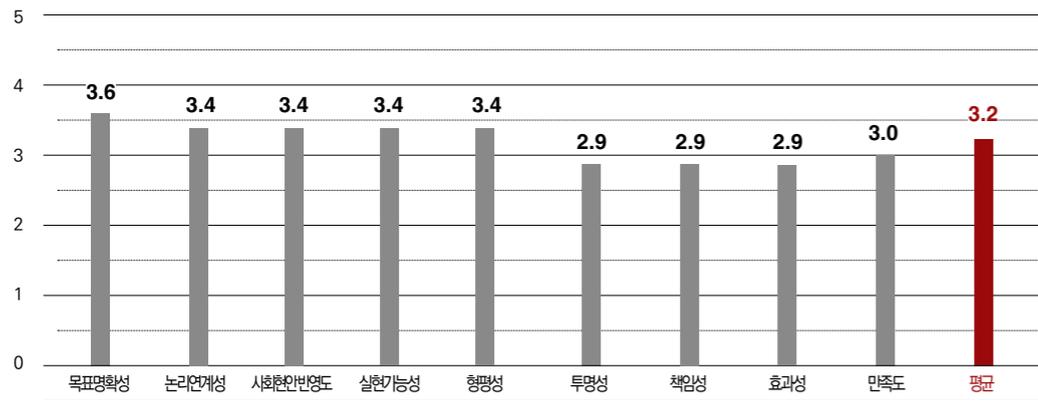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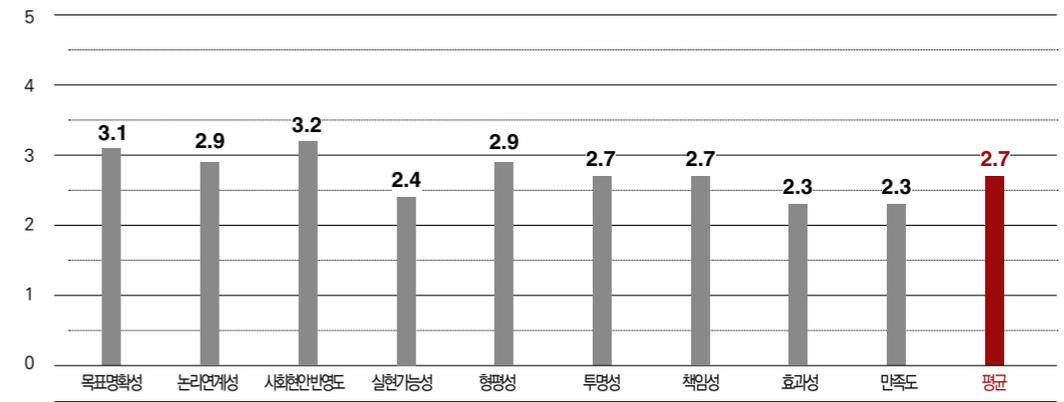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 발전(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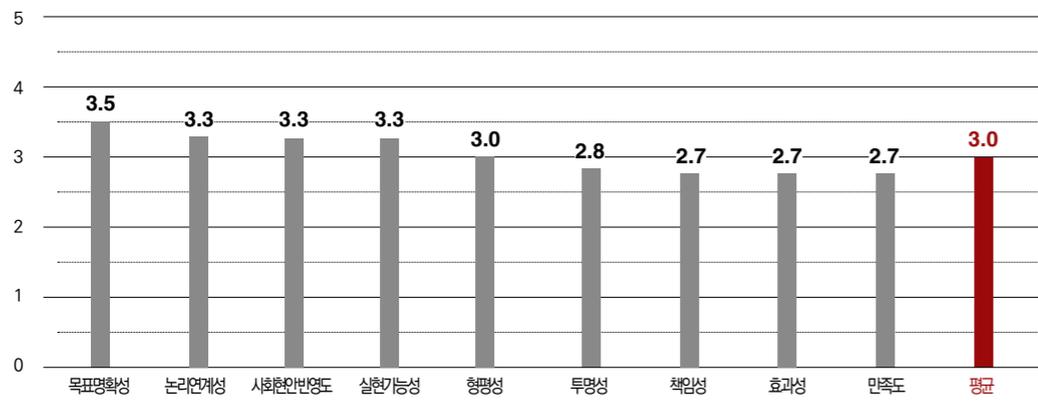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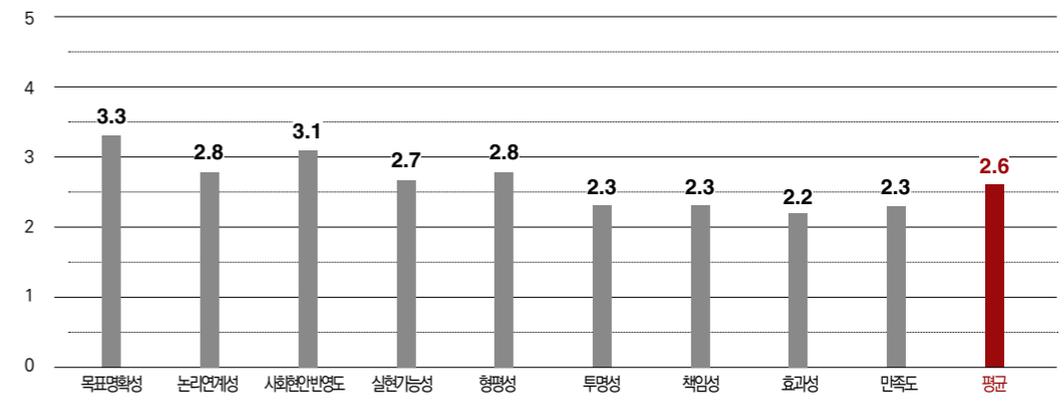
한-일-중 3국 협력 강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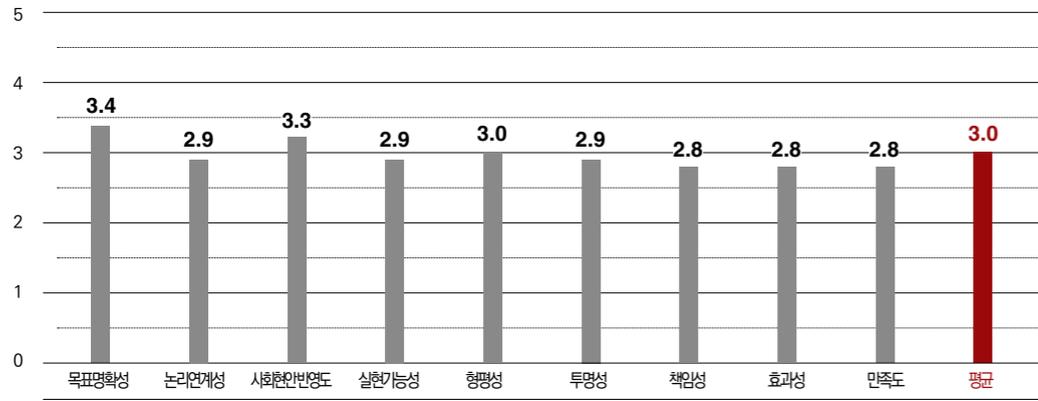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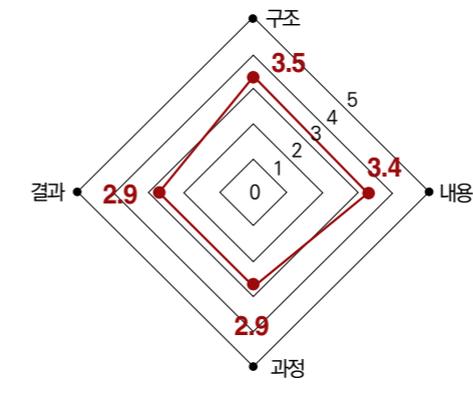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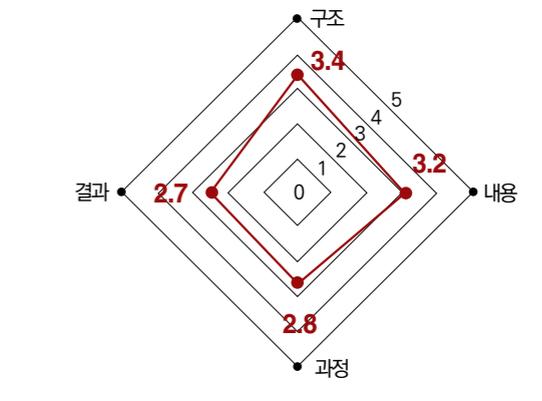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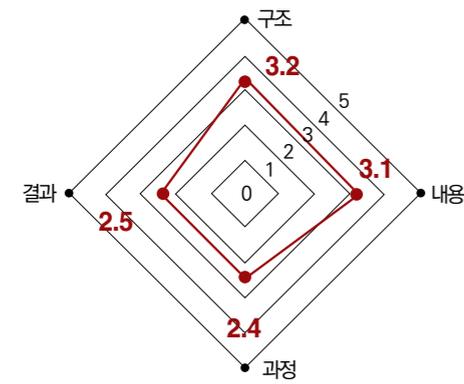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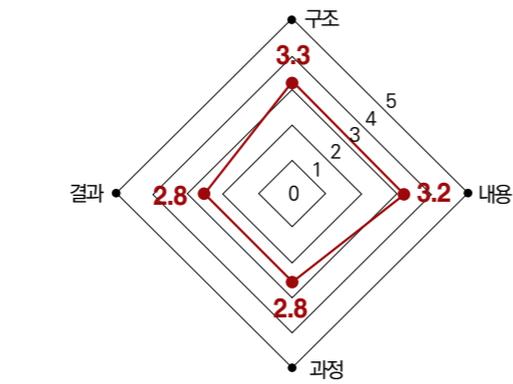


[그림 4-176]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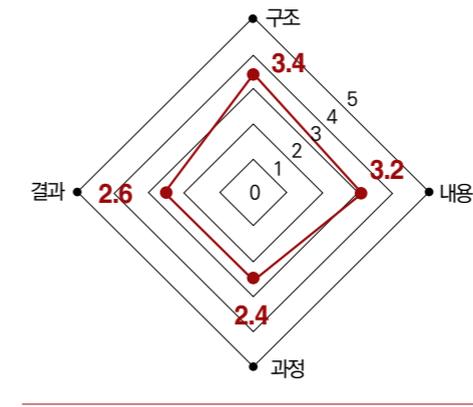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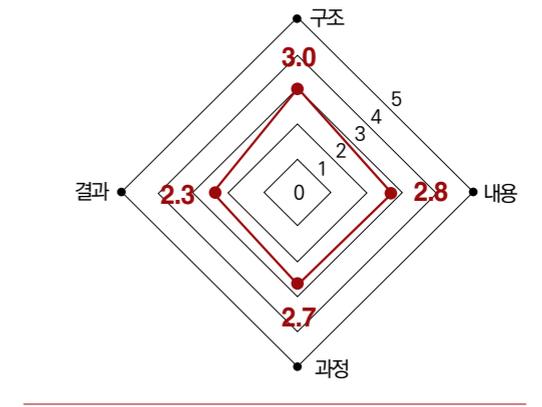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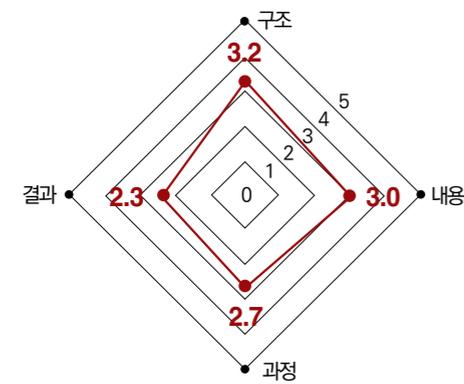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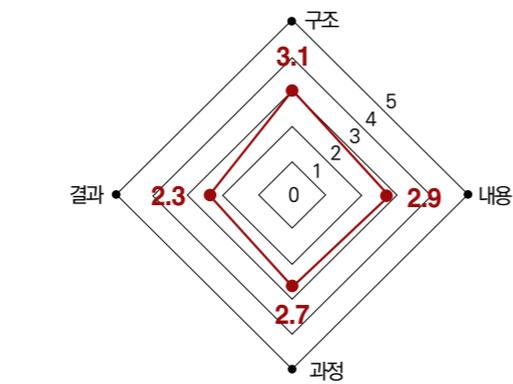
한일중 3국 협력 강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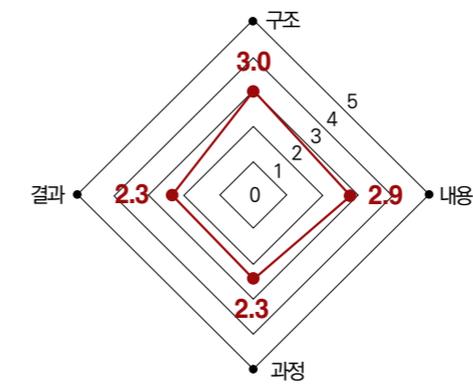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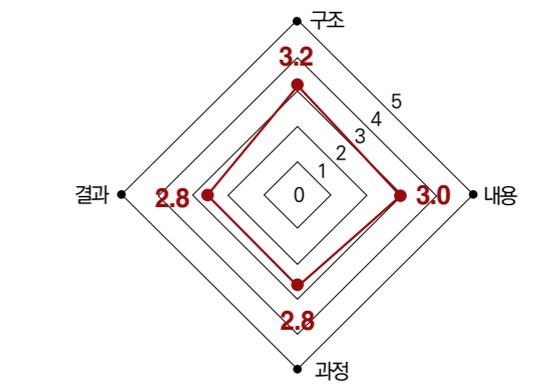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외교부)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05

제5장 정부 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본 평가에서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책지지도 지표로 개인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즉, 세부설문 항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개인은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한 개인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응답자들의 개별 정책에 대한 9개 세부항목의 평균값을 구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지지도 지표로 이용하였다.

정책지지도 결과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들의 정부정책 지지도 평균은 2.85점으로 “보통”인 3점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정책지지도 2.95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79점으로 나타나 작년(2.38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의 정부 전반에 대한 큰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 또한 2.14점으로 나타나 이전의 2.48점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평가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믿음도 보통보다 약간 아래인 2.95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정부 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314
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317
3 정부 정책지지도, 정책 체감도, 정부신뢰도, 사회신뢰도간의 인과관계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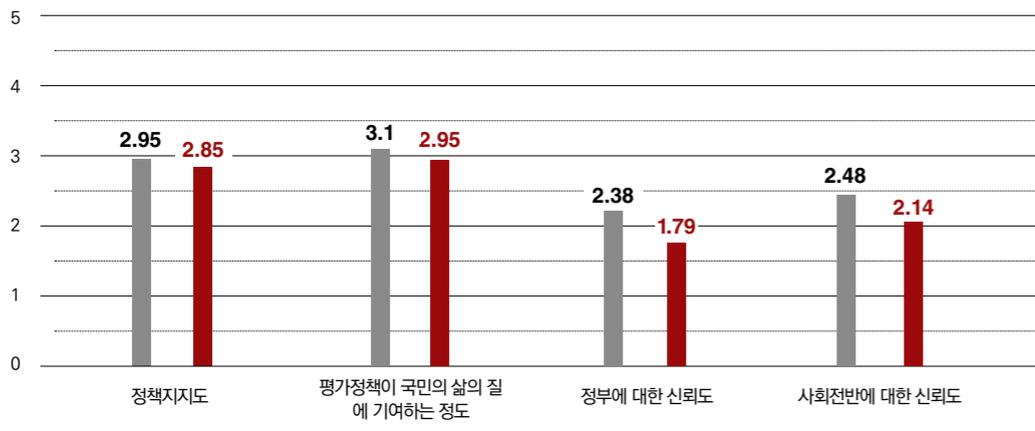


1. 정부 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본 평가에서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책지지도 지표로 개인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즉, 세부설문 항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개인은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한 개인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응답자들의 개별 정책에 대한 9개 세부항목의 평균값을 구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지지도 지표로 이용하였다. 아래 [그림 5-1]은 2015년과 2016년의 정책지지도와, 평가한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정부신뢰도, 사회신뢰도에 관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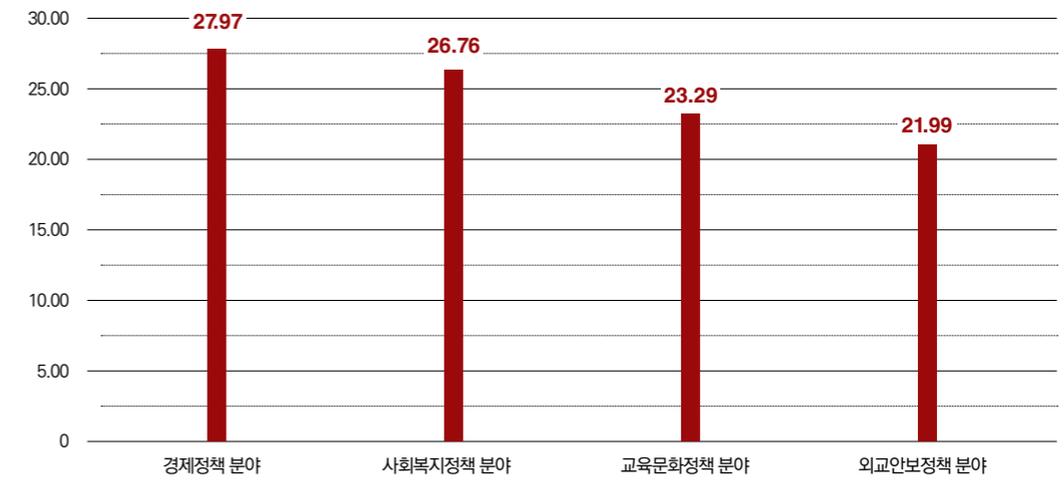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들의 정부정책 지지도 평균은 2.85점으로 “보통”인 3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정책지지도 2.95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79점으로 나타나 작년(2.38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의 정부 전반에 대한 큰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 또한 2.14점으로 나타나 이전의 2.48점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평가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믿음도 보통보다 약간 아래인 2.95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정부신뢰, 사회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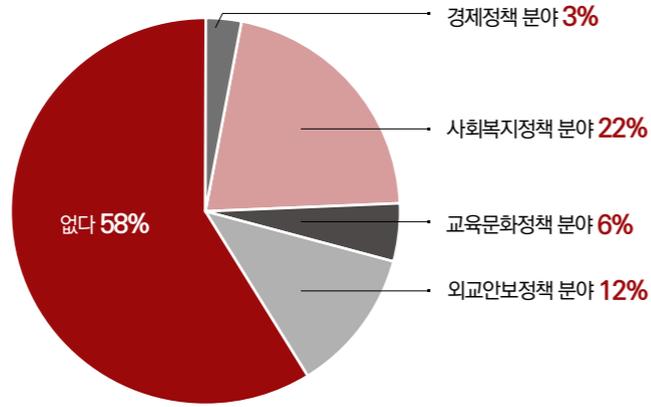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어떠한 정책을 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어떠한 영역의 정책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6년 조사에서는 3개의 항목(정책분야의 상대적 중요성, 4개 분야 중 가장 좋아진 분야, 4개 분야 중 가장 안 좋아진 분야)을 추가하였다. 정책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100점의 점수를 네 개의 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그림 5-2]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점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설문에 참여한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분야가 가장 중요하다(28점)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가 그다음으로 27점, 교육문화정책이 23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정책이 22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4대 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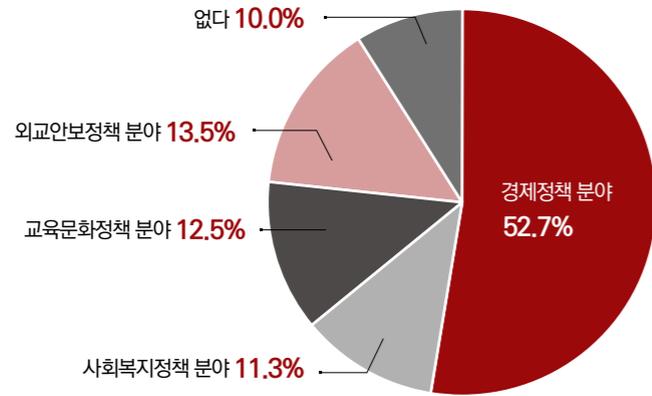
또한 2016년 조사에서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4개의 분야 중 어떠한 분야가 좋아졌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 응답자의 58%는 박근혜 정부에서 나아진 분야가 전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현 정책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22%는 사회복지 정책 분야의 개선을 뽑았고, 12%는 외교안보정책 분야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 응답자들은 52.7%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안 좋아진 정책분야로 경제정책 분야를 지적하였다. 이는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머지 세 분야를 합쳐도 경제 정책분야의 분율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정책 분야에 대한 실망이 얼마인지 가늠케 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안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표 5-1]은 정부정책지지도에 대한 각기 다른 집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설문에 참여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부정책지지도를 분석해보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이 전문가보다는 더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인이 전문가에 비해 한국의 현 상황에 더욱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지지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정책의 지지도는 차이가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30대가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60세 이상에서는 부정보다는 보통에 많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으로는 호남과 제주권의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중도 진보나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응답자가 더 낮은 지지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정부정책지지도 교차분석결과

		정책지지도			Total
		부정	보통	긍정	
집단	전문가	103	87	10	200
		51.5%	43.5%	5.0%	100.0%
	일반인	1106	832	62	2000
		55.3%	41.6%	3.1%	100.0%
계		1209	919	72	2200
		55.0%	41.8%	3.3%	100.0%
성별	남자	544	424	28	996
		54.6%	42.6%	2.8%	100.0%
	여자	562	408	34	1004
		56.0%	40.6%	3.4%	100.0%
연령	19-29세	209	132	7	348
		60.1%	37.9%	2.0%	100.0%
	30대	236	116	4	356
		66.3%	32.6%	1.1%	100.0%
	40대	264	146	10	420
		62.9%	34.8%	2.4%	100.0%
	50대	200	178	14	392
		51.0%	45.4%	3.6%	100.0%
60세 이상	197	260	27	484	
	40.7%	53.7%	5.6%	100.0%	

지역	수도권	549	412	31	992
		55.3%	41.5%	3.1%	100.0%
	중부권	147	115	6	268
		54.9%	42.9%	2.2%	100.0%
	호남-제주권	139	80	5	224
		62.1%	35.7%	2.2%	100.0%
	영남권	271	225	20	516
		52.5%	43.6%	3.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	109	70	8	187
		58.3%	37.4%	4.3%	100.0%
	중도진보	303	166	8	477
		63.5%	34.8%	1.7%	100.0%
	중도	413	323	21	757
		54.6%	42.7%	2.8%	100.0%
	중도보수	197	174	15	386
		51.0%	45.1%	3.9%	100.0%
	보수	84	99	10	193
		43.5%	51.3%	5.2%	100.0%
계 (일반인)		1106	832	62	2000
		55.3%	41.6%	3.1%	100.0%

[표 5-2]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특성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집단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적인 성향을 띠수록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보수에서조차 정부의 불신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의 39%에 비해 22%p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정부신뢰도 교차분석결과

		정부신뢰도			Total
		부정	보통	긍정	
집단	전문가	142	36	22	200
		71.0%	18.0%	11.0%	100.0%
	일반인	1612	264	124	2000
		80.6%	13.2%	6.2%	100.0%
계		1754	300	146	2200
		79.7%	13.6%	6.6%	100.0%

성별	남자	779	141	76	996
		78.2%	14.2%	7.6%	100.0%
	여자	833	123	48	1004
		83.0%	12.3%	4.8%	100.0%
연령	19-29세	313	27	8	348
		89.9%	7.8%	2.3%	100.0%
	30대	316	29	11	356
		88.8%	8.1%	3.1%	100.0%
	40대	359	44	17	420
		85.5%	10.5%	4.0%	100.0%
	50대	301	63	28	392
		76.8%	16.1%	7.1%	100.0%
60세 이상	323	101	60	484	
	66.7%	20.9%	12.4%	100.0%	
지역	수도권	803	136	53	992
		80.9%	13.7%	5.3%	100.0%
	중부권	216	40	12	268
		80.6%	14.9%	4.5%	100.0%
	호남-제주권	198	13	13	224
		88.4%	5.8%	5.8%	100.0%
영남권	395	75	46	516	
	76.6%	14.5%	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	165	13	9	187
		88.2%	7.0%	4.8%	100.0%
	중도진보	436	33	8	477
		91.4%	6.9%	1.7%	100.0%
	중도	623	99	35	757
		82.3%	13.1%	4.6%	100.0%
	중도보수	269	78	39	386
		69.7%	20.2%	10.1%	100.0%
	보수	119	41	33	193
		61.7%	21.2%	17.1%	100.0%
계 (일반인)		1612	264	124	2000
		80.6%	13.2%	6.2%	100.0%

[표 5-3]은 사회신뢰도에 관한 다양한 그룹의 교차분석 결과이며,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 또한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보다는 일반인이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미만과 30대에서 사회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사회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3] 사회신뢰도 교차분석결과

		사회신뢰도			Total
		부정	보통	긍정	
집단	전문가	92 46.0%	71 35.5%	37 18.5%	200 100.0%
	일반인	1421 71.1%	461 23.1%	118 5.9%	2000 100.0%
계		1513 68.8%	532 24.2%	155 7.0%	2200 100.0%
성별	남자	669 67.2%	254 25.5%	73 7.3%	996 100.0%
	여자	752 74.9%	207 20.6%	45 4.5%	1004 100.0%
연령	19-29세	258 74.1%	75 21.6%	15 4.3%	348 100.0%
	30대	283 79.5%	59 16.6%	14 3.9%	356 100.0%
	40대	313 74.5%	89 21.2%	18 4.3%	420 100.0%
	50대	276 70.4%	92 23.5%	24 6.1%	392 100.0%
	60세 이상	291 60.1%	146 30.2%	47 9.7%	484 100.0%
학력	고졸 이하	760 71.5%	247 23.2%	56 5.3%	1063 100.0%
	대재 이상	661 70.5%	214 22.8%	62 6.6%	9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	152 81.3%	27 14.4%	8 4.3%	187 100.0%
	중도진보	367 76.9%	90 18.9%	20 4.2%	477 100.0%
	중도	550 72.7%	172 22.7%	35 4.6%	757 100.0%
	중도보수	234 60.6%	115 29.8%	37 9.6%	386 100.0%
	보수	118 61.1%	57 29.5%	18 9.3%	193 100.0%
계 (일반인)		1421 71.1%	461 23.1%	118 5.9%	2000 100.0%

정책지지도, 정부신뢰도, 그리고 사회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종합해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015년에 비해 매우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책지지도와 사회신뢰도도 대체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족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젊은 층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에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집단에서도 불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의 결여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어떻게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정부 정책지지도, 정책 체감도, 정부신뢰도, 사회신뢰도간의 인과관계

본 조사에서는 정부정책의 지지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4]와 같다. 본 분석에서 정책 체감도는 응답자가 4개의 주요 정책분야 중 단 한 분야라도 정책이 나아졌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분석 1>의 결과에 의하면 우선 정책지지도는 정부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1점 높아지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0.55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체감도의 경우도 정부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가지 정책의 분야 중 한 분야에서라도 정책 향상을 체감한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정부신뢰도가 0.53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분석 2>에서는 각각의 정책분야 중 어느 분야의 향상이 정부신뢰도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4분야의 개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교안보의 개선을 체감한 응답자가 전혀 정책향상을 체감하지 못한 응답자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0.8점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분석 3>에서는 정책지지도, 정책체감도 그리고 정부신뢰도가 사회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3>에 따르면 정부신뢰도와 정책신뢰도는 사회신뢰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정책향상의 체감은 사회신뢰도에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향상의 체감은 정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은 간접적으로 사회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5-4] 회귀분석 결과

<분석1> (종속변수: 정부신뢰)		<분석2> (종속변수: 정부신뢰)		<분석3> (종속변수: 사회신뢰)	
상수	-.006	상수	-.001	상수	-.411**
정책지지도	.55**	정책지지도	.549**	정책지지도	.092**
정책체감	.53**	경제체감	.537**	정부신뢰도	.625**
-	-	사회복지	.415**	정책체감	-.032
-	-	교육문화	.377**	-	-
-	-	외교안보	.799**	-	-
N	2200	N	2200	N	2200
Adjusted R ²	0.305	Adjusted R ²	0.318	Adjusted R ²	0.386

주: ** 0.01수준에서 유의함.

06

제6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2016년 정책평가에 포함된 40개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의 정성평가가 포함된 점수는 3.0점으로 “보통”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초 평가가 시작된 2014년의 종합수치가 각각 3.1점(2014년), 3.05점(2015년)임을 감안하면 소폭이기는 하나 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평가에 포함된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책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정부는 정책의 질과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평가가 실시된 40개 정책 모두를 대상으로 9개 세부 설문 항목과 설문영역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정책구조(평균 3.3점)와 정책내용(평균 3.1점)의 평균은 3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과정(평균 2.8점)과 정책결과(평균 2.7점)의 평균은 3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2014년, 2015년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324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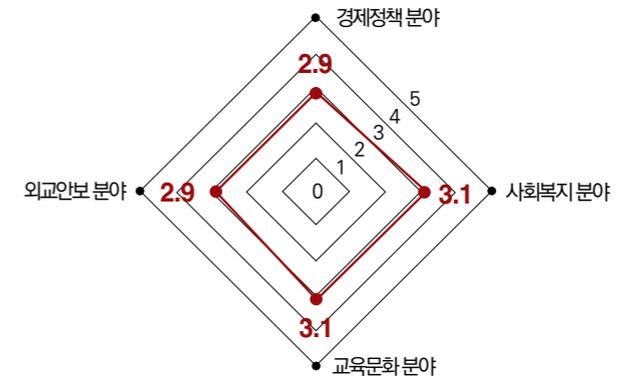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2016년 정책평가에 포함된 40개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의 정성평가가 포함된 점수는 3.0점으로 “보통”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초 평가가 시작된 2014년의 종합 수치가 각각 3.1점(2014년), 3.05점(2015년)임을 감안하면 소폭이기는 하나 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평가에 포함된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책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정부는 정책의 질과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번 정책평가의 결과를 정책 분야별, 개별 정책별, 그리고 평가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분야의 비교

4개 정책 분야의 평균은, 경제정책 분야와 외교안보분야가 2.9점,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문화분야가 3.1점으로 정책분야 간 평가결과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 정책분야는 2014년의 3.0점, 2015년의 3.1점 에서 올해는 2.9점으로 평가가 소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조경제분야에 대한 낮은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평가는 2014년 3.3점, 2015년 3.0점에 이어 올해도 2.9점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국민의 대다수가 북핵에 대한 위협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복잡해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의 미흡함이 지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교육문화분야의 평가는 3.1점으로, 2014년 2.9점, 2015년 3.0점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육평가와 사업에 관련된 정책들이 올해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분야는 2014년 3.2점, 2015년 3.1점에 이어 올해도 3.1점으로 점수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 대다수가 효과를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점수의 정체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복지혜택의 개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림 6-1] 4대 정책분야별 종합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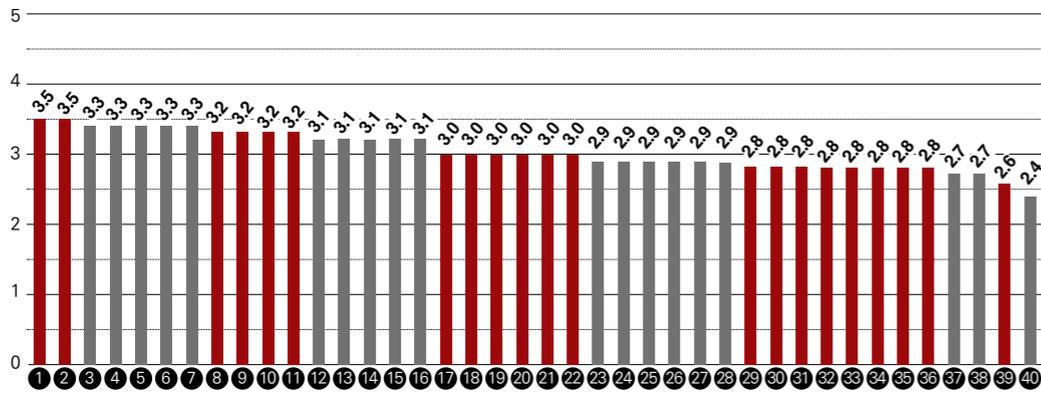


② 개별정책의 비교

최종 평가에 포함된 40개 정책을 살펴보면 “보통” 수준(3.0점)을 넘는 정책이 16개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26개, 2015년에 22개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평균 3.5점을 넘어서는 정책이 없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평균(3.0점)이 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문화정책이 5개, 사회복지정책이 5개, 경제정책이 4개 그리고 외교안보정책이 2개로 나타났다. 교육문화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 중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정책이나 초등돌봄 교실은 정책 중 가장 좋은 3.5점을 받아 주목되며, 이외에도 도시숲 조성,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 아동 체계적 관리 그리고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관행 근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3.3점)를 받아 김영란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였고, 이 외에도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3.3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3.1점), 한부모 자녀 양육지원(3.1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경제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경제정의 실현하려는 정책(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개선(3.2점),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3.1점), 그리고 가계부채관리(3.1점), 틱스 프로그램(3.1점)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외교안보분야에서는 국방부의 장병 근무여건 및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된 정책들(인권 존중의 병영 문화 혁신 추진(3.1점),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3.2점)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보통”수준(3점) 보다 낮게 부정적으로 평가된 정책은 모두 18개로 2014년과 2015년의 13개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외교안보정책 분야가 6개로 가장 많았고, 경제정책 분야 5개, 교육문화정책 분야 4개, 사회복지정책 분야 3개 순이었다. 많은 외교안보분야의 정책(예: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2.8점), 북핵-북한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강화(2.7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최근의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둘러싼 국내외 갈등에 대한 우려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구한 정책들(예: 창조경제혁신센터(2.4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2.7점)이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정책 분야와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들(예: 문화가 있는 날 확대(2.8점),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2.8점), 공동주택 층간 소음관리(2.9점)는 시행기간이 짧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6-2] 40개 정책 평균 비교



[표 6-1] 40개 정책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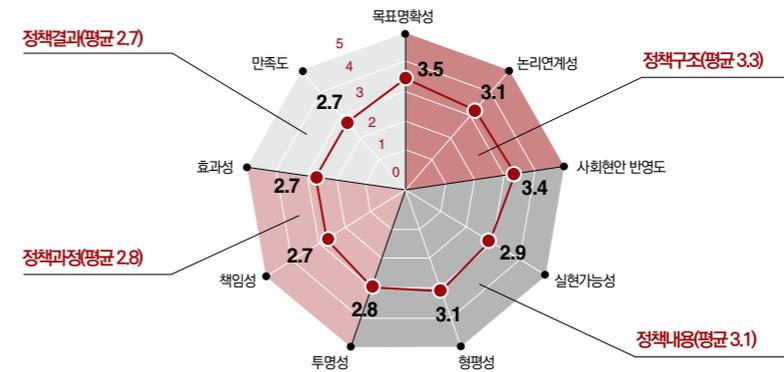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방송통신위원회) ② 초등돌봄교실(교육부) ③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교육부) ④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국민권익위원회) ⑤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대검찰청) ⑥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국민안전처) ⑦ 도시숲 조성(산림청) ⑧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경찰청) ⑩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국방부) ⑪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⑫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교육부) ⑬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⑭ 가계부채 관리(금융위원회) ⑮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국방부) ⑯ 티스(TIPS) 프로그램(중소기업청) ⑰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외교부) 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송통신위원회) ⑲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법무부) ⑳ 임금피크제(고용노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㉒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㉓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㉔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외교부) ㉕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환경부) ㉖ 일 가정 양립(고용노동부) ㉗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교육부) ㉘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산업통상자원부) ㉙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국방부) ㉚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획재정부) ㉛ 누리과정 지원(교육부) 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외교부) ㉝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문화체육관광부) ㉞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국토교통부) ㉟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㊱ 문화가 있는 날 확대(문화체육관광부) ㊲ 한·일·중 3국 협력 강화(외교부) ㊳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기획재정부) ㊴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외교부) ㊵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미래창조과학부) |
|----------------------------------------------------------------------------------------------------------------------------------------------------------------------------------------------------------------------------------------------------------------------------------------------------------------------------------------------------------------------------------------------------------------------------------------------------------------------------------------------------------------------------------------------------------------------------------------------------------------------------------------------------------------------------------------------------------------------|---------------------------------------------------------------------------------------------------------------------------------------------------------------------------------------------------------------------------------------------------------------------------------------------------------------------------------------------------------------------------------------------------------------------------------------------------------------------------------------------------------------------------------------------------------------------------------------------------------------------------------------------------------------------------------------------------------------------------------------------------|

③ 평가영역 및 항목별 비교

평가가 실시된 40개 정책 모두를 대상으로 9개 세부 설문 항목과 설문영역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정책구조(평균 3.3점)와 정책내용(평균 3.1점)의 평균은 3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과정(평균 2.8점)과 정책결과(평균 2.7점)의 평균은 3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설문 항목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목표명확성'이 3.5점으로 전체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현안 반영도'가 3.4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논리연계성'과 '형평성'이 3.1점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만족도', '책임성', '효과성'은 모두 2.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투

명성' 역시 2.8점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2014년, 2015년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6-3] 40개 정책 평가지표별 점수 결과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1) 경제정책 분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평가는 지난 해 실시한 정책평가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해 임금피크제 정책은 단순한 고용정책의 의미를 뛰어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생애소득의 흐름을 규정하는 정치적 선택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선택은 민주주의적 의사선택의 원칙 아래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때 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올해 임금피크제를 돌아볼 때 이러한 제언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으며, 따라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에서 드러나듯이 부정적 평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일방적인 정책의 도입과 이행을 추구하였으며, 본 정책의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지워버린 채 정책의 내적 완결성의 증대에만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시 작년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정책의 성공은 정책의 정당성 획득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이러한 정당성의 획득은 임금피크제를 대한민국이 당면한 고령화 사회와 청년실업증대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시스템으로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본 정책의 신뢰성 증진을 위하여 민간 기업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이러한 재원이 실제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하고도 명확한 모니터링 절차 구축이 필요하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설 자리가 없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은 그 구조와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복에 대한 우려로 말미암은 불공정거래 관행의 미신고 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곧바로 현실에서의 긍정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제도적 노력과는 별개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은 주무부처의 의지와 노력의 투입이다. 이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꾸준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공정관행이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반 대중으로 상대로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용납되지 않고 처벌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후적 제도의 철저한 이행이 수반될 때 불공정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

준으로 억제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생계형 대출이 아닌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노력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1차 대책은 부동산 대출 억제를 위한 수요 관리 측면의 내용보다는 공급 억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자극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좀 더 적극적인 수요 억제를 위해 선 DTI 규제 강화와 같은 소득 중심의 규제가 요구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서민층에 대한 보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이러한 수요가 이지율이 높은 제2 금융권으로 넘어가 서민층에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주택 실수요자들 역시 지나친 전세금 상승 탓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단 대출을 규제해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조이게 되면 이들은 전세금 상승과 대출 규제의 사이에 끼어 움짱달짝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이들을 어떻게 좀 더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가 유통망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제시된 정책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유통망 독점상황 아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외부 불경제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현상 유지적 관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유통망 독점의 해소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본 정책은 그 적실성이나 효과성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적절한 감시활동과 자발적인 시정요도라는 처벌-유인 기제의 효과적 시행을 물론이며, 소비자들에게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력과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 아래 현실적으로 모든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유통업체의 명단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위반 유통업체 이용을 줄이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윤리적 소비가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하고 있는 오늘날의 소비문화를 고려해 본다면,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패턴이야말로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의 근본적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성과연봉제라는 도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본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직무급체계의 근간이 되는 교육훈련시스템이나 일보식 직능급체계의 근간이 되는 평가 및 자격시스템 등의 새로운 교육개발훈련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채산성이 아닌 공공성 강화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존재 목적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형평

성의 강화라는 점에서 볼 때, 재산성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성과평가는 중장기적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예측되는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협력저하, 지나친 경쟁심 및 고용불안의 유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 및 공공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인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정책에 대한 동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본 정책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집권여당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되어 있는 현실에서 본 정책의 정당성은 매우 낮은 형편이고, 이러한 낮은 정당성은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저해함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은 중후장대형 제조업 중심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그 대안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진료, 공유숙박업, 관광시설 내 주거설비 허용, 코리아 둘레길 조성 등 매우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정책을 모두 추진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드론을 통한 신시장 발굴을 위해선 단순히 규제완화만으론 부족하고 공공부문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관련 규제, 연구, 산업 등에 관련된 주무부처가 모두 흩어져 있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산업과 시장과 관련된 분야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 어찌 면 당연하겠으나, 신속하게 새로운 분야를 산업화하고 신시장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흩어진 기능을 모아 주는 서비스 혁신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부문 경쟁력 강화에 있어선 대부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전에는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민영화 추진의 일부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은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정책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조선, 철강, 정유화학 등 한계에 다다른 전통적인 중후장대형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용 업종이 제한적이어서 본 정책의 실효성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업종은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분야로,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본 정책에 호응해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업체는 기대보다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정책이 의도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총수 일가 지배력 개편이나 편법 승계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 정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출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향후 기대되는 부

가가치 창출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창출이 기대되는 새로운 시장수요와 창업 아이디어 등에 대한 부실한 예측은 본 정책이 추구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규제 개선 노력과 더불어 새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장에 대한 예측,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시장에서 생성된 부가가치가 규제 개선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16 Go Drone' 행사 등의 개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그 노력의 정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시범 사업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시도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활성화를 통해 실리콘밸리형 창업경제를 만들어 가려는 정책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대기업 중심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이들 대기업들이 전국을 분할 책임지고 있는 형태는 정책 성공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청, 산업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 관련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자체의 이미지, 나아가서는 '창조'라는 개념의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정책은 매우 적극적인 수준의 리모델링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참여를 제외하고 창업과 직접 연관된 다른 집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틱스 프로그램인데, 성공한 벤처기업인의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틱스 프로그램 등 다른 창업 관련 지원 정책과의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는데, 유사한 정책의 통합 운영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틱스 프로그램은 실리콘밸리식 창업경제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창업정책이다. 정부의 재원과 민간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다만 최근에 불거진 몇몇 문제들은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을 이유로 허용된 지분 이상의 지분을 요구한다면 정부 지원이 실패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의된 수준의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이다. 지원을 하는 투자자와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 간에는 어쩔 수 없이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적절한 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사례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불법적 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무부처는 재원의 제공과 함께 이러한 행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분야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목표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서 정

책 관련 내용이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그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록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정책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정책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의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책들 중에서는 이러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된 각 정책 대안들이 서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계되는지, 그리고 각 대안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들이 있다. 예컨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 같은 경우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정책 수단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취업한 여성들의 고용의 질 측면이나 고용 유발 분야 등이 사회적으로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어 진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 대한 평가와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을 통하여 의도한 결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 목표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이나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모호하게 언급되고 마는 경우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비록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여야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예컨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정책의 경우, 청탁금지법 입법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실적,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나 지지도 외에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가 결여되어 있어 평가가 쉽지 않았다. 물론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량적이건 정성적이건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상 형평성 측면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으며, 이는 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회 집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 같은 정책이라도 바라보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과 조건을 바탕으로 정책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의 형평성은 정책이 제시하는 기준을 평가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이혼이나 사별 등의 사유로 모 또는 부 일방과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조손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이 아니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은 불평등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정책의 경우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상당한 의식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 중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의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측면의 인식 차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투입은 눈에 잘 띄지만 결과는 빠른 시간 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정책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상 정책 과정에 대한 낮은 평가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가 정책 도입과 시행에 있어서 실시하는 공청회나 세미나, 설명회 등의 의사소통 과정을 형식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나 정치권이 정책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절차적 측면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비록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대국민 홍보와 설명, 교육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충분한 시간에 걸쳐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청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이 여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정책별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먼저 **부정청탁 등 부패 관행 근절 정책**의 경우 정책의 명확한 목표와 시의적절성 측면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적용 대상의 형평성 문제, 부패 방지에 필요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미비 등으로 예상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향후 후속 입법과 시행령 등으로 모호한 부분을 줄이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 가정 양립정책은 임신·출산·육아 지원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공직사회에서의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 가정 양립제도를 안착 시키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확충한다는 좋은 취지 및 관련 추진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기업에까지는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듯하다. 향후에 민간기업이 이러한 일 가정 양립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비생산적인 야간 근무 금지, 유연근무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부서 내 야간 회식을 주간 점심식사로 대체 실시하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직장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가양득 캠페인을 통한 직장 문화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근무시간이 아닌 생산성에 기준을 맞춘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은 이혼으로 인한 편모나 편부 가정 뿐 아니라 미혼모 가정 및 청소년이 가장인 가정, 그리고 조손가정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들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한부모자녀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한 가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본다면 이혼이나 혼전임신,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동거 가정 형태의 증가로 한부모가족이 급격히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국가의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개선하여 일반 한부모가족 전반으로 확대하고, 정책 수요자의 상황과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약류 확산 차단 정책의 경우 전체적으로 비교적 정책의 구조와 내용 측면은 잘 구조화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결과 측면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온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들이 마약범죄에 대하여 체감할 기회가 적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 정책의 결과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한다면, 결과 측면의 평가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정책의 경우 정책의 구조와 내용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는 보통 미만의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마약류 확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정책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측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고, 관련부처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면 정책의 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서 수급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원받았던 모든 급여가 일시 중단되므로 급여자의 자활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 차상위층에 속하는 개인이나 가족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제시되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수급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홍보나 지원대상 확대의 측면에서는 좀 더 능동적인 정책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노동참여와 자활을 더욱더 촉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자립을 통한 탈수급 촉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탈수급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환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긴급신고 처리체계 개선의 경우 이미 개선 조치와 시범운영이 완료되고, 실제 운영 중에 있는 정책으로서 상대적으로 명확한 구조와 내용, 결과와 과정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측면에서 여타 정책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다소 의외이다. 그동안 긴급신고전화 통합과 대응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책 홍보와 인지도 제고 측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결혼, 가사 및 육아와 함께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재취업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해당 여성들을 대상으로 고용맞춤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유

입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여성이 재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취직한 여성들의 일자리가 주로 저임금의단기직이라는 점과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이려면 단기적인 취업성과와 일부 직업군(보육이나 보건)에 집중된 정책을 지양하고, 해당 여성의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적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인 취업을 위한 사설학원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의 장기적인 교육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경우 정책의 구조, 내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결과와 과정 측면에서는 각각 보통,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며, 실제로 2013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부처 관련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련부처가 어떻게 협동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분명하지 않다. 더구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과정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가 나온 것은, 정책의 낮은 인지도와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형교통사고가 줄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화물차와 관광버스 중심의 대책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반된다면, 정책 결과나 과정 측면에 대한 평가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증간소음 관리정책은 국민의 대다수가 아파트 혹은 다른 형태의 공동주택(빌라, 다세대주택,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증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을 통해 증간소음 예방행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와 교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증간소음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증간소음 문제의 원인에는 공동주택의 건물 구조적인 측면, 시공 자재의 측면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의 신축이나 개보수 시 증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 증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의 공모 및 적극적인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3) 교육문화정책 분야

종합적으로 2016년 교육문화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지난 두 번의 평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설계의 품질을 나타내내는 구조와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와 운영의 수준과 정책결과의 효과성과 만족도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교육문화 부문에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바로 평가적 태도로 전환될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교육문화 분야의 정책들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각 부처는 현장을 중심으로 대상집단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집행의 구체적인 경험을 반영하여 정책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학습과 환류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한 당국의 노력을 통해 교육문화정책의 효과성과 시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정책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도 취업후상환제도(돈돈학자금)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상환이자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반면, 수혜자의 관점에서 지원자격과 선발기준이 모두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소득분위에 의해 변동되므로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보증성의 미비의 문제가 있다. 사전적으로 제반 자격요건과 기준이 확정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주기적으로 출연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재단이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정책은 최근 미취학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및 학대와 무단결석 학생들의 실종·사망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성공은 교육부와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등 유관 부처들의 업무 협조에 달려있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 이용권한을 부여하였는데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과의 협조를 제도적 수준에서 확립하고 아동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누리과정 지원 정책은 국가가 만 3-5세 유아에게 양질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균등한 생애출발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급격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와 육아 및 보육의 막대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있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관장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복지부, 재원을 마련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집행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매년 재원의 부담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 지방정부, 중앙부처가 갈등을 일으켜 운영체계의 불안정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두고 당국자들이 저마다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각종 법령과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관할권 등을 운운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두고 서로 다투면서 130만 명에 이르는 3-5세 유아들과 그들의 학부모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책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및 단말기 유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추징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하여 통신서비스 시장 과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수단들이 최근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못하다.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이 노령층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다양한 정보취약계층(농어민, 외국인, 일반주부, 장애인)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전담인력, 학부모 및 대학생 봉사, 지역의 기업 및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보사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정, 학교,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적인 양육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체계는 학교의 돌봄교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와 정보가 생성되고 공유될 수 있는 장점을 보인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상세한 운영매뉴얼을 완비하여 학생,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신축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편적인 체계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개선 그리고 수혜대상의 확대와 시설의 확충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기본돌봄, 여가, 학습, 안전의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당초 정책의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되고 있다. 다만, 2016년 지방교육청에 내려간 교부금 중에서 실제로 예산으로 편성된 비율이 전년 대비 12%이상 하락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이 다른 좀 더 시급한 문제에 쓰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낮아진 예산편성비율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재정적 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누리과정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초등돌봄교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도시숲 조성 정책은 산림복지를 활성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수단들-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복합경관숲 조성사업, 대관령지역 경관숲 조성, 도시녹화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시지역의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생활환경권의 숲 조성에 대한 투자가 형평성 측면에서 도시민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확보를 위해 별도의 토지 매입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고, 기존에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많은 재정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산림서비스의 재정투자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일반 국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아울러 정책 성과와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시숲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있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정책은 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과 문화향유가 보편화된 시대에 시청각장애인, 노인 및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접근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IC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고시 등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방송사업자와 미디어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정책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국가 재원으로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방송수신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급하는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노력으로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 정책의 실제 집행은 상당부분 지상파방송사와 공익·보도·일

반 PP, 유선방송사(SO), IPTV 방송사업자들이 이미 구축한 네트워크와 ICT기술을 활용하고, 지원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재원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인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비록 시청각 장애인 취약계층, 노인, 학생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가시성은 높지 않으나 정책의 행정 및 재정적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자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시설 인센티브 지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정책대안들의 상호연계성이 다소 부족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국민들의 문화여가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정책의 수혜대상은 각종 공연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주민들 간의 형평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향후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와 취약계층 문화시설 이용권의 보장의 핵심 문제들에 더욱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수단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정책은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시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의 취지에 대해 시민들은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그 구체적 내용이 대부분 세종학당으로 통합 및 브랜드화로 한정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적인 국익의 증대도 분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세종학당 프로그램의 중장기 운영전략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문화브랜드의 대표기관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도록 한 만큼 세종학당재단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필요하다. 세종학당과 해외 공관 및 문화원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재외교포 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하여 현지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제고하면서도 현지 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과 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정책은 미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의 주역인 SW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급변하는 ICT 환경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비추어 볼 때 2020년까지 초·중등생 SW교육을 통해 문제해결형 창의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투자 규모와 적정사업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초·중등 SW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당국, 기업, 대학 등이 함께 SW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미래부와 함께 SW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단계별 목표, 그리고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이를 실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산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SW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동 대처가 시급하다.

4) 외교안보정책 분야

외교안보분야의 정책평가를 수행한 결과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먼저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정책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책의 형성과정 및 시행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과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로 인해 정책의 투명성을 비롯한 평가지표 전반에 대해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의 범위는 매우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교안보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 및 국익과 관련된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의 기본적 삶에 영향을 주게 되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분야이고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두는 것이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에 있어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국민 참여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교안보분야 정책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과 함께 그 효과성과 만족도도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도 효과성과 만족도는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교안보분야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외부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과 기술력의 문제 등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정책의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기 위하여 정책의 형성과 추진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별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해보면,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정책**의 경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주변국들의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방태세의 확립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만큼, 이전과는 다르게 국익에 부합하더라도 반드시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정책에서는 수신전용 휴대전화의 보급이나, 상담관들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장병들에게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사회와 마찬가지로 군내에서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 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교육을 통해 일깨우며, 폐쇄적인 군대를 사회에 점차 개방하는 방향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정책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적·국제정치적 부담이 적은 분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정책의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하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부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음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책의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정책은 그동안 장기 계획에 맞게 꾸준히 예산이 확보되어 잘 이루어 졌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증가수준이 앞으로도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한 만큼, 정책이 국민의 신뢰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물품조달에 있어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며, 다른 분야에서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의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정책의 경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그 효과성과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는 대안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정책의 경우 세부 정책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도 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실패를 파악해야 한다.

한·일·중 3국 협력 강화정책의 경우 기존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협력 기제를 개발해야 한다. 현재 3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2015년 3년 만에 재개된 정상회담 또한 현재 예정 없이 연기될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그러나 3국 협력은 국익 측면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3국 관계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정책의 경우 평가지표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정책목표에 보다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정책의 형성과 추진과정에 있어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의 경우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러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탈북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탈북민 지원 정책에 탈북민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즉 탈북민의 지속가능한 정착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진짜 수요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경제정책 분야

고용노동부. 2015. 정보공개자료.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7월3일).
 공정거래위원회. 2016. 보도자료. 유통밴드 납품업체 간담회 개최(10월21일).
 국토교통부. 2015. 보도자료. 「'16~'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개최(12월7일).
 국토교통부. 2016. 해명자료. 「중 DJI 10년새 매출 1조원 됐는데... 한국 드론, 시험비행도 제대로 못해」, 관련(8월17일).
 금융위원회. 2016. 보도자료.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사전브리핑(1월27일).
 금융위원회. 2016. 보도자료.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11월25일).
 기획재정부. 2016. 보도자료.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11월16일).
 기획재정부. 2016. 보도자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9월8일).
 기획재정부. 2016. 보도자료.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 내년 인건비 동결,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 부여(5월9일).
 뉴스토마토. 2016.10.17. 김영주 "본래 역할 못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뉴시스. 2015.12.6. 한계기업 급증세...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3배 더 빨라
 미래창조과학부. 2016. 해명자료. 「창조혁신센터 차기정권서 폐쇄될 수도」, 기사 관련(1월5일).
 산업통상자원부. 2016. 보도자료. 철강산업,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본격화(11월22일).
 아시아경제. 2016.11.23. 동국제강, 현대제철 원사법 승차... 감산효과는 제한적
 아이티투데이. 2016.10.27. 티스타운, 스타트업 토털 지원 서비스 나선다
 아주경제. 2016.8.3. 최양희 장관 "혁신센터 한국식 모델 자리매김... 창조경제 이젠 속도전".
 업코리아. 2016.11.25.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티스 운영사 선정.
 주간동아. 2016.11.16. 블랙에인절 먹잇감이 된 스타트업.
 한겨레. 2016.9.8. 노후 불안 취약 복지, 한국 가계부채의 최대 위험 요인.
 한국경제. 2016.10.14.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 36% 늘어... 대기업 524개 중소기업 2754개.
 Bingham, R. and Felbinger, C. 2002. Evaluation in Practice. Chatham House.

사회복지정책 분야

관계부처 합동. 201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2013-2017)』,
 관계부처 합동. 2015. 보도자료.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2016a.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1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2016b.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 2016c. 보도자료. 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마련(6월 1일).
 관계부처 합동. 2016d.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범 개통(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2016e. 보도자료. 15일부터 119-112-110 긴급신고전화 통합 전국 시범서비스 개시(7월 14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각 연도.
 고용노동부. 2012. 『일 가정 양립 경영 지원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2015.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매뉴얼북 '일가양득 행복가득'』.
 국민권익위원회. 2016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2016b.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현대경제연구원. 2016.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예산 개요』. 각 연도.
 국민안전처. 2015. 보도자료. 2016년부터 모든 신고 전화 119-112-110으로 통합(1월 26일).
 국민안전처. 2016a. 『2016년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국민안전처. 2016b. 보도자료. 긴급신고, 편리하고 빨라진다(3월 7일).
 국토교통부. 2016. 보도자료.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추진(4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 『부처별 예산안 분석』, 각 연도.

김원득. 2016.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1주년 평가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1월).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13~2015).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3. 1월-2016. 10월).

대검찰청. 2016a. 보도자료.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7월 8일).

대검찰청. 2016b. 보도자료. 서민상대 주요 재산·강력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10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5.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7월 27일).

보건복지부. 2016. 보도자료.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7월 4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2010.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mfds.go.kr/antidrug/index.do>)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 2016. 보도자료. 정부,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4월 26일).

여성가족부. 2013. 『경력단절여성 대상별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2014.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안)』 (2015-2019).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a. 『2016년 업무추진계획』.

여성가족부. 2016b. 『미혼모·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안내』.

여성가족부. 2016c.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16d. 보도자료. 여성 취·창업의 모든 것! 새일센터에서 찾으세요 –

2016년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워크숍 개최(1월 21일).

연합뉴스. 2016. '긴급신고전화 통합했더니' 공동대응 시간 42% 줄었다. (2016. 10. 26. 보도)

인사혁신처. 2016a. 『2016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인사혁신처. 2016b. 보도자료. 2016년, 인사혁신의 확산과 실천의 해! – 인사혁신처 연두 업무보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공직인사 혁신키로(1월 26일).

최민정. 2015.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9월).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통계청. 2015. 보도자료. 『2015 일·가정양립 지표』(12월 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a.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b. 『한부모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c. 『한부모가족지원 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2014. 『환경정책 브리프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제도』.

환경부. 2016. 보도자료. 환경공단, 층간소음 분쟁 사전예방서비스 확대(10월 12일).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

교육문화정책 분야

교육부. 2015a1.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교육부. 2015a2.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요약 설명 자료』

교육부. 2015a3. 『2015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교육부. 2015a4.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교육부. 2015a5.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2015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1월).

교육부. 2015c.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고시문 (2월24일)

교육부. 2015e. 보도자료.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SW교육 청사진 나왔다(7월21일).

교육부. 2016a1.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교육부. 2016a2. 보도자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상환 편리해진다(7월11일).

교육부. 2016a3. 보도자료,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확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도 높인다(1월20일).

교육부. 2016b1.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교육부. 2016b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교육부. 2016b3. 보도자료,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2월)

교육부. 2016b4. 보도자료, 미취학아동 시행령개정(6월1일).

교육부. 2016c1. 보도자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4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 재차 촉구(2월18일)

교육부. 2016c2. 보도자료, 14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9월8일)

교육부. 2016c3. 보도자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4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 재차 촉구.

교육부. 2016c4. 누리과정 바로알기. 정책브리핑.

교육부. 2016d1. 보도자료, 2016년 행복더하기 초등돌봄교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욱 탄탄하게(1월13일).

교육부. 2016d2. 동정자료, 임시공휴일 돌봄교실 방문(5월4일).

교육부. 2016d3. 보도자료, 학생학부모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예산도 감액 편성:

지방재정알리미에 초등돌봄교실 2016년 예산편성 분석결과(5월20일).

교육부. 2016d4. 보도자료, 행복교육과 일·가정 양립의 핵심정책 초등돌봄교실(6월23일).

국회예산정책처. 2016a1.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월).

국회예산정책처. 2016a2.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9월).

갈혜지. 2016. 『초등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와 만족도에 관한 통계』 교육정책포럼 274호

뉴스1. 2016. 보도자료,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참여자의 만족도 추이 & 지역별 인지도(5월31).

문화체육관광부. 2015a.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안』

문화체육관광부. 2016a.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6b1. 보도자료, 세종학당 9개소 신규 지정, '세계 속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표 브랜드'로(6월8일).

문화체육관광부. 2016b2. 보도자료, 해외 한국어보급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한다(7월12일)

방송통신위원회. 2015a. 『2016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 자료』 (6월4일).

방송통신위원회. 2016a1.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1월).

방송통신위원회. 2016a2.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3월).

방송통신위원회, 2016b. 보도자료, 201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7월5일)

산림청. 2015. 『2016년도 예산요구서』 (6월5일).

산림청. 2016a.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2016. 누리과정 쟁점과 서울시 대안

세종학당재단. 2015. 『한국어 교육기관현황조사 최종 보고서』 (2월13일)

세종학당재단. 2016a. 『2015년 연차보고서』 (7월).

세종학당재단. 2016b. 정책실명제: 세종학당 운영 지원(1월)

세종학당재단. 2016c. 정책실명제: 세종학당 시설 개선 지원(2월)

세종학당재단. 2016d. 정책실명제: 한국어 교원 해외 파견(5월)

이진화·박창현·윤지연. 2015.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실태와 정책 효과분석』 육아정책연구소. 26호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2016. 『2016년 초등돌봄교실운영 길라잡이』 한국교육개발원.

외교안보정책 분야

강정숙. 2016. 『한중관계 新지도가 필요하다』⑨ 문흥호 교수 "한중관계 아무 일도 못한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아주경제』(2016.12.1.).

<http://www.ajunews.com/view/20161130054444352> (최종검색일: 2016.12.13.).

국가인권위원회. 2016a.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14권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 2016b.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

정상환 상임위원, 제8차 국제군운부즈만 기구 회의서 주제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6.10.6.).

국방부. 2015. 『창조국방 국방발전의 새로운 길』.

국방부. 2016a. 『국방통계연보 2016』.

국방부. 2016b. 『2016년 병 복지 길라잡이』.

국방부. 2016c. 「국방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국방부. 2016d. “2016년 군 급식, 더 맛있고 건강하게!». 국방부 보도자료 (2016.1.24.).

국방부. 2016e. “軍 급식구피복 품질 개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조달혁신 시범사업, 군 급식 및 피복 만족도 조사 시작 -”. 국방부 보도자료 (2016.6.6.).

국제일보. 2013. ‘중이없는 여권 신청’ 2016년 전 지자체-재외공관 확대 (2013.3.27).

http://www.kookjeilbo.com/news/article_print.html?no=28447 (최종검색일: 2016.11.29.).

국회국방위원회. 2015. 『2016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국회사무처. 2015. 201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2015.10.8.).

국회사무처. 2016. 2016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2016.10.14.).

국회예산정책처. 2015.『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국회의교통일위원회. 2015. 『2016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6.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

군인권센터. 2016. ‘6사단 GP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긴급 기자회견문 - 박근혜의 병영문화혁신 실패가 박 일병을 죽였다 - 군인권센터 보도자료(2016.11.24.).

기획재정부. 2016. 『2016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김건홍. 2014.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태. 2016. “‘영사 핫라인’ 절반 이상 먹통… 재외국민 보호 미흡” 『파이낸셜뉴스』 (11월 27일).. http://www.fnnews.com/news/201611251245393983 (최종검색일: 2016.11.30.).

김선택. 2011. “군 가산점제 재도입, 헌법적·정책적으로 타당한가?–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의 필요성-”. 『공법연구』 제40집 제2호.

김성윤. 2016. [논설위원 칼럼] 국민의 공분과 안보불안. 『통일신문』(2016.11.24.).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20548§ion=sc6(최종검색일: 2016.12.15.).

김성환. 2016. “탈북민 ‘자립 정책’ 결정과정서 왜 의견수렴 안하나”.

『DailyNK』(2016.11.4.).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2600&num=109581 (최종검색일: 2016.11.30.).

김재철. 2013.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전략”. 『평화학연구』 제14권 제3호.

김준호. 2016. '군 복무 중 성추행' 관용없다… 항소심 재판부 잇단 가중형. 『연합뉴스』 (2016.11.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6/0200000000AKR20161116156000063.HTML?input=1195m(최종검색일 : 2016.12.11.).

김창영. 2016. “中 금한령’에 속수무책 방통위” 『서울경제』 (2016.12.12.).

http://www.sedaily.com/NewsView/1L57VCKD7U (최종검색일: 2016.12.13.).

김화순-최대석. 2011.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제20권 2호.

뉴스속보. 2015.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 ‘안전협약체 구성 전 기준평가표 공개하라」 『헤럴드경제』 (2015.7.2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27001089 (최종검색일: 2016.11.30.).

뉴스스. 201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간담회…'사건·사고 피해 늘어'(2016.11.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4_0014496956&clD=10301&pID=10300 (최종검색일: 2016.11.30.).

민재용. 2016. “對中수출 열 달 연속 ↓ … 약발 안 먹히는 한중FTA”. 『한국일보』 (2016.12. 11.).

http://www.hankookilbo.com/v/023deb0d6b8c4c349ceb1d20bef99c10 (최종검색일: 2016.12.15.).

박세준. 2016. “자원외교 다음은 거품외교”. 『주간동아』 (2016.11.16.).

http://weekly.donga.com/3/all/11/779238/1 (최종검색일: 2016.11.30.).

박휘락. 2016.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국제관계연구』제21권 1호.

배문숙. 2016. [탄핵가결 이후]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경제개혁청년 실업률 쌍두 마차 정책 급선무”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12000318 (최종검색일 : 2016.12.12.).

변창구. 2015.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통일전략』제15권 2호.

부형권. 2016. “北 이용호 외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모두 미국 탓” 『동아일보』 (9월 25일). http://news.donga.com/3/all/20160925/80468238/1 (최종검색일: 2016.11.28.).

서동철. 2016. “최순실 일가 ‘국정농단 사태’ 전경련 이어 중기청으로 불뚱 내막”. 『일요신문』(2016.12.5.)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17402 (최종검색일: 2016.12.5.).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외식조사.

송용창. 2016. “‘영사 핫라인’ 절반 이상 먹통… 재외국민 보호 미흡”. 『한국일보』(2016.4.5.).

http://www.hankookilbo.com/v/d200ead9ef34347538484d98060187aa6 (최종검색일: 2016.11.30.).

신종철. 2016. 서영교 “군대 폭언·가혹행위 증가세…실형 1.4% 55명 불과”. 『로이슈』 (2016.9.13.).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913192113961774501_12(최종검색일 : 2016.12.11.).

연합뉴스. 2016. “안보리 대북결의안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한 나라 70개 육박”(2016.11. 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035500014.HTML?input=1195m (최종검색일: 2016.11.29.).

연합뉴스TV. 2015. 일본 언론 “한중일 관계복원 험난한 상황”(2015.3.22.).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50322004100038/ (최종검색일: 2016.11.30.).

외교부. 2010. 「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

외교부. 2015. 『2015년 외교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외교부. 2016. 北 정부대변인 성명 및 위무성 대변인담화(3.4)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이동직. 2016. “외교부 재외공관, 부실한 영사업무 ‘무더기 적발” 『CBS노컷뉴스』 (2016.4. 5.). http://www.nocutnews.co.kr/news/4573977 (최종검색일: 2016.11.30.).

이부형-천용찬. 2016. 『한중 경제 관계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이수석. 201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와 성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제40집 제2호.

이지현. 2016. “중동 진출 관여한 복지부 돌발 인사… 배경엔 최순실”. 『메디컬타임즈』(2016.12.14.).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8919 (최종검색일: 2016.12.15.).

이창환. 2016. “52조 이란 대박, 알고 보니 ‘쪽박’… 차대통령 세월즈 외교 수수 사실상 ‘제로’”. 『조선비즈』 (2016.11.1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9/2016110902713_1.html (최종검색일: 2016.11.30.).

장영은. 2016.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아시나요?” 『이데일리』 (2016.10.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1574406612810952&DCD=A00603&OutLnkChk=Y (최종검색일: 2016.12.13.).

장천식. 2016. “음성주민 3000여명 사드배치 반대집회”. 『뉴스1』(2016.7.11.).

http://news1.kr/articles/?2716753 (최종검색일: 2016.11.30.).

정다원. 2016. “한반도 지역 안정 중요…북한 핵무기 제어 필요” 『KBS』 (2016.11.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84654&ref=A (최종검색일: 2016.11.28.).

정인환. 2016. 탈북민 3만 시대…‘정착서 통합으로’ 정책 전환 『한겨레』 (2016.11.27.).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2213.html (최종검색일: 2016.11.30.).

조승호. 2016. “당국자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어려워” 『동아일보』 (2016.12.11.).

http://news.donga.com/3/all/20161211/81783994/1#csidx829038e56a72745b466fa113f6f275c (최종검색일: 2016.12.13.).

채병건. 2016. 플린 “북핵 위협 우선순위로 다루겠다” 『중앙 SUNDAY』 (2016.11.20.).

http://sunday.joins.com/archives/139555 (최종검색일: 2016.11.28.).

최재혁. 2015. “차대통령 지지율 오르자 ‘외교안보 성과집’ 낸 청와대”. 『조선일보』 (2015.9.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5/2015091500307.html (최종검색일: 2016.11.30.).

통계청. 2016. 취업자수/실업률 추이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quick_02 (최종검색일: 2016.12.12.).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한재원. 2016. 『군복무 부적응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육군 그린캠프 운영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성수. 2014.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안암법학』 제43권.

황혜경. 2015. 탈북민 5명중 1명 ‘죽고싶다’ 생각 『YTN』 (2015.2.9.).

http://www.ytn.co.kr/_ln/0101_201502091811514677 (최종검색일: 2016.11.30.).

YTN. 2016. 美 전문가 “트럼프, 이란 수준의 강력한 대북제재 나서야”(2016.11.28.).

http://www.ytn.co.kr/_ln/0101_201611281749303429 (최종검색일: 2016.11.28.).

KBS. 『2015년 KBS 통일외식조사』.

부록-2016년 평가 대상 정책 목록(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1. 경제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2	공정거래위원회	상품 가격-품질 비교 정보 제공		
3	공정거래위원회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0	0
6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0	0
7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8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입가 사익편취행위 제재		
9	공정거래위원회	공공입찰 및 민생분야 담합시정		
10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대형 M&A 적극 대응	0	
11	국세청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12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서비스 시행		
13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0	
14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세정지원 확대		
15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16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세제의 성공적 집행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17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18	국토교통부	뉴스데이	0	
19	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방안		
21	국토교통부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추진		
22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23	국토교통부	김해신공항 입지선정		
24	국토교통부	드론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0	0
25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혁신을 위한 차세대 ITS(C-ITS) 도입		
26	국토교통부	전국 주요거점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		
27	기획재정부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28	기획재정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9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0	0
3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3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0	0
32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효율화		
33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확산		
34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마을 조성		
35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확대	0	
3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3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6차 산업화	0	
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 활성화		
39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0	0
40	미래창조과학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41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ICT 미래전략 수립		
42	미래창조과학부	바이오 유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3	미래창조과학부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사업화 활성화		
44	미래창조과학부	SMART 원자로 및 연구로 수출		
45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시대 선제적 대응	0	
4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이동통신산업 육성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47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48	미래창조과학부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49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0	
50	산업통상자원부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0	0
5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대표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2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53	산업통상자원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0	
54	산업통상자원부	新통상 로드맵에 따른 FTA 추진		
55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정상화		
56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과 기업을 위한 국내·외 기술규제 개선		
57	산업통상자원부	1381 인증표준 콜센터		
58	조달청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로 조달시장의 공정성 강화		
59	조달청	지역여행·체험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60	조달청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61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62	중소기업청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63	중소기업청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64	중소기업청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65	중소기업청	팁스(TIPS) 프로그램	0	0
66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67	통계청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68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확대 23억불 달성(가공수산물 수출액 7억불 달성)		
69	해양수산부	대량양식 생산체계 구축 및 첨단양식 육성		
70	해양수산부	바다숲 3,000ha 조성 및 어선감척		
71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인 4,500명 및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105만명 달성		
72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수주액 4,000억원 달성		
73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산업 1,000억원 시장 창출		
74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100만명 달성		
75	해양수산부	참선원 프로젝트		
76	해양수산부	크루즈 관광객 150만명 달성 및 '17년 200만명 유치		
77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 2개소 민자 유치(인천·평택·당진)		
78	해양수산부	7개 항만재개발 및 6개 거점마리나 항만 개발	0	
79	해양수산부	해양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브랜드 가치제고	0	
추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0	0
추가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0	0

2. 사회복지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0	0
2	경찰청	준법보호·불법예방의 집회시위 패러다임 정착		
3	경찰청	112신고 총력 대응체계 구축	0	
4	경찰청	보이스피싱 근절		
5	경찰청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4대 사회악 근절		
6	경찰청	동네조폭 및 경미 절도 등 생활주변 범죄 집중 단속, 체감안전도 제고		
7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NCS 통한 능력중심사회 전환		
8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0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9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0	0
10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11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0	0
1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기피 행태(평풍민원) 개선		
1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중심 민원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0	
15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활성화	통합(17)	
16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16)	
17	국민안전처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18	국민안전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19	국민안전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20	대검찰청	중점검찰청 확대 시행		
21	대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22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확대 시행		
23	대검찰청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시행		
24	대검찰청	피고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소송비용 피고인 적극 부담 조치		
25	대검찰청	문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효율적 대응		
26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 대응		
27	대검찰청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0	0
28	대검찰청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경찰과 협업)		
29	대검찰청	공인전문수사관 제도 시행		
30	법무부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대응	0	0
31	법무부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		
32	법무부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33	법무부	중소기업 경제활성화 지원		
34	법무부	취약계층의 법률올타리		
35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활성화		
36	법무부	알기쉬운 법령		
37	법무부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통한 준법문화 기반 조성		
38	법무부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대상자 확대		
39	법무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성화		
40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시범실시		
41	법무부	탐송객 사전확인 제도 안내		
42	법무부	디지털 증거 추가 형사소송법 개정	0	
43	법무부	맞춤형 교정·교화를 위한 수형자 심리처우 강화		
44	보건복지부	읍면동을 지역사회 이웃사촌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0	
45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0	0
46	보건복지부	경력단절여성 추후납부 허용		
47	보건복지부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48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강화	0	
49	보건복지부	보복·난폭운전 등 고질적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50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1	여성가족부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0	0
5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0	
53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54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0	0
55	인사혁신처	공직생산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사회 조성		
56	행정자치부	정부 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0	
57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혁	0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58	행정자치부	개방과 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부 구현		
59	행정자치부	효율적 정부 업무시스템 구현		
60	행정자치부	현장 중심 지방자치 추진		
61	행정자치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62	환경부	환경오염사실 허가제도 선진화		
63	환경부	환경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64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5	환경부	오염총량관리제		
66	환경부	상수도미보급 지역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67	환경부	도시 내 생태휴식공간 조성		
68	환경부	외래생물 관리 제도 개선		
69	환경부	그린카드 제도	0	
70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		
71	환경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전개		
72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73	환경부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시행		
74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0	0
추가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처리체계 개선 ⁵⁾	0	0

3. 교육문화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0	0
2	교육부	자유학기제 확산		
3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4	교육부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	0	0
5	교육부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6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		
7	교육부	학업중단 예방 대책		
8	교육부	미취학자 및 무단결석아동 체계적 관리	0	0
9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	0	0
10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0	
11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및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사업 추진	0	
12	교육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13	교육부	고졸 취업 활성화		
14	교육부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15	교육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0	0
16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17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0	0
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0	0
19	문화체육관광부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2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 및 정부상징체계 개발		
21	문화체육관광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운영		

5)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와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통합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2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운영		
23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영화관 건립	0	
2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뿌리산업인 원천 이야기 발굴·육성	통합	
25	문화체육관광부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2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7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0	
28	방송통신위원회	신규 방송기술을 활용한 교육 복지 확대		
2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확충		
30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0	0
31	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32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강화		
33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34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3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0	0
36	산림청	도시숲 조성	0	0
37	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38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		
39	산림청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실현	0	
40	산림청	맞춤형 산불예방 대책 및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과 산림재해 방지		
41	산림청	산사태 방지정책		
42	산림청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2015 산지규제 개선 추진		
43	산림청	해외산림 자원개발 활성화 추진	0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창조융합벨트(콘텐츠 뿌리산업인 원천 이야기 발굴·육성)	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 활성화	0	
	해양수산부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유치	0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NCS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전환	0	

4. 외교안보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국방부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	0	0
2	국방부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0	0
3	국방부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0	0
4	국방부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 조업 중국어선 차단 대책		
5	병무청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제' 운영	0	
6	외교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0	0
7	외교부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8	외교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0	0
9	외교부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0	0
10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11	외교부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		
12	외교부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0	0
13	외교부	EU 및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핵심 유럽 국가와의 협력 강화	0	
14	외교부	유럽지역 소다자 협의회 개최 및 다자회의에서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 국제무대의 우리 위상 공고화		
15	외교부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0	
16	외교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화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7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 국가와의 포괄적 상생의 파트너십 강화		
18	외교부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다층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19	외교부	중남미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	0	
20	외교부	평화활동 강화		
21	외교부	북한 인권문제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22	외교부	개발협력구상 추진 정책	0	
23	외교부	해외긴급구호		
24	외교부	난민 지원	0	
25	외교부	모범적 공여국으로서 개발협력의 지평 확대		
26	외교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운영을 통한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 증진		
27	외교부	국제무대에서 모범 중견국으로서 국제적 리더십 강화	0	
28	외교부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0	0
29	외교부	법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여 확대		
30	외교부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31	외교부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	0	0
32	외교부	재외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강화		
33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외교		
34	외교부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한국 매력 확대	0	
35	외교부	한국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현지 맞춤형 사업 지속		
36	외교부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0	0
37	통일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0	
38	통일부	통일 체험연수를 통한 청소년 통일외식 향상		
39	통일부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공감대 제고		
40	통일부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준비 내실화	0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발행일	2017년 2월 10일 (1판 1쇄)
지은이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책임) 심동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총괄)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총괄) 이응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윤건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총괄) 정해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총괄) 최상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총괄)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발행인	김수곤
표지 디자인	김환
내지 디자인	전기욱
마케팅	동아E&D
교정	김현민
펴낸곳	주식회사 동아E&D
주소	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등록	2008년 2월 18일 101-86-37667
출판사등록	2010년 4월 20일 제300-2009-18호
구입문의	02-2020-1751, 1758

저작권 ©2017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편집저작권 ©2017 동아E&D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본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97257-11-9

값 20,000원